

정책보고서 2022-11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793-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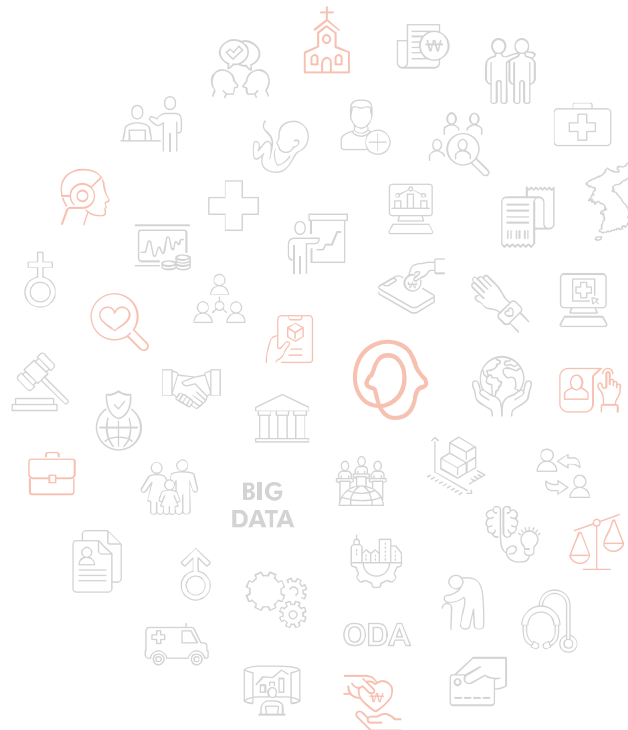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김문길

전지현·홍성운·황도경·김태완·정은희·김성아·이주미·서운석·최옥금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문길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전지현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홍성운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원
	황도경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미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서운석	보훈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출|문

국가보훈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1. 3. 11.)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조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요 약	1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8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제도 현황	53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별 분류	55
제2절 국가보훈대상자 규모 추이 및 현황	57
제3절 주요 보훈정책 현황	67
제3장 실태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91
제1절 기존 실태조사 검토	93
제2절 본 실태조사 개요	101
제3절 본 실태조사 표본설계	103
제4절 본 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108
제4장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실태 분석	123
제1절 가구 일반사항	125
제2절 주거상황	142
제3절 가계지출	150
제4절 소득	156
제5절 자산 및 부채	169
제5장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인식 분석	179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행복	181
제2절 문화 및 여가	183
제3절 사회참여 및 의식	191



제4절 가족관계	197
제5절 보건의료	206
제6절 경제활동	229
제7절 노후 보장	255
제8절 정책 서비스	270
제9절 정책 인식 및 욕구	318
제6장 타 조사 및 유사집단과의 비교	327
제1절 개요	329
제2절 가계금융·복지조사	330
제3절 일반 실태: 노인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340
제4절 인식과 욕구: 사회조사	353
제7장 보훈정책 효과성 분석	359
제1절 소득계층별 분포 및 규모	361
제2절 공적이전과 보훈급여금의 효과성	370
제8장 결론	381
제1절 주요 결과 및 합의	383
제2절 실태조사 및 연구 관련 제언	406
참고문헌	411
부록	413
[부록1] 표본추출 세부 과정 및 가중값 작성	413
[부록2]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조사표	423



요약

〈요약표 1〉 보훈대상자 분류: 9개 유형	3
〈요약표 2〉 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8
〈요약표 3〉 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이용 여부	30
〈요약표 4〉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	39
〈요약표 5〉 빈곤율 감소 효과	40
〈요약표 6〉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층 변화 효과	40
〈요약표 7〉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비교	41

본문

〈표 1-1〉 연구 방법 및 적용 분야	51
〈표 2-1〉 보훈대상자 유형	55
〈표 2-2〉 실태조사 보훈대상자 분류: 9개 유형	57
〈표 2-3〉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대상별 추이(2000~2021.10)	59
〈표 2-4〉 국가보훈대상자 세부 대상별 분포(2021년 10월 기준)	61
〈표 2-5〉 보훈대상자 연령 분포 현황(2021년 10월 기준)	62
〈표 2-6〉 국가유공자 대상별 평균 연령 추이	63
〈표 2-7〉 세부 보훈대상별 연령 분포 및 평균 연령(2021년 10월 기준)	64
〈표 2-8〉 보훈대상자 지역분포 현황(2021년 10월 기준)	66
〈표 2-9〉 2021년도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68
〈표 2-10〉 2021년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기존 등록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69
〈표 2-11〉 2021년도 국가유공자 유족(기존 등록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70
〈표 2-12〉 2021년도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월지급액	71
〈표 2-13〉 2021년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 이후 등록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71
〈표 2-14〉 2021년도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72
〈표 2-15〉 2021년도 사망일시금 지급액	73
〈표 2-16〉 2020년 취학자 현황	74
〈표 2-17〉 2020년 교육 지원 지원실적	75



〈표 2-18〉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액	75
〈표 2-19〉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	76
〈표 2-20〉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77
〈표 2-21〉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80
〈표 2-22〉 수송시설별·대상별 운임 할인 내역	82
〈표 2-23〉 대부 종류별 한도액 및 상환조건	84
〈표 2-24〉 양로·양육 지원사업 입소대상	85
〈표 2-25〉 보훈복지타운 입주보증금 및 월 관리비	86
〈표 2-26〉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 품목	87
〈표 2-27〉 국가보훈관계 법령상의 지원시설	89
〈각주표 3-1〉 1974년 생활등급표	95
〈표 3-1〉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연혁	94
〈표 3-2〉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98
〈표 3-3〉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주요 지표	99
〈표 3-4〉 국가보훈대상자 대상별 분류	102
〈표 3-5〉 시도 및 보훈유형별 목표모집단 현황	104
〈표 3-6〉 보훈대상자 DB 명부,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현황	105
〈표 3-7〉 시도 및 보훈유형별 조사모집단 현황	106
〈표 3-8〉 지역별 조사구 통계량	107
〈표 3-9〉 가구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110
〈표 3-10〉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행복 분야	111
〈표 3-11〉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문화/여가 분야	111
〈표 3-12〉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사회참여 분야	112
〈표 3-13〉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가족관계 분야	113
〈표 3-14〉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보건의료 분야	114
〈표 3-15〉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경제활동 분야	118
〈표 3-16〉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노후 보장 분야	119
〈표 3-17〉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정책서비스 분야	120
〈표 3-18〉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보훈대상자 인식 분야	120
〈표 3-19〉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정책 인식 및 욕구 분야	121
〈표 4-1〉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가구원 수	125



〈표 4-2〉 국가보훈대상자 연령	127
〈표 4-3〉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수준	128
〈표 4-4〉 보훈대상자 가구주와의 관계	129
〈표 4-5〉 보훈대상자 혼인여부	130
〈표 4-6〉 보훈대상자 경제활동	131
〈표 4-7〉 보훈대상자 시장소득 여부	132
〈표 4-8〉 보훈대상자 장애 여부 및 등급	133
〈표 4-9〉 보훈대상자의 질환 및 만성질환 여부	134
〈표 4-10〉 보훈대상자 공적연금 가입 형태	135
〈표 4-11〉 보훈대상자의 가입 및 수급 중인 공적연금	136
〈표 4-12〉 생계급여 수급 여부	138
〈표 4-13〉 의료급여 수급 여부	139
〈표 4-14〉 주거급여 수급 여부	140
〈표 4-15〉 교육급여 수급 여부	141
〈표 4-16〉 거주 주택 유형	143
〈표 4-17〉 주택 입주 형태	144
〈표 4-18〉 현 거주 주택의 평균가격, 보증금, 평균월세액	145
〈표 4-19〉 현 거주 주택의 주거위치	146
〈표 4-20〉 현 거주 주택의 방수 및 면적	147
〈표 4-21〉 주택 입주 형태와 거주면적	148
〈표 4-2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149
〈표 4-23〉 항목별 평균 소비지출 : 월간	152
〈표 4-24〉 항목별 평균 비소비지출 : 월간	154
〈표 4-25〉 추가적 소비지출이 가장 필요한 항목	156
〈표 4-26〉 보훈대상자 가구의 평균 가구 소득 : 연간·항목별	159
〈표 4-27〉 보훈대상자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161
〈표 4-28〉 보훈대상자 평균 개인소득 : 항목별·연간	164
〈표 4-29〉 보훈대상자의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167
〈표 4-30〉 가구 소득 대비 보훈대상자 소득 비율	168
〈표 4-31〉 가구 자산 현황	170
〈표 4-32〉 가구 부채 실태(전가구 기준)	171



〈표 4-33〉 가구 부채 실태(부채가 있는 가구 기준)	173
〈표 4-34〉 부채의 주된 원인(1순위)	174
〈표 4-35〉 부채의 주된 원인(2순위)	175
〈표 4-36〉 최근 1년 간 부채규모 변화	176
〈표 4-37〉 부채감소의 주된 방법	177
〈표 5-1〉 보훈대상자의 삶의 만족	181
〈표 5-2〉 보훈대상자의 삶에 대한 가치 평가	182
〈표 5-3〉 보훈대상자의 문화 및 여가생활 관심 정도	183
〈표 5-4〉 보훈대상자의 주요 여가활동	184
〈표 5-5〉 보훈대상자의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한 사람	185
〈표 5-6〉 보훈대상자의 관광여행	186
〈표 5-7〉 보훈대상자의 여가생활 만족	187
〈표 5-8〉 보훈대상자의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감염병 염려 제외)	188
〈표 5-9〉 보훈대상자의 희망하는 여가활동	189
〈표 5-10〉 보훈대상자의 오락문화 지출 비용	190
〈표 5-11〉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192
〈표 5-12〉 보훈대상자의 단체 참여 경험 및 참여 단체	193
〈표 5-13〉 보훈대상자의 자원봉사 경험 및 참여의사	194
〈표 5-14〉 보훈대상자의 계층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	195
〈표 5-15〉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신뢰	196
〈표 5-16〉 가족관계 만족도	197
〈표 5-17〉 가족유형과 성별 가족도움 여부	199
〈표 5-18〉 연령별 가족도움 여부	201
〈표 5-19〉 대상자별 가족도움 여부	202
〈표 5-20〉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연락 빈도	204
〈표 5-21〉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만남 빈도	205
〈표 5-22〉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제도(1순위)	207
〈표 5-23〉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208
〈표 5-24〉 보훈대상자의 건강 상태	209
〈표 5-25〉 지난 1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진료 받은 주요 질환	210
〈표 5-26〉 복합질환 보훈대상자 현황	211



〈표 5-27〉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212
〈표 5-28〉 보훈대상자 의료기관 의료이용실적	213
〈표 5-29〉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 (입원 외래/ 민간보험 가입여부 추가)	215
〈표 5-30〉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 및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	216
〈표 5-31〉 치료 포기 경험 및 포기 사유	218
〈표 5-32〉 보훈 의료지원 개선 항목	219
〈표 5-33〉 의료비 환급 가능한 민간 의료보험 가입 여부	220
〈표 5-34〉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221
〈표 5-35〉 우울 척도(CES-D11) 점수	223
〈표 5-36〉 마음건강 어려움 여부 및 유형	224
〈표 5-37〉 마음건강 어려움 극복을 위해 원하는 서비스	225
〈표 5-38〉 흡연 여부 및 정도	226
〈표 5-39〉 음주횟수	227
〈표 5-40〉 음주량	227
〈표 5-41〉 과도한 음주 빈도	228
〈표 5-42〉 경제활동 참여 상태	230
〈표 5-43〉 직장구직기간	231
〈표 5-44〉 주당 근무 일수, 주당 근무 시간 및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232
〈표 5-45〉 종사하고 있는 산업 종류	233
〈표 5-46〉 종사하고 있는 직업 종류	235
〈표 5-47〉 사업장 종사자 규모	236
〈표 5-48〉 취업자의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238
〈표 5-49〉 현 직장 관련 만족도 점수	239
〈표 5-50〉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험 및 경험횟수	240
〈표 5-51〉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	242
〈표 5-52〉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	243
〈표 5-53〉 구직활동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44
〈표 5-54〉 희망하고 있는 직업 종류	245
〈표 5-55〉 희망하는 월소득 및 직업선택 요인	247
〈표 5-56〉 보훈 관련법에 따른 취업 수강료 지원 경험 및 도움 여부	248
〈표 5-57〉 제대군인의 연령별 분포	250



〈표 5-58〉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험 및 경험횟수(제대군인)	250
〈표 5-59〉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제대군인)	251
〈표 5-60〉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제대군인)	252
〈표 5-61〉 구직활동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제대군인)	252
〈표 5-62〉 희망하고 있는 직업 종류(제대군인)	253
〈표 5-63〉 희망하는 월소득 및 직업선택 요인(제대군인)	254
〈표 5-64〉 보훈 관련법에 따른 취업 수감료 지원 경험 및 도움 여부(제대군인)	254
〈표 5-65〉 노후생활을 위한 주된 금전적 준비수단	255
〈표 5-66〉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수급여부와 월평균 수령액(배우자포함)	257
〈표 5-67〉 노후생활 월평균 생활비	258
〈표 5-68〉 노후를 위한 금전적 준비 상황 평가	259
〈표 5-69〉 노후 희망 주거형태	260
〈표 5-70〉 희망 양로 및 요양시설 유형	261
〈표 5-71〉 노후 희망 개인주택 유형 및 희망 동거자	262
〈표 5-72〉 희망 거주 지역 형태	263
〈표 5-73〉 노후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264
〈표 5-74〉 장기요양급여 수급 여부 및 지급받은 급여의 종류	265
〈표 5-7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여부 및 받고 있는 서비스	266
〈표 5-76〉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	267
〈표 5-77〉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여부와 희망 안장 장소	268
〈표 5-78〉 희망 안장 지역 선호 이유	269
〈표 5-79〉 희망하는 장례 유형	270
〈표 5-80〉 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71
〈표 5-81〉 2018년도/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비교	272
〈표 5-82〉 보훈급여금 인지 여부	273
〈표 5-83〉 보훈급여금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75
〈표 5-84〉 교육지원 인지 여부	276
〈표 5-85〉 교육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77
〈표 5-86〉 취업 지원 인지 여부	278
〈표 5-87〉 취업 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80
〈표 5-88〉 대부 지원 인지 여부	281



〈표 5-89〉 대부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82
〈표 5-90〉 의료지원 인지 여부	283
〈표 5-91〉 의료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85
〈표 5-92〉 양로보호 인지 여부	286
〈표 5-93〉 양로보호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87
〈표 5-94〉 보철구지원 인지 여부	288
〈표 5-95〉 보철구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89
〈표 5-96〉 수송시설 지원 인지 여부	290
〈표 5-97〉 수송시설 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92
〈표 5-98〉 휴양시설 이용 인지 여부	293
〈표 5-99〉 휴양시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94
〈표 5-100〉 사망시 지원 인지 여부	295
〈표 5-101〉 사망시 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96
〈표 5-102〉 예우 지원 인지 여부	298
〈표 5-103〉 예우 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299
〈표 5-104〉 재가복지 서비스 인지 여부	300
〈표 5-105〉 재가복지 서비스 경험 여부 및 만족도	301
〈표 5-106〉 이용료 감면 인지 여부	302
〈표 5-107〉 이용료 감면 경험 여부 및 만족도	303
〈표 5-108〉 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이용 여부	304
〈표 5-109〉 2018년도/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경험 여부 비교	305
〈표 5-110〉 의료비 지원	306
〈표 5-111〉 노인 급식 지원	307
〈표 5-112〉 물품 지원	308
〈표 5-113〉 가정 봉사 서비스	309
〈표 5-114〉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310
〈표 5-115〉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서비스	311
〈표 5-116〉 이동 편의 서비스	312
〈표 5-117〉 주야간 보호 서비스	313
〈표 5-118〉 노인 일자리사업	314
〈표 5-119〉 장애인 일자리사업	315

〈표 5-120〉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316
〈표 5-121〉 사회 교육 서비스	317
〈표 5-122〉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 정도	318
〈표 5-123〉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	319
〈표 5-124〉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 이유	320
〈표 5-125〉 보훈대상자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322
〈표 5-126〉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에 불만족 하는 이유	323
〈표 5-127〉 국가보훈처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 1순위	324
〈표 5-128〉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가장 힘든 점	326
〈표 6-1〉 조사대상 가구원 수	331
〈표 6-2〉 조사대상 연령대	332
〈표 6-3〉 현 거주 주택 입주형태	332
〈표 6-4〉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333
〈표 6-5〉 가구 월평균 비소비지출	334
〈표 6-6〉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 소득	335
〈표 6-7〉 연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336
〈표 6-8〉 소득계층별 가구분포	336
〈표 6-9〉 가구의 자산	337
〈표 6-10〉 가구의 순자산	338
〈표 6-11〉 부채의 규모(전 가구 기준)	338
〈표 6-12〉 1년 전 대비 부채 변화와 상환 방법에 대한 비율	339
〈표 6-13〉 가구원 수	340
〈표 6-14〉 거주 주택 입주 형태	341
〈표 6-15〉 가계지출	341
〈표 6-16〉 연간 가구 소득	342
〈표 6-17〉 가구 자산	342
〈표 6-18〉 가구 부채	343
〈표 6-19〉 지난 1년간 주된 여가 유형	343
〈표 6-20〉 향후 희망 여가 유형	344
〈표 6-21〉 지난 1년간 여행 경험	344
〈표 6-22〉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345



〈표 6-23〉 지난 1년간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왕래 빈도	345
〈표 6-24〉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연락 빈도	346
〈표 6-25〉 전반적인 건강 상태	346
〈표 6-26〉 병원 진료 여부	347
〈표 6-27〉 경제활동 상태	347
〈표 6-28〉 현재 하는 일의 정부 지원 일자리 여부	348
〈표 6-29〉 현재 하는 일의 직종	348
〈표 6-30〉 주거 위치	350
〈표 6-31〉 거주 주택 점유형태	350
〈표 6-32〉 지난 1년간 가구 평균 월 소득 및 지출	351
〈표 6-33〉 주관적 건강상태	352
〈표 6-34〉 일상생활 스트레스	352
〈표 6-35〉 건강행태: 현재 흡연	353
〈표 6-36〉 참여 여가	354
〈표 6-37〉 여가 만족도	355
〈표 6-38〉 여가 불만족 이유	355
〈표 6-39〉 자원봉사 활동 참여 현황	356
〈표 6-40〉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356
〈표 6-41〉 건강 상태 인식	357
〈표 6-42〉 스트레스 정도	357
〈표 6-43〉 노후준비 방법	358
〈표 7-1〉 2020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 월 기준	362
〈표 7-2〉 소득 계층 구분 기준선 : 월 기준	364
〈표 7-3〉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추정 I : 경상소득 적용	366
〈표 7-4〉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추정 II : 가처분소득 적용	367
〈표 7-5〉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추정 II : 시장소득 적용	368
〈표 7-6〉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	369
〈표 7-7〉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372
〈표 7-8〉 공적이전의 중간소득계층·고소득층 증감 효과	374
〈표 7-9〉 보훈급여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	376
〈표 7-10〉 보훈급여금의 중간소득계층·고소득층 증감 효과	378



〈표 7-11〉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비교	379
〈표 8-1〉 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및 만족도	397

부록

〈부표 1〉 보훈유형별 추출결과	415
〈부표 2〉 시도별 추출결과	415
〈부표 3〉 보훈유형별 제공급 비례배분	416
〈부표 4〉 국가유공(본인)의 상이등급별 제공급 비례배분	417
〈부표 5〉 보훈유형별 제공급 비례배분	417
〈부표 6〉 보훈유형별(상이등급 포함) 조사모집단 특성 비율	418
〈부표 7〉 보훈유형별(상이등급 포함) 추출표본 특성 비율	419
〈부표 8〉 보훈유형별(상이등급 포함) 특성 차이(%p)	420



요약

[요약그림 1] 월 평균 가계 소비지출	14
[요약그림 2] 연간 평균 가구 소득	16

본문

[그림 1-1] 사행수행 체계도	50
[그림 2-1] 국가보훈대상자 추이 및 전년도 대비 증감률	58
[그림 2-2] 보철구 지급 절차	77
[그림 2-3] 2020년도 취업 지원 실시기관별 취업실적	79
[그림 2-4] 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명패 부착 체계	88
[그림 4-1]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가구원 수	126
[그림 4-2] 국가보훈대상자 평균연령	127
[그림 4-3] 월 평균 가계 소비지출	152
[그림 4-4] 연간 평균 가구 소득	158
[그림 4-5] 보훈대상자 가구 유형별 소득구성 비율 현황	160
[그림 4-6] 연간 보훈대상자 개인 소득	163
[그림 4-7] 보훈대상자 개인 소득구성 비율 현황	165
[그림 8-1]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가구원 수, 연령대 비중 변화	387
[그림 8-2]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상태 변화	387
[그림 8-3] 국가보훈대상자 공적연금 가입 형태 변화	388
[그림 8-4]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변화	389
[그림 8-5]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입주 형태 변화	390
[그림 8-6] 국가보훈대상자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변화	391
[그림 8-7] 국가보훈대상자 경상소득 원천별 구성비 변화	392
[그림 8-8] 국가보훈대상자 공적이전소득 원천별 구성비 변화	393
[그림 8-9] 국가보훈대상자 사회적 지지체계 변화	399
[그림 8-10] 국가보훈대상자 사회적 계층인식 변화	400
[그림 8-11] 국가보훈대상자 주관적 건강 상태 변화	401
[그림 8-12] 국가보훈대상자 의료기관 의료이용 실적 변화	402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여 이루어져, 대상자의 가입 기간 또는 금전적 기여를 바탕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회보험과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공공부조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가짐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과 변화하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
 - 통합적 접근과 정기적 조사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선행된 실태 파악 조사들은 경제생활에 한정되거나, 대상별로 산발적으로 조사가 실시되는 한계가 있었음
- 체계적인 보훈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례적이고 포괄적인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2012년 2월)에 따라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게 되었음
 - 2015년 첫 번째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2018년 조사에 이어 2021년은 세 번째 조사가 수행되는 해임
 -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정책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 분석과 그에 기반한 정책함의 도출,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통계 등을 제공하는데 있음

- 조사(지)표 설계, 조사수행 지원, 실태조사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 및 정책함의 제공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과제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지표 선정 및 조사표 개발, 통계청 통계대행과의 실태조사수행의 지원,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과 정책함의 도출로 구성됨
- 본 보고서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 배경과 목적·연구 내용 및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제도 현황, 실태 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실태 분석, 국가보훈대상자 개인의 생활실태 및 인식 현황 분석, 타 조사 및 유사 집단과의 비교, 소득계층별 규모와 소득보장정책 효과성 분석, 주요 결과 요약 및 정책함의 제시

□ 연구 방법

- 통계작성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제시하는 연구 방향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표 작성, 조사실시 지원,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함의 제시 등을 수행하며, 통계청이 표본설계 및 조사수행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 타 조사결과를 이용한 비교정태분석과 2018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한 동태분석
- 선행연구, 정책자료 등 문헌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제도 현황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별 분류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구체적 적용대상 요건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포함됨을 알 수 있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하며, 8개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별 분류에 있어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유족을 구분하여 다음의 9개 유형으로 구분함
- 유족의 거의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포함되며, 전체 보훈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음

〈요약표 1〉 보훈대상자 분류: 9개 유형

구분	대상자 유형
1	독립유공자
2	국가유공자(본인)
3	국가유공자(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5	참전유공자
6	보훈보상대상자
7	5·18민주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9	제대군인

제2절 국가보훈대상자 규모 추이 및 현황

□ 국가보훈대상자 규모 변화

- 2000년 이후 보훈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훈대상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9년 이후 감소하여 현재(2021년 10월) 84만 명
 - 보훈대상자 규모 증가 요인으로는 상이 7등급 신설(2000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2002년), 5.18 민주유공자 편입(2002년), 특수임무수행자 편입(2002년), 6·25참전유공자 편입(2008년) 등
 - 보훈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사망 등은 주요 감소 요인

□ 보훈대상자의 연령 분포

- 보훈대상자 전체 평균 연령은 72세
- 6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의 84.4%
 - 세부적으로는 70세 이상 68.5%, 60대 15.9% 순

□ 보훈대상자의 지역 분포

- 전체 보훈대상자 중 44.8%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

제3절 주요 보훈정책 현황

- 보훈정책 서비스 항목은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및 보철구 지급, 취업 지원, 이동보훈복지서비스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수송시설 이용 및 보철용 차량 지원,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양로·양육 및 보훈복지타운 입주 지원,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생활용품 지원, 보훈예우 지원, 기타 복지 지원 등임
- 보훈급여금이란 국가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의미로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임

- 교육 지원은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과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학습보조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임
- 의료 지원 및 보철구 지급은 국가를 수호하다 부상을 입었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과 보철구 등을 제공하는 것임
- 취업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훈정책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동보훈복지서비스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복지 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수송시설 이용 지원은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보철용 차량 지원은 LPG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장기저리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생활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을 우선 공급하고 있음
- 양로 지원은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를 지원하며, 사후에는 묘지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임
- 노후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령 국가유공자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예우 확대 및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보훈예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지원 등 기타 복지 지원을 하고 있음

제3장 실태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제1절 기존 실태조사 검토

-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조사표 개발을 위해 참조한 기존 관련 실태조사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국가보훈처에서는 생활실태지표를 개발하여 국가유공자 전수를 대상으로 1974년, 1976년, 1979년, 1988년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그러나 투입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에 비해 실질적인 활용도 문제 등이 지적되어(국가보훈처, 2011), 1988년 전수조사 이후에는 표본을 선정하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함
 - 그 간의 생활실태조사 진행 과정들이 축적됨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의 조사표 문항 구성, 목적, 대상 등이 보다 구체화 됨
 - 초기의 생활실태조사는 실제 생존 및 거주지 주소 여부 등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1985년 이후 생활수준별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보훈정책 지원 근거자료나 정책수요 파악의 목적에 따라 실시됨

제2절 본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를 조사하여 국가보훈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를 구축
- 조사내용
 - 가구 조사: 가구 일반사항, 주거상황, 가계지출, 가계소득, 자산, 부채 등
 - 개인 조사: 보훈대상자의 문화/여가 생활, 사회참여, 가족관계, 보건의료 이용, 경제활동, 노후 보장, 보훈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 등

□ 조사방법

- 대면 면접 방식, 필요 시 조사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자기기입 방식을 병행
(조사수행 기간은 2021년 9월 24일 ~ 10월 5일. 총 12일간)
- 조사기준시점
 - 조사항목에 따라 인식과 자산, 부채와 같은 고정시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지출과 소득 등 유량(flow)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한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을 기준으로 조사함

제3절 본 실태조사 표본설계

□ 표본추출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등 2021년 3월 31일 기준 보훈대상자 DB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중 655,184명 중 11,000명

□ 표본추출 방법

- 이중추출(Two-phase sampling, Double sampling) 방법 적용
 - 대규모 1상 표본을 집락 추출하여 2상 표본의 층화를 위한 정보 수집, 최종 추출표본의 지역범위를 조정하여 현장조사 효율성 제고
 - 층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1상 추출된 표본을 리스트화하여 2상 표본추출 틀로 활용하고, 최종 추출단위인 보훈대상자를 직접 층화하여 보훈대상자 리스트 추출
- 이번 조사의 표본추출틀로 활용된 통합 조사구는 전국 10,603개(638,173명)

제4절 본 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 가구 조사표

○ 가구 조사표의 주요 영역은 크게 8가지로 분류

- 전체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장애 여부, 만성질환 여부,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상태 등 가구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자산과 부채, 주거환경 등 가구 특성

○ 가구 조사표에서 산출되는 지표들은 전 국민 및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일반 실태조사의 지표와 항목을 기본으로 구성

- 특히, 소득의 관한 조사 문항의 경우, 통계청과 OECD의 소득 분류 체계를 충족하는 항목들로 편성되어 있어 통계청 조사자료 및 OECD 자료와의 국제 비교도 가능함

○ 조사표 변경 사항

- 조사 효율성 고려한 응답 선택지 및 문항 간소화
- 정책 활용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 삭제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단위와 지자체별로 지급된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득 영역의 공적이전소득 문항에 추가

□ 개인 조사표

○ 개인 조사표에서 국내 보훈대상자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보훈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삶의 만족 수준과 가치 평가를 계량화하기 위해 2021년 조사표에 신설

○ 문화 및 여가 분야는 국내 보훈대상자들의 여가활동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정책 입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 주된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한 사람, 국내와 해외 관광여행 횟수, 여가 활용 만족 수준과 불만족 이유,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 유형, 그리고 오락·문화 지출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함

- 사회참여 및 의식 분야는 보훈대상자들이 생활 중에 경험하는 관계망 및 신뢰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생활이나 경제적 곤란, 정서적 곤란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 여부와 참여한 단체 활동 여부와 단체의 종류, 이타적 사회참여로서 자원봉사 활동 경험과 희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람들에 대한 신뢰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가족관계 관련 지표는 보훈대상자가 인식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과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만남 빈도, 연락 빈도 등에 대한 가족 및 대인 관계 실태 문항으로 구성
- 보건의료 분야의 지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건강 상태, 의료 이용 실태, 의료비 부담 수준, 정신건강 및 건강행태 등으로 구성
- 경제활동은 개인에게 있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하며, 사회참여, 건강 유지, 삶의 만족도 제고 등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개인 부문 중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보훈대상자를 위한 경제활동 조사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됨
 - 보훈대상자가 전반적으로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
 - 보훈대상자의 전 생애적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애주기적인 경제활동 정책지원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조사표를 구성
- 노후 보장 분야는 다수의 보훈대상자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고령층이며, 보훈대상자 집단에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이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노후 보장 분야의 조사지표 구성은 노후생활을 위한 금전적 준비 수단,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금액 및 준비 상황에 대한 인식, 수급하고 있는 연금 종류 및 연금액,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여건, 노후에 필요한 서비스 등과 희망하는 안장유형 및 희망 장례방법 등

보훈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들로 구성됨

- 정책서비스 분야는 보훈대상자 및 보훈대상자 가족의 보훈서비스와 그 외 국가지원에 대한 인지 및 경험 여부와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보훈대상자를 위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표 구성
- 보훈대상자 인식과 정책 인식 및 욕구 분야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느끼는 자긍심 정도와 더불어 자긍심 느끼는 이유와 느끼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지원정책 전반에 대하여 만족도와 개선되어야 할 분야를 조사하여 현재 지원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자 하였음
 -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문항을 신설하여,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훈대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제4장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실태 분석

제1절 가구 일반사항

□ 보훈대상자(가구)의 일반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가구규모(가구원 수)는 평균 2.2명이었음
 - 40대 이하와 50대 보훈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수가 2.9명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일수록 가구규모가 작아짐. 국가유공자(유족)과 참전유공자의 가구원 수가 2.2명으로 가장 적었음
 - 2018년 조사에서 평균가구원 수가 2.3명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음
-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2세로 2018년 조사결과 71세보다 약간 높아졌으며, 70대 이상이 전체의 약 65.5%를 차지함
 - 성별로는 남성은 70대의 비중이, 여성은 8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훈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전체의 56.1%로 나타나 이전 조사의 50.3%에 비해 높아져 전체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세부적으로는 초졸 이하 30.0%, 고졸 29.6%, 대졸 이상 26.5%, 중졸 14.0%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초졸 이하의 학력자 비중이 높았음
-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보훈대상자의 90.4%가 가구주였으며, 남성 가구주 비율은 95.9%로 73.2%인 여성 가구주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응답자의 61.9%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함. 하지만, 보훈대상자인 여성의 상당수가 사별(81.4%)로 인해 무배우 상태였음
- 보훈대상자의 62.5%는 비경제활동인구로 2018년 조사에 비해 2%p 정도 감소하였음. 여성의 비경제활동 비율(83.0%)이 남성(56.1%) 보다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져 40대 이하 대상자의 약 68%는 상용근로자였음
 -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순으로 상용직 비율이 높았음
- 전체 보훈대상자 중 44.2%만이 소득(이전소득 제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8년 조사(45.1%)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음
 -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와 고령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소득이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음
- 국가보훈대상자의 26.1%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음.
 - 장애 비율은 80대, 70대, 40대 이하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비율은 연령에 완전 비례하였음,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장애 비율이 45.9%로 가장 높고, 제대군인의 장애 비율이 4.8%로 가장 낮음
-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67.7%로, 2018년 조사에서 나타난 66.9%보다 조금 더 증가하였음
 - 여성의 만성질환 비율은 73.8%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80대 이상에서는 오직 17.3%만이 만성질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대상별로는 고엽제후유의증(87.5%)의 만성질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참전유공자(76.3%)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보훈대상자의 약 58%가 공적연금을 수급하거나 가입하고 있어 2018년 조사결과인 53%에 비해 5%p 증가하였음

- 여성은 연금 수급 및 가입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아서 노후 소득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 4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연금 가입률을 보이고, 80대 이상은 연금 수급의 비율이 2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의 18.3%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였음
- 고엽제후유의(의)증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유족)의 연금 수급률이 높았고,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는 연금 가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가입 혹은 수급 중인 공적연금 종류는 국민연금이 37.8%로 가장 많았음. 2018년 조사에 비해 약 2%p 증가

- 50대인 보훈대상자는 군인연금의 비중(26.4%)이 국민연금 다음으로 높았으며, 제대군인은 약 40%가 군인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 국가보훈대상자 중 2.4%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음. 이는 전체 인구의 생계급여 수급률 2.5%에 비해 낮은 수준

-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에 비해 높고,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이, 보훈대상별로는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의 순으로 수급률이 높게 나타남

○ 보훈대상자의 6.3%가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며, 2018년 조사 당시 수급률 5.9%보다 증가하였음

-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아지며, 5·18민주유공자의 의료급여 수급률이 가장 높았음

- 주거급여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1.7%가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급여는 학령기 자녀를 가구원으로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수급률이 매우 낮았음(0.3%)

제2절 주거상황

□ 주거상황

- 거주 주택 유형을 보면,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8%로 2018년에 비해 5%p가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32%, 연립다세대 거주자가 10.9%, 국민영구임대주택이 5.4%로 조사되었음
- 주택 입주형태를 보면, 2018년 68.1%에서 2021년에는 67.9%로 미미하게 줄어듬. 반면에 전세 9.2%, 보증금 있는 월세 13.4%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
- 현재 거주 주택 가격은 자가 평균 39천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 동 기간 부동산 가격 변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전세와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2018년 8천만 원대에서 2021년 약 97백만 원으로 22.4%가 증가. 월세액 역시 2018년 18만 원에서 2021년 20.2만 원으로 역시 증가
- 2018년과 2021년의 최저주거기준 이하를 보면 소폭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남. 방수, 면적 및 환경기준 모두 2018년 대비 줄어들고 있다. 세 항목 모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보훈대상가구도 2018년과 동일 수준(0.1%) 유지

제3절 가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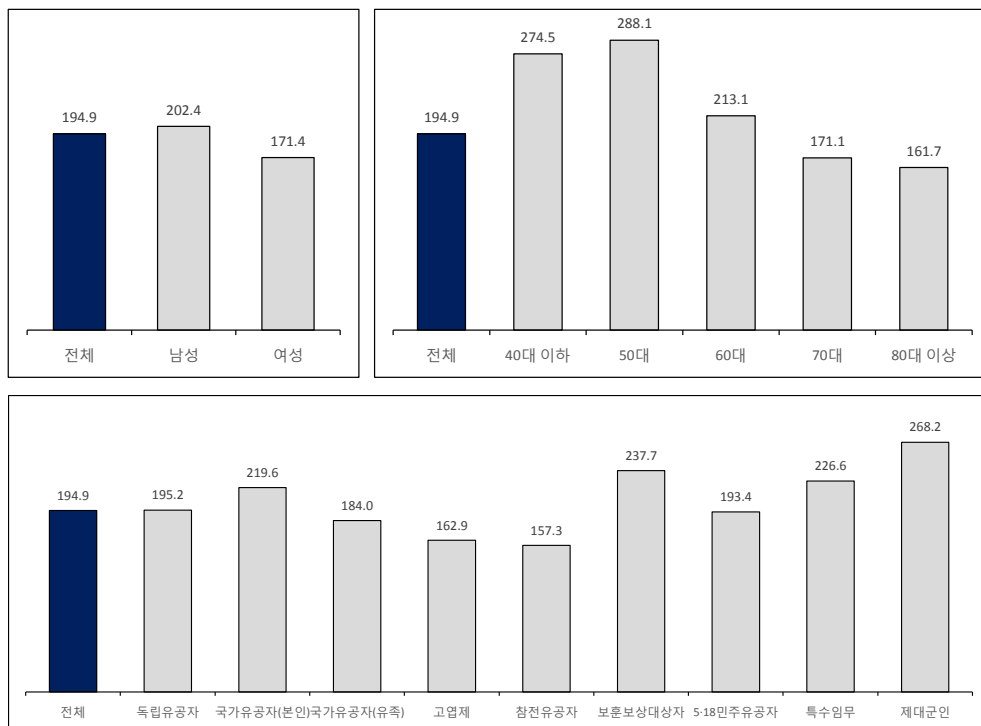
□ 소비지출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월평균 194.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소비지출 중 항목별 비중은 외식비를 포함한 식료품비가 38.6%(75.3만 원)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기타 소비지출 18.3%(35.7만 원), 주거비 13.0%(25.4만 원), 의료비 10.4%(20.2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훈대상자가 남성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202.4만 원으로 여성인 가구의 171.4만 원보다 31만 원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보훈대상자가 50대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288.1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 이하 가구가 274.5만 원, 그리고 60대 이후부터는 최소 6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수준이 낮아짐
- 대상별로 살펴보면, 제대군인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268.2만 원으로 가장 높고, 보훈보상대상자 가구 237.7만 원, 특수임무유공자 가구 226.6만 원, 국가유공자(본인) 가구 219.6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요약그림 1] 월 평균 가계 소비지출

(단위: 만 원)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비소비지출

- 보훈대상자의 가구당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56.1만 원이며, 이 중 사회보험료가 14.6만 원, 이자비용과 같은 기타 비소비지출이 13.3만 원, 세금 12.8만 원, 가구 간 이전 9.4만 원, 비영리단체 이전 6.0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추가적 소비지출 필요 항목

- 추가적 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식료품비가 4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욕구가 24.0%로 높게 나타남
- 식료품비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음에도 추가적 지출 필요성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남

제4절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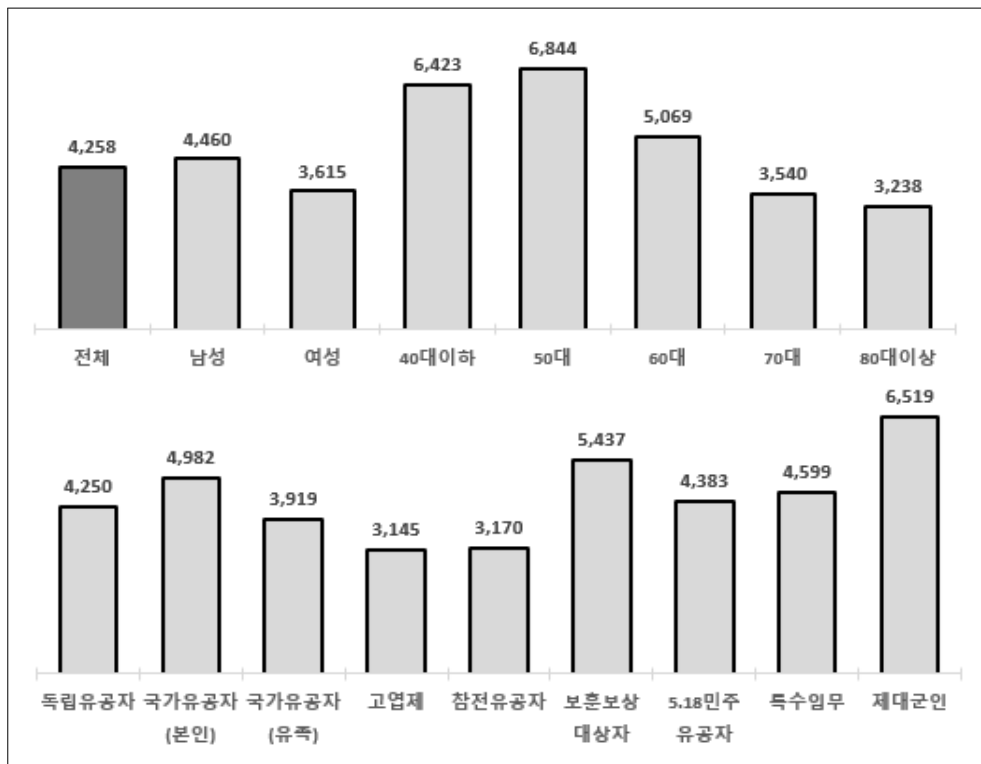
□ 가구 소득

- 보훈대상자 가구의 연간 전체소득(경상소득)은 평균 4,2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은 1,680만 원으로 전체소득의 39.5%, 공적이전소득은 1,692만 원으로 전체소득의 39.7%, 사업소득은 586만 원으로 전체소득의 1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2021년도의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소득의 조사기준시점은 1년 전)
-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상소득이 4,460만 원, 여성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상소득은 3,615만 원으로 다소 차이를 보임
-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부터 70대 보훈대상자 가구에서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80대 이상 보훈대상자 가구에서는 경상소득의 절반 이상을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함
- 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 독립유공자, 고엽제 집단은 전체 소득 중에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50% 이상을 보였고,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제대군인 집단은 전체 보훈대상자 집단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

[요약그림 2] 연간 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 원)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가구 소득 대비 보훈대상자 소득 비율

- 보훈대상자의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을 분담하는 비율은 2018년 93.5%, 2021년 91.7%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훈대상자 가구에 있어 보훈대상자가 벌어들이는 공적이전소득은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큰 도움을 주는 주요 수입원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보훈급여금은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 제도와 함께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 보장 기능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5절 자산 및 부채

□ 자산 및 부채¹⁾

- 보훈대상자 자산을 보면, 2018년 조사에 비해 자산이 증가. 2018년 약 1억 1천만 원에서 2021년에는 약 1억 3천만 원으로 19.2%가 증가. 여기에는 소득 및 점유부동산은 물론 금융재산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대 보훈대상자의 자산 평균이 높았으며, 80대 이상과 40대 이하는 이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
- 부채 규모는 2021년 6,251만 원으로 사업용 부채를 제외할 경우 약 32백만 원 수준으로 2018년 실태조사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
 - 보훈대상자의 자산은 늘어나고 부채는 감소하여 자산의 흑자가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변화
 - 원금상환액은 2021년에는 연간 200.4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27.0% 증가하여, 자산에 대한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음. 이자지출액은 연간 96.8만 원으로 역시 직전 2018년 조사에 비해서는 감소
- 부채를 가지게 되는 요인으로서는 2018년과 같이 주택마련이 약 42%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이 비슷한 14%대로 조사

제5장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인식 분석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행복

- 삶의 만족은 행복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대리지표 중 하나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만족은 0~10점 범위에서 2021년 기준 5.5점으로, 5점을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25.4%로 가장 많음

1) 보훈대상자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은 자산 영역에서 분석하지 않고, 주거 영역에서 분석

-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 평가는 행복의 또 다른 대리지표이고, 나라에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특히 유의미함. 국가보훈대상자의 2021년 삶의 가치 평가는 0~10점 범위에서 평균 5.8점으로 평균 삶의 만족 5.5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제2절 문화 및 여가

- 보훈대상자 중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약간 관심이 있거나 매우 관심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로 2018년의 47.8%에 비해 0.3%p 증가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2021년 보훈대상자의 주요 여가활동을 2018년 1순위 여가활동과 비교하면, 휴식 활동의 비율이 49.6%에서 63.2%로 대폭 증가하였고, 사회 및 친교 활동이 10.6%에서 5.7%로, 문화예술관람이 5.7%에서 1.8%로 감소하였음
- 2018년에 비해 2021년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관심 정도가 유지된 것을 감안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에 보훈대상자 여가활동의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훈대상자와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한 사람은 2021년 혼자가 44.6로 가장 많고, 가족이 35.9%, 친구가 10.7%, 동호회가 7.83%, 직장동료가 1.1%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2018년 응답에 비해 혼자의 응답률이 6.6%p, 가족이 1.4%p 증가했고, 친구와 동호회가 각각 7.3%p, 0.5%p 감소한 것임
- 2021년 보훈대상자 중 관광여행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7.8%로 2018년 47.5%에 비해 29.7%p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된 팬데믹 기간의 영향으로 보임
- 여가생활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보훈대상자는 2021년 21.9%로 2018년 19.5%에 비해 2.4%p 증가했음

-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보훈대상자는 2018년 43.3%에서 31.4%로 11.9%p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여가 만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임
- 2021년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보훈대상자의 이유를 2018년과 비교하면, 경제적 부담의 응답률이 46.0%에서 41.3%로 다소 감소한 반면, 경험 부족이 1.8%에서 3.5%로 1.7%p, 건강 문제가 41.3%에서 42.5%로 1.2%p 증가했음
- 희망하는 여가활동 종류로서 관광활동과 문화예술관람의 응답률은 2018년 32.4%와 6.0%에서 각각 25.0%와 2.4%로 7.4%p, 3.6%p 감소한 데에 비해, 휴식 활동의 응답률은 25.4%에서 36.9%로 11.5%p 증가했음
- 보훈대상자의 월평균 오락 및 문화 지출은 2021년 약 6.6만 원으로 2018년 6.9만 원에 비해 감소하였음

제3절 사회참여 및 인식

- 집안일 도움에 대해 지지체계가 없다는 응답이 2018년 14.3%에서 2021년 14.7%로 0.4%p 증가하였고, 돈을 빌려야 할 경우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는 같은 기간 35.3%에서 36.5%로 1.2%p,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는 18.0%에서 16.6%로 1.4%p 각각 감소하였음
- 특히 경제적 곤란에 대한 지지체계 부재가 가장 높아,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음
- 친목 및 사교, 종교, 취미 및 레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유형의 단체 참여 경험률도 2018년 46.2%에서 2021년에 24.6%로 19.8%p 감소했음
- 특히 보훈대상자의 참여 단체 중 친목 및 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2018년 51.1%에서 2021년 39.4%로 11.7%p, 보훈단체가 같은 기간 11.9%에서 8.6%로 3.3%p 감소하였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보훈대상자는 2021년 8.7%로 2018년 13.8%에 비해 감소하였고, 향후 참여의사도 2018년 20.3%에서 2021년 18.6%로 다소 감소하였음
- 보훈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계층 의식은 2021년에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률이 6.6%, 중간층이라는 응답률이 56.0%, 하층이라는 응답률이 37.4%로 낮은 편임
 - 하지만 2018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률은 2.7%에서 3.9%p, 중간층의 응답률은 44.4%에서 11.6%p 증가했고, 하층의 응답률은 52.8%에서 15.4%p 감소했음
- 보훈대상자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17.8%에서 2021년 17.1%로 0.7%p 감소하고,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60.2%에서 2021년 63.8%로 3.6%p 증가하였음

제4절 가족관계

- 보훈대상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하는 경향이 있음
 - 40대 이하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3.9점인 반면, 70대 이상은 3.6점임
- 가족으로부터 지원 또는 도움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높지만, 지원의 유형 중 현금과 현물지원과 같은 경제적 도움은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배우자로부터 청소, 식사, 세탁 등의 도구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88.0%, 반면 동거자녀와 비동거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각각 60.0%, 26.9% 임
 - 비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 현금과 현물지원을 받는 비율은 각각 47.1% 44.6%

인데, 부모를 직접 부양하지 못하는 비동거 자녀는 경제적 지원의 형태를 통해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응답자 성별과 지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청소, 식사 등의 도구적 도움의 경우 남성이 여성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86.8%이지만, 여성의 경우 해당 비율은 73.5%로 상대적으로 낮음. 반면에 경제적 도움의 경우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원의 비율이 높음

○ 여성은 함께 생활하는 자녀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여성이 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76.7%지만 남성들은 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이 50.1%로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여성들이 사별하여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도움의 유형과 정도가 응답자의 가족형태와 긴밀하게 연관됨을 보여줌.

□ 정서적 도움의 경우 고엽제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비율이 89.8%로 가장 높았으며, 도구적 도움은 제대군인이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91.7%로 가장 높았음. 간병, 병원동행의 경우 고엽제 피해자가 8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경제적 도움에서 현금지원은 고엽제 피해자가 동거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50.7%로 가장 높았으며, 현물지원의 경우에도 고엽제 피해자가 동거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5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제5절 보건 의료

□ (주관적 건강 상태) 보훈대상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결과를 보였음

○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매우 나쁘다+나쁜 편이다)는 2018년 대비 1.2%p 감소하였고, 반대로 좋다(좋은 편이다+매우 좋다)는 응답은 1.2%p 증가하였음

- 걷기, 스스로 목욕과 옷입기, 일상 활동에 지장, 통증이나 불편감, 불안 및 우울 등 항목별 건강 상태도 2018년 비해 모든 항목에서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결과를 보였음
- (주요 질환) 보훈대상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고혈압(22.3%) > 관절·척추 등 근골격계질환(19.1%) > 당뇨병(11.6%) > 심혈관계질환(9.0%) 순으로 나타남
- (복합질환) 지난 1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보훈대상자는 평균 1.8개의 질환을 갖고 있었고, 50.2%는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과 비교해볼 때, 보훈대상자 의료기관 이용자 비율은 입원, 외래, 약국 모두에서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일반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의 의료이용량 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음
- 보훈대상자의 2018년 대비 입원자 비율은 5.6%p, 외래이용자 비율은 8.4%p 감소하였음
- (의료비 부담) 보훈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보훈대상자의 36.9%는 의료비 부담(매우 부담됨 + 부담됨)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38.2%에 비해 1.3%p 감소한 결과임
-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 2021년 전체 보훈대상자의 연간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은 약 8.0% 수준으로 2018년 9.1%에 비해 1.1%p 감소하였음
- 가구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도 전체 보훈대상자 가구의 23.1%로 2018년 대비 3.3%p 감소함
- (미충족 의료) 지난 1년간 몸이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보훈대상자는 2018년과 비교해 0.8%p 감소함.
- (우울정도) CES-D11을 활용하여 보훈대상자의 우울 증상을 분석한 결과 보훈

대상자의 평균 우울점수는 16.2점으로 2018년 18.2점으로 우울성향이 2.0점 감소하여 신체건강 수준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수준도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건강행태: 흡연) 보훈대상자의 흡연율은 15.4%로 나타나 일반국민의 흡연율 18.4%보다 낮은 수준임.

○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3.5개비로 일반국민 중 흡연자의 흡연량 13.0개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

□ (건강행태: 음주) 보훈대상자의 월간 음주율²⁾은 27.3%로 일반국민 78.6%보다 월등히 낮았으며, 고위험 음주율³⁾도 6.2%로 일반국민⁴⁾ 16.3%에 비해 낮았음.

제6절 경제활동

□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활동 현황

○ 일을 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34.6%, 실업 또는 향후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는 2.8%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장 구직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업자의 80% 이상은 1년 이내 직장을 구한 것으로 조사, 반면 11.0%(10명 중 한 명)는 2년 이상 소요

○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전체적으로 단순노무(22.2%), 서비스종사자(15.9%) 순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단순노무, 서비스종사자 비중이 높았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남녀 간의 직업에서의 차이가 보훈 대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중장기적으로 보훈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고숙련 일자리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훈대상자 중 취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를 보면 1~4명 사업장

2) 월간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한 사람의 비율로 한국의료패널 산출기준을 적용함.

3)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시는 날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의 비율

4) 박은자 외. (2020). 201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3.7%, 5~49명 사업장 32.5%로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근무여건, 임금 등 복지혜택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복지 격차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

□ 국가보훈대상자의 구직활동 실태

- 취업자와 현재 또는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비취업자 중 지난 1년간 구직실패(서류 전형 불합격, 면접 전형 불합격 등)를 경험한 보훈대상자는 8.9%, 비취업자이면서 현재 또는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합격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53.3%
-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 응답자 중 46.0%가 고연령(‘나이가 많다’)을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 16.1%, 기술부족 12.9%, 정보부족 6.4%, 인맥없음 5.4% 순
-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구인정보제공(41.2%),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33.1%),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20.0%) 등을 구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
 - 특징적인 점은 30대 이하에서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에 대한 욕구가 5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0대 이상에서는 정보제공 이외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제공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수입(40.0%)과 안정성(35.3%)을 추구, 2018년 조사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수입의 비중(52.9%) 보다 감소하고 이에 반해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비중이 다소 증가한 모습

□ 향후 취업 지원제도의 활용 제고를 위해 현재 국가보훈처의 취업 지원제도의 주 대상인 제대군인 대상에 한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제대군인 중 취업자 및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에서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10.8%로 제대군인의 10명 중 한 명이 구직실패를 경험

-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고연령(30.1%)을,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 21.9%, 기술부족 13.0%, 정보부족 13.0% 순으로 인식
 - 일자리 양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구직의사가 있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직업을 위한 기술훈련 지원과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구인정보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

제7절 노후 보장

□ 금전적 노후준비

- 보훈대상자와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주된 금전적 준비수단은 보훈급여금 46.4%, 공적연금 33.3%, 금융자산 7.6%로, 2018년과 비교할 때 보훈급여금 비중은 낮아지고 공적연금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높아짐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훈급여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
-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 수급하는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의 2.2%에 비해서는 약간 상승함.
- 노후생활에 필요한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00.4만 원,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261.4만 원인 반면, 준비했거나 준비 가능한 월평균 금액은 161.8만 원으로 나타나 약 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전체의 약 50.0%가 노후를 위한 금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 노후 희망 주거 형태 및 지역

-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형태는 개인주택이 79.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양로 및 요양시설 11.2%, 고령보훈대상자 전용임대아파트도 9.7%로 2018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는 없음

-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형태가 양로 및 요양시설인 경우, 희망 양로 및 요양 시설 유형은 보훈요양원 32.5%, 무의탁 보훈대상자 전용 양로시설이 28.1%로 나타남
-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형태가 개인주택인 경우, 희망 개인주택 유형은 단독 주택 43.7%, 단독주택 51.1%였으며, 희망동거자는 배우자가 66.2%, 자녀는 12.2%임

○ 노후에 희망하는 거주지역 형태는 중소도시 41.7%, 대도시 34.1%, 농어촌 24.1%로 2018년 조사결과와 큰 차이는 없음

□ 노후 희망 서비스

○ 노후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가사간병이 42.1%, 시설보호가 31.8%, 여가활동 7.8%, 이동지원 5.9%, 정서적 지원 5.3%로 제시됨

- 연령대가 낮으면 노후 희망 서비스로 여가활동을 응답한 비중이 높음

○ 전체의 약 10.1%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4등급과 3등급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약 60% 정도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기요양 수급비율이 높아지고, 여성이 남성보다 수급 비율이 높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응답자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안전지원(방문, 전화 등)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51.4%, 일상생활 지원(가사, 이동 활동 지원) 서비스가 30.3%로 제시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73.1%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 도와주기 때문이 24.2%로 나타남

□ 희망 안장 및 장례

○ 응답자 가운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69.4%이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희망 안장 장소의 경우 국립묘지가 전체의 87.3%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묘지 8.9%, 공설 및 사설 공원묘지가 3.1%임
- 안장지역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거주지와의 접근성이 좋아 사후 방문에 편리하기 때문이 전체의 58.3%, 현 거주지와의 접근성이 16.4%, 기타 5.0%로 제시됨
- 향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 유형의 경우 응답자의 38.2%가 매장, 화장 후 자연장 30.1%, 화장 후 야외매장 11.5%, 봉안 시설 내 유골 안치 9.5% 등으로 나타남

제8절 정책 서비스

□ 보훈정책 서비스

- 보훈정책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양로보호, 보철구 지원, 수송시설 지원, 휴양시설 이용, 사망시 지원, 예우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등 서비스에 대하여 인지 여부 및 경험 여부와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정도는 보훈급여금(92.0%), 의료지원(89.7%), 사망시 지원(86.3%), 이용료 감면(66.7%), 양로보호(48.6%)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보훈정책 서비스 이용 경험은 의료지원(73.2%), 보훈급여금(70.5%), 이용료 감면(35.2%) 등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외 제도에 대한 이용 경험은 10% 내외로 나타나고 있었음
 -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경험 여부가 항목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런 결과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서비스 항목들이 바로 의료지원, 보훈급여금, 이용료 감면 등의 제도임을 알 수 있게 함
-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통을 의미하는 중간점(3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망시 지원(3.7점), 이용료 감면(3.7점), 교육지원(3.5점), 수송시설 지원(3.5점), 휴양시설 이용(3.5점), 재가복지 서비스(3.5점) 등 서비스 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훈급여금(2.9점), 양로보호(2.9점) 제도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음

○ 이런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정도를 2018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의료지원, 양로보호, 휴양시설 이용, 이용료 감면 제도에서 인지 수준이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경험 여부에서는 취업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양로보호, 휴양시설 이용, 이용료 감면 서비스 제도에서 경험 수준이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음

-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이용료 감면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항목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음
-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이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의미보다는 보훈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기대 수준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봄

〈요약표 2〉 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만족도	(n)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보훈급여금	92.0	8.0	70.5	29.5	2.9	6,990
교육지원	47.6	52.4	15.7	84.3	3.5	1,677
취업지원	42.4	57.6	10.6	89.4	3.4	1,085
대부지원	39.9	60.1	12.0	88.0	3.3	1,223
의료지원	89.7	10.3	73.2	26.8	3.3	7,246
양로보호	48.6	51.4	3.2	96.8	2.9	313
보철구 지원	31.7	68.3	4.1	95.9	3.3	469
수송시설 지원	46.5	53.5	17.6	82.4	3.5	1,751
휴양시설 이용	35.7	64.3	6.6	93.4	3.5	662
사망시 지원	86.3	13.7	10.4	89.6	3.7	863
예우 지원	43.8	56.2	6.7	93.3	3.2	654
재가복지 서비스	34.2	65.8	4.2	95.8	3.5	383
이용료 감면	66.7	33.3	35.2	64.8	3.7	3,437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 지난 1년간 보훈정책 서비스 외에 의료비 지원 등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음
- 각각의 공공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뿐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로 사회복지 영역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료비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비 지원’(13.8%)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물품지원’(3.8%), ‘방문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3.8%), ‘가사봉사서비스’(3.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 이 외에 ‘노인 일자리 사업’(2.0%), ‘식사 배달 서비스’(1.9%), ‘이동편의 서비스’(1.6%), ‘주야간보호 서비스’(1.5%), ‘노인 급식지원’(1.4%) 사업이 이용 빈도가 높았음
 - 나머지 항목들은 경험비율이 0%대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음
-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공공서비스 경험 정도를 2018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 공공서비스 경험 정도의 연도별 비교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항목은 ‘의료비 지원’이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음
 - ‘의료비 지원’은 2018년도에는 34.2%의 이용 정도를 보였는데, 2021년도에는 13.8%로 그 수준이 상당히 줄어들었음
 - ‘물품지원’,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항목들은 경험 정도가 증가한 반면, ‘의료비 지원’, ‘노인 급식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항목은 경험 정도가 감소하였음

〈요약표 3〉 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있다	없다	계
의료비 지원	13.8	86.2	100.0
노인 급식지원	1.4	98.6	100.0
물품지원	3.8	96.2	100.0
가정봉사 서비스	3.1	96.9	100.0
식사 배달 서비스	1.9	98.1	100.0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서비스	3.8	96.2	100.0
이동편의 서비스	1.6	98.4	100.0
주야간보호서비스	1.5	98.5	100.0
노인 일자리사업	2.0	98.0	100.0
장애인 일자리사업	0.2	99.8	100.0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0.3	99.7	100.0
사회교육서비스	0.8	99.2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9절 정책 인식 및 욕구

□ 보훈대상자는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1.7%이며 이 비율은 2018년 63.0%에 비해 11.3%p 감소한 결과임.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정도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각각 19.3%, 32.4%로서 51.7%가 자긍심을 갖는다고 응답했음

□ 자긍심을 크게 느끼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가 각각 29.5%, 26.2%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이 75.5%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부심이 높음. 70대, 80대 이상의 경우 해당비율이 각각 76.5%, 77.6%를 차지했으며, 보훈대상별로는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의 경우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이 미흡한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한 비율이 지난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5.0%에서 8.4%로 증가했음. 국가발전에 기여한 보훈대상자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증진하는 것도 향후 보훈정책의 과제임

□ 보훈대상자 지원정책 만족도는 ‘만족’, ‘매우 만족’을 합산하여 18.2%인 반면, 만족하지 않는 비율(‘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산)이 42.7%로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2018년 실태조사에서 만족 18.0%, 불만족 45.1%와 비교하면 불만족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임

□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범위의 미흡과 지원수준의 미흡이 각각 45.5%, 40.2%로 주된 이유를 차지함. 이 결과는 2018년 실태조사에서 지원수준 미흡과 지원범위의 미흡이 각각 45.4%, 40.7%로 나타난 것과 상반된 결과이며, 지원수준 미흡정도는 감소했지만, 지원범위 미흡은 증가함.

□ 국가보훈처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 1순위로는 2/3이 조금 못미치는 응답자기 보훈급여금(63.8%)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의료지원이 16.9%, 양로지원 5.2% 순이었음

□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운 점이 5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실제로 친인척과의 만남이나 연락 빈도가 낮아진 결과가 반영된 것임. 다음으로는 힘든 점은 감염우려 29.9%, 소득 감소 8.0% 순이었음.

제6장 타 조사 및 유사집단과의 비교

제1절 개요

□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 집단을 설정하고 보훈대상자와의 집단 간(또는 조사 간) 실태 및 인식 또는 생활수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함

- 본 생활실태조사는 이러한 조사들로부터 조사지표 및 조사문항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여 주요 변수들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표가 설계됨
- 보훈대상자의 상대적 특성 파악하기 위해서 영역별로는 가구경제상황과 사회인식을 비교하고, 유사한 집단 비교를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교를 실시하였음.
 - 가구 일반사항과 경제상황 비교를 위해서는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회인식 비교에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노인 및 장애인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각각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음.

제2절 가구 경제 상황: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로 본 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일반국민의 일반사항 및 가계상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함
- 가구의 일반적인 사항 및 주거상황을 비교해보면, 먼저 보훈대상자의 경우 1~2인 가구원 수 비중이 약 70% 정도로 전체 가구(약 51%)와 비교시 높게 나타남
- 또한 보훈대상자의 경우 60대 이상의 비중이 82.5%에 이르며 이는 전체 가구의 60대 이상 가구주 비율 39.4%와 2배 정도에 해당
- 입주형태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자가 보유 비율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보훈대상자 가구에서 자가 보유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반면 전세의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임
- 보훈대상자 가구보다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산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세부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임.
 - 두 집단의 소비지출을 비교해보면 식료품비와 오락·문화, 의류·신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이 포함된 기타소비지출을 제외한다면 공통적으로 주거비가 소비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전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고령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보훈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가구 소득의 40% 정도를 차지하며, 전체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63%를 차지하는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9.8%에 불과.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높음을 시사
- 보훈대상자 가구의 평균 자산은 42,140.8만 원으로 전체 가구 50,253.4만 원의 약 84% 정도로 전체 가구 평균자산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보훈대상자의 금융자산은 전체 가구 금융자산의 약 46.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실물자산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보훈대상자의 평균 부채규모는 6,251만 원(가계용 3,250.7만 원, 사업용 3,000.3만 원)으로 전체 가구 8,801.4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 가구와 비교 시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1~2인 가구 원수 비중과 더불어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고령화된 1~2인 가구에 대한 욕구와 실태파악과 함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다만, 현재도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으로 소득보전 이외의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3절 일반 실태: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 노인실태조사와의 비교분석

○ 가구 및 경제상황

- (평균 가구원 수) 노인실태조사에서는 2.0명, 보훈실태조사에서는 2.2명임
-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 주택 입주형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자가 79.8%, 전세 9.8%, 보증금 있는 월세 7.1%, 기타(무상) 2.8%, 보증금 없는 월세 0.5%로 나타난 반면, 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자가 67.9%, 보증금 있는

월세 13.4%, 전세 9.2%, 기타(무상) 7.7%, 보증금 없는 월세 1.8%로 제시

- (월평균 소비지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147.5만 원, 보훈실태조사에서는 194.9만 원으로 나타남
- (연간 가구 소득)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전체 평균 3,026.5만 원, 보훈실태조사에서는 4,257.6만 원으로 나타남
 - 보훈실태조사의 경우 65세 미만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공적이전소득이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가구자산)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평균 부동산자산액이 26,182.7만 원, 평균 금융자산액 3,212.8만 원, 평균 자동차 등 기타자산액 1,120.1만 원, 보훈실태조사에서는 각각 38,226만 원, 3,071.9만 원, 842.9만 원임
- (가구부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평균 부채액 1,892.8만 원, 보훈실태조사에서는 평균 부채액 3,244.3만 원임
-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 4.6%, 의료급여만 수급하는 경우는 2.4%, 보훈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 9.2%, 의료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4.9%임

○ 사회참여 및 가족관계

- (주된 여가유형)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취미 및 오락활동 30.0%, 사회 및 기타 활동 30.5%, 휴식활동 26.0%이며, 보훈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은 휴식 활동 71.4%, 취미·오락활동 10.1%, 사회 및 기타활동 6.1%로 제시
- (향후 희망 여가 유형)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휴식활동 41.3%, 취미 및 오락 활동 22.8%, 관광활동 8.9%, 사회 및 기타활동 6.7%로 나타났으며 보훈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휴식활동 45.3%, 관광활동 20.9%, 취미 및 오락활동 12.0%로 제시됨
- (지난 1년간 여행경험)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있다 27.6%, 보훈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 10.1%
-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전체의 2.9가 있다고 응답

했으며, 보훈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6.9%가 있다고 응답

- (친인척 왕래빈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연 1~2회 왕래가 45.9%, 분기 1~2회 26.8%, 한 달 1회가 12.0%, 왕래 없음 10.6%, 보훈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은 연 1~2회 왕래 40.0%, 왕래 없음 26.8%, 분기 1~2회 14.1%, 한 달 1회 11.8%로 나타남
- (친인척 연락빈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분기에 1~2회 30.8%, 한 달 1회 25.4%, 연 1~2회 18.6%이었으며, 보훈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은 연 1~2회 22.9%, 한 달에 1회 22.3%, 왕래 없음 17.7%, 분기 1~2회 17.0%임

○ 보건의료

- (전반적 건강 상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건강한 편 44.8%, 그저 그렇다 30.8%, 나쁜 편 17.6%, 매우 건강 4.5%, 매우 나쁜 편 2.3%, 보훈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은 나쁜 편 39.7%, 보통 31.3%, 건강한 편 14.8%, 매우 나쁜 편 13.6%, 매우 건강한 편 0.6%로 제시
- (병원 진료 여부) 지난 1개월 간 진료 여부를 질문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70.6%, 지난 1년간 진료 여부를 질문한 보훈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은 있다고 응답한 비중 92.0%

○ 경제활동

- (현재 경제활동 상태) 노인실태조사의 노인은 36.9%가 현재 일하고 있으며, 보훈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20.5%가 일하고 있음
-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 가운데 노인실태조사에서는 41.8%, 보훈실태조사에서는 15.1%가 정부지원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 (현재 하는 일의 직종)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 가운데 노인실태조사에서는 48.7%가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5%, 서비스종사자 12.2%, 보훈실태조사에서도 단순노무종사자 34.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9.6%, 서비스종사자 14.9%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실태조사와의 비교분석

○ 상이 집단 및 비상이 집단 보훈대상자의 주거위치를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 중 97.3%가 지상에 거주하고 지하가 1.6%, 반지하가 1.1%인 데에 비해 보훈대상자 중 98.5%가 지상에 거주하고 지하가 0.3%, 반지하가 1.1%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보훈대상자 중 지상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간 높음
- 보훈대상자 중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의 67.9%인 데에 비해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인 중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58.2%로 보훈대상자 보다 낮은 수준이고,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전체의 22.0%로 보훈대상자 13.4%에 비해 다소 높음
-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월평균 소득은 199만 원이고 월평균 총지출은 178.5만 원 수준인 반면, 보훈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354.8만 원이고 월평균 총지출은 251.0만 원 수준으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인의 소득 및 지출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면, 장애인의 응답률은 14.9%인데 보훈대상자는 22.3%로 7.4%p 차이임.
-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꼈거나 많이 느꼈다는 응답률은 장애인이 33.6%로 전체 보훈대상자 22.8%에 비해 10.8%p 높음
- 장애인의 12.4%가 현재 흡연하는 반면, 보훈대상자의 흡연율은 15.4%로 장애인에 비해 3.0%p 높은 수준임

제4절 인식과 욕구: 사회조사

□ 보훈대상자의 여가 만족도의 경우 만족(‘만족’, ‘매우 만족’)하는 비율보다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조사결과는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보훈실태조사에서 여가 만족도는 만족하는 비율이 21.9%, 불만족하는 비율이 31.4%이며 사회조사에 따르면 만족하는 비율은 27%이며 불만족하는 비율은 23.6%임. 보훈대상자는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높은 연령, 장애 등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로서 보훈대상자는 건강문제(42.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41.3%), 시간부족(7.5%)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일반국민의 경우 경제적 부담(46.1%)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음
 - 이러한 경향은 보훈대상자의 연령대와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가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즐기지 못하는 제약으로 작용함을 보여줌
- 보훈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좋다(‘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합산)고 응답한 비율은 22.2%에 불과한데, 이는 일반국민들의 거의 절반(49.4%)이 건강하고 응답한 것에 비해 절반 정도임
-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도 보훈대상자는 45.2%, 일반국민은 14.3%로 큰 차이가 나타났음. 이는 보훈대상자의 높은 연령대, 장애 비율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
- 스트레스의 경우 실태조사와 사회조사의 응답항목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용이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보훈대상자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조금’, ‘많이’ 합산)이 75.4%로 일반국민 45.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음
- 보훈대상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안정된 직장 부족, 건강하지 못한 상태 등이 스트레스를 낳는 요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보훈대상자의 노후준비 방법에서는 보훈급여금(4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일반국민의 경우 국민연금이 55.2%로 가장 높았음. 사회조사의 경우 보훈급여금 응답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 유의할 필요 있음

제7장 보훈정책 효과성 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분포 및 규모

□ 개요 및 측정방법

- 소득계층별 분포 및 규모 추정의 기준선으로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을 활용
- 소득계층 별 분포 파악에는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를 활용하지만 공적 이전과 보훈급여금의 소득보장 효과성 파악에는 경상소득만을 활용하였음
- 소득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은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0%~150%까지는 중간소득계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함
 - 여기서 저소득층은 기준중위 30% 미만의 '빈곤층①'과 기준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하는 '빈곤층②'로 다시 분류

□ 소득계층별 분포 및 규모 추정 결과

- 경상소득을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분포를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은 15.4%, 중간소득계층은 64.8%, 고소득층은 20.4%로 나타남.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저소득층은 약 9%p 감소, 중간소득계층은 6.5%p 증가, 고소득층은 2.8%p 증가
 - 한편 저소득층 중에서 빈곤층①은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②는 전체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처분소득을 적용한 결과 저소득층은 17.7%, 중간소득계층은 66.3%, 고소득층은 16.0%로 나타나 경상소득에 비해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계층은 증가하고 고소득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규모를 보훈대상자의 수로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기준에서 경상소득 적용 시 보훈대상자중 저소득층의 규모는 약 102천 명
 - 중간소득계층은 약 428천 명, 고소득층은 약 135천 명인 것으로 나타남
 - 가처분소득의 경우 경상소득 적용 시보다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계층은 증가

하였고, 고소득층은 감소하였음

- 시장소득의 경우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규모가 경상소득과 가처분 소득에 비해 대폭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규모가 전체 46.3%에 해당하는 약 308천 명으로 추산됨

〈요약표 4〉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

(단위: 명, %)

구분	기준중위소득	저소득층 :		① + ② 50%미만	중간소득계층 (50~150%)	고소득층 (150%이상)	합계
		빈곤층① (30%미만)	빈곤층② (30~50%)				
경상소득 적용		12,305 (1.9)	89,930 (13.5)	102,235 (15.4)	427,633 (64.3)	135,294 (20.4)	655.2 (100.0)
가처분소득적용		19,290 (2.9)	98,444 (14.8)	117,734 (17.7)	441,002 (66.3)	106,426 (16.0)	655.2 (100.0)
시장소득적용		307,970 (46.3)	59,199 (8.9)	367,169 (55.2)	234,802 (35.3)	63,190 (9.5)	655.2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2절 공적이전과 보훈급여금의 효과성

□ 빈곤율 감소 효과

- 기준중위소득 30% 적용 시 공적이전소득은 빈곤율을 96.0% 감소시키고, 보훈급여금은 90.0% 감소시킴
- 기준중위소득 50% 적용 시 공적이전소득은 빈곤율을 72.2% 감소시키고, 보훈급여금은 56.7% 감소시킴
-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보훈급여금의 빈곤 감소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남

〈요약표 5〉 빈곤율 감소 효과

구분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시장소득 적용 A	경상소득 적용 B	감소분%p: A-B	감소율%: (A-B)/A
공적이전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30%	46.3	1.9	44.5	96.0
	기준중위소득의 50%	55.2	15.4	39.8	72.2
구분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보훈급여금 지급전 경상소득 A	보훈급여금 지급후 경상소득 B	감소분%p: A-B	감소율%: (A-B)/A
보훈 급여금	기준중위소득의 30%	18.6	1.9	16.7	90.0
	기준중위소득의 50%	35.5	15.4	20.1	56.7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중간소득계층·고소득층 증감 효과

- 공적이전소득은 중간소득계층을 82.1% 증가시키고, 보훈급여금은 32.9% 증가시킴
- 공적이전소득은 고소득층을 113.5% 증가시키고, 보훈급여금은 25.8% 증가시킴
- 공적이전소득 및 보훈급여금의 중간소득계층 및 고소득층 증가 효과도 큼을 확인할 수 있음

〈요약표 6〉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층 변화 효과

구분		소득계층 비율		소득계층 변화	
		시장소득 적용 A	경상소득 적용 B	증감분%p: B-A	증감율%: (B-A)/A
공적이전 소득	중간소득계층 (기준중위 50~150%)	35.3	64.3	29.0	82.1
	고소득층 (기준중위 150%이상)	9.5	20.4	10.8	113.5
구분		소득계층 비율		소득계층 변화	
		보훈급여금 지급전 경상소득 A	보훈급여금 지급후 경상소득 B	증감분%p: B-A	증감율%: (B-A)/A
보훈 급여금	중간소득계층 (기준중위 50~150%)	48.4	64.3	15.9	32.9
	고소득층 (기준중위 150%이상)	16.2	20.4	4.2	25.8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비교

○ 기준중위소득 30%와 50%를 적용하여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 가구의 노인가구에 비해 보훈대상자 가구에서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기준중위소득 30% 적용 시, 보훈대상자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 가구 빈곤율 및 노인가구 빈곤율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은 보훈대상자 가구에서 더 낮게 나타남.
- 기준중위소득 50% 적용 시,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 가구에 비해 보훈대상자 가구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 가구와 비교해서는 더 낮음. 빈곤율 감소율을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 가구와 노인가구 모두와 비교해볼 때 보훈대상자 가구에서 여전히 빈곤 감소 효과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요약표 7〉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비교

(단위: %)

구분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시장소득 적용 A	경상소득 적용 B	감소분%p: A-B	감소율%: (A-B)/A
기준중위소득의 30% 기준 빈곤계층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46.3	1.9	44.5	96.0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	15.3	2.3	13.0
	노인가구 ¹⁾	35.0	3.8	31.3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 빈곤계층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55.2	15.4	39.8	72.2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	24.3	12.5	11.7
	노인가구 ¹⁾	50.1	24.6	25.5

주: 가구에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노인가구로 정의.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8장 결론

□ 실태조사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 첫째, 조사 시점의 보훈대상자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을 탄력적으로 설계
- 둘째, 조사대상의 높은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을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유지할 필요
- 셋째, 행정자료 결합을 통한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가계 금융·복지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향후 실태조사 연구와 관련한 제안

- 첫째, 다음 번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동일한 조사체계로 수행되는 세 번째 조사가 되면서 3개년의 시계열이 축적되어 총 6년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됨. 본 연구에서 단순 비교에 그친 것과 달리 차기 연구에서는 일정 정도 심층 연구를 통해 변화의 요인과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횡단면적으로도 당해 연도 조사에서 파악된 주요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풍부하게 제시할 필요. 실태조사 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양적연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내용은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 양적연구에서 심층분석이 요구되는 대상유형에 대해 초점집단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임.

□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평가

- 본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한 보훈대상자 및 보훈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을 통해 근거기반 정책수립에 활용
- 이를 위하여 현재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본 실태조사연구의 주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국가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헌신과 그 훈공을 기리고 보답하기 위해 행해지는 정신적·물질적 예우 및 지원의 실시를 의미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여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가입 기간 또는 금전적 기여를 바탕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사회보험제도나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제도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임완섭 외, 2017, p. 21).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경제적·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통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 대한 실태 및 인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및 실태의 파악은 보훈대상자의 특성과 더불어 변화하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는 과정에서 상이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가 고령인구에 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사회보장제도 대상 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정부의 노인과 장애인 대상 정책에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특성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가구원 수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물론 소득, 지출, 자산 등과 같은 가구 경제 특성, 경제활동, 의료비 지출, 여가 등과 같은 주요 개인생활 특성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실태와 인식 및 욕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생활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여기에 더해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상이한 유형으로 구성

되어 있어 이들 유형별로 훈공과 그 보상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보상의 차이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과 정기적 조사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지금까지 보훈대상자 실태 파악을 위한 관련 조사들은 주로 경제생활에 한정되었거나, 대상별로 산발적으로 조사되어왔다는 한계가 있다(임완섭 외, 2014; 임완섭 외, 2018, p. 45). 이에 보훈정책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보훈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정례적이고 포괄적인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에 대한 높아지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을 통해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동 법 제16조에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였다(2012년 2월).

국가보훈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이와 같은 개정에 따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2015년에 실시되었으며, 2018년에 두 번째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상의 두 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실태와 인식 및 욕구는 보훈제도의 발전과 공헌에 대한 적정 수준의 예우 및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2021년은 세 번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 해로써 상기와 같은 목적에 따라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를 바탕으로 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 분석 및 그에 근거한 정책함의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태 및 인식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보훈대상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생활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기초통계 및 다른 유사 대상 조사와 비교할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훈대상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보훈대상자와 유사한 범주적 집단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즉, 일반 국민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 범주적 정책 집단과의 생활수준 및 사회보장 관련 실태를 비교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 통계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2015년 수행된 첫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와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을 범위에서 조사표를 수정하고 유사대상 조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심화된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선정과 조사표 개발, 그리고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과 정책함의 제시로 구성된다. 본 연구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생활실태와 정책수요 그리고 인식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만, ‘생활실태조사’라는 말 그대로 보훈대상자 및 그 가구의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선행 조사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족도 및 복지욕구 관련 조사항목은 필수적인 항목으로 국한시켜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통계 등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생활실태조사 조사지표 선정과 조사표 작성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조사에서 파악된 보훈대상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함의를 도출한다.

둘째, 또한 조사수행을 담당하는 통계청(통계대행과)의 실태조사 진행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그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구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성·분석하여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지표 및 조사표의 설계, 효율적인 조사수행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통계치 등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국가보훈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함의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셋째,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전 조사와의 비교를 통한 동태 변화를 파악하며, 주요 타 조사결과와의 비교 분석 즉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과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비롯한 여타 실태조사의 조사표를 검토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조사표 개발에 반영한다. 그리고 통계작성기관이자 본 연구용역의 발주부처인 국가보훈처와 조사실시기관인 통계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사표를 확정한다. 두 번째는 조사실시기관인 통계청(통계대행과)의 실태조사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장조사 지침서 작성, 조사원 교육 실시, 조사현장 관리·점검, 현장조사 주요 항목 결과표 양식 작성, 조사대상자 및 제도적 특성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과 정책함의를 제시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제도 현황’, ‘제3장 실태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제4장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실태 분석’, ‘제5장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인식 분석’, ‘제6장 타 조사 및 유사 집단과의 비교’, ‘제7장 보훈정책 효과성 분석’, ‘제8장 결론’으로 구성된다. 각 장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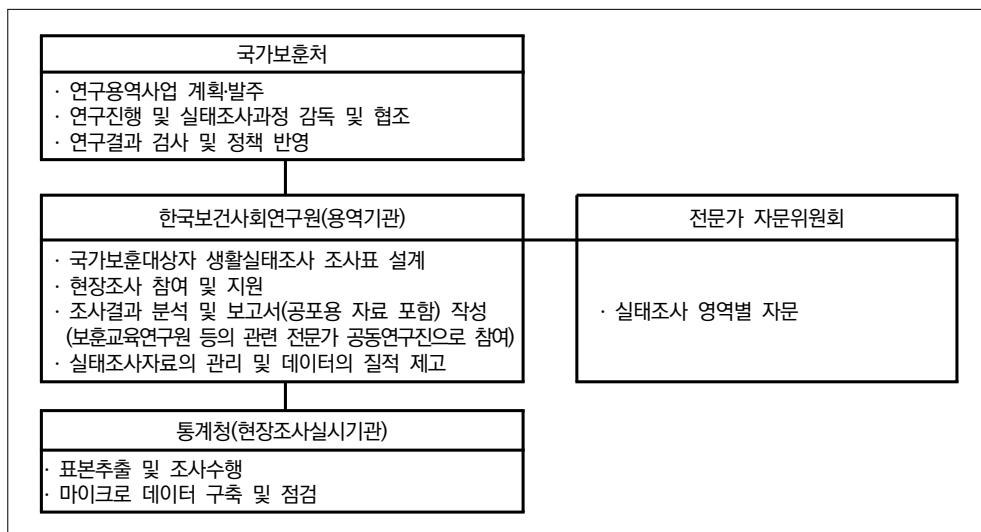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 및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수행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며, 개괄적으로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제도 현황’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조사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보훈 대상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유형화를 실시하고 주요 대상 집단에 대한 추이 및 현황, 그리고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즉, 국가보훈대상자를 주요 집단별로 유형화시키고 주요 대상의 추이 및 현황과 지원내용 파악을 통해, 표본설계 및 생활실태조사 지표 선정과 기존 조사표 수정·보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3장 실태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에서는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주요 지표 및 문항 선정 등 조사표 설계 내용과 통계청에서 수행한 표본설계 및 추출 등 실태조사 준비와 설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제4장부터 제7장까지는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제4장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실태 분석’에서는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가구 조사표를 분석하는데, 보훈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 일반사항, 주거상황, 가계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현황과 특성을 제시한다. ‘5장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인식 현황 분석’은 본 조사의 개인 조사표를 분석한 것으로 보훈대상자의 문화 및 여가 생활, 사회참여 상태, 가족관계, 보건의료 실태, 경제 활동 상태, 노후 보장 및 정책서비스, 보훈대상자 인식 및 욕구에 대한 실태와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다. ‘제6장 타 조사 등 유사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다양한 집단과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비교정태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 활용된 조사표는 다양한 정책대상 집단 및 다른 실태조사항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비교 영역으로는 경제상황, 일반실태, 인식과 욕구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가구 경제상황은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일반 실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를, 그리고 인식과 욕구는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비교 대상 자료로 활용한다. ‘제7장 보훈정책 효과성 분석’에서는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 분포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득보장 정책으로서의 보훈제도의 효과성을 평가결과가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제8장 결론’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들을 정리하고 주요한 영역별로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며, 이에 대한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방향성과 조사의 질 제고 방안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제언들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2018년 조사와 동일한 사업수행체계를 따랐다. 즉, 조사표 개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표본추출과 조사의 수행은 통계청(통계대행과)이, 조사결과의 분석은 다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는 구조로 수행하였다. 주요 주체별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보훈처는 통계작성기관이자 연구용역 발주부처로서 연구용역 사업 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그리고 연구결과 검수, 연구 종료 후 주요 결과의 정책개선 활용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조사 실시기관인 통계청은 표본추출, 통계변경승인, 조사 실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제도와 실태조사 분석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조사표 개발, 현장조사 참여 및 지원,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 실태조사자료 관리 및 데이터 질적 제고를 위한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조사의 효율성 및 분석 결과의 정확성 그리고 정책함의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조사표 작성부터 정책함의 도출까지 본 사업 전반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그림 1-1] 사행수행 체계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조사표 개발(조사지표 선정 포함), 조사수행 지원,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함의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 분야는 아래 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표 1-1〉 연구 방법 및 적용 분야

방법	분야					비고
	제도 현황	사례 연구	조사표 개발	조사 수행	결과 분석	
문헌연구	○	○	○	○	○	- 2018년 생활실태조사, 선행 및 관련 실태조사 연구, 보훈 제도·정책 관련 보고서, 정책자료 검토 - 법령 및 홈페이지(국내·외 보훈담당 부서)
통계자료 분석	○				○	- 보훈 제도·실태 관련 집계자료 제시 및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 사회조사,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자료 분석
연구진 회의	○	○	○	○	○	- 연구사업 전반에 걸쳐 상시적 개최
부처 자료 협조	○		○	○		- 표본 및 관련 집계자료, 제도 관련 자료 등 과제 전반에 걸쳐 관련 자료 요청 및 수령
전문가 자문		○	○		○	- 조사지표 선정 및 조사표 개발 전반 - 실태조사 분석 및 정책함의, 향후 보완사항
조사 지원				○		- 통계청의 파일럿 조사 참여 및 지원 - 조사원 교육 및 조사실태 점검 지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조사표 개발, 통계청의 실태조사수행,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과 정책함의 도출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훈제도의 현황 및 모니터링 사례 파악, 조사지표 선정 및 조사표 개발, 통계청의 조사수행 지원, 결과분석 및 정책함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요 분야 과제 수행은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연구진 회의, 부처 자료 협조, 조사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는 본 연구의 주요 분야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보훈제도 및 실태조사 근거 법령들과 보훈제도(보훈실태조사 포함)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보훈제도의 현황과 특성은 물론 본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인 보훈대상자의 정의 및 유형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및 조사결과 분석과 정책함의 도출에도 기 수행된 보훈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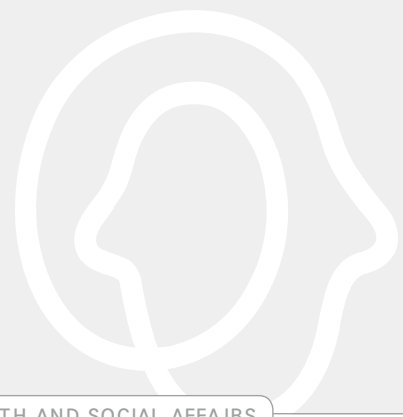
조사 및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보훈처에서 제공한 대상별 분포자료와 보훈연감 등의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제도 현황 및 조사지표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본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일반국민의 특성을 보훈대상자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비교집단으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실태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상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표본설계 및 조사수행은 통계청 통계대행과에서 수행하였는데, 통계청의 표본 추출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조사수행 지원을 위해 본 과제의 연구진들이 직접 조사원 교육에 참여함은 물론 조사 진행과정 점검 등 생활실태 조사 모니터링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조사지표의 선정 및 조사표 개발의 경우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와 상시적인 연구진 회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초안은 보훈처, 통계청과의 수시적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조사의 수용성 및 난이도 그리고 조사표와 실제 조사 관련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통계청이 실시한 파일럿 조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조사수행으로 완성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자료에 대해 실시한 다양한 분석 중에 발견한 수정 사항들을 다시 조사자료에 반영하여 데이터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방법과 함께 2018년 수행된 2차 생활실태조사 및 선행된 보훈 관련 설문조사자료들의 핵심 지표들을 반영하여 조사표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요 지표들을 반영하여 전체 가구, 노인, 장애인 등 집단 간 생활실태의 비교가 가능한 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금번 조사와 동일한 체계로 수행했던 2018년 실태조사결과 중 주요한 지표들에 대해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제도 현황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별 분류

제2절 국가보훈대상자 규모 추이 및 현황

제3절 주요 보훈정책 현황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제도 현황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별 분류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는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14459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희생·공헌자’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희생 또는 공헌한 자를 말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국가보훈대상자로 포괄하고 있다.

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정의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구체적 적용대상 요건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즉, 개별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요건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를 다음 표와 같이 유형화해볼 수 있다. <표 2-1>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보훈대상자 유형별 본인 및 유족의 범위를 보여준다.

<표 2-1> 보훈대상자 유형

유형	대상 요건	등록 대상 유족 및 가족 요건	관련 법률
독립 유공자	- 순국선열 - 애국지사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 - 3순위: 손자녀 - 4순위: 자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유형	대상 요건	등록 대상 유족 및 가족 요건	관련 법률
국가 유공자	- 전몰군경, 전상군경 - 순직군경,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 - 전투중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등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 - 3순위: 부모 -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월남전참전, 국내전 방북무)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 및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 및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 재해사망군경 - 재해부상군경 - 재해사망공무원 - 재해부상공무원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 - 3순위: 부모 -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및 그 밖의 희생자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 - 3순위: 부모 -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공로자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 - 3순위: 부모 -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 중기복무제대군인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국가보훈처, 예우보상. <https://www.mppa.go.kr/mpva/contents.do?key=100>에서 2022. 2. 26. 인출.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별 분류에 있어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유족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제2절에 제시된 보훈대상자별 현황을 보면, 유족의 거의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전체 보훈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기 때문에, 대상자 유형별 생활실태 및 욕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분류한 보훈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이 9개 유형으로 구분된다.¹⁾

〈표 2-2〉 실태조사 보훈대상자 분류: 9개 유형

구분	대상자 유형
1	독립유공자
2	국가유공자(본인)
3	국가유공자(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5	참전유공자
6	보훈보상대상자
7	5·18민주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9	제대군인

제2절 국가보훈대상자 규모 추이 및 현황

1. 보훈대상자 추이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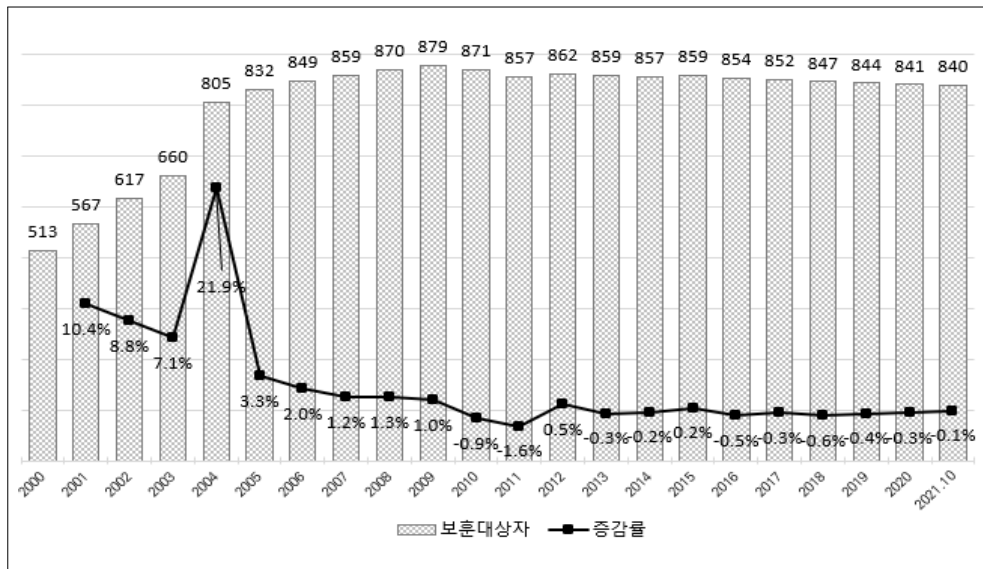
보훈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대상자 수 증가는 그간 보훈 적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2000년 이후의 보훈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중 상이7등급이 신설되었고(2000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1) 9개 유형별 하위 세부 분류는 제3장 제2절의 본 실태조사 개요에서 제시

(2002년), 5·18민주유공자 편입(2002년), 특수임무수행자 편입(2005년), 월남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편입(2011년), 보훈보상대상자 신설(2012년) 등 보훈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진행되어왔다.

[그림 2-1] 국가보훈대상자 추이 및 전년도 대비 증감률

(단위: 천 명, %)



자료: 국가보훈처. (2021b). 2021년 10월 말 보훈대상자 기본현황.

보훈대상자 수는 2000년 말 513,247명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5년 말에 처음으로 80만 명을 넘어섰고, 2009년 말에는 878,78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 현재(2021년 10월)까지 보훈대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약 84만 명에 이르렀으며, 보훈대상 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전 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감소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대상별 추이(2000~2021.10)

(단위: 명, %)

연도	총계	국가유공자(계)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독립 유공자	전공상 군경	전몰순직 군경	참전 유공자	기타				
2000	513,247 (-)	217,105	4,362	62,619	76,941	259,930	73,183	19,737	0	0	16,475
2001	566,810 (10.4%)	229,199	5,225	67,544	79,742	294,140	76,688	24,834	0	0	18,637
2002	616,551 (8.8%)	245,267	5,373	75,559	82,542	321,913	81,793	25,526	3,507	0	20,338
2003	660,445 (7.1%)	255,020	5,463	79,030	85,903	350,775	84,624	29,278	3,825	0	21,547
2004	805,277 (21.9%)	745,250	5,604	116,089	55,626	480,647	87,284	32,579	3,875	0	23,573
2005	831,785 (3.3%)	764,133	6,011	123,519	56,005	486,696	91,902	36,463	3,954	1,775	25,460
2006	848,745 (2.0%)	775,769	6,281	132,125	56,239	484,934	96,190	40,321	3,978	1,917	26,760
2007	859,138 (1.2%)	779,620	6,442	139,190	56,361	477,781	99,846	43,604	4,012	2,271	29,631
2008	870,060 (1.3%)	781,940	6,642	145,881	56,255	470,088	103,074	46,688	4,042	2,333	35,057
2009	878,780 (1.0%)	782,430	6,766	151,954	55,913	460,950	106,847	49,900	4,062	2,302	40,086
2010	871,092 (△0.9%)	766,499	6,942	156,570	55,625	437,095	110,267	52,692	4,090	3,113	44,698
2011	857,151 (△1.6%)	745,844	7,098	160,962	55,455	408,944	113,385	55,166	4,095	3,261	48,785
2012	861,817 (0.5%)	752,035	7,214	177,883	55,313	394,657	116,968	49,006	4,191	3,496	53,089
2013	858,834 (△0.3%)	745,452	7,312	182,851	54,998	379,634	120,657	48,717	4,252	3,575	56,838
2014	857,107 (△0.2%)	738,474	7,378	186,570	54,573	364,980	124,973	49,532	4,252	3,617	61,232

연도	총계	국가유공자(계)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독립 유공자	전공상 군경	전몰순직 군경	참전 유공자	기타				
2015	858,859 (0.2%)	734,135	7,437	190,438	54,125	353,346	128,789	50,475	4,235	3,659	66,355
2016	854,356 (△0.5%)	723,602	7,483	194,184	53,727	335,879	132,329	50,975	4,225	3,690	71,864
2017	851,635 (△0.3%)	714,217	7,548	198,097	53,273	319,630	135,669	51,553	4,377	3,714	77,774
2018	846,800 (△0.6%)	702,571	7,714	202,176	52,680	300,154	139,847	51,831	4,415	3,765	84,218
2019	843,770 (△0.4%)	685,681	8,036	206,745	52,188	284,631	142,548	51,793	4,410	3,786	89,633
2020	841,119 (△0.3%)	686,331	8,351	210,842	51,701	267,902	147,535	51,741	4,406	3,811	94,830
2021 10월	840,402 (△0.1%)	681,367	8,522	213,907	51,549	254,916	152,473	51,389	4,416	3,867	99,363
연평균 증감율	2.4%	5.6%	3.2%	6.0%	-1.9%	-0.1%	3.6%	4.7%	1.2%	5.3%	8.9%

주: 1) 국가유공자 기타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임.

2) 총계의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율임.

3) 연평균 증감율은 2000~2021년을 기준으로 구하였음. 단, 5·18민주유공자는 2002~2021년, 특수임무유공자는 2005~2021년을 기준으로 구하였음.

자료: 국가보훈처. (2021b). 2021년 10월 말 보훈대상자 기본현황.

국가보훈대상자의 세부 대상별로 살펴보면 2021년 10월 기준 전체 840,402명 중 본인이 69.89%(587,358명)를 차지하며, 유족이 30.11%(253,044명)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유족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의 수가 408,284명(48.58%)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참전유공자가 254,916명(30.33%), 제대군인이 99,363명(11.82%)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단일 분류 중에서는 참전유공자 중 월남참전유공자가 187,024명(2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이 147,411명(17.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국가보훈대상자 세부 대상별 분포(2021년 10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본인		유족	
			대상자 수	비율	대상자 수	비율	대상자 수	비율
합계	2018년 10월		847,565	100.00	623,187	73.53	224,378	26.47
	2021년 10월		840,402	100.00	587,358	69.89	253,044	30.11
독립 유공자	소계		8,522	1.01	16	0.00	8,506	1.01
	순국선열	건국훈장	798	0.09	0	0.00	798	0.09
		건국포장	30	0.00	0	0.00	30	0.00
		대통령표창	59	0.01	0	0.00	59	0.01
	애국지사	건국훈장	4,472	0.53	10	0.00	4,462	0.53
		건국포장	749	0.09	1	0.00	748	0.09
		대통령표창	2,414	0.29	5	0.00	2,409	0.29
국가 유공자	소계		408,284	48.58	168,118	20.00	240,166	28.58
	전몰군경유족		35,706	4.25	0	0.00	35,706	4.25
	전상군경		147,411	17.54	58,306	6.94	89,105	10.60
	순직군경유족		15,843	1.89	0	0.00	15,843	1.89
	공상군경		66,496	7.91	50,403	6.00	16,093	1.91
	무공수훈자		83,204	9.90	16,770	2.00	66,434	7.91
	보국수훈자		43,790	5.21	38,641	4.60	5,149	0.61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90	0.03	9	0.00	281	0.03
	4·19혁명사망자		33	0.00	0	0.00	33	0.00
	4·19혁명상이자		349	0.04	168	0.02	181	0.02
	4·19혁명공로자		482	0.06	293	0.03	189	0.02
	순직공무원		8,673	1.03	0	0.00	8,673	1.03
	공상공무원		5,991	0.71	3,528	0.42	2,463	0.29
	특별공로순직자		16	0.00	0	0.00	16	0.00
	6·18자유상이자		367	0.04	34	0.00	333	0.04
지원대상	소계		2,833	0.34	2,274	0.27	559	0.07
	지원순직군경		181	0.02	0	0.00	181	0.02
	지원공상군경		1,851	0.22	1,762	0.21	89	0.01
	지원순직공무원		218	0.03	0	0.00	218	0.03
	지원공상공무원		583	0.07	512	0.06	71	0.01
보훈보상 대상자	소계		6,445	0.77	4,818	0.57	1,627	0.19
	재해사망군경유족		1,052	0.13	0	0.00	1,052	0.13
	재해부상군경		5,017	0.60	4,655	0.55	362	0.04
	재해사망공무원유족		205	0.02	0	0.00	205	0.02
	재해부상공무원		171	0.02	163	0.02	8	0.00
참전 유공자	소계		254,916	30.33	254,916	30.33	0	0.00
	6·25참전유공자		66,182	7.88	66,182	7.88	0	0.00
	월남참전유공자		187,024	22.25	187,024	22.25	0	0.00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1,710	0.20	1,710	0.20	0	0.00
고엽제	소계		51,389	6.11	51,389	6.11	0	0.00
	고엽제후유의증		51,241	6.10	51,241	6.10	0	0.00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148	0.02	148	0.02	0	0.00
5·18 민주유공자	소계		4,416	0.53	3,496	0.42	920	0.11
	5·18사망행불자		170	0.02	0	0.00	170	0.02
	5·18부상자		2,757	0.33	2,189	0.26	568	0.07
	5·18기타희생자		1,489	0.18	1,307	0.16	182	0.02
특수임무 유공자	소계		3,867	0.46	2,934	0.35	933	0.11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유족		21	0.00	0	0.00	21	0.00
	특수임무부상자		1,270	0.15	1,146	0.14	124	0.01
	특수임무공로자		2,576	0.31	1,788	0.21	788	0.09
제대군인	중장기복무제대군인		99,363	11.82	99,363	11.82	0	0.00

주: 표의 모든 비율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인원 수 대비 세부 집단 인원 수의 비율을 산출한 값임.

자료: 국가보훈처, (2021b), 2021년 10월 말 보훈대상자 기본현황.

2. 보훈대상자 연령 분포

보훈대상자 전체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68.5%, 60대가 15.9%, 50대가 7.5%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의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세부 집단별로 전상·공상군경 집단의 평균 연령은 본인의 경우 68세, 유족은 72세이며, 유족으로만 구성되는 전몰·순직군경의 경우 평균 연령이 74세로 가장 높았다.

〈표 2-5〉 보훈대상자 연령 분포 현황(2021년 10월 기준)

(단위: 명, 세)

구분	전체			전상·공상군경		전몰·순직 군경	기타 대상	
	합계	본인	유족	본인	유족	유족	본인	유족
합계	840,402	587,358	253,044	108,709	105,198	51,549	478,649	96,297
30세 미만	6,917	6,585	332	515	142	42	6,070	148
30~39세	27,057	25,841	1,216	7,556	572	137	18,285	507
40~49세	34,097	26,961	7,136	10,328	4,235	671	16,633	2,230
50~59세	63,038	39,166	23,872	9,262	11,117	2,113	29,904	10,642
60~69세	133,883	63,430	70,453	10,631	32,337	9,318	52,799	28,798
70세 이상	575,410	425,375	150,035	70,417	56,795	39,268	354,958	53,972
평균 연령	72	71	73	68	72	74	72	73

주: 1)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에우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

2) 기타 대상은 독립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유공자, 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
유상이자,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임.

자료: 국가보훈처. (2021e). 국가보훈처 내부 전산자료.

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73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 본인이 96세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유공자 유족 78세, 무공·보국수훈자 73세, 군경유족 72세, 전·공상군경 본인 68세 순으로 높았다.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2000년 63세에서 2021년 현재 73세로 약 20년 동안 10세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현상은 2011년부터 참전유공자가 포함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21년 기준 6·25참전유공자는 90세,

월남참전유공자는 75세, 그리고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89세에 이른다. 국가유공자 주요 대상별로 연령 추이를 살펴보면, 전·공상군경 본인과 무공·보국수훈자에서 2010년을 정점으로 평균 연령이 하락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의 평균 연령은 200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표 2-6〉 국가유공자 대상별 평균 연령 추이

(단위: 세)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독립유공자 본인	81	84	87	88	89	90	90	92	92	93	94	95	95	96
독립유공자 유족	67	69	73	73	74	74	75	75	76	76	76	76	77	78
전·공상군 경본인	60	62	65	62	63	63	64	64	65	65	65	66	67	68
군경유족	65	66	68	68	69	69	70	70	71	71	71	72	72	72
무공· 보국수훈자	66	70	73	71	71	71	72	72	72	72	72	73	73	73
기타	56	60	64	73	73	73	74	75	75	76	65	66	71	72
국가유공자 평균	63	65	66	70	71	71	72	72	72	73	71	71	71	73

주: 기타는 재일학도의용군인, 4·19유공자, 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2011년부터 포함)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82에서 2022. 2. 6. 인출; 국가보훈처, (2021b). 2021년 10월 말 보훈대상자 기본현황.

2)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82에서 2022. 2. 6. 인출.

〈표 2-7〉 세부 보훈대상별 연령 분포 및 평균 연령(2021년 10월 기준)

구분		합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평균 연령
독립 유공자	합계	840,402	64	6,853	27,057	34,097	63,038	133,883	372,588	202,822	72
	진국훈장(순국선열)	유족	798	0	0	8	48	133	228	381	77
	진국포장(순국선열)	유족	30	0	0	0	2	5	9	14	78
	대통령표창(순국선열)	유족	59	0	0	0	2	2	24	31	81
	진국훈장(애국지사)	본인	10	0	0	0	0	0	0	10	97
	유족	4462	0	1	2	48	241	788	1,350	2,032	77
	진국포장(애국지사)	본인	1	0	0	0	0	0	0	1	99
	유족	748	1	0	0	5	26	103	234	379	78
	대통령표창(애국지사)	본인	5	0	0	0	0	0	0	5	94
	유족	2409	1	1	0	22	108	374	704	1,199	78
국가 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35,706	3	0	14	176	597	23,181	6,590	75
	전상군경	본인	58,306	0	3	27	29	9	444	11,308	77
	유족	89,105	3	24	324	3,339	9,082	28,079	18,580	29,674	72
	순직군경	유족	15,843	13	26	123	495	1,516	4,079	5,418	73
	본인	50,403	0	512	7,529	10,299	9,253	10,187	9,450	3,173	57
	공상군경	유족	16,093	24	91	248	896	2,035	4,240	4,301	70
	본인	16,770	0	11	10	56	70	220	6,750	9,653	83
	무공수훈자	유족	66,434	4	3	64	1,249	7,298	8,677	27,879	73
	본인	38,641	0	1	7	8	6,801	19,652	9,114	3,058	67
	유족	5,149	0	4	30	129	530	1,491	1,409	1,556	72
	재일한도의용군인	본인	9	0	0	0	0	0	0	9	94
	유족	281	0	0	0	5	30	93	31	122	74
	4·19혁명사망자	유족	33	0	0	0	1	10	6	16	78
	4·19혁명생이자	본인	168	0	0	0	0	1	83	84	80
	유족	181	0	0	1	12	21	29	81	37	71
	4·19혁명공로자	본인	293	0	0	0	0	0	89	204	81
	유족	189	0	0	0	8	20	17	92	52	73
	순직공무원	유족	8,673	4	66	219	384	1,123	2,487	1,799	69
	공상공무원	본인	3,528	0	0	5	141	639	1,186	439	68
	유족	2,463	1	7	20	69	236	666	816	648	71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16	0	0	0	0	3	3	7	74

(단위: 명, 세)

구분		합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평균 연령
준용대상	6.18자유상이자	본인 34	0	0	0	0	0	0	0	34	89
	유족	333	0	0	1	6	58	80	35	153	73
	유족	181	0	0	2	10	29	74	45	21	66
지원대상	지원순직군경	본인 1,762	0	6	745	411	265	221	95	19	46
	유족	89	0	1	3	4	21	29	17	14	65
	지원순직공무원	유족 218	0	6	8	19	61	81	27	16	60
	유족	512	0	0	1	38	130	224	113	6	63
	지원공상공무원	유족 71	0	0	0	2	15	34	15	5	66
보훈대상 대상자	재해사망군경유족	유족 1,052	0	2	18	70	302	360	159	141	64
	재해부상군경	본인 4,655	0	1,085	1,074	781	588	646	341	140	45
	유족	362	3	7	6	13	82	92	70	89	67
	재해사망공무원유족	유족 205	3	2	9	51	94	42	4	0	52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163	0	1	2	5	32	108	13	2	62
참전 유공자	유족	8	0	0	0	1	3	3	0	1	62
	6·25참전유공자	본인 66,182	0	2	0	0	0	0	12	66,168	90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187,024	0	0	0	0	0	1,464	172,059	13,501	75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1,710	0	0	0	0	0	0	1	1,709	89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51,241	0	0	0	0	0	369	46,862	4,010	75
5·18민 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본인 148	0	0	12	115	21	0	0	0	45
	유족	170	0	0	3	18	10	34	42	63	72
	본인	2,189	0	0	0	10	384	1,340	331	124	65
	유족	568	1	12	56	31	113	156	117	82	63
	본인	1,307	1	0	0	0	181	951	136	38	64
특수임무 유공자	5·18기타희생자	유족 182	0	9	20	6	32	69	23	23	61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유족 21	0	0	0	0	1	11	5	4	70
	본인	1,146	0	0	2	95	297	405	312	35	64
	유족	124	0	1	10	9	19	38	27	20	65
	본인	1,788	0	0	39	557	450	367	214	161	58
재단법인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유족	788	1	7	35	51	113	234	120	227	68
재단법인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	99,363	1	4,962	16,388	14,416	20,046	25,645	11,968	5,937	55

자료: 국가보훈처. (2021e). 국가보훈처 내부 전산자료.

3. 보훈대상자 지역분포

2021년 10월 기준으로 보훈대상자의 거주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194,187명(23.1%), 서울 141,514명(16.8%), 부산 60,783명(7.2%), 경상남도 57,640명(6.9%), 경상북도 53,884명(6.4%), 대구 41,954명(5.0%), 인천 40,908명(4.9%), 강원도 38,240명(4.6%), 전라남도 35,550명(4.2%), 충청남도 33,068명(3.9%), 전라북도 31,591명(3.8%), 충청북도 26,610명(3.2%), 대전 24,417명(2.9%), 광주 23,705명(2.8%), 울산 14,247명(1.7%), 제주 11,990명(1.4%)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약 44.8%의 보훈대상자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한다.

〈표 2-8〉 보훈대상자 지역분포 현황(2021년 10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전상·공상군경		전몰·순직 군경	기타 대상	
	합계	본인	유족	본인	유족	유족	본인	유족
합계	840,402	587,358	253,044	91,376	90,260	42,818	495,982	119,966
서울특별시	141,514	98,726	42,788	17,333	14,938	8,731	81,393	2,7850
부산광역시	60,783	42,201	18,582	8,935	8,575	3,770	33,266	6,237
대구광역시	41,954	27,744	14,210	6,308	6,584	3,123	21,436	4,503
인천광역시	40,908	29,229	11,679	5,053	4,843	2,083	24,176	4,753
광주광역시	23,705	16,862	6,843	3,544	2,856	1,530	13,318	2,457
대전광역시	24,417	17,602	6,815	3,149	2,724	1,441	14,453	2,650
울산광역시	14,247	9,333	4,914	2,549	2,404	1,016	6,784	1,494
세종특별자치도	5,823	4,561	1,262	797	494	237	3,764	531
경기도	194,187	139,278	54,909	24,047	21,106	10,479	115,231	23,324
강원도	38,240	27,828	10,412	4,246	4,282	2,101	23,582	4,029
충청북도	26,610	18,283	8,327	3,162	3,527	1,740	15,121	3,060
충청남도	33,068	24,111	8,957	4,099	3,655	1,851	20,012	3,451
전라북도	31,591	22,097	9,494	4,273	4,449	2,053	17,824	2,992
전라남도	35,550	24,428	11,122	5,310	5,329	2,448	19,118	3,345
경상북도	53,884	35,558	18,326	7,416	8,827	3,766	28,142	5,733
경상남도	57,640	39,403	18,237	6,826	8,498	3,636	32,577	6,103
제주특별자치도	11,990	6,952	5,038	1,355	1,861	1,236	5,597	1,941
그 외	4,291	3,162	1,129	307	246	308	2,855	575

주: 1) 그 외는 해외거주 또는 주소불명인 경우임.

2) 기타 대상은 독립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익용군인, 4·19유공자, 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임.

자료: 국가보훈처. (2021e). 국가보훈처 내부 전산자료.

제3절 주요 보훈정책 현황³⁾

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란 국가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의미로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오늘날 보훈급여금 지급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는 정책수단으로 국가보훈 업무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국가보훈처, 2021g, p. 242).

관련 지원연혁을 살펴보면, 지원이 시작되었던 1952년에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과 군경희생자로 대상이 국한되었으나 1962년에는 애국지사, 순국선열의 유족, 4·19 유공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85년에는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공상경찰 및 순직경찰 유족, 반공포로상이자 유족과 월남귀순상이사망자 유족 등 연금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1996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는 상이7급을 신설하여 경상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002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신체적 희생이 없는 유공자에 대해서도 명예를 높이는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종전의 기본연금, 부가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으로 보훈급여금을 개편하였다. 연금제도는 당초 전쟁 등 국방의무 중의 희생자를 수혜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국가보훈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보훈급여금의 종류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 보훈급여금과 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수시 보훈급여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정기 보훈급여금의 주요 구성 항목은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예우법 제11조, 보상자법 제10조)과 참전명예수당(참전법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고엽제법 제7조의3),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예우법시행령 제23조, 보상자법시행령 제9조), 전상수당(예우법

3) 주요 보훈정책 현황 관련 내용은 국가보훈처(2021f)의 보훈 60년사, 국가보훈처(2021c)의 2021년도 보훈 업무 시행지침(I), 국가보훈처(2021d)의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II), 국가보훈처(2021a)의 2020년 국가보훈처 보훈 연감,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s://www.mpva.go.kr/mpva/index.do>)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시행령 제23조) 등이다. 수시 보훈급여금의 주요 구성 항목은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장제보조비(참전법 제9조제5항) 등이다(국가보훈처, 2021f, p. 244).

보훈보상금 지급액은 1962년 월 500~700원 수준에서 시작하여 2021년에는 보상금(6급 2항 기준) 월 1,386천 원과 더불어 개별여건을 고려한 부가 수당 9만 7천 원~37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보상금 급여 예산 규모는 1962년 14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3조 8,642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2021년 현재에는 4조 4,868억 원에 이르고 있다(국가보훈처, 2021f, p. 243).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본인과 유족에게 구분되어 지급되며, 2021년도에는 독립유공자 본인은 보상금에 특별예우금을 더하여 월 2,800천 원에서 8,505천 원 수준을, 독립유공자 유족은 월 765천 원에서 2,738천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표 2-9〉 2021년도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단위: 천 원)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인	건국훈장	1~3등급	6,180	2,325	8,505	
		4등급	3,290	1,920	5,210	
		5등급	2,602	1,725	4,327	
	건국포장		1,864	1,575	3,439	
	대통령표창		1,225	1,575	2,800	
유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738		2,738
			기타 유족	2,370		2,370
		4등급	배우자	2,017		2,017
			기타 유족	1,975		1,975
		5등급	배우자	1,642		1,642
			기타 유족	1,604		1,604
	건국포장		배우자	1,153		1,153
			기타 유족	1,145		1,145
	대통령표창		배우자	780		780
			기타 유족	765		765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가족 3인 이하: 220~283, 4인 이상: 273~336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 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345천 원			

자료: 국가보훈처 누리집. 2021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https://www.mpva.go.kr/mpva/index.do>에서 2022. 2. 6. 인출.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기존 등록자)의 경우 상이등급별로 보상금에 수당을 더하여 496천 원에서 5,636천 원(간호수당, 전상수당 제외)을 지급받는다.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인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유족(기존 등록자)의 경우 보상금과 수당을 합하여 각각 530천 원~1,942천 원, 503천 원~1,912천 원, 766천 원~1,933천 원(미성년 자매 양육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제외)을 지원받고 있다.

〈표 2-10〉 2021년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기존 등록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단위: 천 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 군경	1급1항	고령	3,165	97	2,374	5,636
		일반	3,165	-	2,374	5,539
	1급2항	고령	2,985	97	1,642	4,724
		일반	2,985	-	1,642	4,627
	1급3항	고령	2,857	97	1,000	3,954
		일반	2,857	-	1,000	3,857
	2급	고령	2,540	97		2,637
		일반	2,540	-		2,540
	3급	고령	2,374	97		2,471
		일반	2,374	-		2,374
	4급	고령	1,992	97		2,089
		일반	1,992	-		1,992
	5급	무의탁	1,650	274		1,924
		고령	1,650	97		1,747
		일반	1,650	-		1,650
	6급1항	무의탁	1,506	274		1,780
		고령	1,506	97		1,603
		일반	1,506	-		1,506
	6급2항	무의탁	1,386	274		1,660
		고령	1,386	97		1,483
		일반	1,386	-		1,386
	7급	무의탁	496	274		770
		고령	496	97		593
		일반	496	-		496
*간호수당			·1급1항 2,631, 1급2항 2,532, 1급3항 2,434, 2급 841			
*전상수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386	274		1,660
	고령		1,386	97		1,483
	일반		1,386	-		1,386
4·19혁명공로자			·35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가족 3인 이하: 220~283, 4인 이상: 273~336			

자료: 국가보훈처 누리집. 2021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https://www.mpva.go.kr/mpva/index.do>에서 2022. 2. 6. 인출.

〈표 2-11〉 2021년도 국가유공자 유족(기존 등록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단위: 천 원)

대상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 족	배우자	전몰·순직	무의탁	1,668	274	1,942
			무의탁부모부양	1,668	149	1,817
			고령	1,668	149	1,817
			일반	1,668	-	1,668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446	274	1,720
			무의탁부모부양	1,446	149	1,595
			고령	1,446	149	1,595
			일반	1,446	-	1,446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530	274	804
			무의탁부모부양	530	149	679
			고령	530	149	679
			일반	530	-	530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	전몰·순직	무의탁	1,638	274	1,912
			독자사망	1,638	274	1,912
			고령	1,638	97	1,735
			일반	1,638	-	1,638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422	274	1,696
			고령	1,422	97	1,519
			일반	1,422	-	1,422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503	274	777
			고령	503	97	600
			일반	503	-	503
		*2명 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274(1인 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전몰·순직		1,933	-	1,933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678	-	1,678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766	-	766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가족 3인 이하: 220~283, 4인 이상: 273~336			
6·25 자녀수당			· 제작자녀: 1,387(위로가산금 80 추가), 승계자녀: 1,180 · 신규승계자녀: 347(생계 곤란한 경우 114천 원 추가 지원)			

자료: 국가보훈처 누리집. 2021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https://www.mpva.go.kr/mpva/index.do>에서 2022. 2. 6. 인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2세환자는 경도, 중증도, 고도의 세 단계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며, 후유의증환자는 489천 원에서 1,010천 원, 후유증2세환자는 1,123천 원에서 1,799천 원 사이의 수당을 받는다.

〈표 2-12〉 2021년도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월지급액

(단위: 천 원)

대상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후유의증수당	1,010	745	489
후유증2세환자수당	1,799	1,398	1,123

자료: 국가보훈처 누리집. 2021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https://www.mpva.go.kr/mpva/index.do>에서 2022. 2. 6. 인출.

2012년 7월 1월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아래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상이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496천 원에서 5,539천 원(간호수당, 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제외)에 이르는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을 받으며, 유족은 상이등급에 따라 배우자 530천 원~1,668천 원, 부모 503천 원~1,638천 원, 미성년 자녀 766천 원~1,933천 원(부양가족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고령수당 제외)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원받는다.

〈표 2-13〉 2021년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 이후 등록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단위: 천 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이자	1급1항	3,165	2,374	5,539
	1급2항	2,985	1,642	4,627
	1급3항	2,857	1,000	3,857
	2급	2,540		2,540
	3급	2,374		2,374
	4급	1,992		1,992
	5급	1,650		1,650
	6급1항	1,506		1,506
	6급2항	1,386		1,386
	6급3항	930		930
	7급	496		496
	*간호수당	· 상시 2,631/ 수시 1,755		
	*전상수당	· 90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0/ 자녀 100		
*고령수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97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1,668		1,668
		상이 1~5급	1,446		1,446
		상이 6급	530		530
	부모	전몰·순직	1,638		1,638
		상이 1~5급	1,422		1,422
		상이 6급	503		503
	자녀	전몰·순직	1,933		1,933
		상이 1~5급	1,678		1,678
		상이 6급	766		766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2명 이상 사망수당		· 274		
	*고령수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 가족 3인 이하: 220~283, 4인 이상: 273~336			

자료: 국가보훈처 누리집. 2021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https://www.mpva.go.kr/mpva/index.do>에서 2022. 2. 6. 인출.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상이자는 상이등급별로 348천 원에서 3,878천 원(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제외)의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을 지원받으며, 유족은 상이 등급에 따라 배우자 371천 원~1,168천 원, 부모 353천 원~1,147천 원, 미성년 자녀 537천 원~1,354천 원(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제외)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원받는다.

〈표 2-14〉 2021년도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단위: 천 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이자	1급1항	2,216	1,662	3,878
	1급2항	2,090	1,150	3,240
	1급3항	2,000	700	2,700
	2급	1,778		1,778
	3급	1,662		1,662
	4급	1,395		1,395
	5급	1,155		1,155
	6급1항	1,055		1,055
	6급2항	971		971
	6급3항	651		651
	7급	348		348
	*간호수당	· 상시 2,631, 수시 1,755		
	*부양가족수당(6급 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고령수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97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유족	배우자	사망	1,168		1,168
		1~5급 유족	1,013		1,013
		6급 유족	371		371
	부모	사망	1,147		1,147
		1~5급 유족	996		996
		6급 유족	353		353
	자녀	사망	1,354		1,354
		1~5급 유족	1,175		1,175
		6급 유족	537		537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고령수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 가족 3인 이하: 220~283, 4인 이상: 273~336			

자료: 국가보훈처 누리집. 2021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https://www.mpva.go.kr/mpva/index.do>에서 2022. 2. 6. 인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사망한 경우 대상자 특성별로 독립유공자 본인은 1,127천 원~3,268천 원, 독립유공자 유족은 1,127천 원~2,261천 원, 상이군경은 1,127천 원~1,704천 원, 재일학도의용군과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은 1,127천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표 2-15〉 2021년도 사망일시금 지급액

(단위: 천 원)

대상별				지급액	대상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이 군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건국포장		1,208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일학도의용군			1,127
			기타 유족	2,200				
		4등급 유족		1,989				
		5등급 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자료: 국가보훈처 누리집. 2021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https://www.mpva.go.kr/mpva/index.do>에서 2022. 2. 6. 인출.

2. 교육 지원

교육 지원은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과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학습보조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배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교육 지원은 1961년 전몰군경 유자녀에게 중·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면제시켜주고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1977년부터는 모든 국가유공자 자녀들까지 대학 학비를 면제해주었다. 1985년에는 순국·전몰·순직자의 배우자까지 교육 지원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1996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자녀에게도 교육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2004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들도 교육 지원대상에 편입되었다. 교육 지원에는 수업료 등 면제, 등록 신청 이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공납금 등을 보전해 주는 수업료 등 보전, 학습보조비 지급, 장학금 지급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국가보훈처, 2021d, p. 294).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립 능력 함양 및 역량을 갖춘 우수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지원에 대한 보훈정책 방침은 교육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 지원 내실화,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제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한 대입특별전형 협조 강화 등에 있다(국가보훈처, 2021f, p. 326). 2020년 교육 지원 지원실적과 관련하여 취학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6〉 2020년 취학자 현황

(단위: 명)

학교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계
취학자	3,701	4,298	15,934	87	24,020
	(15.4%)	(17.9%)	(66.3%)	(0.4%)	(100%)

자료: 국가보훈처. (2021a). 2020년 국가보훈처 보훈 연감. p. 296.

2020년 기준 교육 지원 지원실적을 보면,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 수업료 등 국비 보전,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장학금 지급 등에 연인원 37,81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액 합계는 25,690백만 원이었다.

〈표 2-17〉 2020년 교육 지원 지원실적

(단위: 명/백만 원)

사업 구분	연인원	금액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	18,585	23,003
수업료 등 국비 보전	468	685
학습보조비 지급	18,116	1,512
보훈장학금 지급	647	490
합계	37,816	25,690

자료: 국가보훈처. (2021a). 2020년 국가보훈처 보훈 연감. p. 296.

교육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액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124천 원, 고등학교의 경우 144~186천 원, 대학교의 경우 236천 원 등의 수준이다.

〈표 2-18〉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액

(단위: 천 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인문계	실업계		유·초등	중·고등
지급액	124	144	186	236	534	718

자료: 국가보훈처. (2021c).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1). p.334.

3. 의료 지원 및 보철구 지급

주요 보훈정책 중 의료 지원은 국가를 수호하다 부상을 입었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의료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은 국비 진료와 감면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

국비 진료 대상은 ①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 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특수임무부상자,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과 ②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이 있다. 국비 진료 대상자의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나 예외가 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9〉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기공료 포함)	외모 개선 목적 진료	예방 진료 등
- 전액 본인 부담 - 예외 · 애국지사, 1급상이자 60% 감면 · 치료 목적상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및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경우는 전액 국비 지원	- 상이처: 보철구로 신청 - 비상이처: 전액 본인 부담	- 상이처: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비상이처: 전액 본인 부담	- 예방진료: 60% 감면 - 제증명수수료: 본인 부담

자료: 국가보훈처 누리집,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 안내. <https://www.mpva.go.kr/mpva/index.do>에서 2022. 2. 6. 인출.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는 위탁병원 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진료비 지원범위는 본인 부담 급여이고, 본인 부담 비급여는 3항목(MRI, 초음파, 건위 소화제)이 해당한다.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료시설(국내)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인 전문위탁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응급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인 통원 진료도 포함한다.

감면 진료는 본인 부담 진료비에서 감면 비율에 의거 진료비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0〉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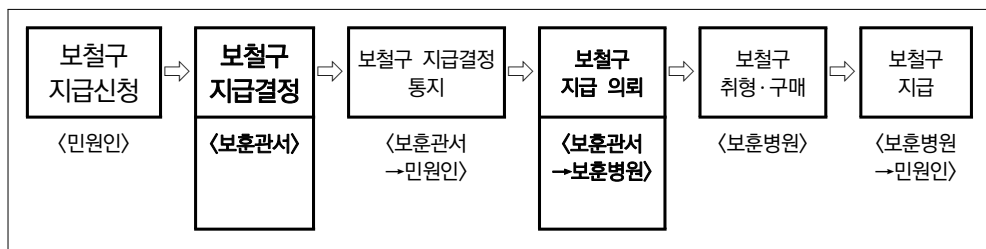
진료비 감면 대상	감면 비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60%
·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60%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100%
·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60%
· 참전유공자 본인	90%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60%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	50%~30%
·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	60%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	50%

자료: 국가보훈처 누리집.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 안내. <https://www.mpva.go.kr/mpva/index.do>에서 2022. 2. 6. 인출.

한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보훈병원(상이처는 전문위탁 포함)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체기능 장애 보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질의 보철구를 지급하고 있다. 보철구 지급정책의 추진방향은 사용연한 만기도래자의 적기 지급과 노후 장비의 신속한 수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로 보철구 지급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보철구 품목 사용연한 단축, 품질 고급화 및 신설 품목을 요구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등 보철구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2-2] 보철구 지급 절차



자료: 국가보훈처. (2021d).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II). p. 334.

4. 취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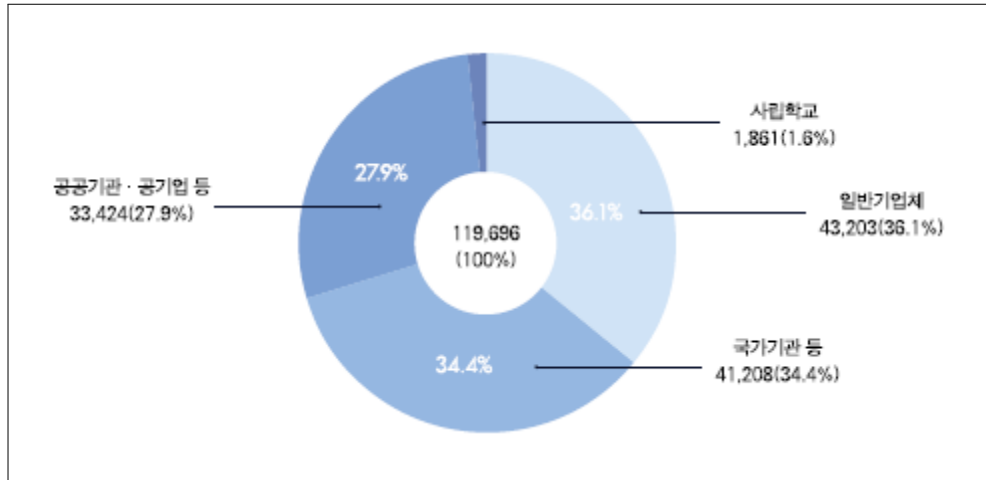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취업 지원사업은 1950년대 초 실시된 이래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국가보훈정책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취업 지원사업은 국가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보훈대상자들의 자발적 의지와 공·사기업체 및 사회단체 그리고 보훈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온 사업이기에 더욱 큰 의미와 보람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보훈처, 2021g, p. 273).

취업 지원제도의 목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 지원 전략(기업협력 강화-취업역량 강화-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취업 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실시기관의 우선 고용의무 이행 강화, 취업 지원대상자의 적성 및 자격을 고려한 취업역량 강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취업 지원 내실화 등을 주요한 방침으로 정해 수행하고 있다(국가보훈처, 2021f, p. 293).

국가보훈대상자 취업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사기업체까지 국가보훈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점과 둘째, 공·사기업체에 대한 고용명령의 발동과 함께 법령 적용대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온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기업의 직원 채용 시험에 보훈대상자가 응시할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채용된 이후에도 직급의 부여·보직·승급 등에 있어 일반 직원과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처우 증진과 취업 편의를 도모한 점을 들 수 있다.

2020년 기준 취업 지원 실시기관별 취업실적을 보면, 일반기업체가 36.1%를 차지하고, 국가기관 등이 34.4%, 공공기관·공기업 등이 27.9%, 사립학교가 1.6%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2-3] 2020년도 취업 지원 실시기관별 취업실적



자료: 국가보훈처. (2021a). 2020년 국가보훈처 보훈 연감. p. 339.

2020년 취업 실적을 보면, 연간목표는 8,200명이었고, 실적은 8,563명으로 달성률은 104.4%에 이른다(국가보훈처, 2021d, p. 339).

5. 이동보훈복지서비스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보훈복지서비스는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섭김이)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요양 지원, 건강·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노후복지 시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2007년 1월부터는 기존의 이동보훈팀과 노후복지 기능을 합쳐서 노후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노후복지서비스 제공 대상과 지원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보훈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간·유관 기관 간 복지네트워크를 튼튼히 구축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많은 보훈가족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표 2-21〉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A, B 포함)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자료: 국가보훈처 누리집,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https://www.mpva.go.kr/mpva/index.do>에서 2022. 2. 6. 인출.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은 먼저 대상자 맞춤형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다.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 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 중 다음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을 들 수 있다. 보훈섬김이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나 전문기관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 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 중 셋째는 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보호서비스 지원이다. 치매·중풍, 노인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평소 가족 들로부터 수발이 어려워 인근 복지시설에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 중 넷째는 여가선용활동 지원이다. 건강한 노인 세대의 건전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단위 상이군경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건강·문화교실 등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 중 다섯째는 현장 민원 처리이다.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각 보훈관서에서 보훈공무원으로 편성된 37개의 이동보훈복지팀이 전국 120여 개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보훈민원업무 상담·접수 처리 및 이동보훈복지 지원 등 근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 중 마지막으로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들 수 있다.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던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부터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그 외 지역사회 단체·기업 등과 연계한 지방보훈관서 주관의 주거시설 개선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목적은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찾아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방향은 먼저 수혜자 특성과 복지환경 및 개인별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계부처 협업 및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 번째로는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통한 서비스 관리 체계화이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사업 체계는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과 독거·복합질환 참전 유공자 노후복지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 대상은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배우자가 해당한다. 선정기준은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노인장기요양등급의 A, B, C 포함)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이다.

-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노후복지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선정기준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3개 이상 복합질환이 있어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C 포함)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이다.

-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6. 수송시설 이용 및 보철용 차량 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은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송 시설별·대상별 운임 할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2〉 수송시설별·대상별 운임 할인 내역

구분		이용대상	할인율	비고
열차 (KTX·SRT 포함)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	거동장애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장해)자는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하철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무임	거동장애 애국지사 및 1급 상 이(장해)자는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버 스	시내버스 *좌석·광역(급행) ·마을버스 제외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무임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 자 1인 포함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농어촌버스 무임 시외버스 70% 할인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 자 1인 포함
		·6~7급 상이국가유공자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0% 할인	-
	고속버스 *우등고속(13.3. 4.부터 시행) *프리미엄 고속버스 제외	·애국지사 ·1~5급 상이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할인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 자 1인 포함
		·6~7급 상이국가유공자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0% 할인	-

구분	이용대상	할인율	비고
내항 여객선	·애국지사 ·1~5급 상이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임	육상거주자: 연 6회 도서거주자: 연 12회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애)자 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2013.5.1.시행)
	·6~7급 상이국가유공자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할인	
국내선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50% 할인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장애)자는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단, 대한항공은 5·18 동반자 할인 없음
	·참전유공자 등 비상이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수권유족	30% 할인	
국제여객선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20% 할인	한국 ↔ 중국 및 일본 (한국 발권 승선권에 한함) *일본노선의 경우 선사별 차이

자료: 국가보훈처. (2021d).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II). p. 232.

보철용 차량 지원은 LPG보조금 등 보철용 차량 지원을 통해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철용 차량 지원정책의 추진방향은 먼저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LPG보조금 부담사용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포함된다. 보철용 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다.

7.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대부 지원은 장기저리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생활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대부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이 주요한 목적이다. 대부 지원정책 추진의 방향성은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를 통하여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지원을 통하여 생활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차보전을 부담하는 보훈기금 여건을 감안하여 총대부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부조건 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부 지원과 관련하여 대부의 종류를 보면,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제정 당시의 대부에는 농장구입대부, 농장확장대부, 주택구입 및 신축대부와 사업자금 대부(사업대부의 경우 법에는 명시하였으나, 대부 지원금은 1969년부터 지급되었음) 등이 있었으며, 1인 1종에 한해서만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후 대부 종류는 계속 보완, 발전을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일부는 폐지되고 일부는 신설되었다. 현재의 대부 종류와 대부 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23〉 대부 종류별 한도액 및 상환조건

구분		한도액 (만원)	상환조건		담보조건
			연이율(%)	기간	
주택 대부	아파트 분양	3,000~6,000	1.3	20년 균등	분양아파트(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주택 구입(신축)	3,000~6,000	1.3	20년 균등	구입(신축) 주택
	주택 임차	1,500~4,000	1.3	7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주택 개량	600	2.3	7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자영 사업	농토 구입	2,500	2.3	3년 거치 10년 균등	구입 농토
	사업(창업)	2,000	2.3	7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생활안정		300~1,000	1.3	3년 균등 (보철용 차량 5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 차량(1천만 원), 재해복구비(6백만 원)

자료: 국가보훈처. (2021c).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Ⅰ). p. 361.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정책의 추진방향은 주택 우선 공급 지원으로 무주택 보훈가족의 주거안정 도모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훈가족의 주택 지원 확대이다. 우선 공급 대상 주택을 살펴보면, 먼저 주거면적 85㎡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이 대상 주택이 된다. 이와 함께 우선 공급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며 우선 공급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영구임대주택: 50년 이상 영구임대 목적으로 공급(10% 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3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공급(10% 특별공급)
- 장기전세주택: 2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공급(10% 특별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공급(10% 특별공급)
-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2% 특별공급)

-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2% 특별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공급(5% 우선 공급)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①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②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 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③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④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⑤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⑥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⑦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⑧ 참전유공자 본인 등이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자격 조건이다(국가보훈처, 2021f, pp. 443-444).

8. 양로·양육 및 보훈복지타운 입주 지원

양로 지원의 목적은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를 지원하며, 사후에는 묘지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양육 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로·양육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입소시설은 보훈원이다. 보훈원은 215명 수용 규모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보훈원은 주거시설(126실), 보훈의원, 목욕탕, 식당, 체력단련실, 게이트볼장, 강당, 영안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로·양육 지원사업은 입소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등 입소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주요한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2-24〉 양로·양육 지원사업 입소대상

구분	입소대상
양로 지원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양육 지원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자녀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자녀(제매)

자료: 국가보훈처. (2021d).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II). p. 278.

양로 지원 자격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이며, 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한다. 양육 지원 자격은 미성년자녀 및 손자녀, 미성년 제매(19세까지)로 한다.

보훈복지타운 입주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거시설(임대아파트)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훈복지타운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하며,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보훈의원, 세탁실, 슈퍼마켓, 식당, 목욕탕, 노인정 등이 있다.

〈표 2-25〉 보훈복지타운 입주보증금 및 월 관리비

구분	입주대상	입주보증금	월 평균 관리비
8평형(26㎡)	독신세대	150만 원	49천 원
13평형(42㎡)	부부세대	250만 원	95천 원

자료: 국가보훈처. (2021d).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II). p. 285.

9.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생활용품 지원

건강한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여가·취미·건강·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령 국가유공자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먼저 사업역량을 갖춘 전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의 참여를 통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건강·문화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지원이다. 다음으로 건강·문화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각 시·도 상이군경 복지회관별로 채용된 복지전문인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용적이고 지속성 있는 건강·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한 주요 추진내용은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을 들 수 있다. 먼저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특성 및 참여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노인대학 운영 등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스포츠 교실: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 ② 건강교실: 치매 및 질병의 예방 강의 등
- ③ 문화교실: 공예활동, 서예, 연극 영화관람 등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건강·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비대면 프로그램 예시 및 운영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프로그램(예시): 치매예방, 건강체조 등 온라인 강의, 반려식물 기르기, 공예 등
- ② 운영 방법: 상담인력을 통해 대상자별 희망 수요 파악 및 관련 교재, 물품 구매 전달, 대상자별 활동사항 주기적 확인 및 피드백 제공(유선 및 온라인 활용)

다음으로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을 들 수 있다. 전국 16개 지역 상이군경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지역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1년 과정의 복지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16개 보훈복지문화대학에 대한 총괄(국고보조금 교부신청·정산)은 상이군경회 중앙회에서 하고, 실무 운영 및 집행 등은 지역별 상이군경복지회관에서 실시한다.

노인생활지원용품 지원사업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 지원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훈재가복지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 사업은 노인생활지원용품 구매 지원을 통해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용품 지원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것과 용품 수요 관리 및 지급체계의 확립으로 용품 수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한 추진방향이다.

노인생활지원용품 지원사업 지급 대상은 ①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② 애국지사(본인), ③ 국가유공자(상이1급), ④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⑤ 기타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표 2-26〉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 품목

①관급식	②기저귀	③물수건	④위생비닐장갑	⑤무릎보호대(2)	⑥허리보호대(2)
⑦안마기(2)	⑧지팡이(2)	⑨찜질기(2)	⑩보행차(5)	⑪수동휠체어(5)	⑫치매예방용품

주: ()는 사용 내구 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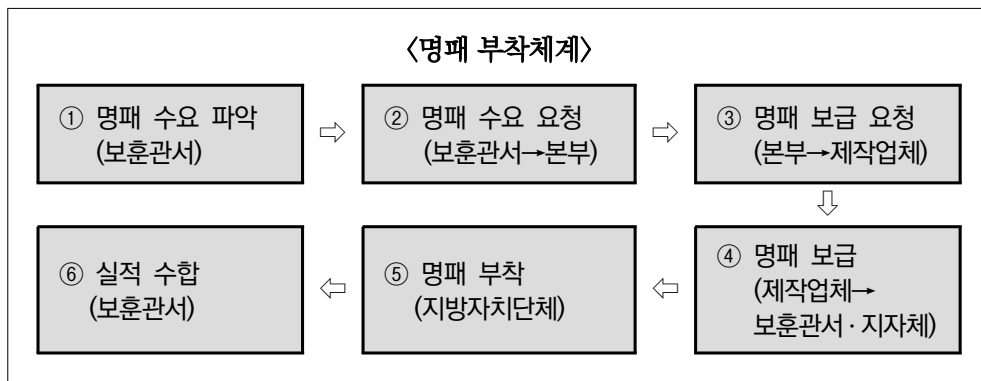
자료: 국가보훈처. (2021d).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II). p. 261.

10. 보훈예우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예우 확대 및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보훈예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예우 시책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로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시책을 시행 중이다.

보훈예우 지원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패를 달아드리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방향은 부착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희생도를 고려하여 전몰·순직군경 유족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나라사랑신문 등 각종 언론 홍보를 통한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각계각층의 명패 사업 참여를 통한 범국민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명패 부착 대상은 '19~'20년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공상군경,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하였고, '21년에는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명패를 지급받기 전 사망한 선순위 유족 1명으로 하였다.

[그림 2-4] 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명패 부착 체계



자료: 국가보훈처. (2021d).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II). p. 99.

보훈예우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예우 지원을 들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등을 통해 고인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하여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를 근조기 증정, 공적카드 또는 공적증서 증정, 묘비제작비 지원 등이 수행된다.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는 장례서비스 지원을 통해 고인의 영예를 선양한다. 그리고 애국지사 및 태극·을지무공수훈자 사망 시에는 특별한 예우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례식장 조문 및 조위금 전달, 조화 근정, 경찰 에스코트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훈예우와 관련하여 국립묘지 안장 및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안장대상자의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하는 국가책임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장 심사를 통한 국립묘지 영예성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한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11. 기타 복지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지원 등 기타 복지 지원을 통한 이용편의 제공이 목적이다. 기타 복지 지원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상의 지원(고궁 등의 이용지원), 타법에 의한 지원, 자체 협약을 통한 지원 등으로 크게 지원근거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먼저 국가보훈관계 법령상의 지원(고궁 등의 이용지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7〉 국가보훈관계 법령상의 지원시설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
고궁 및 능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50%

자료: 국가보훈처. (2021d).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II). p. 224.

타법에 의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인터넷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에너지 요금 감면(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지역), 과태료 감경,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감면,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연말정산 지원(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상속세·증여세 인적공제, 영세 자영업자 세금감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등이 있다.

자체 협약을 통한 지원은 보훈가족 콘도미니엄 협약을 통한 객실료 감면(20~30% 수준), 상이국가유공자 무료 운전교육 실시(도로교통공단) 등이 있다(국가보훈처, 2021c, p. 223-224).



제3장

실태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 제1절 기존 실태조사 검토
- 제2절 본 실태조사 개요
- 제3절 본 실태조사 표본설계
- 제4절 본 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제3장 실태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제1절 기존 실태조사 검토⁴⁾

본 절에서는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선행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대상 실태조사를 검토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는 주로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보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며 이러한 목적이나 내용은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변화되어 왔다(국가보훈처, 2011). 보훈대상자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범위에 따라 전수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생활실태지표를 개발하여 국가유공자 전수를 대상으로 1974년, 1976년, 1979년, 1988년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입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에 비해 실질적인 활용도의 문제(국가보훈처, 2011; 임완섭 외, 2018에서 재인용) 등으로 인해, 그 이후에는 표본을 선정하여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197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조사에 대한 연혁은 <표 3-1>과 같으며, 이를 통해 생활실태조사가 진행되어온 과정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내용 및 의의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초기의 생활실태조사는 실제 생존 및 거주지 주소 여부 등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생활수준별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하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보훈정책 지원 근거자료나 정책수요 파악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도 전수조사나 보훈대상자 구분에 따르거나, 가구의 특성에 따라 저소득 가구 등 부분조사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일반국민의 소득수준과도 교차비교가 가능하게끔 도시근로자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생활등급을 12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국가보훈처, 2011; 임완섭 외, 2018에서 재인용).

4) 이하 내용은 임완섭 외(2018)의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중 pp. 89-95의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조사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3-1〉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연혁

대구분	소구분	내용	의의
1973년 이전		-보훈행정 전산화에 앞서 자력기록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 대상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실제 생존 및 거주지 주소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침	-국가보훈처 창설 이후 최초의 직접 가정 방문
1974년~1975년	1974년	-1974년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 확정됨.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대두됨.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 실시	-실태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실시 등 실태조사의 요령 구체화 노력
	1975년	-표본 및 저소득자 가구 대상 실태조사 실시	
1976년~1978년	1976년	-국가보훈대상자 전수조사(13만 6783명 대상) -생활등급 ⁵⁾ 35개 등급 분류	-지자체에 조사자명단을 보내 간접조사 후 서면조사 등으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화 기함
	1977년	-생활등급 17등급 이하 부분적 실태조사 실시	
	1978년	-생활등급 12등급 이하 부분적 실태조사 실시 -생활등급 21개 등급으로 조정	
1979년~1987년	1979년	-1980년대 보훈정책자료 수집 위해 전수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됨 -생활등급기준표 12등급으로 조정
	1980년~1982년	-매년 전 보훈대상자의 1%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1981년 애국지사 및 유족, 1급상이자 전수조사 -1982년 월남귀순자, 무공수훈자 및 1급상이자 전수조사 실시	
	1983년	-전수조사 실시(전 대상자의 소득추계) -생계안정층 64%에 대하여 서면조사, 생계유지층 이하 자인 36%만 방문조사) -생활기준표상의 생활등급 12개 등급 통합조정	
	1984년~1987년	-매년 표본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저소득층 중점 부분조사 실시 -1985년 저소득 무공·보훈수훈자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병행	
1988년 이후	1988년	-전수실태조사 실시 -생활등급 분류 기준 9등급의 하한 기준을 도시근로자의 평균 가계비 63%→60%로 조정하여 6등급 이하의 하층 등급을 10% 단위로 구분	-1988년에는 최초로 보훈대상자들의 의식구조 조사를 통하여 사회지표작성 가능케 함. 뿐만 아니라 복지세대 실태까지 정밀 조사하여 실태조사의 질적 향상 도모
	1989년~2007년	-표본조사 및 여건변동자 수시조사 병행 실시 -생활등급 분류기준표 12등급으로 분류하여 현재까지 적용함	
	2008년~현재	-2007년 법령개정으로 출가한 딸도 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생활실태조사지침개선	

자료: 국가보훈처(2011)의 '보훈50년사' p.272-278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임완섭 외.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보훈처·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p. 90 〈표 3-1〉에서 재인용.

5) 1976년 생활등급 분류기준표: 5인 가족 기준 최저 2만 4000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가족 수에 따라 35개 등급으로 분류

2000년 이후 보훈대상자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들은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훈교육연구원, 한국갤럽 등의 기관에서 수행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4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지표 개발” 연구, 2005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에는 2015년 실시될 1차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보훈교육연구원의 경우 2009년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 “보훈대상자 정책수요 조사지표 개발 연구”, 2011년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한국갤럽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보훈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1년에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를 수행하였고, 2012년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 제 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에 따라 2015년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첫 번째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재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 3-2>와 같다. 2004년 9월~2004년 11월에 실시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김미숙 외(2004) 연구에서는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및 조사표 초안 작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임완섭 외, 2018에서 재인용).

2005년의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는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제대군인과 관련한 생활실태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사회지표를 활용하여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보훈정책 및 제대군인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주표 3-1> 1974년 생활등급표

유형	생활안정	생계유지			생계곤란
		상	중	하	
등급	1-6	7-15	16-20	21-26	27-35
도시근로자 가계비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조사결과 분포비	37.8	21.8	19.0	13.8	7.6

자료: 국가보훈처(2011, p. 274) ‘1974년 생활등급표’

2008년 국가유공자에우법의 개정·시행으로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실태지표를 개발하여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훈교육연구원이 함께 공동 수행한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에서는 새로 개발된 조사지표를 통하여 참전유공자 대상별(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참전유공자 대상별 특성 비교와 2005년에 이루어진 조사의 동일문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조사지표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구분에 따라 조사지표가 각각 개별적으로 구성된 바 있다. 이를 활용하여 기초생활 실태 및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0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훈교육연구원이 함께 공동 수행한 ‘보훈대상자 정책수요 조사지표 개발 연구’에서는 보훈정책별 조사지표 풀(Pool)을 개발하였다. 조사지표의 구성은 모두 9개 영역 42개 부문 279개 항목에 걸쳐 보훈대상자의 실제적·상징적 예우 전반에 걸쳐 평가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⁶⁾되었다(보훈교육연구원, 2010; 임완섭 외, 2018에서 재인용).

2011년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보훈 의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일반국민 대상의 보훈의식조사는 2004년부터 조사된 바 있으나, 국민의식보훈지수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보훈인식’, ‘보훈감성’, ‘보훈실천’의 3개 분야로 구성하는 국민의식보훈 지수의 측정결과를 지수로 변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화된 조사표를 통하여 연차별로 보훈의식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훈의식지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훈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2011년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수행된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중·

6) 각 영역은 기본사항 영역(3개 부문 14개 항목), 생활실태 영역(3개 부문 21개 항목), 경제활동 영역(5개 부문 28개 항목), 기본정책 분야(2개 부문 24개 항목), 정책평가 및 기본수요 영역(10개 부문 57개 항목), 보건의료 영역(4개 부문 36개 항목), 여가·노후생활 영역(4개 부문 21개 항목), 보훈선양 영역(6개 부문 31개 항목), 제대군인 영역(5개 부문 4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 보훈대상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위한 표본설계를 구성하고자 하였음(보훈교육연구원, 2010; 임완섭 외, 2018에서 재인용).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생활안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정책육구 및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제대군인 지원정책 분야, 경제 분야, 생활실태 분야, 인구학적 특성 등 총 4개 분야 1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보훈교육연구원, 2011; 임완섭 외, 2018에서 재인용).

2015년 국가보훈처와 한국 갤럽(Gallup)의 '2015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연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를 파악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3년 주기의 생활실태조사로서 첫 번째 생활실태조사이다(국가보훈처, 2015; 임완섭 외, 2018에서 재인용).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2005년, 2009년 진행해온 실태조사,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선행연구'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및 최근 보훈대상자 관련 정책적 이슈 등을 활용하여 가구 조사와 개인 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국가보훈처, 2015; 임완섭 외, 2018에서 재인용).

2018년 국가보훈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법 개정 이후 2번째 조사인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인식 등을 분석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5년 조사와 달리 연구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업하여 주요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사는 기간통계 생산에 강점을 가진 통계청(통계대행과)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능과 조사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활용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기존 조사표를 현행 제도에 부합하도록 업데이트하고 주요 지표들을 재정비하면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는데 최적화된 조사표를 설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법정조사로서 일관된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정비하는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사회조사, 노인생활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지표들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표를 구성하는데 주력하였다.

〈표 3-2〉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보고서명	연도	목적	내용 및 주요 지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18	-국가보훈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	-(가구)일반사항, 주거상황, 가계지출, 가계소득, 자산/부채 -(개인)문화·여가, 사회참여, 가족관계, 보건의료, 경제활동, 노후 보장, 보훈 정책 서비스, 정책 인식 및 욕구 -유관조사결과 비교
2015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15	-국가보훈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	-(가구)일반사항, 주거상황, 가계지출, 가계소득, 자산/부채 -(개인)문화·여가, 사회참여, 가족관계, 보건의료, 경제활동, 노후 보장, 보훈 정책 서비스, 정책 인식 및 욕구 -유관조사결과 비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선행연구	2014	-보훈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정례적이고 포괄적인 보훈대상별 생활실태 자료의 수집을 위해 2015년 실시된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의 조사지표 선정 및 조사표 개발, 표본설계와 조사컨설팅	-국가보훈대상자 유형 및 현황 -생활실태조사 지표 선정 및 조사표 개발 -생활실태조사 표본설계와 컨설팅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방안 연구	201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정책의 이론적 고찰 -국내·외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정책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에 대한 정책육구분석(지원정책육구, 경제상태, 생활실태) -제대군인 생활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결과보고서	2011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보훈의식을 체계화된 조사표로 측정하여 국민의 보훈의식 제고 정책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연차별 보훈의식지수를 비교함으로써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하고자 함	-국민보훈지수 종합분석 -(3개)분야별 분석(보훈인식, 보훈감성, 보훈실천) -(14개)세부문항별 분석 ⁷⁾
보훈대상자 정책수요 조사지표 개발 연구	2010	-2011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 예정인 “국가보훈대상자 정책수요 조사”를 위한 보훈정책별 조사지표 풀(Pool) 개발	-국가보훈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정책수요 조사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기존의 보훈대상자 정책수요 조사지표 분석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조사	2009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참전유공자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 보훈정책 수립	-일반적 특성 -기초생활실태 -경제생활 부문 -보건의료 부문 -여가·노후생활 부문 -보훈행정 부문 -사망 시 예우 부문

보고서명	연도	목적	내용 및 주요 지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실태와 욕구에 기반한 보훈정책 및 제대군인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대상별 인구사회학적 현황 및 국내외 지원정책 -대상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 -정책적 시사점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조사	2004	-보훈대상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지표 개발	-보건의료, 주거생활, 경제생활, 대부현황, 보훈·행정 정보 부문, 민원부문, 노후생활, 기타 만족도

자료: 임완섭 외,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보훈처·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pp. 92-93 <표 3-2>에서 재인용하였으며, 임완섭 외(2018)의 연구 내용을 추가함.

지금까지 살펴본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주요 지표 등을 요약·정리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주요 지표

지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4)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조사 (2009)	보훈대상자 정책수요 조사지표 개발 연구 (2010)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방안 연구 (2011)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선행연구 (2014)	2015년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15)	2018년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18)
기본사항	○	○	○	○	○	○	○
생활실태 부문	○	○	○	○	○	○	○
개인 및 가구사항(분리)					○	○	○
보건의료 부문	○	○	○	○	○	○	○
주거생활	○	○	○	○	○	○	○
경제생활/경제활동	○	○	○	○	○	○	○
자산/부채(대부) 부문	○	○	○	○	○	○	○
보훈행정·정보 부문	○	○	○				
민원부문	○		○				

7) ①주요 보훈인물 이해, ②보훈 관련 주요 기념일 이해, ③보훈제도 이해, ④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⑤보훈대상자들의 국가발전 기여 인정, ⑥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 여부, ⑦국가유공자 존경 정도, ⑧보훈 단체에 대한 호감도, ⑨주요 기념일 국기제양, ⑩병역의무의 자발적 이행, ⑪국가위기 시 동참, ⑫전쟁 참여, ⑬현충시설 방문, ⑭보훈 관련 행사 참여(국가보훈처, 2011; 임완섭 외, 2018에서 재인용)

지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4)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조사 (2009)	보훈대상자 정책수요 조사지표 개발 연구 (2010)	제대군인 생활안전 지원방안 연구 (2011)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선행연구 (2014)	2015년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15)	2018년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18)
노후 및 여가생활	○	○	○	○	○	○	○
각종 만족도 부문	○	○	○	○	○	○	○
사망 시 예우 부문		○	○			○	○
보훈선양 영역			○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			○	○
제대군인영역			○	○			
정책 이용 경험				○	○	○	○
정책 인식 및 욕구				○	○	○	○
정책 개선사항				○	○	○	○
노후 보장					○	○	○
대인 및 가족관계					○	○	○
사회참여						○	○
보훈대상자 인식						○	○

자료: 임완섭 외.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보훈처·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p. 95 <표 3-3>에서 재인용하였으며, 임완섭 외(2018)의 연구 내용을 추가함.

이상 살펴본 실태조사와 별도로 국가보훈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2월 국가보훈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건강보험료체납 등 위기가 예상되는 800명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협조로 65세 이상 독거유공자 118,717명을 파악한 바 있다(임완섭 외, 2018에서 재인용).⁸⁾ 이들 중 90세 이상 지원이 필요한 보훈대상자 1,831명을 발굴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10명에 대해 장기요양 및 노인돌봄서비스와 같은 복지서비스들을 지원하였고, 162명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임완섭 외, 2018에서 재인용).⁹⁾

8) 매일경제. (2018. 2. 13.). 보훈처, 복지사각지대 보훈대상자 실태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200027&year=2018&no=102897>에서 2018. 12. 11. 인출.

9) 국가보훈처. (2018. 8. 6.). 보훈복지 사각지대 종합 실태조사 및 지원 실시. https://www.mpva.go.kr/mobile/news/pressView.asp?id=43051&gotopage=1&search=&search_string=에서 2018. 12. 11. 인출.

제2절 본 실태조사 개요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를 조사하여 국가보훈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국가보훈처는 1974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래, 1976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전수조사(1976년, 1979년, 1988년)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해왔고(국가보훈처, 2011) 2012년에 「국가보훈기본법」 제16조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2015년에 첫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조사인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는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가 주관하여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각 조사와 분석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세 번째 조사인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는 국가보훈처 정책총괄과의 주관 하에 실시되었다.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통계대행과가 표본설계와 조사수행을 담당하고, 조사표 개발, 실태 분석,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등 2021년 3월 31일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보훈대상자 655,184명 중 11,000명(가구)이다. 조사대상 11,000명(가구) 중 최종적으로 9,716명(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88.3%의 완료율을 보였다. 2018년 조사완료율(87.2%)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후술하겠지만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표본추출틀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DB다. 본 조사에서 보훈대상자 유형은 세부 층화 기준으로 사용된 중요한 개념이며, 보훈대상DB에 있는 대상 구분 코드를 상당 부분 준용하였다. 대상별 특성과 법적 근거에 따라 9개 대상으로 분류된 보훈대상자 세부 유형은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국가보훈대상자 대상별 분류

대상	대상 구분 코드	
1. 독립유공자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본인)
	3	애국지사(유족)
2. 국가유공자(본인)	4	4.19혁명공로자
	5	4.19혁명부상자
	6	공상공무원
	7	공상군경
	8	무공수훈자
	9	보국수훈자
	10	재일학도의용군인
	11	전상군경
	12	지원대상자
3. 국가유공자(유족)	13	4.19혁명공로자 유족
	14	4.19혁명부상자 유족
	15	4.19혁명사망자 유족
	16	공상공무원 유족
	17	공상군경 유족
	18	무공수훈자 유족
	19	보국수훈자 유족
	20	순직공무원 유족
	21	순직군경 유족
	22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23	전몰군경 유족
	24	전상군경 유족
	25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26	지원대상자 유족
4. 5·18민주유공자	27	5·18민주유공자 본인
	28	5·18민주유공자 유족
5. 참전유공자	29	6·25참전유공자
	30	월남참전유공자
6. 고엽제	31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환자 포함)
7. 특수임무유공자	32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33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8. 제대군인	34	제대군인
9. 보훈보상대상자	35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36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주: 대상 6번 “고엽제”의 경우, 고엽제후유증 대상자 본인과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를 포함하였음.

조사내용은 크게 보훈대상자 본인에 대한 개인 조사와 보훈대상자가 속한 가구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 조사로 구분된다. 가구 조사에서는 가구 일반사항, 주거상황, 가계 지출, 가계소득, 자산, 부채 등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현황과 실태가 포함되었고, 개인 조사에서는 보훈대상자 본인의 문화/여가 생활, 사회참여, 가족관계, 보건의료 이용, 경제활동, 노후 보장, 보훈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 등 보훈대상자 개인 측면의 실태 및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의 현장조사는 당초 2021년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확산세에 있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를 늦추어 실제 실사는 같은 해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2일간 이루어졌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원이 가구에 방문하는 대면 면접 방식으로 수행하였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조사항목의 일부에 대해서 조사표를 유치하여 자기기입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조사의 기준시점은 조사항목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다. 먼저 인식과 자산, 부채와 같은 고정시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지출과 소득 등 유량(flow)을 파악해야 하는 항목의 경우는 2020년 한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제3절 본 실태조사 표본설계

1. 모집단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목표모집단으로 하였다. 보훈대상자 DB에 등록된 대상자는 총 655,184명이고, 이중 해외거주자 22명을 제외한 655,162명이 이번 조사의 목표모집단이 되었다. 지역별·대상유형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국가유공자(유족)가 3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본인)가 24.8%, 참전유공자가 23.5%, 제대군인이 10.2%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전유공자 46.5%, 국가유공자(유족) 29.9%, 국가유공자(본인)

와 제대군인 각각 10.3% 등의 순이었던 2018년도 조사 당시 모집단의 구성(임완섭 외, 2018. p. 124)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표 3-5〉 시도 및 보훈유형별 목표모집단 현황

(단위: 명, %)

시도	합계		독립 유공	국가 유공 (본인)	국가 유공 (유족)	고엽제	참전 유공	보훈보상 대상	5.18 민주유공	특수임무 유공	제대 군인
합계	655,162	(100.0)	8,215	162,332	220,426	31,092	154,134	5,897	4,247	2,047	66,772
	(100.0)		(1.3)	(24.8)	(33.6)	(4.7)	(23.5)	(0.9)	(0.6)	(0.3)	(10.2)
서울	113,342	(17.3)	2,098	27,075	36,767	4,770	30,473	1,038	571	344	10,206
부산	46,911	(7.2)	521	11,475	16,607	3,252	11,409	395	53	106	3,093
대구	31,822	(4.9)	423	8,458	12,757	1,844	5,086	291	38	56	2,869
인천	32,926	(5.0)	360	7,027	10,061	1,251	10,094	286	93	226	3,528
광주	18,668	(2.9)	215	4,731	5,707	1,041	2,769	180	1,913	36	2,076
대전	18,990	(2.9)	213	5,197	6,009	809	3,374	186	33	40	3,129
울산	10,500	(1.6)	65	2,770	4,289	672	1,828	118	15	30	713
세종	4,353	(0.7)	42	1,406	1,064	132	590	54	10	11	1,044
경기	152,263	(23.2)	2,065	38,901	47,358	5,320	36,805	1,463	499	561	19,291
강원	29,670	(4.5)	191	8,097	9,166	1,064	6,541	228	36	219	4,128
충북	20,940	(3.2)	211	5,157	7,390	993	4,803	151	31	32	2,172
충남	26,220	(4.0)	390	6,335	7,778	1,301	7,355	244	39	80	2,698
전북	24,857	(3.8)	268	5,586	8,506	1,792	6,419	235	125	31	1,895
전남	27,486	(4.2)	196	6,632	9,884	1,827	6,110	234	683	56	1,864
경북	40,957	(6.3)	523	9,988	16,196	2,309	8,530	334	40	82	2,955
경남	45,636	(7.0)	336	11,554	16,451	2,348	9,924	388	48	120	4,467
제주	9,621	(1.5)	98	1,943	4,436	367	2,024	72	20	17	644

목표모집단에서 도서지역, 만 13세 이하 및 100세 이상, 소규모 사무소 등을 제외한 638,173명을 조사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모집단 설정 시 목표모집단에서 제외하는 보훈대상자는 16,989명으로 도서지역 3,450명, 소규모 사무소 13,019명, 기타(연령 만 13세 이하, 100세 이상) 520명이며, 포함오차는(coverage error)는 2.6%다. 이 포함오차는 추정 단계에서 보완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는 모집단 설정 시 보훈대상 유형의 분류 방식을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변경하였다. 참전유공자와 다른 보훈대상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를 직전 조사에서는 참전유공자로 분류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각 해당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모집단을 구성한 점이 그 차이점이다. 따라

서 보훈대상 유형별로 직전 조사결과(2018년)와 이번 조사결과(2021년)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표 3-6〉 보훈대상자 DB 명부,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현황

(단위: 명, %)

시도	목표 모집단	제외2			조사 모집단	목표 모집단 비율	조사 모집단 비율	차이 (%p)
		도서 ¹⁾ 지역	소규모 사무소 ²⁾	제외 연령 ³⁾				
합계	655,162 (100.0)	3,450 (0.5)	13,019 (2.0)	520 (0.1)	638,173 (97.4)	100.0	100.0	0.0
독립유공	8,215	17	157	50	7,991	1.3	1.3	0.0
국가유공(본인)	162,332	738	2,771	44	158,779	24.8	24.9	0.1
국가유공(유족)	220,426	1,086	4,988	294	214,058	33.6	33.5	△0.1
고엽제	31,092	167	707		30,218	4.7	4.7	0.0
참전유공	154,134	962	3,607	130	149,435	23.5	23.4	△0.1
보훈보상대상	5,897	24	89	2	5,782	0.9	0.9	0.0
5.18민주유공	4,247	15	63		4,169	0.6	0.7	0.0
특수임무유공	2,047	22	40		1,985	0.3	0.3	0.0
제대군인	66,772	419	597		65,756	10.2	10.3	0.1

주: 1) 도서지역: 섬지역 및 다리(연육교)로 연결된 섬 포함(영종도 등).

2) 소규모 사무소: 보훈대상자 규모가 작아 조사원 운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조사모집단에서 제외
(청송, 울진, 삼척, 강진, 해남, 진안, 함천, 거창, 영월).

3) 제외 연령: 연령 만 13세 이하, 100세 이상 제외.

이렇게 조사모집단으로 확정된 638,173명을 보훈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유족) 집단이 33.5%로 가장 많고, 국가유공(본인) 집단 24.9%, 참전유공자 집단 23.4%, 제대군인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조사모집단은 목표모집단의 97.4%를 포괄하고 있으며, 조사모집단과 목표모집단의 보훈유형별 분포 차이는 0.1%p 이내로 나타났다.

〈표 3-7〉 시도 및 보훈유형별 조사모집단 현황

(단위: 명, %)

시도	합계		독립 유공	국가 유공 (본인)	국가 유공 (유족)	고엽제	참전 유공	보훈보상 대상	5.18 민주유공	특수임무 유공	제대 군인
합계	638,173	(100.0)	8,215	162,332	220,426	31,092	154,134	5,897	4,247	2,047	66,772
	(100.0)		(1.3)	(24.8)	(33.6)	(4.7)	(23.5)	(0.9)	(0.6)	(0.3)	(10.2)
서울	113,213	(17.7)	2,079	27,066	36,687	4,770	30,452	1,038	571	344	10,206
부산	46,884	(7.4)	521	11,469	16,593	3,251	11,403	395	53	106	3,093
대구	31,809	(5.0)	419	8,455	12,752	1,844	5,085	291	38	56	2,869
인천	31,493	(4.9)	347	6,714	9,739	1,222	9,670	273	87	209	3,232
광주	18,657	(2.9)	211	4,731	5,701	1,041	2,768	180	1,913	36	2,076
대전	18,975	(3.0)	207	5,196	6,004	809	3,371	186	33	40	3,129
울산	10,497	(1.6)	65	2,770	4,287	672	1,827	118	15	30	713
세종	4,351	(0.7)	42	1,406	1,063	132	589	54	10	11	1,044
경기	151,977	(23.8)	2,055	38,860	47,234	5,317	36,705	1,463	499	561	19,283
강원	25,782	(4.0)	166	7,226	7,642	896	5,501	192	35	196	3,928
충북	20,922	(3.3)	211	5,156	7,379	993	4,797	151	31	32	2,172
충남	26,152	(4.1)	388	6,329	7,754	1,298	7,329	244	39	79	2,692
전북	23,503	(3.7)	260	5,374	8,077	1,716	5,876	225	119	30	1,826
전남	23,291	(3.7)	165	5,668	8,269	1,496	5,117	213	628	47	1,688
경북	39,029	(6.1)	464	9,563	15,420	2,226	8,079	322	36	75	2,844
경남	42,127	(6.6)	294	10,865	15,082	2,171	8,872	365	42	116	4,320
제주	9,511	(1.5)	97	1,931	4,375	364	1,994	72	20	17	641

2. 표본추출틀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전 국민이 아닌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DB(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추출틀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제도의 대상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는 경우, 행정자료의 모집단 리스트를 활용한 표본설계를 사용하면 최종 추출단위를 직접 층화할 수 있어 층화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표본이 지역별로 산재하게 되어 현장조사의 동선이 커짐에 따라 조사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절충할 수 있는 이중 추출(Two-phase sampling, Double sampling) 방식을 적용하고자 보훈대상자 DB의 도로명 주소와 각종 읍면동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의 규모가 일정(평균 60명 내외)한 집락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재구축했다.¹⁰⁾

위 방식으로 표본추출틀을 구축한 결과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표본추출틀로 활용될 통합 조사구는 전국 10,603개(638,173명)로 조사구당 평균 60.2명을 포함하게 된다.

〈표 3-8〉 지역별 조사구 통계량

시도	조사구	대상자	평균	중앙값	3분위수	최댓값	표준편차	왜도
전국	10,603	638,173	60.2	62	64	92	7.3	-1.5
서울	1,834	113,213	61.7	62	63	87	4.1	-1.8
부산	755	46,884	62.1	62	64	85	4.8	-1.8
대구	519	31,809	61.3	62	64	71	5.3	-1.9
인천	509	31,493	61.9	62	64	90	5.2	-1.5
광주	304	18,657	61.4	63	65	71	5.9	-1.7
대전	306	18,975	62.0	62	66	71	5.6	-1.0
울산	170	10,497	61.7	63	67	86	6.9	-0.7
세종	71	4,351	61.3	63	66	71	8.0	-1.3
경기	2,467	151,977	61.6	62	64	92	5.0	-1.1
강원	434	25,782	59.4	62	65	71	8.2	-1.1
충북	364	20,922	57.5	60	64	84	9.3	-0.7
충남	461	26,152	56.7	60	64	82	9.9	-0.6
전북	424	23,503	55.4	58	63	79	10.1	-0.7
전남	428	23,291	54.4	56	63	87	11.2	-0.3
경북	686	39,029	56.9	59	64	82	9.7	-0.7
경남	717	42,127	58.8	62	65	75	9.0	-1.3
제주	154	9,511	61.8	63	65	71	6.3	-1.6

3. 표본추출

전술한 바와 같이, 도서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장시간 조사응답이 쉽지 않은 연령을 조사모집단(표본추출틀)에서 제외하였으며, 현장조사 업무량과 보훈유형별 세부 층화를 위하여 이중추출(Two-phase sampling, Double sampling) 방법으로 표본을 설계하였다. 이중추출 표본설계는 추정의 효율성과 조사비용 절감 등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조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대규모의 1상 표본을 조사구에서 집락 추출하여 2상 표본의 층화를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최종 추출표본의 지역범위를 조정하여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층화효율을 높이기 위해 1상 추출된 표본을 리스트화하여 2상 표본추출틀로 활용했고, 최종 추출단위인 보훈대상자를 직접 층화하여 보훈대상자 리스트를 추출하였다.

10) 표본추출 방식과 가중치 부여에 대해서는 [부록 1]에 수록했다.

제4절 본 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조사표는 3가지 원칙에 따라 구성했다. 첫 번째는 직전 조사인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계열적 연속성을 살려 구성하고자 했다. 따라서, 직전 조사의 문항 시점 및 기간과 응답 선택지 구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제도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은 문항에 적극 반영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동일 기간을 조사하는 주요 통계조사와의 횡단면(cross-sectional)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주요 통계조사자료에서 산출되는 동시기의 통계량 및 지표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과 응답 선택지를 구성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와 다른 인구 집단(일반국민, 노인,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전 조사인 2018년 조사 대비 정책 활용도가 낮은 문항은 삭제하거나 응답 선택지를 간소화했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영역 중 자세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기존의 문항을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의 조사표는 2018년 조사표와 동일하게 가구 조사표와 보훈대상자(개인) 조사표로 구성했다. 국가보훈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혹은 우선순위에 유족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질적으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훈대상자 개인의 삶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의 특성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개인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기에 앞서 가구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임완섭 외, 2018). 따라서, 보훈대상자의 가구 특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보훈대상자 개인의 생활실태를 세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조사표를 분리하여 구성했다.

가구 조사표에서는 보훈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이 공유하는 가구 특성 중 가구 및 가구원 일반사항, 주거,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규모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고, 보훈대상자(개인) 조사표에서는 보훈대상자의 행복, 문화 및 여가, 사회참여 및 의식, 가족관계, 보건·의료, 경제활동, 노후 보장, 정책 서비스, 정책 인식 및 욕구의 9가지 삶의 영역을 주제로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1. 가구 조사표 지표 선정과 개발

가구 조사표의 주요 영역은 크게 8가지로 분류했다. 가구 조사표는 전체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장애 여부, 만성질환 여부,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상태 등 가구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자산과 부채, 주거환경 등 가구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조사표 체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 조사와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계조사자료들을 참조하여 구성된 것이다. 또한, 보훈대상자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사한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조사들을 함께 참조했다.

이렇게 설계된 가구 조사표에서 산출되는 지표들은 전 국민 및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일반 실태조사의 지표와 항목을 기본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득에 관한 조사 문항의 경우, 통계청과 OECD의 소득 분류 체계를 충족하는 항목들로 편성되어있어 통계청 조사자료 및 OECD 자료와의 국제 비교도 가능하다.

개별적인 조사 문항과 관련하여 2018년에 수행된 직전 조사와 달라진 점을 살펴 보면, 제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 선택지를 다소 변경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등급이 기존 6등급제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된 점 등을 조사 표에 반영했고, 가계소득 영역에서는 본 조사의 소득 기준시점인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단위와 지자체별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응답에 포함했다. 또한, 공적이전소득 중 근로(자녀)장려세제, 양육수당 등은 보훈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정책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은 공적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보조금에 포함시키는 등 응답선택지의 간소화를 진행했다. 2018년에 조사했던 세금 및 사회보험료 체납 여부에 대해서도 정책 활용도가 낮다는 국가보훈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 효율화를 위하여 문항을 삭제했다. 그 외의 문항들은 시계열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유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가구 조사표의 문항 영역 및 지표 내용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표 3-9〉 가구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구분	영역	지표 내용
가구	가구일반사항	현재 가구원 수, 성명, 성별, 출생연도, 동거 여부,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장애분류 및 장애 정도, 만성질환, 공적연금 가입 형태, 가입 및 수급 중인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수급 형태, 교육급여
	주거상황	거주유형, 입주 형태, 주택가격(전세금·월세보증금 포함), 월세액, 주거 위치, 방의 수, 주거면적
	가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주거비(월세 제외, 광열수도비 포함), 교육비(보육비 포함),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전체 소비지출, 필요한 추가지출 항목
		(비소비지출) 세금,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 기타 소비지출, 전체 비소비지출
	가계소득	시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① 보훈급여금 ② 공적연금 ③ 기초연금 ④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⑤ 긴급재난지원금 ⑥ 기타 정부 보조금 사적이전소득
	자산	소유 및 점유 부동산, 금융자산(예금, 적금·주식·채권·펀드, 헷돈 등), 자동차 등 기타자산(농기계, 농축산물 등 기타재산)
	부채	총 부채액, 사업 용도 부채액, 가계 용도 부채액, 금융기관 대출·카드 대출·보훈처 생업 지원 대출, 부채 상환 능력(원금상환액, 이자지출액), 부채 원인, 부채 규모 변화
	추가 질문	작년 기준 가구원 수

2. 개인 조사표(보훈대상자) 지표 선정과 개발

보훈제도는 개인 단위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상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훈대상자 조사표(개인 조사표)는 문화/여가 생활, 사회참여 정도, 가족관계, 보건의료 이용, 경제활동, 노후 보장, 보훈정책 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 등의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가. 행복

국내 보훈대상자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보훈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삶의 만족 수준과 가치 평가를 계량화하기 위해 2021년 조사에서 신설된 것이다.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는 대표지표로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과 삶의 가치 평가에

대한 두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10〉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행복 분야

구분	분야	구분 항목	지표 내용
개인	행복	삶의 만족	-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
		삶의 가치 평가	- 삶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평가

나.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 분야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여가활동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정책 입안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조사표는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 주된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한 사람, 국내와 해외 관광여행 횟수, 여가 활용 만족 수준과 불만족 이유, 향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 유형, 그리고 오락·문화 지출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조사에 포함되었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여부, 레저시설 이용 여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의성과 정책 활용도를 고려해 2021년 조사표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국내 및 해외의 관광여행 문항은 여행 기간을 삭제하고 횟수만을 묻는 것으로 질문을 간소화하였다.

〈표 3-11〉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문화/여가 분야

구분	분야	구분 항목	지표 내용
개인	문화/여가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 정도
		주된 여가 유형	-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유형 - 여가활동을 함께 한 사람
		관광여행 횟수	- 지난 1년 동안 여행 경험 여부 - 국내 여행(숙박/당일 여행)/해외 여행 여부
		여가 활용 만족도	- 평소 여가생활 만족도 - 여가 불만족 이유
		향후 여가활동	- 앞으로 희망하는 여가 유형
		오락·문화 지출	- 지난 1년 동안의 오락·문화비(운동, 공연, 단체여행비, 취미용품 등) 월평균 지출 금액

다. 사회참여

개인 조사표의 사회참여 분야는 보훈대상자들이 생활 중에 경험하는 관계망 및 신뢰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조사표는 일상 생활이나 경제적 곤란, 정서적 곤란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적 지지체계의 존재 여부와 참여한 단체 활동 여부와 단체의 종류, 이타적 사회참여로서 자원봉사 활동 경험과 희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람들에 대한 신뢰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조사표에서는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으나, 2021년 조사표에서는 낮은 정책 활용도를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표 3-12〉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사회참여 분야

구분	분야	구분 항목	지표 내용
개인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	- 곤란한 상황(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단체 참여	- 지난 1년 간 단체 참여 활동 경험 여부 - 주로 활동한 단체
		자원봉사 관련	- 지난 1년 간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 향후 1년 이내 자원봉사 활동 의사 여부
		계층의식	- 본인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
		신뢰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

라. 가족관계

가족관계 관련 지표는 보훈대상자가 인식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과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만남 빈도, 연락 빈도 등에 대한 가족 및 대인관계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표 3-13〉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가족관계 분야

구분	분야	구분 항목	지표 내용
개인	가족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 주관적 가족관계 만족 정도
		가족 도움	- 지난 1년간 자녀, 부모, 형제 등으로부터 항목별(고민 상담(정서적 도움), 청소·식사 준비·세탁(도구적 도움), 간병·수발·병원 동행 도움, 경제적 도움(현금 지원, 현물 지원) 받은 여부
		만나는 정도	- 지난 1년간 친인척과 만난 정도
		연락 정도	- 지난 1년간 친인척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

마.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 조사 지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관련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크게 자격 및 건강 상태, 의료 이용 실태, 의료비 부담 수준, 정신건강 및 건강행태로 구성하였다. 먼저 보훈대상자의 자격 및 건강 상태에서는 의료보장 자격은 건강보험, 보훈의료 등 1개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주로 이용한 의료보장제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걷거나, 목욕을 혼자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혹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지, 불안 또는 우울한지의 정도 등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항목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보훈대상자의 의료기관 지원정책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보훈대상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다양한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전국 5개의 국가보훈병원과 보훈대상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 중인 위탁 병원에서 진료비 면제 또는 감면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자격으로 민간 병·의원과 국공립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의 보건의료 분야 조사에서 어떤 유형의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보훈의료의 나아갈 방향성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 지원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병·의원 이용 일수 및 연간 본인 부담한 진료비 수준 등 의료기관 의료 이용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로 보훈대상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의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의료비 경감 등 적정 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본인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표기하게끔 하고,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한 치료 중도 포기 경험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보훈 의료 지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항목과 추가적인 경제적 의료 자원으로서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항목을 추가하였다.

네 번째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 CES-D11 지표를 활용하였다. CES-D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하여 합계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훈의료 차원의 심리재활치료를 위한 서비스 욕구를 추가하였다. 보훈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심리상담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본 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훈대상자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건강 위해 요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흡연과 음주 영역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흡연 및 음주 여부, 고위험 음주율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21년 보훈실태조사에서는 2018년도 조사에 포함되었던 선호하는 의료기관, 건강검진 여부,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이용 의향 문항은 삭제하였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심리재활서비스 문항과 음주 및 흡연 등 건강행태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3-14〉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보건의료 분야

구분	분야	구분 항목	지표 내용
개인	보건의료	자격 및 건강 상태	-주 이용 의료제도 -건강 상태(걷는데 지장 정도, 목욕 지장 정도, 일상생활 지장 정도 통증 및 불편감 정도, 불안우울 정도) -주관적 건강 상태 -병원진료 여부 및 주 질환
		의료 이용 실태	-주 이용 의료기관 종류 -병·의원 이용 여부 -병의원 이용 일수(1년간) -본인 부담금(1년 총액)
		의료비 부담 수준	-본인 부담금 부담 수준 -치료 포기 경험 여부 및 이유 -보훈의료 지원 개선사항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정신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우울증 자가진단 CES-D11 지표 -마음건강 상태 및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종류
		건강행태(음주, 흡연)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및 정도

바. 경제활동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개인 부문 중 중요한 한 분야가 경제활동 분야이다. 경제활동은 개인에게 있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사회참여, 건강 유지, 삶의 만족도 제고 등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보훈대상자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는 소득 증대, 사회참여를 통한 개인적 활력,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등 청장년층과 비교 시 더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경제활동 조사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하고 세부적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이 되는 보훈대상자가 전반적으로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조사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으로 삼은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의 경제활동 부문을 참조하였다. 특히 노인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조사기준에 의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와 우리나라 일반 노인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비교 분석을 통해 보훈대상자에게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전 생애적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보훈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제활동 참여 형태와 노동시장 참여가 주는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애주기적인 경제활동 정책 지원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목적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경제활동 분야 조사표는 다섯 가지 부문으로 조사표를 구성하였다(구체적인 설문 형태는 부록의 조사표 중 경제활동 분야 참조). 첫 번째는 현재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두 번째는 구직활동 과정, 세 번째는 장래 경제활동 계획, 네 번째는 직업 선택의 요인, 마지막으로 보훈 관련법에 따른 취업수강료 지원 프로그램의 형태로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다섯 가지 조사표 구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보훈대상자들의 현재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즉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해당 부문에서 세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구성인 현재의 경제활동 참여는 일자리 참여 상태와 구직의사,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보훈대상자는 어떠한 일에 참여하고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우선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과연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령임에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면 전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지를 다른 부문의 조사인 소득 조사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소득 지원방안으로 바람직한 것이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1년의 경우 보훈대상자 구직 실태 파악을 위해 현 직장을 구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경제활동 참여가 주는 만족도 등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일자리 참여는 단순히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 이외에 일자리 참여를 통해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후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에 보훈대상자가 충분히 대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의 만족도를 이미 파악한 직종 및 지위 등과 연계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직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훈대상자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구직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구직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직면하고 있는 취업장벽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 보훈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원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직을 위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직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 노력이나 민간기관 등의 협력 하에 직업 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동 설문을 통해서도 보훈대상자가 직업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정부가 적절하게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디서 주요 정보를 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직업정보 제공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미래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여기서는 경제활동 계획에 대하여 조사하며, 세부적으로는 참여 희망 직업 분야, 희망 임금수준을 질문한다. 이를 통해 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경제활동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급여수준을 원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직종에 대한 개발과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묻는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보훈대상자와 같은 고령층의 경우 자칫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경우 삶에 대한 낙을 잃고 고령층의 이른바 ‘4고(苦)’¹¹⁾를 경험하게 된다. 과연 보훈대상자는 다른 고령층이 경험하는 네 가지 어려움 중에서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부합되는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설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보훈 관련법에 따른 취업수강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2018년) 취업수강료 지원내역을 대신하여 2021년 조사에서는 그 실질적 도움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1) 노인들이 경험하는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의 네 가지 어려움을 4고(苦)라 한다. 즉 고령으로 인한 건강 상실, 소득 상실로 인한 빈곤,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른 역할 상실감을 노인들이 경험하는 네 가지 어려움으로 표현할 수 있음 (김태완·이주미, 2015).

〈표 3-15〉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경제활동 분야

구분	분야	구분 항목	지표 내용
개인	경제활동	현재 시점에서 경제활동 참여 상	- 현 직장을 구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 현 직장에서의 근무 시작 시기 - 주당 평균 근무 일수, 평균 근무시간 -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 주요 참여 산업, 참여 직업 및 사업장 종사자 규모 - 경제활동 참여 이유 -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 직업에 대한 만족도
		구직활동	-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험과 주된 이유 -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 - 구직활동 중 필요한 사항
		향후 경제활동	- 참여하고 하는 산업 및 일자리 분야 - 희망 소득수준
		직업 선택 요인	-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취업수강료 지원	- 취업수강료 지원 경험 여부 - 취업수강료 지원의 취업이 실질적 도움 정도

사. 노후 보장

대부분의 보훈대상자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고령층이고,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이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지표 가운데 노후 보장 영역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노후 보장 분야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였다. 조사 지표 구성은 노후생활을 위한 주된 금전적 준비 수단(보훈급여금, 금융자산, 공적연금, 사적연금, 부동산 등) 여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 생활비와 적정생활비,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금액 및 준비 상황에 대한 인식, 수급하고 있는 연금 종류(개인·퇴직, 주택·농지연금) 및 연금액,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종류, 주택 형태, 노후에 필요한 서비스 등 노인 대상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표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및 수급하는 급여 종류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급 여부, 희망하는 안장 유형 및 희망 장례 방법 등 보훈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와 희망 주거 형태 및 거주 지역을 파악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정책 수립과 주거복지서비스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노후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중점적으로 확대·지원할 노후생활서비스 선정 및 장례서비스 개선과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6〉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노후 보장 분야

구분	분야	지표 내용
개인	노후 보장	-노후생활을 위한 주된 금전적 준비 수단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생활비 -노후생활을 위한 적정생활비 -노후생활을 위한 월 준비금액 -경제적 노후 준비 상황에 대한 인식 -수급하고 있는 개인·퇴직·주택·농지연금 및 연금액 -노후 희망 주거 종류/세부 종류/주택 형태 -노후 거주 희망 지역 -노후에 필요한 희망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및 급여 종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급 여부 -희망 안장 유형 및 희망 장례 방법

아. 정책서비스

정책서비스 분야의 조사지표 설계 목적은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의 보훈서비스와 보훈서비스 외 국가지원에 대한 인지 및 경험 여부와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보훈대상자를 위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보훈대상자를 위해 제공되는 보훈서비스를 바탕으로 복지욕구 실태조사 및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의 복지서비스 문항 틀을 참고하여 조사지표를 구성하였다.

보훈정책 서비스 분야 중 보훈서비스는 서비스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보훈서비스의 종류로는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대부 지원, 의료 지원, 양로보호, 보철구 지원, 수송시설 지원, 휴양시설 이용, 사망 시 지원, 예우 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등을 포함하였다.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의 항목으로는 의료비 지원, 노인급식 지원, 물품 지원,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방문가정간호·간병·목욕서비스, 이동편의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노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회교육서비스 등의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며, 이들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여부를 포함하였다.

정책 활용도가 높은 정책서비스 목록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2021년도 조사에서는 2018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일부 항목에 변경이 있었다. 2021년도 조사에서의 변경된 상황을 보면, 먼저 보훈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문항은 활용도가 낮아 삭제하였다. 다음

으로 보훈정책 서비스 조사항목이 2018년도 12개에서 2021년도 13개로 1개 증가하였다. 보훈급여금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2018년도 항목 중 이동복지서비스와 보훈상담센터서비스 항목은 삭제하였고, 대신 2021년에는 예우 지원, 재가복지서비스 항목을 신설하였다.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항목은 2018년도 14개에서 2021년도 12개로 2개 항목을 삭제하면서 축소되었다. 2018년도 항목 중에서 기초연금지급과 특별연금급여 항목을 정책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삭제하였다.

〈표 3-17〉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정책서비스 분야

구분	분야	구분 항목	지표 내용
개인	정책서비스	보훈정책 서비스	-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만족도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자. 보훈대상자 인식

보훈대상자 인식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국가정책 방향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느끼는 자긍심의 정도와 더불어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와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포함하여 조사표를 구성했다.

〈표 3-18〉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보훈대상자 인식 분야

구분	분야	지표 내용
개인	보훈대상자 인식	-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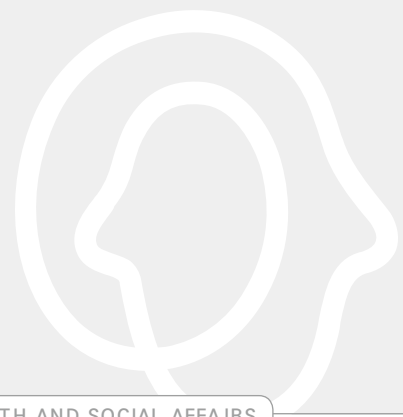
차. 정책 인식 및 욕구

정책 인식 및 욕구 분야는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정책 전반에 대하여 만족도 및 개선되어야 할 분야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지원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자 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은 2021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이다. 2018년도에 정책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조사했던 항목 중 의료 지원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로 위치를 이동하였으며, 정책적 자료로써 활용도가 낮은 교육 및 취업 지원제도 분야는 삭제했다.

〈표 3-19〉 개인 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 정책 인식 및 욕구 분야

구분	분야	지표 내용
개인	정책 인식 및 욕구	- 국가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 국가보훈정책에 불만족 이유 및 개선되어야 할 분야 -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점



제4장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실태 분석

제1절 가구 일반사항

제2절 주거상황

제3절 가계지출

제4절 소득

제5절 자산 및 부채

제4장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실태 분석

제1절 가구 일반사항

1. 보훈대상자(가구)의 일반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2.3명에 비해 미약하게 감소한 것이다. 가구규모별 구성을 보면, 2인 가구의 비중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는 25% 수준이다. 1인 가구의 비중은 2018년 2.21%에 비해 약 3%p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보훈대상자의 경우 2인 가구의 비중이 52.6%로 절반을 상회하는 반면, 여성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1인 가구의 비중이 51.3%로 나타나 대비된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 보훈대상자의 가구원 수가 약 3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일수록 가구규모가 작았다. 보훈대상별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유족)의 가구원 수가 2.1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이는 참전유공자는 2인 가구의 비율이, 국가유공자(유족)의 경우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각각 월등히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가구원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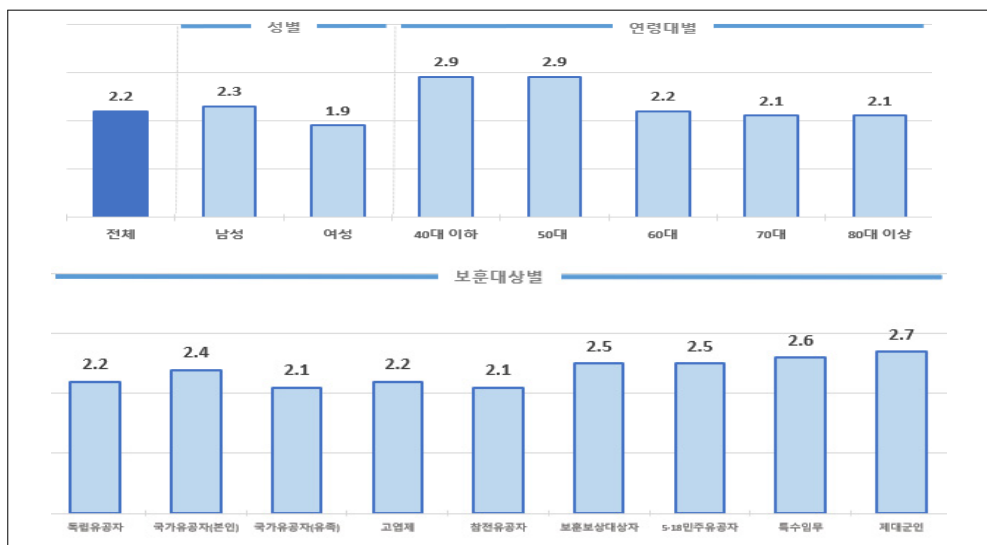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계	평균
2018년		22.1	45.8	16.0	10.3	3.9	1.5	0.5	100.0	2.3
2021년		25.0	45.7	15.7	8.8	3.4	1.1	0.4	100.0	2.2
성별	남성	16.6	52.6	17.1	9.2	3.0	1.1	0.4	100.0	2.3
	여성	51.3	23.8	11.5	7.4	4.7	1.0	0.3	100.0	1.9
연령대 별	40대 이하	22.0	15.6	23.6	28.5	8.2	1.7	0.4	100.0	2.9
	50대	14.2	24.2	30.5	24.3	5.0	1.5	0.4	100.0	2.9
	60대	22.4	49.3	18.1	7.5	2.0	0.7	0.1	100.0	2.2
	70대	22.9	58.8	11.7	2.8	2.3	1.0	0.5	100.0	2.1
	80대 이상	34.0	41.2	13.0	6.6	3.8	1.2	0.3	100.0	2.1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계	평균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5.4	50.0	11.8	7.0	4.4	0.9	0.4	100.0	2.2
	국가유공자(본인)	12.3	56.4	16.6	8.8	3.7	1.7	0.4	100.0	2.4
	국가유공자(유족)	41.2	31.3	14.2	8.3	3.9	0.8	0.3	100.0	2.1
	고엽제	14.0	67.5	11.5	3.3	1.7	1.1	0.9	100.0	2.2
	참전유공자	20.7	58.5	13.7	3.8	2.0	0.9	0.3	100.0	2.1
	보훈보상대상자	23.1	30.9	25.8	17.1	2.6	0.5	0.0	100.0	2.5
	5·18민주유공자	22.7	36.8	20.7	12.6	5.4	1.8	0.0	100.0	2.5
	특수임무	26.7	28.9	14.4	24.5	4.2	0.8	0.5	100.0	2.6
	제대군인	17.2	29.1	24.8	23.0	4.7	0.8	0.3	100.0	2.7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1]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가구원 수

(단위: 명)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1.2세이며(남성 69.6세, 여성은 76.2세), 이는 2018년 71세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이다. 보훈대상자의 약 65.5%가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의 비중이, 여성은 8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아 여성의 고령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70대 이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평균연령이 80세를 넘어 가장 고령화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등의 순으로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와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이 약 50세로 가장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국가보훈대상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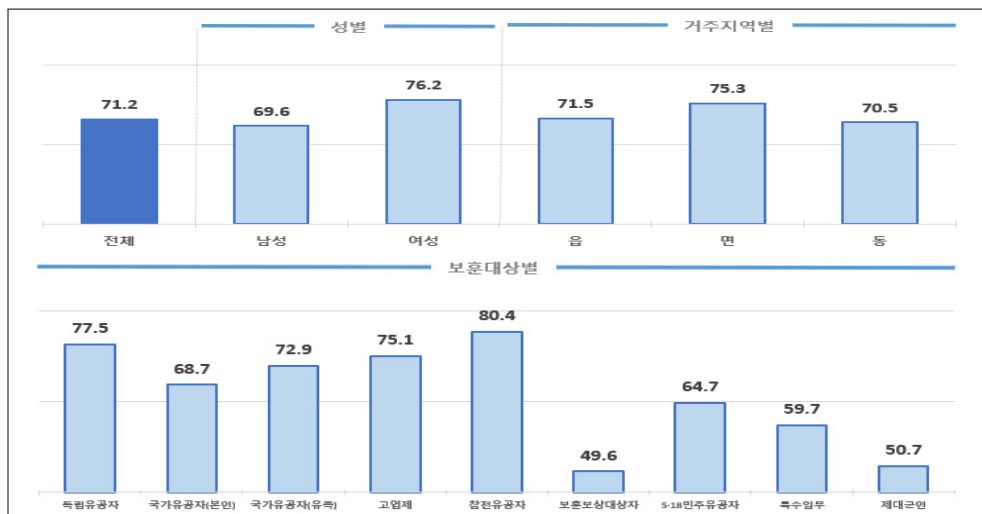
(단위: %, 세)

구분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계	평균
2018년		4.5	4.2	8.1	20.2	33.6	24.6	4.7	100.0	71.0
2021년		4.8	4.9	7.8	17.0	39.1	17.8	8.6	100.0	71.2
성별	남자	5.9	5.8	8.8	16.4	43.3	11.4	8.4	100.0	69.6
	여자	1.3	2.0	4.6	18.8	26.0	38.0	9.2	100.0	76.2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0.5	1.3	4.5	14.9	29.1	38.8	11.0	100.0	77.5
	국가유공자(본인)	5.4	6.6	9.7	19.8	41.7	10.3	6.5	100.0	68.7
	국가유공자(유족)	0.4	2.9	8.9	27.3	27.2	27.2	6.2	100.0	72.9
	고엽제	0.0	0.3	0.1	0.6	92.2	6.6	0.3	100.0	75.1
	참전유공자	0.0	0.0	0.0	0.2	59.0	20.8	20.0	100.0	80.4
	보훈보상대상자	36.9	13.3	17.2	19.5	7.3	5.1	0.6	100.0	49.6
	5·18민주유공자	1.8	1.4	15.9	59.3	14.5	6.6	0.7	100.0	64.7
	특수임무	3.4	24.7	25.0	22.4	11.4	12.0	1.1	100.0	59.7
	제대군인	28.9	20.1	19.9	19.7	8.1	3.2	0.1	100.0	50.7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2] 국가보훈대상자 평균연령

(단위: 세)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56.1%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초졸 이하 30.0%, 고졸 29.6%, 대졸 이상 26.5%, 중졸 14.0%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초졸 이하의 학력자 비중이 높았다. 대상별로는 제대군인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이, 특수임무유공자에서 고졸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4-3〉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수준

(단위: %)

구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계
2018년		34.6	15.1	27.7	22.6	100.0
2021년		30.0	14.0	29.6	26.5	100.0
성별	남성	21.7	13.9	32.7	31.8	100.0
	여성	56.2	14.3	19.8	9.7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0.8	0.9	26.9	71.4	100.0
	50대	2.2	4.4	35.7	57.7	100.0
	60대	13.2	12.9	38.6	35.3	100.0
	70대	29.7	21.1	33.6	15.6	100.0
	80대 이상	60.1	11.8	17.0	11.2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7.4	11.0	28.0	33.6	100.0
	국가유공자(본인)	17.4	13.1	33.7	35.8	100.0
	국가유공자(유족)	43.8	13.3	27.1	15.9	100.0
	고엽제	30.6	24.7	30.7	13.9	100.0
	참전유공자	37.3	18.9	30.3	13.5	100.0
	보훈보상대상자	9.2	7.4	37.4	46.0	100.0
	5·18민주유공자	18.4	19.3	23.5	38.8	100.0
	특수임무	17.8	11.7	43.7	26.8	100.0
	제대군인	0.9	2.7	25.4	71.0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은 90.4%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두드러진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성별로는 남성 가구주 비율이 95.9%로 여성 가구주 비율(73.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가구주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70대에서의 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80대 이상과 40대 이하에서는 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유족)의 가구주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가구주 비율이 96.7%로 다른 대상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보훈대상자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구분		가구주	배우자	미혼 자녀	기혼 자녀 또는 그 배우자	손자 손녀 또는 그 배우자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타	계
2018년		90.9	2.1	0.9	0.1	-	5.7	0.3	0.1	0.0	100.0
2021년		90.4	2.3	0.5	0.0	0.0	6.3	0.2	0.2	0.1	100.0
성별	남성	95.9	0.5	0.6	0.0	0.0	2.7	0.1	0.2	0.0	100.0
	여성	73.2	8.1	0.1	0.0	0.0	17.6	0.5	0.3	0.2	100.0
연령대 별	40대 이하	90.2	4.0	5.2	0.0	0.0	0.0	0.0	0.3	0.2	100.0
	50대	95.1	3.9	0.0	0.0	0.0	0.0	0.0	0.9	0.0	100.0
	60대	93.3	5.2	0.0	0.0	0.0	1.5	0.0	0.0	0.0	100.0
	70대	94.7	1.7	0.0	0.0	0.0	3.3	0.1	0.2	0.0	100.0
	80대 이상	81.0	0.4	0.0	0.0	0.0	17.8	0.5	0.1	0.2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84.3	6.8	0.2	0.0	0.0	8.6	0.0	0.0	0.0	100.0
	국가유공자(본인)	96.7	0.5	0.4	0.0	0.0	2.3	0.0	0.1	0.0	100.0
	국가유공자(유족)	82.1	4.8	0.0	0.0	0.0	12.2	0.4	0.4	0.1	100.0
	고엽제	96.2	0.5	0.0	0.0	0.0	3.1	0.0	0.1	0.1	100.0
	참전유공자	93.6	0.8	0.0	0.0	0.0	5.3	0.2	0.2	0.0	100.0
	보훈보상대상자	86.9	3.1	7.8	0.5	0.0	1.4	0.0	0.3	0.0	100.0
	5·18민주유공자	93.8	3.3	0.3	0.4	0.0	1.9	0.0	0.3	0.0	100.0
	특수임무	89.7	5.6	0.5	0.0	0.0	4.3	0.0	0.0	0.0	100.0
	제대군인	93.8	2.6	3.0	0.0	0.0	0.4	0.0	0.1	0.2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대상자 중 61.9%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사별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2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혼과 미혼의 비율이 높아진 결과로 파악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유배우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사별(81.4%)로 인한

무배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80대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유배우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의 유배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국가유공자(유족)의 유배우율이 가장 낮았으며, 평균 연령대가 가장 낮은 보훈보상대상자가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본인), 제대군인 순으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5〉 보훈대상자 혼인여부

(단위: %)

구분		배우자 있음	별거	사별	이혼	미혼	해당없음 (18세 미만)	계
2018년		64.3	1.4	26.4	4.4	3.6	0.0	100.0
2021년		61.9	1.5	27.1	5.2	4.2	0.0	100.0
성별	남성	77.3	1.6	10.0	6.0	5.1	0.0	100.0
	여성	13.2	1.1	81.4	2.9	1.5	0.0	100.0
연령대 별	40대 이하	59.9	1.0	0.9	5.1	32.9	0.2	100.0
	50대	77.3	2.0	6.1	9.8	4.8	0.0	100.0
	60대	69.5	1.9	18.7	8.0	1.8	0.0	100.0
	70대	71.3	1.9	19.9	6.1	0.8	0.0	100.0
	80대 이상	39.3	0.7	59.0	0.9	0.1	0.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60.7	1.2	31.5	4.6	2.0	0.0	100.0
	국가유공자(본인)	82.0	1.4	8.2	4.0	4.5	0.0	100.0
	국가유공자(유족)	33.6	1.5	57.2	5.3	2.3	0.1	100.0
	고엽제	83.0	2.4	8.3	6.1	0.1	0.0	100.0
	참전유공자	72.3	1.6	19.5	5.8	0.8	0.0	100.0
	보훈보상대상자	49.7	1.6	13.1	8.6	27.1	0.0	100.0
	5·18민주유공자	64.6	2.3	16.4	12.0	4.6	0.0	100.0
	특수임무	58.3	2.2	19.2	11.3	8.9	0.0	100.0
	제대군인	73.7	1.3	1.9	5.3	17.7	0.0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62.5%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었다. 2018년에 비해 약 2%p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83.0%로 남성의 56.1%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아지는데, 40대에서 60대까지는 경제활동인구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67.8%에 달하고,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7%), 실업자(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순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정적인 고용형태인 상용직의 비율은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임시직 및 일용직의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대상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보훈대상자 경제활동

(단위: %)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계
2018년		14.6	5.3	2.8	2.1	9.1	0.6	5.0	60.5	100.0
2021년		16.8	4.8	2.6	2.0	8.0	0.5	2.8	62.5	100.0
성별	남성	20.4	5.1	2.7	2.4	9.8	0.3	3.2	56.1	100.0
	여성	5.3	3.9	2.2	0.7	2.3	0.9	1.7	83.0	100.0
연령대 별	40대 이하	67.8	4.5	2.7	3.5	7.7	0.4	7.6	5.8	100.0
	50대	52.1	6.4	4.8	4.1	11.7	0.4	4.9	15.7	100.0
	60대	22.3	7.6	4.3	2.7	12.6	1.4	5.5	43.6	100.0
	70대	5.8	5.6	2.6	1.9	9.9	0.4	1.9	71.9	100.0
	80대 이상	0.4	1.6	0.6	0.4	1.3	0.1	0.1	95.6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7.7	3.0	1.3	1.8	4.8	0.2	2.1	79.1	100.0
	국가유공자(본인)	20.7	4.4	1.5	1.6	8.2	0.3	3.0	60.5	100.0
	국가유공자(유족)	11.2	4.2	3.5	2.1	7.0	0.8	2.7	68.6	100.0
	고엽제	4.9	5.9	1.4	1.6	10.1	0.1	1.8	74.1	100.0
	참전유공자	4.9	5.5	2.6	1.8	8.8	0.2	1.1	75.1	100.0
	보훈보상대상자	41.1	6.2	2.3	3.7	9.6	0.5	7.9	28.5	100.0
	5·18민주유공자	25.6	8.0	5.7	2.8	13.6	0.3	4.5	39.5	100.0
	특수임무	33.9	4.1	9.0	4.2	10.4	0.5	4.5	33.5	100.0
	제대군인	56.8	5.9	2.1	2.9	8.2	0.4	7.0	16.6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전체 대상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4.2%만이

본인의 근로활동을 통한 시장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에 비해 약 1%p 감소하였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무소득 비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았고, 고령으로 갈수록 소득이 없는 비율이 높아진다. 보훈대상별로는 평균연령이 높은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고령에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시장소득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7〉 보훈대상자 시장소득 여부

(단위: %)

구분		소득 있음	소득 없음	계
2018년		45.1	55.0	100.0
2021년		44.2	55.8	100.0
성별	남성	51.0	49.0	100.0
	여성	22.9	77.1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89.6	10.4	100.0
	50대	82.4	17.6	100.0
	60대	61.0	39.0	100.0
	70대	37.2	62.8	100.0
	80대 이상	15.9	84.1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8.6	71.4	100.0
	국가유공자(본인)	47.1	52.9	100.0
	국가유공자(유족)	37.3	62.7	100.0
	고엽제	35.1	64.9	100.0
	참전유공자	35.8	64.2	100.0
	보훈보상대상자	68.7	31.3	100.0
	5·18민주유공자	62.2	37.8	100.0
	특수임무	67.9	32.1	100.0
	제대군인	81.7	18.3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1~6급으로 구분했던 등급이 없어지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처럼 등급을 파악하지 않고, 상기 두 기준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보훈대상자의 장애 여부를 파악한 결과 26.1%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약 3%p 감소한 것이지만, 보훈대상자 4명 중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28.3%)이 여성(19.0%)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80대, 70대, 40대 이하, 50대, 60대의 순으로 장애인 비율이 높지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비율은 연령에 완전히 비례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의 장애 비율이 45.9%(등록 장애 23.1%)로 가장 높았으며, 국가유공자(본인)이 45.1%(등록 장애 22.1%)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제대군인의 장애 비율이 4.8%로 가장 낮았으며, 특수임무유공자가 12.3%로 두 번째로 장애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보훈대상자 장애 여부 및 등급

(단위: %)

구분		장애				비장애	계
		소계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기준 1-3급)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 4-6급)	비등록 장애인		
2018년		29.0	4.6	10.2	14.2	71.0	100.0
2021년		26.1	4.6	10.9	10.6	73.9	100.0
성별	남성	28.3	4.5	11.2	12.6	71.7	100.0
	여성	19.0	5.0	9.8	4.2	81.0	100.0
연령대 별	40대 이하	18.2	1.3	4.0	12.9	81.8	100.0
	50대	16.4	1.9	7.7	6.8	83.6	100.0
	60대	15.3	2.9	6.6	5.8	84.7	100.0
	70대	29.3	4.7	11.3	13.4	70.7	100.0
	80대 이상	33.9	7.6	16.5	9.9	66.1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1.9	5.9	11.7	4.3	78.1	100.0
	국가유공자(본인)	45.1	5.6	16.5	23.1	54.9	100.0
	국가유공자(유족)	17.3	4.7	8.9	3.6	82.7	100.0
	고엽제	45.9	7.9	15.2	22.8	54.1	100.0
	참전유공자	23.7	4.4	10.8	8.5	76.3	100.0
	보훈보상대상자	35.3	2.4	12.4	20.5	64.7	100.0
	5·18민주유공자	32.6	4.0	11.1	17.5	67.4	100.0
	특수임무	12.3	2.9	4.3	5.1	87.7	100.0
	제대군인	4.8	0.9	1.8	2.0	95.2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의 만성질환(6개월 이상 투병·투약) 비율도 매우 높았다.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67.7%에 이르렀다. 앞서 살펴본 장애 여부에서는 여성의 장애 비율이 남성의 장애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만성질환 비율에서는 여성이 73.8%로 남성(6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성질환 비율이 높았고, 70대와 80대 이상의 경우 약 80% 정도가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역시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의 만성질환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참전유공자(76.3%), 국가유공자(74.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대군인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높은 무소득 비율에는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높은 장애비율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9〉 보훈대상자의 질환 및 만성질환 여부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6개월 이상 투병·투약)	계
2018년		33.1	66.9	100.0
2021년		32.3	67.7	100.0
성별	남성	34.2	65.8	100.0
	여성	26.2	73.8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80.8	19.2	100.0
	50대	56.9	43.1	100.0
	60대	40.9	59.1	100.0
	70대	21.7	78.3	100.0
	80대 이상	17.3	82.7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6.0	74.0	100.0
	국가유공자(본인)	30.3	69.7	100.0
	국가유공자(유족)	30.1	69.9	100.0
	고엽제	12.5	87.5	100.0
	참전유공자	23.7	76.3	100.0
	보훈보상대상자	53.9	46.1	100.0
	5·18민주유공자	37.8	62.2	100.0
	특수임무	52.9	47.1	100.0
	제대군인	71.5	28.5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대상자의 58%가 공적연금을 수급(46.1%)하거나 가입(11.9%)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에 비해 연금수급자 비율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 보훈대상자의 공적연금 수급 및 가입 비율은 남성에 비해 낮아서 노후 소득원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4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수급 비율은 6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0대 이상의 경우 연금수급 비율이 29.8%에 그치고 있어 노후 소득원으로서 보훈급여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보훈대상별로는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유족)의 연금수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는 연금 가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유족)의 경우 연금수급 비율이 낮으면서도 비해당(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등)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 이들 역시 노후소득원으로서 보훈보상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10〉 보훈대상자 공적연금 가입 형태

(단위: %)

구분		비해당	연금수급	연금가입	연금수급 하면서 가입	미가입	계
2018년		39.9	40.7	11.8	0.7	6.8	100.0
2021년		39.4	46.1	11.9	0.5	2.1	100.0
성별	남성	33.2	49.8	14.2	0.5	2.3	100.0
	여성	58.9	34.4	4.9	0.5	1.3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12.4	3.8	71.9	1.3	10.5	100.0
	50대	9.8	27.5	48.8	3.5	10.4	100.0
	60대	23.9	67.3	6.8	0.5	1.4	100.0
	70대	38.1	61.9	0.0	0.0	0.0	100.0
	80대 이상	70.1	29.8	0.0	0.1	0.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3.5	38.5	6.4	0.0	1.6	100.0
	국가유공자(본인)	30.1	53.0	14.1	0.4	2.4	100.0
	국가유공자(유족)	47.3	40.4	9.7	0.4	2.2	100.0
	고엽제	37.3	62.1	0.4	0.0	0.1	100.0
	참전유공자	51.5	48.5	0.0	0.0	0.0	100.0
	보훈보상대상자	26.5	20.4	43.8	1.3	8.0	100.0
	5·18민주유공자	35.2	32.3	24.9	0.0	7.6	100.0
	특수임무	33.6	17.8	40.5	1.4	6.7	100.0
	제대군인	8.8	39.9	42.9	2.6	5.8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대상자가 가입하거나 수급하고 있는 공적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37.8%)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약 2%p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군인연금(12.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으로 응답한 비율은 성과 연령에 무관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대와 60대의 경우 군인연금의 비중도 각각 26.4%와 24.8%로 나타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집단에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수급 중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제대군인의 경우 40.1%가 군인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35.2%)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국가유공자(본인)와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는 공무원연금의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보훈대상자의 가입 및 수급 중인 공적연금

(단위: %)

구분		해당없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계
2018년		46.8	35.7	6.3	10.7	0.5	0.1	100.0
2021년		41.5	37.8	8.1	12.1	0.5	0.0	100.0
성별	남성	35.6	41.6	8.6	13.6	0.6	0.0	100.0
	여성	60.3	25.7	6.3	7.4	0.3	0.1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22.9	56.8	13.6	6.1	0.6	0.0	100.0
	50대	20.2	44.1	8.4	26.4	0.7	0.2	100.0
	60대	25.3	37.3	12.0	24.8	0.5	0.0	100.0
	70대	38.1	47.3	6.6	7.4	0.5	0.1	100.0
	80대 이상	70.1	15.1	5.7	8.8	0.4	0.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5.1	31.8	8.7	1.4	2.9	0.2	100.0
	국가유공자(본인)	32.4	34.0	11.0	21.9	0.6	0.0	100.0
	국가유공자(유족)	49.5	37.5	7.3	5.1	0.5	0.0	100.0
	고엽제	37.4	52.4	7.1	3.1	0.0	0.0	100.0
	참전유공자	51.5	39.7	5.5	2.8	0.5	0.0	100.0
	보훈보상대상자	34.4	51.8	8.3	3.6	1.8	0.0	100.0
	5·18민주유공자	42.9	49.0	5.9	0.0	2.2	0.0	100.0
	특수임무	40.3	43.2	9.6	6.6	0.4	0.0	100.0
	제대군인	14.6	35.2	9.8	40.1	0.3	0.0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통합급여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개별 급여 형태인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가 각각의 급여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맞춤형 급여 중 교육급여는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새롭게 지급되는 급여로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생계급여와 분리된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1년 10월부터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본 조사의 시점(2021년 8월 1일)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조사가 되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을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특례수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지만 당시 조건부수급과 특례수급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 이번 조사에서는 구분 없이 생계급여 수급여부만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파악된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러한 생계급여 수급 실태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2.4%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2020년 기준)¹²⁾인 2.5%¹³⁾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본 장의 실태는 개인소득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가구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일반적으로 인구 기준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하여 개인 단위의 수급률을 제시하였다. 생계급여를 비롯해 이후에 다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의 수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아 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80대, 70대, 50대, 60대의 순으로 나타나 50대의 수급률이 60대의 수급률보다 높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5·18 민주유공자의 수급률이 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참전유공자와

12)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13)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수 1,301,061명(보건복지부, 2020, p. 21), 2020년 총인구수 51,829,136명(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20))

국가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의 순으로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대 군인의 수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본인), 보훈 보상대상자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12〉 생계급여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비수급	생계급여 수급	계
2018년		98.3	1.7	100.0
2021년		97.6	2.4	100.0
성별	남성	97.8	2.2	100.0
	여성	96.8	3.2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99.5	0.5	100.0
	50대	97.8	2.2	100.0
	60대	98.6	1.4	100.0
	70대	97.4	2.6	100.0
	80대 이상	96.1	3.9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97.0	3.0	100.0
	국가유공자(본인)	99.1	0.9	100.0
	국가유공자(유족)	96.9	3.1	100.0
	고엽제	97.9	2.1	100.0
	참전유공자	95.7	4.3	100.0
	보훈보상대상자	98.9	1.1	100.0
	5·18민주유공자	93.0	7.0	100.0
	특수임무	97.9	2.1	100.0
	제대군인	99.4	0.6	100.0

주: 2018년 생계급여 수급률은 인구 기준 산출결과로 가구 기준 산출결과인 임완섭 외(2018)와 차이가 있음.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아래 표는 의료급여 수급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에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별도로 조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만 구분하여 조사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0%)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조사결과 국가보훈대상자의 6.3%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기준 전체 인구 의료급여 수급률 2.8%¹⁴⁾에

14) 2020년 의료급여 수급자 수 1,440,298명(보건복지부, 2020, p.21), 2020년 총인구수 51,829,136명(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20))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¹⁵⁾이라 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률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는 5·18민주유공자의 의료급여 수급률이 1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3〉 의료급여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비수급	의료급여 수급 상태			계
			소계	1종	2종	
2018년		94.1	5.9	-	-	100.0
2021년		93.7	6.3	4.4	1.9	100.0
성별	남성	94.1	5.9	4.1	1.8	100.0
	여성	92.4	7.7	5.2	2.4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97.2	2.8	1.7	1.1	100.0
	50대	95.7	4.3	2.7	1.6	100.0
	60대	95.5	4.5	3.1	1.4	100.0
	70대	92.8	7.2	5.2	2.0	100.0
	80대 이상	91.3	8.7	6.0	2.7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92.4	7.6	4.6	3.0	100.0
	국가유공자(본인)	95.1	4.9	3.7	1.2	100.0
	국가유공자(유족)	92.7	7.3	5.0	2.2	100.0
	고엽제	93.3	6.7	5.4	1.4	100.0
	참전유공자	91.4	8.6	5.8	2.8	100.0
	보훈보상대상자	95.9	4.1	1.7	2.4	100.0
	5·18민주유공자	85.5	14.5	13.3	1.2	100.0
	특수임무	96.6	3.4	3.2	0.2	100.0
	제대군인	97.9	2.1	0.8	1.3	100.0

주: 1) 2018년 수급비율 5.9%에는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2.9%)가 포함되어 있음.

2) 2018년 의료급여 수급률은 인구 기준 산출결과로 가구 기준 산출결과인 임완섭 외(2018)와 차이가 있음.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15) 「2021 의료급여 사업안내」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운데 일반가구의 경우 중위기준소득의 80%,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중위기준소득의 100%를 소득·재산기준으로 적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음(보건복지부, 2021, p. 55).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소유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한다. 2020년 기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선은 기준중위소득의 45%로 2018년 43%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1.7%가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주거급여 수급률인 3.8%¹⁶⁾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급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80대 이상에서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는 5·18민주유공자의 수급률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본인)의 수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4〉 주거급여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비수급	주거급여 수급	계
2018년		99.1	0.9	100.0
2021년		98.3	1.7	100.0
성별	남성	98.3	1.7	100.0
	여성	98.1	1.9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99.3	0.8	100.0
	50대	98.0	2.0	100.0
	60대	99.0	1.0	100.0
	70대	98.2	1.8	100.0
	80대 이상	97.5	2.5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98.0	2.0	100.0
	국가유공자(본인)	99.3	0.7	100.0
	국가유공자(유족)	98.1	1.9	100.0
	고엽제	99.0	1.0	100.0
	참전유공자	96.6	3.4	100.0
	보훈보상대상자	99.0	1.0	100.0
	5·18민주유공자	94.5	5.5	100.0
	특수임무	97.9	2.1	100.0
	제대군인	99.4	0.6	100.0

주: 2018년 주거급여 수급률은 인구 기준 산출결과로 가구 기준 산출결과인 임완섭 외(2018)와 차이가 있음.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16) 2020년 주거급여 수급자 수 1,947,099명(보건복지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21), 2020년 총인구수 51,829,136명(통계청, 인구총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 수업료와 학습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다. 학령기 자녀를 가구원으로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수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에 비해 가장 높은 수급기준선(기준중위소득의 50%)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가구의 교육급여 수급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교육급여 수급률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교육급여 수급률인 0.6%¹⁷⁾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연령대가 매우 높은 것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보훈대상별로 보면 5·18민주유공자의 수급률이 가장 높았고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급률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교육급여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비수급	교육급여 수급	계
2018년		99.9	0.1	100.0
2021년		99.7	0.3	100.0
성별	남성	99.7	0.3	100.0
	여성	99.7	0.3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99.3	0.7	100.0
	50대	98.8	1.2	100.0
	60대	99.9	0.1	100.0
	70대	99.9	0.1	100.0
	80대 이상	100.0	0.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99.5	0.5	100.0
	국가유공자(본인)	99.7	0.3	100.0
	국가유공자(유족)	99.8	0.2	100.0
	고엽제	100.0	0.0	100.0
	참전유공자	99.8	0.2	100.0
	보훈보상대상자	99.3	0.7	100.0
	5·18민주유공자	96.9	3.1	100.0
	특수임무	99.3	0.7	100.0
	제대군인	99.6	0.4	100.0

주: 2018년 교육급여 수급률은 인구 기준 산출결과로 가구 기준 산출결과인 임완섭 외(2018)와 차이가 있음.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17) 2020년 교육급여 수급자 수 303,747명(보건복지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21), 2020년 총인구수 51,829,136명(통계청, 인구총조사)

제2절 주거상황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기본적 시설이며, 보훈실태조사에서도 보훈대상자의 주거 상황은 상시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8년에 이어 2021년 주거상황을 보면, 지난 3년 사이 보훈대상자 가구의 주거 상황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에 비해서 5%p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32.7%로 나타났는데 2018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단독주택 거주자가 감소한 만큼 일반아파트 거주자가 증가하여 고령층의 보훈대상자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좀 더 편리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 거주 주택 유형을 보면 연립다세대 거주자가 10.9%, 국민영구임대주택이 5.4%로 다음을 잇고 있다. 다소 불안정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도 여전히 비거주용 건물, 비닐하우스 및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도 1.8%로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한 주거유형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2018년 2.0%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2018년 대비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주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있다는 점에서는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훈대상자 특성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아지고 반면에 단독주택 거주자는 증가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이 높았다. 비정형주택 거주자의 경우 7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70대가 비닐하우스, 판잣집, 비거주용 건물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 보면,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대군인, 국가유공자(본인) 등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다른 보훈대상 유형에 비해 높았다.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독립유공자(3.4%), 보훈보상대상자(3.3%), 참전유공자(2.5%) 등으로 높게 나타나, 다른 보훈대상자에 비해 주거 상황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보훈대상 유형에서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세밀한 주거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4-16〉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일반아파트	국민영구임대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비거주용건물	비닐하우스판잣집	기타	숙박업소객실	기숙사·사회시설	계
2018년		37.5	43.3	5.5	11.1	0.5	1.2	0.2	0.1	0.1	0.4	100.0
2021년		32.7	48.3	5.4	10.9	0.9	1.1	0.4	0.3	-	-	100.0
성별	남성	32.2	48.8	5.2	11.0	0.9	1.2	0.5	0.3	-	-	100.0
	여성	34.6	46.9	6.2	10.4	0.7	0.5	0.2	0.6	-	-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15.0	60.9	5.8	14.4	2.9	0.8	0.1	0.1	-	-	100.0
	50대	23.9	58.5	4.1	11.0	0.9	1.1	0.2	0.3	-	-	100.0
	60대	28.2	55.4	4.8	9.6	0.6	1.3	0.2	0.1	-	-	100.0
	70대	34.9	44.0	6.2	12.0	0.6	1.3	0.7	0.3	-	-	100.0
	80대 이상	41.7	42.4	4.9	8.7	0.6	0.7	0.3	0.7	-	-	100.0
대상분류	독립유공자	27.8	48.3	7.7	11.9	0.9	2.0	0.2	1.2	-	-	100.0
	국가유공자(본인)	28.4	54.9	5.0	9.5	0.8	1.0	0.3	0.1	-	-	100.0
	국가유공자(유족)	34.9	45.5	6.3	10.8	0.8	1.0	0.3	0.4	-	-	100.0
	고엽제	36.3	44.1	5.9	11.1	0.6	1.4	0.6	0.1	-	-	100.0
	참전유공자	40.4	39.7	5.3	11.7	0.4	1.1	0.8	0.6	-	-	100.0
	보훈보상대상자	25.8	51.7	4.2	13.5	1.6	2.7	0.3	0.3	-	-	100.0
	5·18민주유공자	29.9	50.7	9.2	8.3	0.3	0.9	0.3	0.3	-	-	100.0
	특수임무	23.5	48.9	7.8	15.7	2.3	1.3	0.0	0.5	-	-	100.0
	제대군인	18.7	62.7	3.0	12.0	2.3	1.0	0.1	0.2	-	-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 주택 입주형태 혹은 점유형태를 보면, 2018년에 비해 자가 거주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다. 2018년 68.1%에서 2021년에는 67.9%로 미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전세가 9.2%, 보증금 있는 월세가 13.4%로 2018년 대비 늘어났다.

보훈대상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 보훈대상자의 주택 입주형태가 다소 안정적인 자가와 전세 비율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 비해 50대 이상의 자가 비율이 높았으며, 40대 이하에서는 전세와 보증금이 있는 월세 등이 20%대를 넘어서고 있어 50대 이상의 보훈대상자와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보훈대상 유형으로는 5·18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가 비율이 낮았으며, 이들의 경우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훈대상 유형별로 주택 입주형태에 있어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4-17〉 주택 입주 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사글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기타 ¹⁾	계
2018년		68.1	8.7	12.2	2.1	8.8	100.0
2021년		67.9	9.2	13.4	1.8	7.7	100.0
성별	남성	68.9	9.4	13.3	1.8	6.7	100.0
	여성	65.1	8.4	13.9	1.8	10.9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50.6	22.1	21.1	0.8	5.3	100.0
	50대	64.1	12.3	17.7	2.4	3.5	100.0
	60대	73.0	8.6	13.0	2.0	3.3	100.0
	70대	71.0	7.4	12.5	1.8	7.3	100.0
	80대 이상	67.6	6.5	11.0	1.7	13.3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64.0	9.0	17.8	1.3	7.9	100.0
	국가유공자(본인)	72.8	9.2	10.9	1.4	5.7	100.0
	국가유공자(유족)	65.5	8.2	15.1	2.2	9.0	100.0
	고엽제	72.0	7.3	12.1	1.8	6.9	100.0
	참전유공자	69.1	7.2	12.6	1.9	9.4	100.0
	보훈보상대상자	59.2	12.6	17.6	2.4	8.3	100.0
	5·18민주유공자	57.4	9.5	22.7	2.6	7.8	100.0
	특수임무	63.1	10.6	18.7	0.9	6.7	100.0
	제대군인	61.9	17.4	17.7	1.0	5.0	100.0

주: 1) 보훈복지타운 등 무상주택, 무상사택 등.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의 현재 거주하는 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자가의 경우 평균 3억 9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동 기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변동 폭이 높았던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¹⁸⁾ 전세와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역시 2018년 8천만 정도에서 2021년에는 약 9천 7백만 원으로 22.4%가 증가하였다. 3년 사이에 전세 및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부담이 상당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액 역시 2018년 18만 원에서 2021년에는 20.2만 원으로 역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이 보훈대상자 간에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가를 가진 경우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재산이 증가하겠지만, 자가 거주가 아닌 보훈대상자는 반대로 주택 거주를 위한 비용이 크게 늘어

18)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파악되는 각 연도별 월별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은 2017년 1.5%, 2018년 1.1%, 2019년 -0.36%, 2020년 5.36%, 2021년 9.93% 차이를 보임.

남으로써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향후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전월세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대상 특성별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은 50~60대의 보훈대상자의 자가 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전세 및 월세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훈대상 유형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5·18민주 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의 자가 가격이 가장 낮았으며, 독립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평균 자가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은 특수임무 및 제대군인이 27~30만 원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 부동산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훈대상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보훈대상자 연령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8〉 현 거주 주택의 평균가격, 보증금, 평균월세액

(단위: 만 원)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보증금	보증부 월세· 사글세·기타 ¹⁾ 월세액
2018년		25,737.3	7,925.7	18.0
2021년		39,226.1	9,699.3	20.2
성별	남성	39,726.1	10,105.8	21.4
	여성	37,549.7	8,387.4	17.3
연령대별	40대 이하	40,315.2	12,151.6	31.2
	50대	41,228.3	11,162.0	28.0
	60대	43,417.9	9,856.5	23.9
	70대	37,129.8	8,369.6	17.4
	80대 이상	38,714.3	8,847.0	15.8
	독립유공자	51,955.8	9,935.1	22.4
대상 분류	국가유공자(본인)	42,601.2	11,970.6	22.4
	국가유공자(유족)	38,315.9	8,027.4	19.2
	고엽제	32,032.8	8,175.6	17.3
	참전유공자	36,164.2	8,736.6	16.8
	보훈보상대상자	38,051.9	9,639.3	23.3
	5·18민주유공자	30,394.1	8,005.3	19.1
	특수임무	30,277.4	8,658.7	27.6
	제대군인	43,815.9	12,153.9	29.7

주: 1) 보훈복지타운 등 무상주택, 무상사택 등.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현 거주 주택의 위치를 살펴보면, 2018년 조사와 비교하여 2021년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생활하는 주택이 지상(98.5%)에 위치하고 있으며, 1.5% 정도의 보훈대상자가 지하(0.3%), 반지하(1.1%)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훈대상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주거환경이 소폭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를 제외하고는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는 독립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1.8%), 특수임무 및 참전유공자(1.7%) 등이 반지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19〉 현 거주 주택의 주거위치

(단위: %)

구분		주거위치				계
		지하	반지하	지상	옥상	
2018년		0.4	1.0	98.6	0.0	100.0
2021년		0.3	1.1	98.5	0.1	100.0
성별	남성	0.3	1.1	98.6	0.1	100.0
	여성	0.2	1.3	98.4	0.1	100.0
연령대 별	40대 이하	0.2	0.3	99.3	0.2	100.0
	50대	0.4	1.1	98.5	0.0	100.0
	60대	0.1	1.1	98.7	0.1	100.0
	70대	0.4	1.2	98.3	0.1	100.0
	80대 이상	0.2	1.3	98.5	0.1	100.0
	독립유공자	0.4	1.8	97.5	0.2	100.0
대상 분류	국가유공자(본인)	0.3	0.5	99.2	0.0	100.0
	국가유공자(유족)	0.3	1.4	98.4	0.0	100.0
	고엽제	0.1	1.4	98.3	0.1	100.0
	참전유공자	0.3	1.7	97.8	0.2	100.0
	보훈보상대상자	0.0	1.8	97.9	0.3	100.0
	5·18민주유공자	0.3	1.0	98.7	0.0	100.0
	특수임무	0.0	1.7	98.3	0.0	100.0
	제대군인	0.0	0.5	99.3	0.2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방수를 보면, 평균 방수는 2018년과 2021년이 동일한 2.7개로 조사되었다. 방수별 비율을 보면 방수가 1~2개의 비율은 2018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방수가 3개 이상인 비율은 증가하여, 주택 시설 면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는 연령이 40대의 경우 방수가 1개인 비율도 높았지만 방수가 3개인 비율도 역시 높아서 같은 세대 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방수가 3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2개인 경우도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보훈 대상자 유형별로도 방수 3개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제대군인이 6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다.

〈표 4-20〉 현 거주 주택의 방수 및 면적

(단위: %, 개)

구분		방수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평균	
2018년		7.5	28.1	55.4	8.1	1.0	2.7	100.0
2021년		7.2	24.9	56.9	10.1	1.0	2.7	100.0
성별	남성	7.2	23.4	58.2	10.1	1.1	2.7	100.0
	여성	7.1	29.8	52.5	10.0	0.7	2.7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10.6	18.7	61.9	8.4	0.5	2.7	100.0
	50대	7.0	17.7	64.7	9.7	0.9	2.8	100.0
	60대	5.7	20.4	60.7	12.6	0.7	2.8	100.0
	70대	7.4	26.9	56.0	8.7	1.0	2.7	100.0
	80대 이상	6.6	29.4	51.5	11.2	1.4	2.7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7.4	26.0	50.0	14.1	2.7	2.8	100.0
	국가유공자(본인)	5.7	19.7	62.1	11.2	1.3	2.8	100.0
	국가유공자(유족)	7.2	27.9	53.9	10.2	0.9	2.7	100.0
	고엽제	6.6	27.7	56.8	8.1	0.9	2.7	100.0
	참전유공자	8.4	28.8	52.7	9.1	1.0	2.7	100.0
	보훈보상대상자	10.7	23.1	55.3	10.4	0.5	2.7	100.0
	5·18민주유공자	9.0	26.8	52.3	11.1	0.9	2.7	100.0
	특수임무	10.0	28.7	54.5	6.7	0.0	2.6	100.0
	제대군인	7.6	17.0	64.8	9.8	0.8	2.8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택 방수와 연계된 것이 주택면적이다. 아래 표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주택입주 형태와 주택면적을 보면, 주택의 평균 면적이 2018년 81.2㎡에서 82.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방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면적에서는 소폭이지만 넓어진 것이다. 주택입주 형태별로 보면, 모든 입주형태에서 2018년 대비 2021년에 주택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가가 가장 넓은 91.8㎡로 조사되었다. 월세는 약 54㎡로 자가와 전세에 비해서는 평균 주택면적이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훈대상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택면적이 넓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보훈대상별로는 국가유공자(본인)와 독립유공자가 다른 보훈대상자에 비해서는 다소 넓은 주거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적으로는 보증금 없는 월세와 사글세가 가장 면적이 낮았으며 특히 특수임무대상자는 면적이 20.4㎡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 주택 입주 형태와 거주면적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사글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기타 ¹⁾	평균
2018년		89.4	72.8	55.9	44.9	70.1	81.2
2021년		91.8	74.2	54.2	54.4	71.4	82.9
성별	남성	92.5	74.1	54.6	49.6	71.5	83.6
	여성	89.6	74.8	52.8	69.2	71.3	80.9
연령대 별	40대 이하	93.1	72.5	56.1	45.5	64.6	78.8
	50대	96.5	81.5	60.3	55.7	62.0	86.1
	60대	96.2	77.3	54.9	53.7	73.6	87.6
	70대	89.0	71.3	51.0	47.5	73.2	81.0
	80대 이상	91.6	74.7	54.7	67.3	71.3	83.4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97.6	72.2	56.0	83.1	66.1	85.2
	국가유공자(본인)	96.0	76.1	60.0	59.5	72.7	88.4
	국가유공자(유족)	90.6	74.7	53.2	62.9	72.3	81.3
	고엽제	87.0	71.7	52.7	45.6	73.0	80.1
	참전유공자	88.4	69.8	49.5	41.5	69.5	79.5
	보훈보상대상자	94.8	71.5	49.4	44.8	61.8	80.0
	5·18민주유공자	94.8	82.8	54.9	48.0	65.4	81.1
	특수임무	89.4	78.5	65.3	20.4	55.4	80.9
	제대군인	94.9	75.7	56.4	38.2	74.2	84.3

주: 1) 보훈복지타운 등 무상주택, 무상사택 등.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 주거복지 혹은 주거보장 상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최저주거기준이다. 정부는 가구원수별로 면적, 방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중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과 2021년의 최저주거기준 이하를 비교해 보면 소폭이지만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방수, 면적 및 환경기준 모두 2018년 대비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방수, 면적 기준 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기준 이하인 비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방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대 이하에서는 방수 기준에 미달하는 보훈대상자가 40%대로 나타났지만, 60대 이상에서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면적과 환경 기준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 보면 방수 기준에서는 특수임무, 제대군인 등이 30%대 이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가 20%대 후반으로 각각 나타났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미달하는 경우는 독립유공자(0.21%), 참전유공자(0.25%), 보훈보상대상자(0.27%), 5·18민주유공자(0.33%) 등이 다른 보훈대상에 비해 높았다.

〈표 4-2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단위: %)

구분		방수	면적	환경(지하, 반지하, 옥상)	모두
2018년		24.3	2.7	1.5	0.1
2021년		20.4	1.7	1.5	0.1
성별	남성	20.7	1.9	1.4	0.1
	여성	19.2	1.2	1.6	0.1
연령대별	40대 이하	48.0	2.2	0.7	0.0
	50대	37.9	2.2	1.5	0.2
	60대	15.8	1.5	1.3	0.1
	70대	14.5	2.0	1.7	0.2
	80대 이상	16.7	1.1	1.5	0.1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8.0	1.6	2.5	0.2
	국가유공자(본인)	19.3	1.4	0.8	0.1
	국가유공자(유족)	20.3	1.7	1.7	0.1
	고엽제	14.7	1.6	1.7	0.1
	참전유공자	15.8	2.3	2.2	0.3
	보훈보상대상자	29.2	2.6	2.1	0.3
	5·18민주유공자	28.4	2.9	1.3	0.3
	특수임무	38.1	4.1	1.7	0.0
	제대군인	34.9	1.2	0.7	0.0

주: 1) 보훈복지타운 등 무상주택, 무상주택 등.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3절 가계지출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소비지출은 가구에서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비소비지출은 세금 등과 같이 법적 또는 제도적 의무성이 부여된 지출을 의미한다.¹⁹⁾

국가보훈실태조사에서도 가계지출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비목별로 2020년 1년간의 월평균 지출을 조사하였다. 소비지출의 항목에는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주거비(월세 포함), 교육비(보육비 포함),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기타 소비지출은 오락·문화비, 의류·신발비, 가정용품·가사서비스비, 이미지용 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등의 지출을 포괄한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 그리고 그 밖의 기타 비소비지출(이자지출 등)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21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194.9만 원으로, 2018년 177.6만 원에 비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지출 중 항목별 비중은 외식비를 포함한 식료품비가 38.6%(75.3만 원)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기타 소비지출 18.3%(35.7만 원), 주거비 13.0%(25.4만 원), 의료비 10.4%(20.2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조사와 유사한 결과이나, 다만 식료품비와 기타 소비지출의 비중이 2018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훈대상자가 남성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202.4만 원으로 여성인 가구의 171.4만 원보다 31만 원 높게 나타났다. 보훈대상자가 여성인 가구에서 남성인 가구보다 큰 비중을 보인 항목은 주거비와 의료비였는데, 특히 의료비의 비중 차이가 2.9%p(남성 9.8%, 여성 12.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외의 지출 항목의 경우에는 남성 가구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중 차이가 큰 지출은 교통비로 여성 가구에 비해 1.2%p 높게 나타났다(남성 10.1%, 여성 8.9%).

연령대별로는, 보훈대상자가 50대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288.1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 이하 가구가 274.5만 원, 그리고 60대 이후부터는 최소 6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60대 213.1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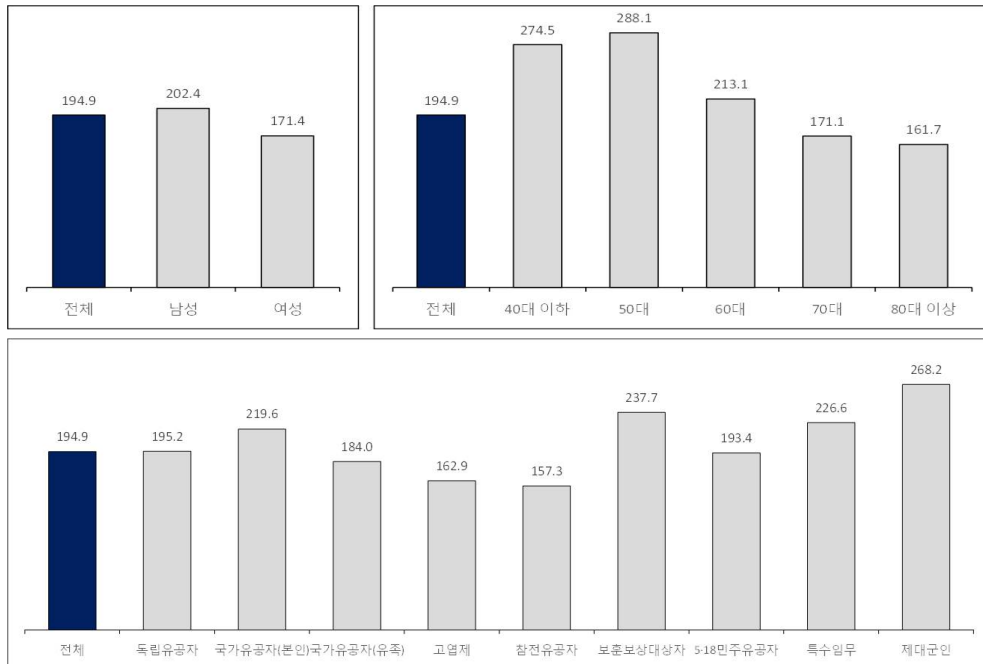
19) 통계청 통계설명DB.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에서 2022. 2. 22. 인출.

70대 171.1만 원, 80대 이상 161.7만 원). 연령대별 지출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교육비였다. 전체 가구의 교육비 비중은 4.2%로 7개 소비지출 항목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데 반해, 40대 이하와 50대 가구에서는 교육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훈대상자가 40대 이하인 가구의 경우 교육비 비중은 12.2%로 식료품비(34.2%)와 기타 소비지출(19.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비 외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체로 비중이 낮아지는 지출 항목은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교통비이다. 통신비와 기타 소비지출은 50대 이후부터, 교통비는 60대 이후부터 그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의료비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식료품비와 주거비도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의 유형별로 소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제대군인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268.2만 원으로 가장 높고, 보훈보상대상자 가구 237.7만 원, 특수임무유공자 가구 226.6만 원, 국가유공자(본인) 가구 219.6만 원 등의 순으로 소비지출 수준이 높았다. 항목별 비중은 전체 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가구에서 식료품비, 기타 소비지출, 주거비가 순서대로 1~3순위를 차지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가구의 경우에는 나머지 지출 항목들도 전체 가구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들 유형의 가구들은 대체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와 같은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보육)비, 통신비 등과 같은 지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제대군인, 특수임무,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교통비, 교육(보육)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이 다른 유형이나 전체 평균과 비교해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특히 교육비 지출이 보훈대상자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가구의 경우 그 비율이 2% 미만인 반면에, 특수임무유공자 가구 9.9%, 제대군인 가구 8.5%, 보훈보상대상자 가구 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 월 평균 가계 소비지출

(단위: 만 원)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4-23〉 항목별 평균 소비지출 : 월간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소비지출)	항목별						
			식료품비 (외식비포함)	주거비	교육 (보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2018년		177.6 (100.0)	63.0 (35.5)	23.6 (13.3)	10.1 (5.7)	19.0 (10.7)	20.6 (11.6)	10.7 (6.0)	30.7 (17.3)
2021년		194.9 (100.0)	75.3 (38.6)	25.4 (13.0)	8.2 (4.2)	20.2 (10.4)	19.2 (9.9)	10.9 (5.6)	35.7 (18.3)
성별	남성	202.4 (100.0)	78.4 (38.7)	26.0 (12.8)	8.7 (4.3)	19.8 (9.8)	20.5 (10.1)	11.4 (5.6)	37.5 (18.5)
	여성	171.4 (100.0)	65.5 (38.2)	23.4 (13.7)	6.6 (3.9)	21.7 (12.7)	15.0 (8.8)	9.2 (5.4)	29.9 (17.4)
연령 대별	40대 이하	274.5 (100.0)	93.9 (34.2)	32.4 (11.8)	33.4 (12.2)	13.6 (5.0)	30.6 (11.1)	17.7 (6.4)	52.9 (19.3)
	50대	288.1 (100.0)	97.9 (34.0)	32.1 (11.1)	27.2 (9.4)	20.5 (7.1)	32.8 (11.4)	19.0 (6.6)	58.8 (20.4)
	60대	213.1 (100.0)	82.5 (38.7)	27.0 (12.7)	3.8 (1.8)	19.6 (9.2)	24.6 (11.5)	12.4 (5.8)	43.3 (20.3)
	70대	171.1 (100.0)	70.7 (41.3)	23.2 (13.6)	3.1 (1.8)	19.9 (11.6)	15.7 (9.2)	8.9 (5.2)	29.7 (17.4)
	80대 이상	161.7 (100.0)	64.1 (39.6)	23.0 (14.2)	3.7 (2.3)	23.5 (14.5)	12.8 (7.9)	7.9 (4.9)	26.6 (16.5)

구분		전체 (소비지출)	항목별						
			식료품비 (외식비포함)	주거비	교육 (보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95.2 (100.0)	77.5 (39.7)	27.3 (14.0)	7.7 (3.9)	21.5 (11.0)	16.9 (8.7)	10.1 (5.2)	34.1 (17.5)
	국가유공자(본인)	219.6 (100.0)	85.9 (39.1)	27.7 (12.6)	9.0 (4.1)	20.6 (9.4)	22.2 (10.1)	12.1 (5.5)	42.1 (19.2)
	국가유공자(유족)	184.0 (100.0)	69.5 (37.8)	24.4 (13.3)	7.4 (4.0)	21.2 (11.5)	18.2 (9.9)	10.2 (5.5)	33.1 (18.0)
	고엽제	162.9 (100.0)	69.7 (42.8)	22.6 (13.9)	2.1 (1.3)	18.8 (11.5)	14.9 (9.1)	8.5 (5.2)	26.4 (16.2)
	참전유공자	157.3 (100.0)	64.6 (41.1)	22.2 (14.1)	2.9 (1.8)	20.2 (12.8)	13.4 (8.5)	8.1 (5.1)	26.0 (16.5)
	보훈보상대상자	237.7 (100.0)	84.4 (35.5)	28.3 (11.9)	16.9 (7.1)	19.5 (8.2)	26.5 (11.1)	15.0 (6.3)	47.1 (19.8)
	5·18민주유공자	193.4 (100.0)	71.2 (36.8)	26.0 (13.4)	6.6 (3.4)	13.3 (6.9)	23.6 (12.2)	12.1 (6.3)	40.5 (20.9)
	특수임무	226.6 (100.0)	80.6 (35.6)	28.6 (12.6)	22.4 (9.9)	16.2 (7.1)	25.7 (11.3)	15.4 (6.8)	37.7 (16.6)
	제대군인	268.2 (100.0)	95.3 (35.5)	31.1 (11.6)	22.9 (8.5)	17.5 (6.5)	30.1 (11.2)	17.0 (6.3)	54.2 (20.2)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 표는 보훈대상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월평균 금액 및 세부 항목별 비중을 보여 준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56.1만 원이며, 이 중 사회보험료가 14.6만 원, 이자비용과 같은 기타 비소비지출이 13.3만 원, 세금이 12.8만 원, 가구 간 이전 9.4만 원, 비영리단체 이전 6.0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기타 비소비지출을 별도 집계하지 않아 2018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

성별로는 보훈대상자가 남성인 가구(56.1만 원)가 여성인 가구(44.4만 원)보다 비소비지출이 더 많았다. 성별 지출항목별 비중을 보면 사회보험료와 비영리단체 이전은 남성보다 여성 가구에서 더 높은 비율로 지출된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의 경우보다 연령대별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50대 가구와 40대 가구의 비소비지출이 많고,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출이 낮게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유형별 가구의 비소비지출 규모 또한 유형별 차이가 비교적 크다. 제대군인의 가구가 102.8만 원으로 가장 높고, 보훈보상대상자 가구가 80.7만 원, 특수임무유공자 가구 74.0만 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35.2만 원, 35.7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24〉 항목별 평균 비소비지출 : 월간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비소비지출)	항목별				
			세금	사회보험료	가구간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기타 비소비지출
2018년		45.7 (100.0)	11.9 (26.0)	13.0 (28.5)	12.0 (26.2)	8.8 (19.3)	- -
2021년		56.1 (100.0)	12.8 (22.8)	14.6 (26.0)	9.4 (16.8)	6.0 (10.7)	13.3 (23.7)
성별	남성	59.8 (100.0)	13.9 (23.2)	15.3 (25.6)	10.1 (16.9)	6.3 (10.5)	14.2 (23.7)
	여성	44.4 (100.0)	9.5 (21.4)	12.1 (27.3)	7.3 (16.4)	5.1 (11.5)	10.4 (23.4)
연령 대별	40대 이하	107.9 (100.0)	26.6 (24.7)	32.3 (29.9)	15.2 (14.1)	6.6 (6.1)	27.1 (25.1)
	50대	108.6 (100.0)	21.9 (20.2)	30.8 (28.4)	18.9 (17.4)	10.4 (9.6)	26.6 (24.5)
	60대	68.9 (100.0)	14.0 (20.3)	17.4 (25.3)	13.0 (18.9)	8.4 (12.2)	16.1 (23.4)
	70대	40.5 (100.0)	9.2 (22.7)	9.2 (22.7)	7.0 (17.3)	5.2 (12.8)	9.9 (24.4)
	80대 이상	36.4 (100.0)	9.6 (26.4)	9.3 (25.5)	5.9 (16.2)	4.1 (11.3)	7.5 (20.6)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3.4 (100.0)	12.2 (22.8)	12.7 (23.8)	10.1 (18.9)	5.8 (10.9)	12.6 (23.6)
	국가유공자(본인)	64.5 (100.0)	13.6 (21.1)	15.4 (23.9)	12.7 (19.7)	7.6 (11.8)	15.1 (23.4)
	국가유공자(유족)	52.3 (100.0)	12.6 (24.1)	14.0 (26.8)	8.1 (15.5)	5.5 (10.5)	12.1 (23.1)
	고엽제	35.2 (100.0)	8.2 (23.3)	8.1 (23.0)	6.1 (17.3)	4.0 (11.4)	9.0 (25.6)
	참전유공자	35.7 (100.0)	9.3 (26.1)	8.9 (24.9)	5.5 (15.4)	4.1 (11.5)	8.0 (22.4)
	보훈보상대상자	80.7 (100.0)	16.2 (20.1)	24.6 (30.5)	15.8 (19.6)	6.4 (7.9)	17.6 (21.8)
	5·18민주유공자	53.3 (100.0)	10.8 (20.3)	13.0 (24.4)	9.8 (18.4)	7.8 (14.6)	11.9 (22.3)
	특수임무	74.0 (100.0)	14.7 (19.9)	24.9 (33.6)	10.4 (14.1)	5.1 (6.9)	18.9 (25.5)
	제대군인	102.8 (100.0)	21.5 (20.9)	29.6 (28.8)	16.0 (15.6)	9.1 (8.9)	26.6 (25.9)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은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중 추가 지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이다. 2018년 조사와 2021년 조사에서 모두 식료품비와 의료비의 지출이 가장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차이점은 식료품비와 의료비의 비중이 반전되었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두 지출 항목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긴 하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추가 욕구(30.6%)가 식료품비(30.4%)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식료품비 지출에 대한 욕구가 11.7%p 증가하여 가장 높고(42.1%), 의료비 지출에 대한 욕구는 6.6%p 감소했다(24.0%). 2021년 조사에서는 식료품비를 제외하고 다른 지출 항목에 대한 추가적 욕구가 거의 대부분 감소하였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앞서 실제 항목별 소비지출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훈대상자가 남성인 가구에 비해 여성 가구에서 의료비에 대한 추가적 지출 욕구가 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남성 22.4%, 여성 29.1%). 이 밖에 여성 가구에서 추가적 지출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난 항목은 의류·신발과 가사용품·가사서비스였다.

전체 가구에서 추가적 지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식료품비와 의료비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연령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40대 이하의 경우 5.3%만이 추가 지출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의료비를 선택한데 비해 80대 이상은 그 비율이 32.7%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주거비와 교육(보육)비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구 내 추가 지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교육(보육)비를 선택한 비율을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2% 내에 불과했으며(60대 1.7%, 70대 1.3%, 80대 이상 1.4%), 50대 12.8%, 40대 이하 21.6%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임무 및 제대군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식료품비, 의료비, 기타 소비의 순으로 추가 지출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가구의 경우에는 앞서 월평균 소비지출 결과에서처럼 비슷한 특징을 보였는데, 식료품비와 의료비에 대한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5%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5〉 추가적 소비지출이 가장 필요한 항목

(단위: %)

구분		식료 품비	주거비	교육 (보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 문화	의류, 신발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기타 소비
2018년		30.4	10.1	6.0	30.6	2.2	0.3	7.2	1.1	3.0	9.1
2021년		42.1	7.1	4.2	24.0	1.5	0.2	4.8	1.0	2.5	12.4
성별	남성	43.2	7.2	4.5	22.4	1.8	0.2	5.1	0.9	2.3	12.5
	여성	38.8	7.0	3.4	29.1	0.9	0.2	3.8	1.4	3.2	12.1
연령 대별	40대 이하	35.0	10.1	21.6	5.3	1.6	0.5	8.6	2.9	2.0	12.5
	50대	37.7	8.8	12.8	10.2	1.8	0.5	9.7	1.3	3.3	13.8
	60대	42.1	7.9	1.7	19.0	2.2	0.2	7.7	1.0	2.9	15.2
	70대	44.7	6.5	1.3	27.8	1.5	0.2	3.7	0.8	1.8	11.7
	80대 이상	42.2	6.1	1.4	32.7	1.1	0.1	1.5	0.5	3.4	11.1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1.4	7.1	3.4	27.3	2.0	0.5	3.4	1.1	2.1	11.8
	국가유공자(본인)	43.6	6.8	4.2	21.1	2.2	0.3	5.7	0.8	2.5	12.9
	국가유공자(유족)	40.8	7.1	3.5	26.1	1.5	0.2	4.2	1.1	2.9	12.8
	고엽제	47.9	6.2	1.4	26.4	1.6	0.1	2.7	0.8	2.6	10.3
	참전유공자	44.4	7.0	1.0	30.2	1.0	0.3	2.5	0.7	2.3	10.6
	보훈보상대상자	40.9	7.8	9.6	15.9	1.6	0.0	4.9	1.3	2.4	15.5
	5·18민주유공자	53.6	8.3	4.1	12.1	2.7	0.6	4.1	1.5	1.3	11.8
	특수임무	37.2	8.8	14.2	17.8	4.1	1.4	2.3	1.9	2.3	10.0
제대군인		34.5	8.5	14.8	10.7	1.2	0.3	10.9	2.3	2.3	14.5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소득

소득 영역에서는 2020년 1년 동안(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훈대상자 및 보훈대상자의 가구가 벌어들인 유형별 소득에 대해 가구 단위 소득과 보훈대상자 개인 단위 소득을 분리하여 조사했다.

소득 유형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 사업소득은 자영업 및 기업경영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의미하며, 재산소득은 금융, 부동산 등의 보유한 자산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이전소득은 성격에 따라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적이전소득은 부모·형제·자녀·

친인척 등에게서 제공 받은 금품과 민간 단체 등에게서 받은 지원 등을 의미하며, 공적 이전소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정책적·제도적 지원 금액과 연금 및 사회보험 등으로 인한 소득을 포함한다. 이러한 소득 유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집계(aggregated)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앞에 열거한 5가지 소득 유형을 합산한 금액을 경상소득(current income)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득 영역의 조사에서 직전 연구와 가장 큰 차이를 둔 것은 공적이전소득 분류를 재편한 점이다. 기존의 공적이전소득은 양육수당이나 근로(자녀)장려세제, 장애수당 항목의 금액을 따로 조사했었는데 이 항목들을 모두 기타 정부보조금에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간소화했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항목은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급한 금액과 지자체에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조사했는데,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가구의 거주지역 등에 따라 실제 지급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총액이 가구마다 매우 상이했으므로 조사수행 중에 최대한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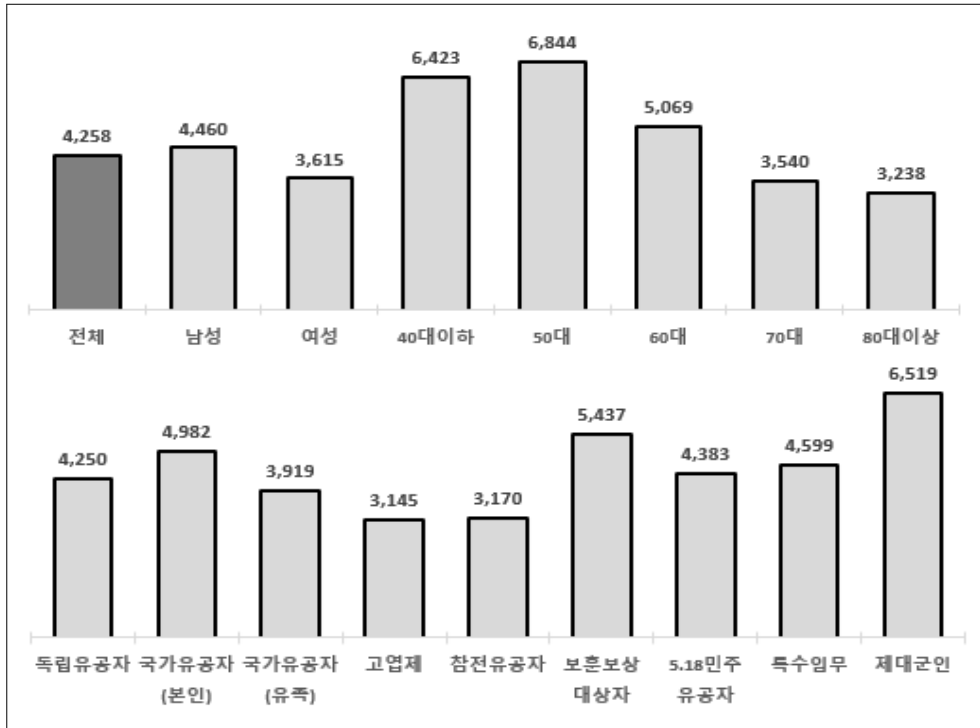
1. 가구 소득

먼저,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보훈대상자 가구의 평균 소득(경상소득)은 4,258만 원이다. 2018년에 비해서는 약 463만 원 증가했다.

보훈대상자 성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남성 보훈대상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은 4,460만 원, 여성 보훈대상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은 3,615만 원으로 나타난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보훈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6,844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하 보훈대상자의 가구 소득은 6,423만 원, 60대 보훈대상자의 가구 소득은 5,06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제대군인 가구의 경상소득이 6,519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훈보상대상자 가구가 5,437만 원, 국가유공자(본인) 가구가 4,982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연간 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 원)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소득항목별 규모에 이어 소득항목별 비중을 확인해보면, 전체 가구 소득의 39.7% 정도를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보훈대상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미세하게 높지만, 다른 소득 항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에서부터 70대 보훈대상자의 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80대 이상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집단은 전체 소득 중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50% 이상을 보였고,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집단은 전체 보훈대상자 집단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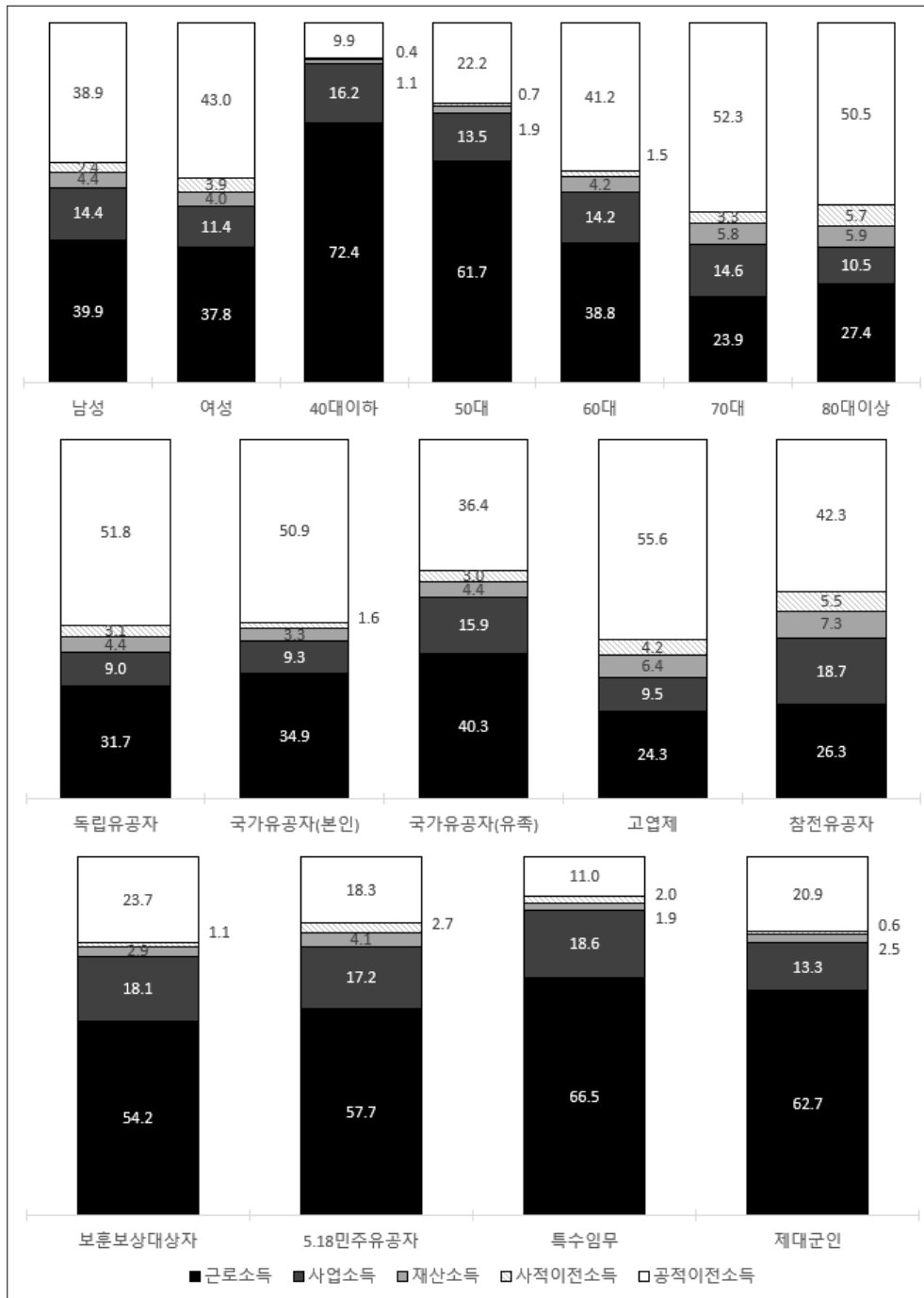
〈표 4-26〉 보훈대상자 가구의 평균 가구 소득 : 연간·항목별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경상소득)	항목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2018년		3,795 (100.0)	1,618 (42.6)	512 (13.5)	181 (4.8)	144 (3.8)	1,340 (35.3)
2021년		4,258 (100.0)	1,680 (39.5)	587 (13.8)	184 (4.3)	114 (2.7)	1,692 (39.7)
성별	남성	4,460 (100.0)	1,779 (39.9)	641 (14.4)	197 (4.4)	106 (2.4)	1,736 (38.9)
	여성	3,615 (100.0)	1,365 (37.8)	413 (11.4)	143 (4.0)	139 (3.9)	1,555 (43.0)
연령 대별	40대 이하	6,423 (100.0)	4,650 (72.4)	1,040 (16.2)	73 (1.1)	26 (0.4)	634 (9.9)
	50대	6,844 (100.0)	4,220 (61.7)	922 (13.5)	132 (1.9)	48 (0.7)	1,522 (22.2)
	60대	5,069 (100.0)	1,967 (38.8)	720 (14.2)	214 (4.2)	78 (1.5)	2,090 (41.2)
	70대	3,540 (100.0)	847 (23.9)	517 (14.6)	205 (5.8)	118 (3.3)	1,853 (52.3)
	80대 이상	3,238 (100.0)	889 (27.4)	339 (10.5)	190 (5.9)	184 (5.7)	1,636 (50.5)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250 (100.0)	1,345 (31.7)	384 (9.0)	187 (4.4)	134 (3.1)	2,200 (51.8)
	국가유공자(본인)	4,982 (100.0)	1,738 (34.9)	462 (9.3)	163 (3.3)	82 (1.6)	2,538 (50.9)
	국가유공자(유족)	3,919 (100.0)	1,579 (40.3)	622 (15.9)	172 (4.4)	118 (3.0)	1,428 (36.4)
	고엽제	3,145 (100.0)	764 (24.3)	299 (9.5)	200 (6.4)	132 (4.2)	1,750 (55.6)
	참전유공자	3,170 (100.0)	833 (26.3)	592 (18.7)	232 (7.3)	173 (5.5)	1,340 (42.3)
	보훈보상대상자	5,437 (100.0)	2,944 (54.2)	983 (18.1)	157 (2.9)	61 (1.1)	1,290 (23.7)
	5·18민주유공자	4,383 (100.0)	2,529 (57.7)	753 (17.2)	180 (4.1)	118 (2.7)	803 (18.3)
	특수임무	4,599 (100.0)	3,060 (66.5)	856 (18.6)	85 (1.9)	91 (2.0)	507 (11.0)
	제대군인	6,519 (100.0)	4,087 (62.7)	866 (13.3)	166 (2.5)	38 (0.6)	1,362 (20.9)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 보훈대상자 가구 유형별 소득구성 비율 현황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중 세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비중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훈급여금은 37.4%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보훈대상자 성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 중 보훈급여금의 비중이 남성(34.2%)에 비해 여성(48.5%)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중 보훈급여금 비중이 54.7%, 50대의 경우 23.4%, 60대의 경우 19.5%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60대에서 가장 높았다가, 70대 이후부터는 보훈급여금의 비중이 공적연금의 비중을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보훈대상자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단위: %)

구분		공적 이전소득	보훈 급여금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긴급재난 지원금	기타정부 보조금
2018년 ¹⁾		100.0	42.4	45.8	8.0	0.6	-	3.1
2021년		100.0	37.4	44.2	10.2	1.1	4.6	2.4
성별	남성	100.0	34.2	47.3	10.2	1.1	4.7	2.5
	여성	100.0	48.5	33.2	10.5	1.3	4.5	2.1
연령 대별	40대 이하	100.0	54.7	21.7	2.5	1.0	15.7	4.4
	50대	100.0	23.4	65.2	1.1	1.6	6.7	2.0
	60대	100.0	19.5	70.7	3.8	0.8	3.7	1.5
	70대	100.0	43.8	36.3	12.3	1.1	3.9	2.6
	80대 이상	100.0	42.6	33.1	15.7	1.4	4.4	2.7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00.0	58.1	29.1	7.1	0.7	3.5	1.5
	국가유공자(본인)	100.0	43.8	47.0	4.4	0.2	3.3	1.2
	국가유공자(유족)	100.0	42.7	37.6	10.5	1.6	5.1	2.4
	고엽제	100.0	43.8	31.8	16.6	0.9	4.3	2.5
	참전유공자	100.0	29.4	33.7	23.7	2.4	5.5	5.3
	보훈보상대상자	100.0	54.6	30.1	5.4	0.9	7.1	1.8
	5·18민주유공자	100.0	0.0	51.0	18.0	9.8	10.7	10.7
	특수임무	100.0	0.0	45.7	22.5	5.9	17.9	7.9
	제대군인	100.0	0.1	89.4	1.8	0.5	6.7	1.6

주: 1) 2018년에 조사된 양육수당, 근로(자녀)장려세제, 장애수당은 기타정부보조금 항목에 포함하였음.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별로는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에서 보훈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8.1%, 54.6%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집단에서도 공적이전소득 중 보훈급여금의 비중이 각각 43.8%, 42.7%, 43.8%로 보훈급여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집단에서는 공적이전소득 중 공적연금, 기초연금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제대군인의 집단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이 89.4%로 다른 보훈대상자 집단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2. 국가보훈대상자 개인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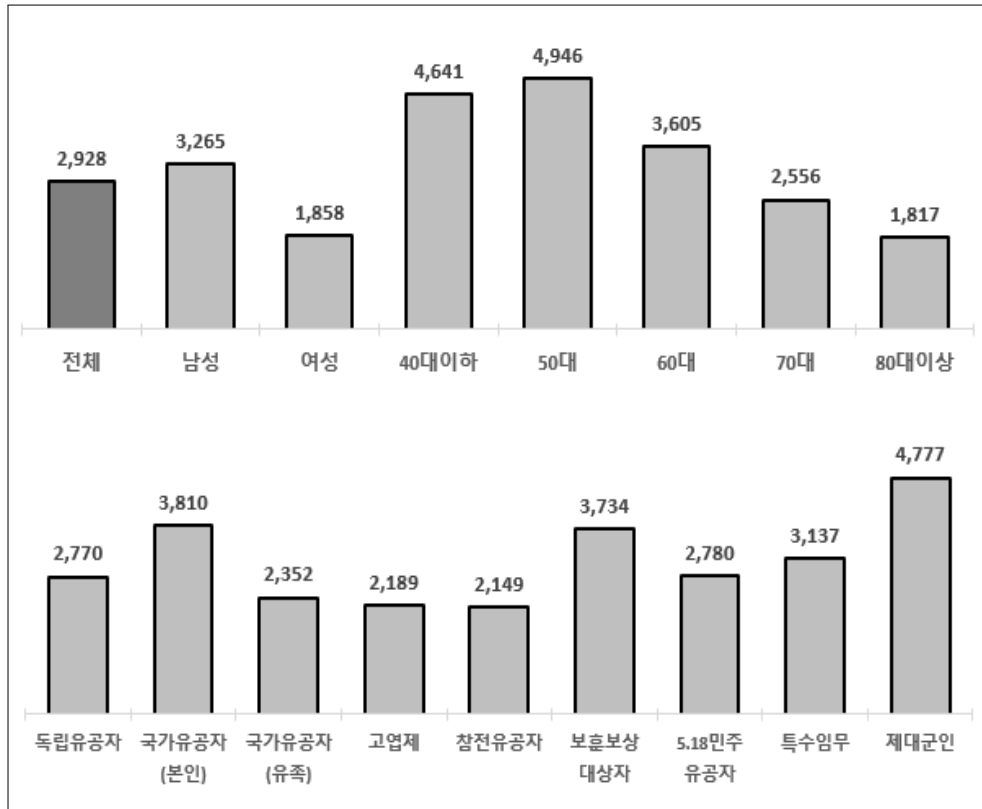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보훈대상자의 소득 영역에서는 크게 보훈대상자의 소득을 포함한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보훈대상자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보훈대상자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훈대상자 개인의 소득은 연간 평균 2,928만 원으로 나타나며, 성별로는 남성 보훈대상자의 경우 3,265만 원, 여성 보훈대상자는 1,858만 원으로 약 1,407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보훈대상자가 4,946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하의 4,641만 원, 60대는 3,605만 원 순으로 나타난다. 50대 이후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80대 이상 보훈대상자는 60대 이상 보훈대상자에 비해 절반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인다.

보훈대상별 소득 규모를 살펴보면, 제대군인이 4,777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3,810만 원, 보훈보상대상자가 3,734만 원, 특수임무유공자가 3,137만 원 순이었다. 독립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집단의 경우 2천만 원 중반 정도의 소득을,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집단의 경우 2천만 원 초반 정도의 소득 수준을 보였다.

[그림 4-6] 연간 보훈대상자 개인 소득

(단위: 만 원)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 개인 소득 항목별 규모를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전체에서 소득 항목 중 공적이전소득이 2021년 기준 1,55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근로소득이 789만 원, 사업소득이 350만 원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21년 보훈대상자 개인 소득은 약 468만 원 증가했는데, 이 중 300만 원은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해보면, 보훈대상자 개인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53.0%, 근로소득은 27.0%, 사업소득은 11.9%로 나타나며, 전체 보훈대상자 개인 소득의 측면에서만 살펴보았을 때,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개인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 성별에 따라서는 보훈대상자의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여성에게서는 74.1%, 남성에게서는 49.2%로 성별 차이가 다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 보훈대상자 집단에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은 줄어들고,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보훈대상별로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고(72.9%), 반면, 특수임무유공자(14.9%), 5·18민주유공자(23.7%), 제대군인(27.1%) 집단은 다른 보훈대상자 집단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표 4-28〉 보훈대상자 평균 개인소득 : 항목별·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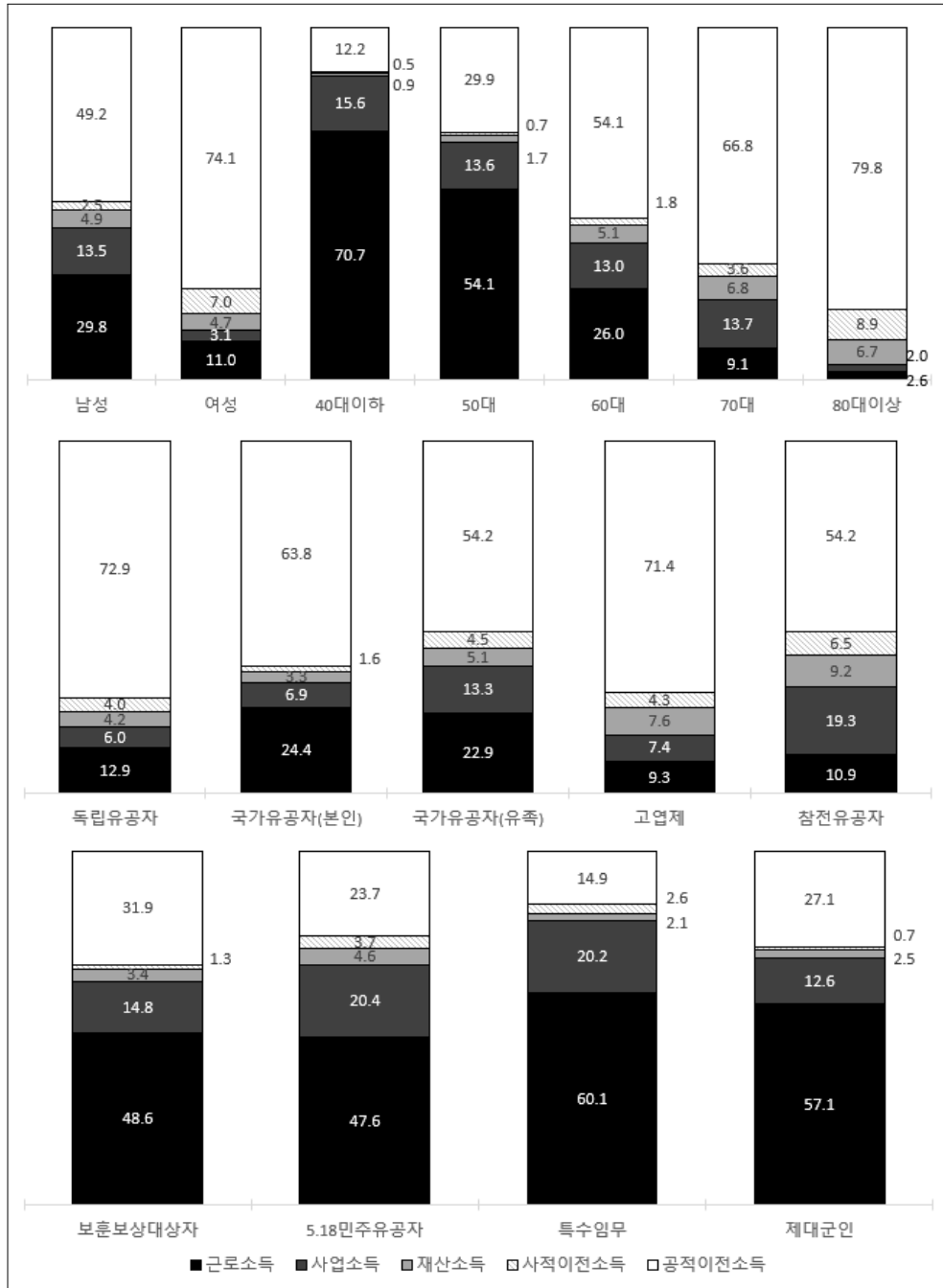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경상소득)	항목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2018년		2,460 (100.0)	692 (28.1)	278 (11.3)	137 (5.6)	100 (4.1)	1,252 (50.9)
2021년		2,928 (100.0)	789 (27.0)	350 (11.9)	142 (4.9)	94 (3.2)	1,552 (53.0)
성별	남성	3,265 (100.0)	973 (29.8)	442 (13.5)	159 (4.9)	83 (2.5)	1,608 (49.2)
	여성	1,858 (100.0)	205 (11.0)	58 (3.1)	88 (4.7)	130 (7.0)	1,376 (74.1)
연령 대별	40대 이하	4,641 (100.0)	3,283 (70.7)	726 (15.6)	43 (0.9)	23 (0.5)	567 (12.2)
	50대	4,946 (100.0)	2,676 (54.1)	672 (13.6)	84 (1.7)	35 (0.7)	1,479 (29.9)
	60대	3,605 (100.0)	936 (26.0)	470 (13.0)	183 (5.1)	64 (1.8)	1,951 (54.1)
	70대	2,556 (100.0)	232 (9.1)	351 (13.7)	174 (6.8)	92 (3.6)	1,707 (66.8)
	80대 이상	1,817 (100.0)	46 (2.6)	37 (2.0)	122 (6.7)	162 (8.9)	1,449 (79.8)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770 (100.0)	356 (12.9)	166 (6.0)	117 (4.2)	111 (4.0)	2,019 (72.9)
	국가유공자(본인)	3,810 (100.0)	929 (24.4)	261 (6.9)	127 (3.3)	62 (1.6)	2,430 (63.8)
	국가유공자(유족)	2,352 (100.0)	538 (22.9)	314 (13.3)	121 (5.1)	105 (4.5)	1,274 (54.2)
	고엽제	2,189 (100.0)	203 (9.3)	162 (7.4)	165 (7.6)	95 (4.3)	1,564 (71.4)
	참전유공자	2,149 (100.0)	234 (10.9)	414 (19.3)	197 (9.2)	141 (6.5)	1,164 (54.2)
	보훈보상대상자	3,734 (100.0)	1,815 (48.6)	552 (14.8)	126 (3.4)	50 (1.3)	1,191 (31.9)
	5·18민주유공자	2,780 (100.0)	1,324 (47.6)	568 (20.4)	127 (4.6)	104 (3.7)	658 (23.7)
	특수임무	3,137 (100.0)	1,886 (60.1)	634 (20.2)	66 (2.1)	82 (2.6)	469 (14.9)
	제대군인	4,777 (100.0)	2,727 (57.1)	603 (12.6)	122 (2.5)	32 (0.7)	1,293 (27.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7] 보훈대상자 개인 소득구성 비율 현황

(단위: %)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앞서 전체 보훈대상자의 개인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항목이 절반 이상(53.0%)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공적이전소득이 보훈대상자의 주요 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보훈대상자의 개인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이전소득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이전소득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인 보훈급여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긴급재난지원금, 기타정부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보훈대상자 집단별로 각각의 항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보훈대상자 개인의 공적이전소득에서 공적연금(43.1%)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훈급여금(40.6%)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 중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비중의 경우 남성(36.9%)에 비해 여성(54.5%)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공적연금의 비중의 경우 남성은 47.7%, 여성은 26.2%로 남성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도 그 비중이 5.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 보훈대상자의 공적이전소득 중 보훈급여금 비중(61.0%)이 가장 높으며, 50대와 60대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보훈급여금 비중(각각 24.1%, 20.8%)에 비해 공적연금의 비중(각각 65.4%, 70.1%)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70대와 80대 이상 보훈대상자 집단에서는 공적연금(각각 35.9%, 29.4%) 비중에 비해 보훈급여금 비중(47.4%, 48.0%)이 높게 나타나는 연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중 보훈급여금이 6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의 비중은 25.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비중은 59.2%,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집단의 비중이 48.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훈급여금을 거의 지급받지 않는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집단은 공적이전소득 중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제대군인 집단이 받는 대부분의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90.5%)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9〉 보훈대상자의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단위: %)

구분		공적 이전소득	보훈 급여금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긴급재난 지원금	기타정부 보조금
2018년 ¹⁾		100.0	45.2	45.0	6.1	0.7	-	3.1
2021년		100.0	40.6	43.1	7.6	1.2	5.1	2.3
성별	남성	100.0	36.9	47.7	6.8	1.2	5.0	2.4
	여성	100.0	54.5	26.2	10.8	1.5	5.1	2.0
연령 대별	40대 이하	100.0	61.0	17.3	0.1	1.1	17.6	3.0
	50대	100.0	24.1	65.4	0.2	1.6	6.9	1.8
	60대	100.0	20.8	70.1	2.9	0.8	4.0	1.3
	70대	100.0	47.4	35.9	8.7	1.2	4.3	2.6
	80대 이상	100.0	48.0	29.4	13.3	1.6	5.0	2.8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00.0	63.3	25.1	5.7	0.8	3.8	1.4
	국가유공자(본인)	100.0	45.7	46.9	2.5	0.2	3.5	1.1
	국가유공자(유족)	100.0	47.6	32.6	10.0	1.8	5.8	2.3
	고엽제	100.0	48.9	31.5	11.2	1.1	4.8	2.6
	참전유공자	100.0	33.8	33.8	17.7	2.8	6.3	5.6
	보훈보상대상자	100.0	59.2	27.5	3.5	1.0	7.7	1.1
	5·18민주유공자	100.0	0.0	47.4	15.2	11.9	13.0	12.4
	특수임무	100.0	0.0	47.5	18.3	6.4	19.4	8.3
	제대군인	100.0	0.0	90.5	0.8	0.5	7.0	1.1

주: 1) 2018년에 조사된 양육수당, 근로(자녀)장려세제, 장애수당은 기타정부보조금 항목에 포함하였음.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 절의 첫 단락에서는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 규모와 소득항목별 비중을 먼저 살펴 보았고, 이어서 보훈대상자 개인 소득의 규모와 소득항목별 비중도 함께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보훈대상자 개인 소득이 가구 소득을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소득 측면에서의 보훈대상자 집단의 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4-30〉은 보훈대상자 개인 소득을 보훈대상자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즉, 보훈대상자 가구가 벌어들이는 가구 경상소득 중 보훈대상자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 항목별로 계산해 나타낸 것이며, 이를 활용해 보훈대상자의 개인 소득이 가구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체 보훈대상자 집단에서 보훈대상자의 개인 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약 68.8%를 차지한다. 이를테면, 가구 전체가 1년 동안 1,000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였다면, 그중 보훈대상자는 688만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도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이 91.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가구 전체가 1년 동안 받은 공적이전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그중 보훈대상자 개인이 받은 공적이전소득이 약 458.5만 원($500 \times 91.7/100 = 458.5$)이라는 의미가 된다.

〈표 4-30〉 가구 소득 대비 보훈대상자 소득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경상소득)	항목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2018년		64.8	42.8	54.3	75.7	69.6	93.5
2021년		68.8	47.0	59.6	77.2	82.5	91.7
성별	남성	73.2	54.7	68.9	80.8	77.9	92.6
	여성	51.4	15.0	14.1	61.5	93.4	88.5
연령 대별	40대 이하	72.3	70.6	69.8	58.5	87.6	89.4
	50대	72.3	63.4	72.9	64.0	72.1	97.2
	60대	71.1	47.6	65.4	85.3	82.6	93.4
	70대	72.2	27.4	67.9	85.0	77.4	92.1
	80대 이상	56.1	5.2	10.9	64.2	87.8	88.6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65.2	26.5	43.3	62.5	83.1	91.8
	국가유공자(본인)	76.5	53.5	56.5	78.0	75.9	95.7
	국가유공자(유족)	60.0	34.1	50.5	70.2	88.6	89.3
	고엽제	69.6	26.5	54.4	82.5	71.4	89.4
	참전유공자	67.8	28.0	70.0	85.0	81.2	86.9
	보훈보상대상자	68.7	61.6	56.1	80.1	81.6	92.3
	5·18민주유공자	63.4	52.3	75.5	70.5	87.7	81.9
	특수입부	68.2	61.6	74.1	77.3	90.8	92.4
제대군인		73.3	66.7	69.6	73.4	83.3	94.9

주: 보훈대상자 소득/가구 소득으로 계산.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4-30〉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을 분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가구 소득 혹은 보훈대상자의 개인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보훈대상자 가구에게 있어 보훈대상자가 벌어들이는 공적이전소득은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 보훈급여금은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 제도와 함께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 보장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자산 및 부채

보훈대상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산 중에서 보훈대상자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용 자산은 앞서 제2절 주거상황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주거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²⁰⁾ 여기서 다루는 자산 유형은 소유 및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구성된다. 2018년 조사에서는 자동차 가격을 별도로 조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기타 자산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2018년 조사에 비해 자산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약 1억 1천만 원에서 2021년에는 약 1억 3천만 원으로 19.2%가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소유 및 점유부동산은 물론 금융재산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타자산은 2018년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약 843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보훈대상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산 전체적으로는 5천만 원 이상 높게 나타나 자산에서 보훈대상자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소유 및 점유 부동산에서 큰 차이를 보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성 중심의 자산보유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대 보훈대상자의 자산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과 40대 이하는 이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자산차이를 많이 보이는 자산 형태는 역시 소유 및 점유부동산이었지만, 기타 자산에서는 고령 보훈대상자보다는 50대 이하 보훈대상자의 자산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에서 별도로 구분한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보훈대상 유형별로는 독립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자산 평균이 1억 6천만 원대로 가장 높았으며, 특수임무유공자가 8천만 원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시 자산 총액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소유 및 점유 부동산이었으며, 기타 자산에서도 보훈대상 유형별로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 참고로 제2절에서 파악된 거주 주택 가격, 전세 및 보증부 월세 보증금은 해당 거주 주택 유형에 한정하여 평균한 값이고, 여기서 제시되는 값은 실태조사 응답자 전체를 평균한 값임.

〈표 4-31〉 가구 자산 현황

(단위: 가구, 만 원)

구분		전체평균	항목별 평균			
			소유 및 점유 부동산	금융 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2018년		11,157.2	7,938.3	2,349.7	253.3	615.9
2021년		13,300.3	9,385.5	3,071.9	842.9	
성별	남성	14,526.4	10,303.0	3,292.4	930.9	
	여성	9,415.2	6,478.2	2,373.0	564.0	
연령대별	40대 이하	12,721.5	7,294.1	3,883.3	1,544.1	
	50대	17,258.4	11,375.5	4,293.0	1,589.9	
	60대	16,535.1	11,582.7	3,797.0	1,155.5	
	70대	13,451.4	10,200.4	2,603.8	647.1	
	80대 이상	10,031.8	6,938.9	2,639.4	453.4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6,300.8	12,231.4	3,395.1	674.3	
	국가유공자(본인)	13,112.9	8,468.1	3,618.0	1,026.8	
	국가유공자(유족)	12,201.4	8,941.7	2,516.0	743.8	
	고엽제	11,903.9	8,770.6	2,533.5	599.8	
	참전유공자	13,768.7	10,389.3	2,850.4	528.9	
	보훈보상대상자	11,675.4	7,131.5	3,469.4	1,074.5	
	5·18민주유공자	12,819.8	8,696.1	3,246.8	876.8	
	특수임무	8,128.4	4,785.0	2,298.2	1,045.2	
	제대군인	16,915.9	11,084	4,278.9	1,553.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 부채 규모는 6,25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사업용 부채를 제외할 경우 약 3천 2백만 원 수준으로 2018년 실태조사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분석한 보훈대상자의 자산은 늘어나고 부채는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자산에서 흑자가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여겨진다. 원금상환액을 보면 2018년에 비해 2021년에는 연간 200.4만 원으로 27.0%가 증가하여, 자산에 대한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자지출액은 연간 96.8만 원으로 역시 직전 2018년 조사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보훈대상자 특성별로 보면, 자산에서와 같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채는 두 배 정도 높았으며, 사업용 부채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항목별 부채 금액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금융기관 대출액이 각각 3,371만 원, 2,141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자지출액의 경우 남성은 연간 107.7만 원, 여성은 62.3만 원으로 보훈대상자 남성이 부채금액이 많은 만큼 이자지출액도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부채액이 1억 6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80대 이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대가 가진 부채의 대부분은 사업용 부채로 40대 이하와 50대 부채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연간 원금상환액과 이자지출액에서 50대 이하가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상환액이 연간 500만 원대이며, 이자 역시 200만 원 수준으로 부채에 대한 부담 상황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50대 이하 보훈대상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지원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4-32〉 가구 부채 실태(전가구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총부채액		주요 항목별 대출 평균			원금 상환액 (연간)	이자 지출액 (연간)
	총부채액	사업용 부채	금융기관 대출액	카드빚	보훈처 생업지원대출		
2018년		3,502.8	3,170.5	76.0	79.1	157.8	98.0
2021년		6,251.0	3,000.3	3,076.5	58.8	108.9	96.8
성별	남성	7,272.6	3,709.8	3,371.7	61.4	121.4	215.8
	여성	3,013.7	752.2	2,141.2	50.6	69.3	151.5
연령대별	40대 이하	9,321.0	1,236.6	7685.0	118.3	281	581.6
	50대	9,455.4	2,735.7	6,382.8	129.6	198.9	476.5
	60대	16,403.8	12,528.2	3,636.0	99.8	136.9	220.7
	70대	3,270.4	958.3	2,183.1	31.3	84.2	125.5
	80대 이상	2,058.4	618.7	1,371.4	30.5	37.8	76.9
	80대 이상	2,058.4	618.7	1,371.4	30.5	37.8	76.9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146.3	1,025.4	2,925.9	53.0	138.9	156.2
	국가유공자(본인)	4,895.7	975.1	3,550.8	73.5	279.5	251.0
	국가유공자(유족)	9,677.1	6,866.9	2,676.1	56.7	76.3	174.5
	고엽제	3,263.5	894.1	2,324.3	37.7	2.3	99.9
	참전유공자	2,371.1	702.5	1,616.6	29.6	16.0	81.7
	보훈보상대상자	6,683.5	1,360.3	5,102.8	84.6	134.5	442.9
	5·18민주유공자	5,977.8	1,675.2	4,076.6	72.3	149.7	176.5
	특수임무	6,602.4	1,653.5	4,552.9	87.8	308.2	373.9
	제대군인	8,810.4	1,957.8	6,696.1	104.1	51.5	464.2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 유형별로는 국가유공자(유족)와 제대군인의 평균 부채가 다른 보훈대상 유형에 비해 많았으며, 대부분은 금융기간 대출액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원금상환액 및 이자지출액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및 특수임무유공자가 가장 높아서 이들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부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2018년과 큰 차이 없이 약 33%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가구의 총부채액은 사업용 부채를 제외하면 역시 2018년에 비해 소폭이지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채액 대부분은 금융기관 대출액이었으며, 카드빚과 생업자금 대출 수준은 높지 않았다. 눈여겨볼 부분은 원금상환액과 이자지출액 수준이다. 원금상환액은 2018년에 비해 약 1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지출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간 290만 원대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보훈대상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의 경우 많은 부채액으로 인해 원금상환과 이자지출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 부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면 남성의 경우 부채액의 절반이 사업용 부채이었지만 여성은 이보다 낮아 여성의 경우 생활비 조달을 위한 부채가 많아 남성 보훈대상자에 비해 여성 보훈대상자가 자산 부문에 있어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남성 및 여성 모두 원금상환 및 이자지출액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부채를 가진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50대 이하는 절반 이상이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부채금액에 있어서는 60대가 가장 많았지만, 사업용 부채를 제외하면 부채규모는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원금상환액과 이자지출에 대한 부담도 50대 이하는 연간 8백만 원과 3백만 원 정도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는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등이 부채를 가진 비율이 50%대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연간 원금상환액과 이자지출액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유공자(유족)의 총부채액이 높았지만, 사업용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보훈대상자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표 4-33〉 가구 부채 실태(부채가 있는 가구 기준)

(단위: %, 만 원)

구분	부채있음	총부채액	사업용부채	주요 항목별 대출 평균			원금 상환액	이자 지출액
				금융기관 대출액	카드빚	보훈처 생업지원대출		
2018년	33.6		10,413.3	9,425.3	225.9	235.3	445.2	287.9
2021년	33.4	1,8710.7	8,980.6	9,208.8	176.1	326.0	599.9	289.8
성별	남성	35.7	2,0375.1	10,393.3	9,446.1	172.1	340.1	301.8
	여성	26.2	11,516.9	2,874.6	8,182.8	193.4	265.0	579.2
연령 대별	40대 이하	66.9	13,933.8	1,848.6	11,488.2	176.8	420.0	869.4
	50대	59.8	15,802.2	4,572.0	10,667.1	216.6	332.4	796.3
	60대	39.9	41,125.4	31,409.0	9,115.7	250.2	343.2	553.3
	70대	28.6	11,419.3	3,346.3	7,622.9	109.3	293.9	438.1
	80대 이상	16.2	12,706.7	3,819.3	8,465.6	188.5	233.4	475.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2.0	12,940.6	3,200.4	9,131.8	165.3	433.6	487.4
	국가유공자(본인)	40.4	12,123.6	2,414.6	8,793.2	182.0	692.0	621.6
	국가유공자(유족)	31.7	30,553.2	21,680.8	8,449.3	179.1	240.9	551.0
	고엽제	25.3	12,924.9	3,540.8	9,205.3	149.1	9.1	395.5
	참전유공자	20.5	11,571.2	3,428.5	7,889.2	144.6	77.9	398.5
	보훈보상대상자	51.0	13,110.1	2,668.3	10,009.4	165.9	263.9	868.8
	5·18민주유공자	47.3	12,627.2	3,538.7	8,611.2	152.7	316.2	372.7
	특수임무	52.3	12,633.5	3,163.9	8,711.8	168.1	589.7	715.5
	제대군인	53.0	16,637.5	3,697.0	12,644.8	196.7	97.2	876.5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들이 부채를 가지게 되는 주요 요인을 보면, 2018년과 동일하게 주택 마련이 약 42%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이 비슷한 14%대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전월세보증금으로 인한 비율을 고려하면 주택 관련한 사항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에게 있어 주택 관련한 지원방안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채가 발생한 원인은 보훈대상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었다.

보훈대상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부채 사유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남성이 주택과 관련된 부채 이유가 다소 높았다면 여성은 생활비, 의료비 등 직접적 생활과 관련된 이유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 관련 부채 사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인한 부채 사유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생애 주기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훈대상 유형별로 보면 역시 보훈대상 유형에 상관없이 주택과 관련된 부채 사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활비와 관련된 것인데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에서 생활비로 인한 부채사유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는 사업자금을 위한 부채라고 응답한 비율도 20%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34〉 부채의 주된 원인(1순위)

(단위: %)

구분		주택 마련	주택외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증권 투자	부채 상환	사업 자금	결혼 자금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기타	계
2018년		47.1	9.8	7.1	0.4	4.7	-	3.9	3.9	3.0	15.3	4.8	100.0
2021년		42.7	6.3	10.8	1.8	3.0	14.1	1.2	2.3	1.2	14.1	2.5	100.0
성별	남성	43.2	6.3	11.0	2.0	3.0	14.3	1.2	2.0	1.2	13.7	2.4	100.0
	여성	40.5	6.7	10.2	1.0	3.0	13.5	1.2	3.8	1.2	15.9	3.1	100.0
연령대 별	40대 이하	49.1	3.9	18.8	2.3	1.9	8.6	0.1	0.8	0.9	11.1	2.5	100.0
	50대	47.5	5.9	9.3	2.2	2.4	17.6	-	1.3	2.5	10.0	1.3	100.0
	60대	49.0	8.2	6.9	2.0	2.8	13.8	1.6	1.0	1.2	11.5	2.1	100.0
	70대	37.2	6.2	10.1	1.3	3.7	14.8	2.2	3.4	0.6	17.5	3.1	100.0
	80대 이상	31.9	8.0	8.9	1.4	3.6	17.5	0.8	4.9	1.5	18.7	2.8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1.5	7.6	7.8	1.4	3.5	14.6	2.0	3.5	0.7	14.7	2.7	100.0
	국가유공자(본인)	48.1	6.1	11.3	1.4	2.2	11.0	1.3	2.0	1.0	13.6	2.1	100.0
	국가유공자(유족)	37.2	7.2	9.6	1.8	3.1	16.5	1.2	3.1	1.1	16.7	2.6	100.0
	고엽제	32.2	9.1	8.3	1.3	3.0	15.9	2.7	4.8	0.5	19.6	2.7	100.0
	참전유공자	35.5	5.8	9.5	2.5	4.8	18.4	1.5	3.0	1.2	15.2	2.9	100.0
	보훈보상대상자	36.4	5.0	14.7	1.6	2.6	17.0	1.1	-	2.0	16.6	3.1	100.0
	5·18민주유공자	36.9	5.0	10.1	0.7	3.5	20.2	-	0.7	0.7	17.2	5.2	100.0
	특수임무	45.4	5.4	10.7	1.0	3.6	20.7	0.9	-	2.7	8.8	0.9	100.0
	제대군인	53.1	5.2	14.2	2.1	2.6	10.2	0.3	0.5	1.6	7.7	2.6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부채발생의 주된 원인 2순위를 보면 생활비로 인한 원인이 가장 높은 40%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1순위가 주택 관련, 2순위가 생활비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부채발생 원인은 거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보훈처 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확대되고 가고 있지만, 여전히 보훈대상자 가구는 실생활과 관련된 부담이 많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방안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보훈대상 특성별로 보면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비로 인한 부채 사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부채상환이라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조기에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보훈대상 유형별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5〉 부채의 주된 원인(2순위)

(단위: %)

구분		주택 마련	주택외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증권 투자	부채 상환	사업 자금	결혼 자금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기타	계
2018년		6.7	7.4	4.7	0.3	15.0	-	3.6	7.8	5.4	46.0	3.1	100.0
2021년		5.9	7.3	5.5	2.9	15.1	5.6	1.6	5.9	5.5	41.7	3.1	
성별	남성	5.9	7.5	6.0	2.8	15.6	5.5	1.6	5.0	6.0	40.8	3.3	100.0
	여성	5.8	6.7	3.2	3.3	13.1	6.2	1.4	9.5	3.3	45.3	2.3	100.0
연령대 별	40대 이하	6.6	5.9	7.1	6.1	17.0	5.9	1.2	2.1	8.1	35.3	4.8	100.0
	50대	5.7	10.1	6.8	3.4	11.0	6.4	1.2	4.4	12.0	37.1	2.0	100.0
	60대	7.3	9.3	4.5	1.7	17.5	5.9	2.4	5.9	3.3	40.3	2.1	100.0
	70대	3.9	5.4	5.0	1.6	16.7	3.6	2.2	7.9	2.2	48.4	3.2	100.0
	80대 이상	7.6	7.9	3.8	2.1	9.2	9.0	-	9.3	4.3	44.3	2.6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9	4.3	1.6	1.4	16.9	8.9	1.6	5.9	5.9	46.2	1.5	100.0
	국가유공자(본인)	5.5	6.5	6.7	2.8	15.8	3.8	1.7	4.2	6.9	43.3	2.8	100.0
	국가유공자(유족)	5.3	7.7	4.9	2.7	13.1	6.4	1.3	8.6	4.3	42.7	2.9	100.0
	고엽제	2.9	8.9	4.9	3.0	13.5	4.9	2.8	7.8	5.0	45.3	1.0	100.0
	참전유공자	5.4	4.5	4.8		18.5	5.5	1.0	7.7	2.5	46.6	3.7	100.0
	보훈보상대상자	5.0	5.7	7.0	1.9	15.6	3.8	2.9	3.0	10.9	40.4	3.9	100.0
	5·18민주유공자	6.3	9.9	6.5	1.4	11.8	7.7	-	1.4	2.7	51.1	1.2	100.0
	특수임무	3.1	4.5	8.9	4.4	12.7	7.6	-	3.0	6.0	48.2	1.6	100.0
제대군인		8.6	10.0	5.2	6.0	15.5	7.2	2.0	2.3	7.4	31.9	3.9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의 최근 1년간 부채 변화를 보면 2018년 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부채 규모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78%로 2018년 조사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앞의 분석에서 부채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보훈대상자들이 느끼기에는 부채상환 수준이 부채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부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정도의 감소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보훈대상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 보훈대상자의 부채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가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활동이 어렵고 따라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어려운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활동을 통한 부채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의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채무관리에 대한 집중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대상 유형별로는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는 부채규모가 변화 없었다는 비율이 80%대로 높았으며, 반면에 부채가 증가했다고 한 경우는 특수임무 10.3%, 제대군인 7.6%의 순으로 높았다. 동시에 이들은 부채도 감소했다고 한 비율도 높아서 채무변화가 다른 보훈대상 유형에 비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6〉 최근 1년 간 부채규모 변화

(단위: %)

구분		감소	변화없음	증가
2018년		16.6	77.8	5.6
2021년		16.5	78.4	5.1
성별	남성	17.7	77.2	5.1
	여성	12.9	82.2	4.9
연령대별	40대 이하	37.6	51.3	11.1
	50대	32.4	57.7	9.9
	60대	21.6	72.8	5.6
	70대	12.4	83.6	4.0
	80대 이상	7.0	90.3	2.7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7.5	78.1	4.4
	국가유공자(본인)	21.0	73.5	5.5
	국가유공자(유족)	15.3	79.0	5.7
	고엽제	10.7	86.7	2.6
	참전유공자	7.6	89.4	3.0
	보훈보상대상자	27.3	67.2	5.5
	5·18민주유공자	23.1	67.9	9.0
	특수임무	28.9	60.8	10.3
	제대군인	31.5	60.9	7.6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부채 감소의 주된 방법을 보면 지난 조사에 비해 소득으로 상환했다고 하는 비율이 92.5%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다른 항목을 통해 부채상환 비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소득으로 상환한 것 다음으로는 금융자산 처분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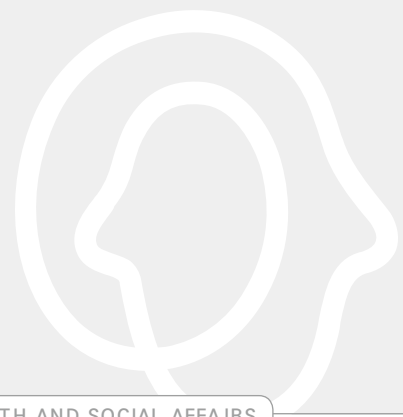
보훈대상자 특성별로 보면, 대부분이 소득으로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을 통한 상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금융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보훈대상 유형별로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금융자산을 활용한 처분이 가장 높은 10.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4-37〉 부채감소의 주된 방법

(단위: %)

구분		소득으로 상환	금융자산 처분 등	주거 통해 상환	부동산 등 처분	상속, 증여 상환	기타
2018년		88.8	5.1	2.4	1.7	1.5	0.5
2021년		92.5	3.5	1.4	1.3	0.6	0.7
성별	남성	93.0	3.3	1.4	1.2	0.4	0.8
	여성	90.3	4.3	1.8	1.6	1.5	0.5
연령대별	40대 이하	94.7	1.1	1.8	1.0	0.1	1.4
	50대	94.9	2.5	1.4	1.2	-	-
	60대	91.7	4.7	1.7	1.3	0.6	0.0
	70대	91.7	4.3	1.1	1.4	0.5	0.9
	80대 이상	88.7	5.1	1.3	1.4	2.5	1.1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82.1	10.5	3.8	3.6	-	-
	국가유공자(본인)	91.7	4.7	1.3	1.5	0.5	0.4
	국가유공자(유족)	92.2	3.1	1.6	1.1	0.9	1.1
	고엽제	90.9	1.1	2.0	3.0	2.0	1.0
	참전유공자	93.3	4.1	0.7	0.6	0.6	0.7
	보훈보상대상자	93.3	3.9	-	2.9	-	-
	5·18민주유공자	87.9	4.1	1.2	4.2	2.7	-
	특수임무	95.3	-	1.6	-	-	3.1
	제대군인	95.0	1.9	1.7	0.9	-	0.6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5장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인식 분석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행복

제2절 문화 및 여가

제3절 사회참여 및 의식

제4절 가족관계

제5절 보건의료

제6절 경제활동

제7절 노후 보장

제8절 정책 서비스

제9절 정책 인식 및 욕구

제 5 장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인식 분석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행복

1.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행복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대리지표 중 하나이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만족은 0~10점 범위에서 2021년 기준 5.5점으로, 5점을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25.4%로 가장 많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삶의 만족 평균값이 5.6점으로 여성의 5.2점에 비해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가 6.5점, 50대가 6.2점, 60대가 5.9점, 70대가 5.4점, 80대 이상이 5.0점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진다. 보훈대상별로는 제대군인의 삶의 만족 평균값이 6.8점으로 가장 높고, 국가유공자(본인)이 5.8점, 독립유공자가 5.7점으로 높은 편이다. 국가유공자(유족)과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의 삶의 만족 평균값이 5.1점으로 가장 낮다.

〈표 5-1〉 보훈대상자의 삶의 만족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성별	2021년	0.6	2.7	5.9	9.4	9.0	25.4	13.1	14.2	11.0	5.0	3.7	100.0	5.5	
	남성	0.6	2.5	5.5	9.0	8.4	25.2	13.5	14.5	11.3	5.5	4.1	100.0	5.6	
	여성	0.7	3.2	7.3	10.7	10.8	26.0	11.8	13.4	10.2	3.5	2.4	100.0	5.2	
연령 대별	40대 이하	0.4	1.7	3.6	4.9	4.3	18.2	11.4	20.7	18.9	8.4	7.5	100.0	6.5	
	50대	0.7	1.2	4.5	6.7	6.2	22.0	11.7	17.8	12.9	8.9	7.3	100.0	6.2	
	60대	0.6	1.9	4.8	7.7	7.2	23.1	14.7	16.6	12.4	6.5	4.6	100.0	5.9	
	70대	0.7	2.5	6.2	10.0	9.7	27.6	13.9	12.8	9.8	4.1	2.7	100.0	5.4	
	80대 이상	0.6	4.3	7.6	12.0	11.5	27.4	12.0	11.3	8.6	2.8	2.0	100.0	5.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0.2	3.7	4.5	6.4	8.4	28.4	13.0	14.7	12.0	4.8	3.8	100.0	5.7	
	국가유공자(본인)	0.4	1.7	4.4	8.4	7.8	25.6	14.0	15.0	12.0	6.3	4.3	100.0	5.8	
	국가유공자(유족)	0.8	2.9	7.0	10.6	9.9	25.8	13.0	14.0	9.5	3.7	2.8	100.0	5.3	
	고엽제	0.5	3.9	7.7	9.6	11.4	30.2	12.6	10.5	8.5	3.1	2.0	100.0	5.1	
	참전유공자	0.8	3.5	7.3	10.7	11.0	27.2	13.5	11.8	9.5	3.0	1.8	100.0	5.1	
	보훈보상대상자	1.6	4.3	5.2	10.5	6.8	23.9	12.9	13.3	11.8	5.0	4.7	100.0	5.5	
	5·18민주유공자	0.9	5.6	9.3	11.7	8.2	27.6	7.7	13.7	8.1	4.2	3.2	100.0	5.1	
	특수임무	0.9	5.2	6.5	8.5	8.7	29.7	10.9	10.6	10.0	5.7	3.4	100.0	5.3	
	제대군인	0.4	1.4	2.5	4.5	3.1	16.6	11.2	20.3	18.3	11.7	9.9	100.0	6.8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삶에 대한 가치 평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 평가는 행복의 또 다른 대리지표이고, 나라에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특히 유의미하다. 국가보훈대상자의 2021년 삶의 가치 평가는 0~10점 범위에서 평균 5.8점으로 평균 삶의 만족 5.5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성의 삶의 가치 평가 평균값이 6.0점으로 여성의 5.4점에 비해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가 7.1점, 50대가 6.7점, 60대가 6.2점, 70대가 5.7점, 80대 이상이 5.2점으로 나이와 반비례한다. 보훈대상별로는 제대군인이 7.3점으로 가장 높고, 국가유공자(본인)이 6.1점, 보훈보상대상자가 6.1점, 독립유공자가 6.0점으로 높다. 참전유공자의 삶의 가치 평가 평균값이 5.4점으로 가장 낮고, 국가유공자(유족)과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의 삶의 만족 평균값이 5.1점으로 가장 낮은 편이다.

〈표 5-2〉 보훈대상자의 삶에 대한 가치 평가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2021년		0.4	2.2	4.4	7.8	8.1	25.3	12.7	15.0	12.5	6.3	5.4	100.0	5.8	
성별	남성	0.4	1.9	4.0	7.2	7.5	24.7	13.0	15.2	13.0	7.0	6.2	100.0	6.0	
	여성	0.3	3.3	5.6	9.7	10.1	27.3	11.9	14.0	10.6	4.3	2.9	100.0	5.4	
연령 대별	40대 이하	0.2	1.1	1.6	3.9	2.7	14.7	9.3	19.4	18.8	11.7	16.5	100.0	7.1	
	50대	0.7	0.6	2.8	4.8	5.1	20.7	9.1	16.2	17.1	11.8	11.2	100.0	6.7	
	60대	0.3	1.5	3.4	6.1	6.7	21.7	13.8	17.0	15.6	8.0	5.9	100.0	6.2	
	70대	0.4	2.1	4.4	8.0	9.0	27.9	13.7	14.6	10.9	5.4	3.6	100.0	5.7	
	80대 이상	0.3	3.7	6.4	11.0	10.6	29.0	12.9	12.1	9.0	3.0	2.0	100.0	5.2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0.2	2.5	3.4	6.3	6.9	26.7	11.8	15.4	14.7	6.1	6.1	100.0	6.0	
	국가유공자(본인)	0.1	1.4	3.3	5.9	6.9	25.1	13.3	16.6	14.0	7.3	6.1	100.0	6.1	
	국가유공자(유족)	0.4	2.8	5.1	9.4	9.2	26.4	12.6	14.8	10.9	4.9	3.4	100.0	5.5	
	고엽제	0.4	2.7	5.0	8.9	9.3	30.5	13.0	13.8	8.9	4.5	3.1	100.0	5.5	
	참전유공자	0.5	2.6	5.7	9.7	10.2	27.5	13.8	13.0	10.7	3.7	2.6	100.0	5.4	
	보훈보상대상자	1.3	3.2	2.5	8.0	6.0	22.1	12.5	11.6	14.3	7.9	10.6	100.0	6.1	
	5·18민주유공자	0.6	5.3	7.3	9.0	8.0	26.0	7.7	12.4	13.4	5.1	5.4	100.0	5.5	
	특수임무	0.9	5.2	5.2	5.8	8.7	24.9	11.2	11.0	15.1	5.2	6.7	100.0	5.7	
	제대군인	0.4	0.6	1.4	2.7	2.4	14.6	9.3	17.0	19.0	15.5	17.1	100.0	7.3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2절 문화 및 여가

1. 문화 및 여가생활

보훈대상자 중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약간 관심이 있거나 매우 관심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로 2018년의 47.8%에 비해 0.3%p 증가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약간 관심이 있거나 매우 관심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51.9%로 여성 36.0%에 비해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 중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약간 관심이 있거나 매우 관심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81.9%, 50대 74.3%, 60대 63.5%, 70대 45.3%, 80대 이상 22.3%로 나이가 어릴수록 관심 정도가 높다. 보훈대상별로는 제대군인이 81.2%로 가장 높고, 보훈보상대상자가 65.9%로 높은 편이다.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각각 35.1%와 39.4%로 낮은 편이다.

〈표 5-3〉 보훈대상자의 문화 및 여가생활 관심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관심이 없다	별 관심이 없다	약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계
2018년		17.3	34.9	34.1	13.7	100.0
2021년		17.8	34.1	33.9	14.2	100.0
성별	남성	15.5	32.6	36.2	15.7	100.0
	여성	25.0	38.9	26.7	9.3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3.6	14.6	46.3	35.6	100.0
	50대	6.5	19.3	44.5	29.8	100.0
	60대	9.4	27.2	42.2	21.3	100.0
	70대	15.0	39.7	35.3	10.0	100.0
	80대 이상	35.8	41.9	18.8	3.5	100.0
대상분류	독립유공자	19.2	34.7	33.3	12.8	100.0
	국가유공자(본인)	13.9	30.3	37.9	17.9	100.0
	국가유공자(유족)	20.3	37.3	31.9	10.5	100.0
	고엽제	20.6	40.1	31.2	8.2	100.0
	참전유공자	24.0	41.0	28.2	6.9	100.0
	보훈보상대상자	10.4	23.7	43.8	22.1	100.0
	5·18민주유공자	13.2	38.5	37.0	11.3	100.0
	특수임무	16.0	28.7	34.7	20.6	100.0
	제대군인	3.8	15.0	44.6	36.6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21년 보훈대상자의 주요 여가활동을 2018년 1순위 여가활동과 비교하면, 휴식 활동의 비율이 49.6%에서 63.2%로 대폭 증가하였고, 사회 및 친교 활동이 10.6%에서 5.7%로, 문화예술 관람이 5.7%에서 1.8%로 감소하였다. 2018년에 비해 2021년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관심 정도가 유지된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에 보훈대상자 여가활동의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여가활동 종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76.1%가 휴식 활동을 응답한 반면 남성의 응답률은 59.1%로 전체 여가활동 유형 중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여성에 비해서는 적다. 여성은 휴식 활동에 이어 사회 및 친교 활동의 응답률이 9.1%로 두 번째로 높지만, 남성은 스포츠 참여의 응답률이 9.9%로 두 번째로 높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의 83.5%가 휴식 활동을 응답한 반면, 40대 이하는 33.8%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스포츠 참여(19.7%), 취미 및 오락 활동(16.5%), 관광 활동(13.8%)의 응답률이 높아 연령대별 차이를 보인다. 제대군인의 휴식 활동에 대한 응답률은 32.6%에 불과한 데에 비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의 응답률은 70%를 넘는 수준으로 보훈대상별로도 여가활동 유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4〉 보훈대상자의 주요 여가활동

(단위: %)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친교활동	기타 활동	계
2018년 (1순위)		5.7	2.2	4.1	9.4	5.9	11.2	49.6	10.6	1.3	100.0
2021년		1.8	1.9	3.3	8.3	3.3	12.1	63.2	5.7	0.4	100.0
성 별	남성	2.0	1.6	4.2	9.9	3.9	14.3	59.1	4.6	0.4	100.0
	여성	1.2	2.7	0.6	3.5	1.5	4.9	76.1	9.1	0.4	100.0
연 령 대 별	40대 이하	7.3	0.4	5.6	19.7	13.8	16.5	33.8	2.7	0.1	100.0
	50대	3.5	1.7	4.2	19.8	8.8	19.7	37.8	4.2	0.3	100.0
	60대	2.8	2.6	4.6	11.3	3.0	17.7	50.0	7.5	0.7	100.0
	70대	0.7	2.0	3.1	6.2	1.7	12.9	67.5	5.6	0.4	100.0
	80대 이상	0.3	1.9	1.8	2.0	0.5	3.4	83.5	6.2	0.5	100.0
대 상 분 류	독립유공자	2.2	0.7	3.4	6.0	1.7	8.6	66.5	10.2	0.7	100.0
	국가유공자(본인)	2.6	1.7	4.3	11.9	3.9	14.4	56.5	4.4	0.3	100.0
	국가유공자(유족)	1.3	2.6	2.2	5.8	2.0	9.8	68.2	7.6	0.4	100.0
	고엽제	0.3	1.4	3.2	5.7	1.1	10.7	71.3	5.7	0.5	100.0
	참전유공자	0.5	1.6	2.9	3.6	1.5	10.2	75.0	4.1	0.5	100.0
	보훈보상대상자	6.1	0.8	7.0	10.3	8.8	12.2	50.4	4.2	0.3	100.0
	5·18민주유공자	2.5	0.6	5.6	7.3	2.4	15.1	58.0	8.1	0.4	100.0
	특수임무	1.0	0.9	5.3	7.9	4.7	17.5	54.8	7.9		100.0
	제대군인	4.9	1.1	5.4	20.4	10.9	19.0	32.6	5.3	0.4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와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한 사람은 2021년 혼자가 44.6%로 가장 많고, 가족이 35.9%, 친구가 10.7%, 동호회가 7.3%, 직장동료가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응답에 비해 혼자의 응답률이 6.6%p, 가족이 1.4%p 증가했고, 친구와 동호회가 각각 7.3%p, 0.5%p 감소한 것이다.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 정도는 같은 기간에 유지된 반면, 팬데믹 기간에 주요 여가활동 유형 중 실내에서 동거하는 가족과 하는 휴식 활동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한 사람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 보훈대상자 중 혼자의 응답률이 58.6%로 남성 40.2%에 비해 높다. 남성 보훈대상자 중 가족의 응답률은 39.9%로 여성의 23.2%에 비해 높아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혼자의 응답률이 80대 이상에서 57.9%로 가장 높고 40대 이하가 24.8%로 가장 낮아 나이가 많을수록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40대 이하의 가족의 응답률이 44.8%로 가장 높아 연령대별 차이가 있다. 보훈대상별로도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본인)은 가족의 응답률이 각각 43.5%, 43.3%로 높아 혼자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다른 유형의 보훈대상자와 차이를 보인다.

〈표 5-5〉 보훈대상자의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한 사람

(단위: %)

구분	혼자서	가족	친구	동호회	직장동료	기타	계
2018년	38.3	34.5	18.0	7.8	1.1	0.4	100.0
2021년	44.6	35.9	10.7	7.3	1.1	0.4	100.0
성별							
남성	40.2	39.9	10.4	7.8	1.4	0.3	100.0
여성	58.6	23.2	11.7	5.8	0.2	0.5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24.8	44.8	19.2	7.1	4.1	0.0	100.0
50대	30.2	40.3	13.5	11.0	4.4	0.5	100.0
60대	36.5	37.1	14.6	10.5	1.0	0.2	100.0
70대	47.0	34.8	10.1	7.6	0.3	0.1	100.0
80대 이상	57.9	32.1	5.2	3.7	0.2	0.9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5.8	33.0	10.1	9.8	0.4	0.7	100.0
국가유공자(본인)	37.8	43.3	10.1	7.2	1.4	0.3	100.0
국가유공자(유족)	52.7	27.0	12.4	7.0	0.6	0.4	100.0
고엽제	47.9	36.5	8.2	6.8	0.3	0.3	100.0
참전유공자	48.7	37.8	6.7	5.9	0.4	0.5	100.0
보훈보상대상자	38.3	35.9	18.7	3.9	2.7	0.6	100.0
5·18민주유공자	50.3	30.9	9.6	7.7	1.5		100.0
특수임무	44.7	34.4	10.9	7.1	2.9		100.0
제대군인	23.8	43.5	16.5	12.2	4.0		100.0

주: 공란은 응답값이 없는 경우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21년 보훈대상자 중 관광여행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7.8%로 2018년 47.5%에 비해 29.7%p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된 팬데믹 기간의 영향으로 보인다. 여행 경험이 있는 보훈대상자 중 당일여행의 횟수는 2021년 4.3회로 2018년 3.6회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숙박여행도 2021년 2.1회로 2018년 1.3회에 비해 늘었다. 반면, 해외여행은 2018년 0.4회에서 2021년 0.005회로 대폭 감소하여 관광여행 경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보훈대상자의 관광여행 경향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중 19.8%가 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응답률은 11.7%로 상대적으로 낮다. 당일여행과 숙박여행의 횟수도 남성 4.6회, 2.3회에 비해 여성 3.1회, 1.3회로 낮은 편이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40대 이하 보훈대상자의 55.2%가 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50대 37.5%, 60대 24.9%, 70대 10.8%, 80대 이상 4.2%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행 경험이 감소하였다. 보훈대상별로는 제대군인 중 48.1%가 여행 경험이 있는 반면,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 중 여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와 8.6%에 불과해 차이를 보였다.

〈표 5-6〉 보훈대상자의 관광여행

(단위: %, 회)

구분		여행경험	국내여행		해외여행
		있다	당일여행	숙박여행	
2018년		47.5	3.6	1.3	0.4
2021년		17.8	4.3	2.1	0.005
성별	남성	19.8	4.6	2.3	0.006
	여성	11.7	3.1	1.3	0.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55.2	4.4	3.2	0.007
	50대	37.4	6.2	2.1	0.003
	60대	24.9	4.4	1.8	0.000
	70대	10.8	3.2	1.4	0.003
	80대 이상	4.2	3.4	1.0	0.019
	독립유공자	18.3	2.4	1.5	0.000
대상 분류	국가유공자(본인)	19.9	4.2	2.1	0.004
	국가유공자(유족)	14.2	3.5	1.5	0.000
	고엽제	8.5	3.4	1.5	0.000
	참전유공자	8.6	3.4	1.4	0.006
	보훈보상대상자	36.3	3.4	2.2	0.000
	5·18민주유공자	22.1	5.0	1.6	0.000
	특수임무	25.7	3.6	2.0	0.019
	제대군인	48.1	6.0	3.1	0.01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여가 만족

여가생활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보훈대상자는 2021년 21.9%로 2018년 19.5%에 비해 2.4%p 증가했다.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보훈대상자는 2018년 43.3%에서 31.4%로 11.9%p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여가 만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보훈대상자의 여가생활 만족 수준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중 여가생활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응답자가 23.5%인 데에 비해 여성은 16.8%로 상대적으로 낮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 보훈대상자 중 여가생활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35.2%로 가장 높고, 50대 33.4%, 60대 29.3%, 70대 19.1%, 80대 이상 12.9%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가생활 만족 수준이 낮아진다. 보훈대상별로는 제대군인 중 여가생활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41.9%로 가장 높고,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는 16.5%와 16.9%에 불과했다.

〈표 5-7〉 보훈대상자의 여가생활 만족

(단위: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2018년		11.6	31.7	37.2	16.0	3.5	100.0
2021년		7.5	23.9	46.7	18.8	3.1	100.0
성별	남성	7.0	23.9	45.6	20.1	3.4	100.0
	여성	9.0	24.0	50.2	14.9	1.9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5.3	21.1	38.5	29.1	6.1	100.0
	50대	5.5	21.5	39.6	26.2	7.3	100.0
	60대	6.5	20.5	43.8	24.7	4.6	100.0
	70대	6.8	25.4	48.7	16.9	2.3	100.0
	80대 이상	10.6	25.6	50.9	12.0	0.9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6.6	22.4	46.5	18.4	6.0	100.0
	국가유공자(본인)	6.3	23.8	46.1	20.5	3.4	100.0
	국가유공자(유족)	8.2	24.7	48.4	16.5	2.2	100.0
	고엽제	9.0	27.4	47.1	14.6	2.0	100.0
	참전유공자	8.8	24.4	49.8	15.1	1.8	100.0
	보훈보상대상자	7.2	29.3	46.2	13.8	3.5	100.0
	5·18민주유공자	5.5	31.8	42.3	18.2	2.2	100.0
	특수임무	7.5	27.3	46.8	16.0	2.4	100.0
	제대군인	4.5	17.6	35.9	33.7	8.2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21년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보훈대상자의 이유를 2018년과 비교하면, 경제적 부담의 응답률이 46.0%에서 41.3%로 다소 감소한 반면, 경험 부족이 1.8%에서 3.5%로 1.7%p, 건강 문제가 41.3%에서 42.5%로 1.2%p 증가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21년 남성 보훈대상자의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은 경제적 부담(44.9%)이지만, 여성은 건강문제(55.1%)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도 40대 이하와 50대 보훈대상자 중 경제적 부담의 응답률이 60%를 넘는 높은 수준인 데에 비해, 50대 이상은 건강문제가 74.6%로 4명 중 3명 꼴이다. 보훈대상별로는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에 의한 보훈대상자 중 경제적 부담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로 선택한 응답률이 각각 65%를 넘는 높은 수준인 데에 비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불만족 이유는 건강문제이다. 상대적으로 제대군인과 보훈보상대상자 중 시간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선택한 응답률이 26.2%와 17.7%로 다른 보훈대상 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표 5-8〉 보훈대상자의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감염병 염려 제외)

(단위: %)

구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불편	여가시설 부족	정보 부족	경험 부족	건강 문제	함께즐길 사람없어서	기타	계
2018년		46.0	7.6	0.7	0.6	0.7	1.8	41.3	1.0	0.4	100.0
2021년		41.3	7.5	0.8	0.9	1.2	3.5	42.5	1.3	1.0	100.0
성별	남성	44.9	8.6	0.8	1.0	1.2	3.2	38.2	1.2	1.0	100.0
	여성	30.7	4.6	0.7	0.8	1.2	4.4	55.1	1.6	1.1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60.1	28.1	0.5	0.5	2.0	1.3	4.7	0.6	2.1	100.0
	50대	60.2	19.0	0.8	1.5	2.4	2.4	9.9	1.3	2.5	100.0
	60대	55.4	14.9	0.7	1.0	1.3	6.3	18.3	1.3	0.7	100.0
	70대	47.0	3.9	0.9	0.8	1.5	3.8	39.9	1.3	0.7	100.0
	80대 이상	17.9	0.7	0.7	0.9	0.3	2.6	74.6	1.4	0.9	100.0
대상분류	독립유공자	33.0	3.6		1.5	2.9	3.9	51.0	0.9	3.1	100.0
	국가유공자(본인)	35.8	9.2	1.0	0.6	1.4	4.1	46.4	0.8	0.8	100.0
	국가유공자(유족)	41.7	6.7	0.7	0.9	1.0	4.1	42.8	1.4	0.7	100.0
	고엽제	41.8	4.9	0.6	0.9	0.9	3.9	44.6	1.8	0.6	100.0
	참전유공자	40.9	2.1	0.6	0.8	0.9	2.3	49.6	1.9	0.9	100.0
	보훈보상대상자	49.7	17.7	0.7	1.4	3.8	1.4	24.5		0.7	100.0
	5·18민주유공자	65.7	9.0	0.8	0.8	1.7	2.4	18.8		0.8	100.0
	특수임무	65.4	8.4		1.3		1.4	23.6			100.0
	제대군인	55.3	26.2	0.8	2.3	2.6	2.6	6.2	0.3	3.6	100.0

주: 공란은 응답값이 없는 경우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희망 여가활동

희망하는 여가활동 종류로서 관광활동과 문화예술 관람의 응답률은 2018년 32.4%와 6.0%에서 각각 25.0%와 2.4%로 7.4%p, 3.6%p 감소한 데에 비해, 휴식활동의 응답률은 25.4%에서 36.9%로 11.5%p 증가했다. 희망 여가활동 유형의 변화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실내 활동 및 거리두기가 장려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희망 여가활동의 종류를 살펴보면, 여성은 휴식활동의 응답률이 47.0%로 가장 높고, 관광활동이 21.5%, 사회 및 친교 활동이 12.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휴식활동이 33.8%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 관광활동이 26.1%로 다음 순서로 나타났지만, 그 다음은 취미 및 오락활동이 15.0%, 스포츠 참여가 11.5%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 60대 중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여가활동 종류가 관광활동으로 나타난 반면, 70대와 80대 이상은 휴식 활동의 응답률이 가장 높아 연령대별 희망하는 여가활동 종류의 차이를 보였다. 보훈대상자별로도 제대군인과 보훈보상대상자는 관광활동을 가장 많이 희망한 반면, 참전유공자는 절반 정도가 휴식 활동을 희망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9〉 보훈대상자의 희망하는 여가활동

(단위: %)

구분		문화예 술관람	문화예 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활동	취미· 오락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친교활동	기타 활동	계
2018년		6.0	3.3	2.6	8.8	32.4	11.0	25.4	9.3	1.2	100.0
2021년		2.4	3.7	2.0	9.7	25.0	12.4	36.9	7.2	0.7	100.0
성 별	남성	2.4	2.6	2.4	11.5	26.1	15.0	33.8	5.5	0.7	100.0
	여성	2.6	7.3	0.4	3.9	21.5	3.8	47.0	12.5	0.8	100.0
연 령 대 별	40대 이하	8.3	1.9	2.5	24.9	42.6	10.2	7.4	2.0	0.1	100.0
	50대	6.8	2.9	2.2	20.5	36.0	13.3	12.1	5.6	0.5	100.0
	60대	2.7	4.9	2.6	12.9	31.6	17.4	20.0	7.8	0.2	100.0
	70대	1.3	4.2	1.9	7.3	23.6	15.7	37.5	7.8	0.7	100.0
	80대 이상	0.6	3.1	1.3	2.4	13.0	4.7	65.3	8.2	1.2	100.0
대 상 분 류	독립유공자	3.6	4.6	1.3	7.5	20.3	11.2	40.1	10.5	0.8	100.0
	국가유공자(본인)	2.8	2.9	2.7	12.7	26.3	14.7	31.8	5.6	0.6	100.0
	국가유공자(유족)	2.5	5.7	1.3	6.5	24.2	9.3	39.4	10.4	0.7	100.0
	고엽제	1.5	2.4	1.3	5.9	22.7	17.5	41.5	6.5	0.7	100.0
	참전유공자	0.6	2.5	2.4	4.8	20.0	12.8	50.4	5.4	1.1	100.0
	보훈보상대상자	9.0	2.9	2.6	17.7	31.1	13.2	19.7	3.6	0.3	100.0
	5·18민주유공자	4.4	2.4	2.3	13.0	26.3	15.5	27.7	6.8	1.7	100.0
	특수임무	4.3	2.3	0.9	14.0	26.8	17.3	26.3	7.2	0.9	100.0
	제대군인	5.3	2.5	1.7	25.2	37.1	12.9	10.1	4.7	0.3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4. 문화 및 여가 지출

보훈대상자의 월평균 오락 및 문화 지출은 2021년 약 6.6만 원으로 2018년 6.9만 원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유지되었지만 주된 여가활동으로서 휴식 활동의 비율이 증가한 팬데믹 기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월평균 7.7만 원으로 여성의 3.2만 원에 비해 4.5만 원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가 17.0만 원, 50대가 15.0만 원, 60대가 9.4만 원, 70대가 4.5만 원, 80대 이상이 1.7만 원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락 및 문화 지출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는 제대군인이 월평균 17.0만 원으로 가장 높고, 보훈보상대상자 8.8만 원, 국가유공자(본인)이 8.6만 원, 특수임무에 의한 보훈대상자 8.0만 원, 5·18민주유공자 7.3만 원 수준으로 높은 반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대상자는 각각 3.1만 원과 3.6만 원에 그쳤다.

〈표 5-10〉 보훈대상자의 오락문화 지출 비용

(단위: 만 원/월)

구분		한달 평균 오락·문화비 지출비
2018년		6.9
2021년		6.6
성별	남성	7.7
	여성	3.2
연령대별	40대 이하	17.0
	50대	15.0
	60대	9.4
	70대	4.5
	80대 이상	1.7
대상분류	독립유공자	5.5
	국가유공자(본인)	8.6
	국가유공자(유족)	5.0
	고엽제	3.6
	참전유공자	3.1
	보훈보상대상자	8.8
	5·18민주유공자	7.3
	특수임무	8.0
	제대군인	17.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3절 사회참여 및 의식

1. 사회적 지지체계

여기에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거나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등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 등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인하였다. 집안일 도움에 대해 지지체계가 없다는 응답이 2018년 14.3%에서 2021년 14.7%로 0.4%p 증가하였고, 돈을 빌려야 할 경우 지지체계가 없다는 응답이 같은 기간 35.3%에서 36.5%로 1.2%p,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지지체계가 없다는 응답이 18.0%에서 16.6%로 1.4%p 각각 감소하였다. 특히 경제적 곤란에 대한 지지체계 부재가 가장 높아,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집안일 도움과 돈을 빌려야 할 경우 지지체계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16.7%와 37.0%로 남성의 14.0%, 36.4%에 비해 다소 높고,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지지체계가 없다는 응답은 남성(16.9%)이 여성(15.6%)에 비해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는 집안일 도움에 대해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가 50대와 60대에서 각각 17.6%와 17.1%로 높고, 돈을 빌려야 하는 경제적 곤란에 대해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는 70대에서 39.7%로 가장 높다.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도 경제적 곤란에 대한 지지체계와 유사하게 70대에서 19.0%로 가장 높다.

보훈대상별로 집안일 도움에 대해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는 특수임무에 의한 보훈대상자가 22.2%, 5·18민주유공자가 20.0%, 보훈보상대상자가 18.4%로 높고, 제대군인은 10.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돈을 빌려야 하는 경제적 곤란에 대한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는 특수임무에 의한 보훈대상자 39.7%, 국가유공자(유족)이 38.9%, 참전유공자 38.7%, 5·18민주유공자 38.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대군인 중 경제적 곤란에 대한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률은 24.2%로 가장 낮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정서적 곤란에 대한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는 특수임무에 의한 보훈대상자가 23.4%, 5·18민주유공자가 22.0%의 순으로 높다. 집안일 도움이나 돈을 빌려야 할 경우와 유사하게 제대군인 중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는 11.8%로 가장 낮다.

〈표 5-11〉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단위: %)

구분		집안일 도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이야기 상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2018년		85.7	14.3	64.7	35.3	82.0	18.0
2021년		85.3	14.7	63.5	36.5	83.4	16.6
성별	남성	86.0	14.0	63.6	36.4	83.1	16.9
	여성	83.3	16.7	63.0	37.0	84.4	15.6
연령 대별	40대 이하	86.6	13.4	72.9	27.1	88.3	11.7
	50대	82.4	17.6	65.6	34.4	85.6	14.4
	60대	82.9	17.1	63.4	36.6	84.9	15.1
	70대	84.7	15.3	60.3	39.7	81.0	19.0
	80대 이상	88.2	11.8	64.1	35.9	83.5	16.5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86.9	13.1	63.9	36.1	83.8	16.2
	국가유공자(본인)	87.1	12.9	64.5	35.5	84.5	15.5
	국가유공자(유족)	82.4	17.6	61.1	38.9	83.4	16.6
	고엽제	85.6	14.4	59.0	41.0	81.7	18.3
	참전유공자	85.9	14.1	61.3	38.7	80.7	19.3
	보훈보상대상자	81.6	18.4	66.0	34.0	83.1	16.9
	5·18민주유공자	80.0	20.0	61.4	38.6	78.0	22.0
	특수임무	77.8	22.2	60.3	39.7	76.6	23.4
제대군인		89.9	10.1	75.8	24.2	88.2	11.8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단체 및 사회 참여 활동

친목 및 사교, 종교, 취미 및 레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유형의 단체 참여 경험률도 2018년 46.2%에서 2021년에 24.6%로 19.8%p 감소했다. 실내활동과 거리두기가 권장된 팬데믹 기간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참여 단체 중 친목 및 사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2018년 51.1%에서 2021년 39.4%로 11.7%p, 보훈 단체가 같은 기간 11.9%에서 8.6%로 3.3%p 감소하였다. 반면, 종교단체는 같은 기간 19.4%에서 25.7%로 6.3%p, 취미 및 레저 단체는 10.2%에서 16.4%로 6.2%p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했다기보다 단체 참여 경험률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 남성 보훈대상자 중 41.7%가 친목 및 사교 단체에 참여하였고, 종교 단체 20.9%, 취미 및 레저 단체 18.3%, 보훈 단체 9.4%의 순으로 참여하였다. 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 보훈대상자 중에서는 49.3%가 종교

단체에 참여하였고, 친목 및 사교 단체 참여가 2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 40대 이하 보훈대상자의 44.9%가 친목 및 사교 단체에 참여하였고, 취미 및 레저 단체 참여율은 32.2%, 종교 단체 참여율은 11.0%이다. 50대는 39.7%가 친목 및 사교 단체에 참여하였고, 취미 및 레저 단체 참여율은 28.4%, 종교 단체 참여율은 16.6%이다. 60대는 45.7%가 친목 및 사교 단체에 참여하였고, 종교 단체 참여율이 25.4%로 그 뒤를 이었다. 70대는 38.4%가 친목 및 사교 단체에 참여하였고, 종교 단체 참여율이 27.7%, 보훈단체 참여율 14.5%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 80대 이상 보훈대상자의 45.5%가 종교 단체에 참여하고 친목 및 사교 단체 참여율은 23.0%, 보훈단체 참여율은 15.3%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친목 및 사교 단체 참여율이 감소하고, 종교단체 및 보훈단체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훈 대상별로는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보훈단체 참여율이 각각 20.2%, 18.7%, 17.7%, 14.7%로 다른 보훈 유형에 비해 높다.

〈표 5-12〉 보훈대상자의 단체 참여 경험 및 참여 단체

(단위: %)

구분		단체참여 경험(있음)	친목및 사교	종교	취미 레저	시민 사회	학술	이익	정치	지역 사회	보훈	기타
2018년		46.2	51.1	19.4	10.2	2.9	0.7	0.2	0.1	3.5	11.9	0.1
2021년		26.4	39.4	25.7	16.4	3.9	1.2	0.9	0.3	3.5	8.6	0.1
성 별	남성	28.8	41.7	20.9	18.3	3.9	1.3	1.1	0.3	3.1	9.4	0.1
	여성	18.9	28.2	49.3	7.4	3.9	0.5	0.0	0.3	5.4	4.8	
연 령 대 별	40대 이하	34.0	44.9	11.0	32.2	4.4	2.8	2.9	0.8	0.7	0.4	
	50대	42.9	39.7	16.6	28.4	4.6	2.1	2.5	0.5	2.8	2.7	
	60대	38.9	45.7	25.4	15.4	5.3	1.2	0.3	0.3	2.8	3.6	
	70대	25.7	38.4	27.7	10.7	3.0	0.4	0.4	0.1	4.7	14.5	
	80대 이상	11.7	23.0	45.5	7.3	2.6	0.9			4.9	15.3	0.5
대 상 분 류	독립유공자	29.4	31.3	37.5	8.9	0.7	0.7			2.3	18.7	
	국가유공자(본인)	31.3	39.8	20.4	19.4	4.8	0.8	0.4	0.2	2.3	11.9	
	국가유공자(유족)	23.3	34.5	35.8	13.9	3.8	1.3	1.2	0.4	5.3	3.8	
	고엽제	25.5	40.8	19.2	10.4	4.6	1.0	0.4	0.4	3.0	20.2	
	참전유공자	18.2	40.5	25.3	9.9	3.0	0.3	0.8		5.1	14.7	0.4
	보훈보상대상자	28.3	45.3	21.7	17.4	3.6	1.9	5.7	0.9	0.9	2.7	
	5·18민주유공자	39.5	35.3	21.2	7.9	8.2	2.6	3.2	3.2	0.8	17.7	
	특수임무	31.2	32.1	22.1	23.9	7.2		3.1	1.4		10.2	
	제대군인	42.6	46.8	18.9	24.6	3.4	2.5	1.3	0.2	1.4	1.0	

주: 공란은 응답값이 없는 경우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자원봉사는 이타적 사회참여의 한 유형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있는 보훈대상자는 2021년 8.7%로 2018년 13.8%에 비해 감소하였다. 향후 참여의사도 2018년 20.3%에서 2021년 18.6%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 또한 실내활동과 거리두기가 권장된 팬데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참여의사에 비해 실제 참여경험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보훈대상자의 9.5%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반면, 여성은 6.1%로 남성에 비해 다소 낮다. 향후 참여의사도 남성 20.6%에 비해 여성 12.4%로 남성이 높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보훈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률이 16.8%로 가장 높고, 60대 14.9%, 40대 이하 10.4%, 70대 8.3%의 순이다. 향후 참여의사 또한 50대가 가장 높아 38.1%인데,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은 실제 참여 경험의 응답 경향과 달리 40대 이하(32.2%)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5·18민주유공자(19.1%)로 나타났지만 향후 참여의사는 30.5% 수준으로, 실제 참여율이 14.5%인 제대군인의 향후 참여의사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3〉 보훈대상자의 자원봉사 경험 및 참여의사

(단위: %)

구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향후 참여의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2018년		13.8	86.2	20.3	79.7
2021년		8.7	91.3	18.6	81.4
성별	남성	9.5	90.5	20.6	79.4
	여성	6.1	93.9	12.4	87.6
연령 대별	40대 이하	10.4	89.6	32.2	67.8
	50대	16.8	83.2	38.1	61.9
	60대	14.9	85.1	29.2	70.8
	70대	8.3	91.7	16.9	83.1
	80대 이상	2.2	97.8	3.6	96.4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7.9	92.1	13.9	86.1
	국가유공자(본인)	10.7	89.3	23.2	76.8
	국가유공자(유족)	7.3	92.7	15.5	84.5
	고엽제	7.0	93.0	14.2	85.8
	참전유공자	5.8	94.2	11.0	89.0
	보훈보상대상자	12.4	87.6	27.7	72.3
	5·18민주유공자	19.1	80.9	30.5	69.5
	특수임무	11.8	88.2	23.8	76.2
	제대군인	14.5	85.5	36.4	63.6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사회 인식

보훈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계층 의식은 2021년에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률이 6.6%, 중간층이라는 응답률이 56.0%, 하층이라는 응답률이 37.4%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2018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률은 2.7%에서 3.9%p, 중간층의 응답률은 44.4%에서 11.6%p 증가했고, 하층의 응답률은 52.8%에서 15.4%p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계층 의식을 살펴보면,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성은 35.4%, 여성은 44.0%이고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남성이 7.2%, 여성이 4.5%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80대 이상이 45.0%로 가장 높고, 70대 39.3%, 60대 31.6%의 순이다. 보훈대상별로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5·18민주유공자가 49.4%로 가장 높고, 특수임무에 의한 보훈대상자가 48.6%, 참전유공자가 44.1%,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43.1%,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42.2% 순으로 높다.

〈표 5-14〉 보훈대상자의 계층 의식: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구분		상		중		하	
		상	하	상	하	상	하
2018년		1.1	1.6	16.8	27.6	27.5	25.3
2021년		0.9	5.7	22.4	33.6	26.0	11.4
성별	남성	1.1	6.1	24.1	33.4	24.9	10.5
	여성	0.4	4.1	17.2	34.3	29.4	14.6
연령 대별	40대 이하	0.6	6.9	32.6	32.3	18.3	9.3
	50대	1.5	8.7	32.3	30.5	19.2	7.9
	60대	1.5	7.6	26.9	32.3	22.6	9.1
	70대	0.8	5.1	20.0	34.8	27.5	11.8
	80대 이상	0.6	3.9	16.4	34.1	30.7	14.3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0.9	7.7	26.4	29.3	24.4	11.2
	국가유공자(본인)	1.0	6.4	28.1	35.4	21.8	7.4
	국가유공자(유족)	0.8	4.9	18.4	32.8	29.6	13.5
	고엽제	0.2	3.4	19.8	34.4	27.8	14.3
	참전유공자	0.8	4.3	16.9	33.9	29.9	14.2
	보훈보상대상자	1.3	4.3	23.4	33.8	23.5	13.7
	5·18민주유공자	2.3	4.4	13.8	30.0	30.2	19.2
	특수임무	1.3	4.3	13.4	32.4	31.1	17.5
제대군인		1.5	10.5	35.9	31.7	14.3	6.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대리지표이다. 보훈대상자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17.8%에서 2021년 17.1%로 0.7%p 감소하고, 모르겠다는 응답률도 같은 기간 22.0%에서 19.1%로 2.9%p 감소하여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60.2%에서 2021년 63.8%로 3.6%p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신뢰 수준을 나누어 보면,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여성이 64.3%, 남성이 63.7%로 0.6%p 차이를 보이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여성이 13.9%, 남성이 18.1%로 4.2%p 차이를 보여 여성의 사회적 불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60대 보훈대상자 중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67.1%로 가장 높고, 40대 이하가 58.3%로 가장 낮아 나이에 따른 비례 관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보훈대상별로는 독립유공자의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66.9%로 가장 높고 독립유공자 본인이 64.1%, 유족이 64.0%, 참전유공자 63.8%,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는 63.7%, 제대군인은 63.6% 수준으로 높은 반면, 특수임무에 의한 보훈대상자는 51.7%로 가장 낮다.

〈표 5-15〉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신뢰

(단위: %)

구분		신뢰함	신뢰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2018년		60.2	17.8	22.0	100.0
2021년		63.8	17.1	19.1	100.0
성별	남성	63.7	18.1	18.2	100.0
	여성	64.3	13.9	21.7	100.0
연령대별	40대 이하	58.3	19.1	22.6	100.0
	50대	62.7	19.9	17.4	100.0
	60대	67.1	18.1	14.7	100.0
	70대	64.7	18.7	16.6	100.0
	80대 이상	62.7	12.6	24.7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66.9	14.7	18.3	100.0
	국가유공자(본인)	64.1	17.1	18.7	100.0
	국가유공자(유족)	64.0	15.8	20.2	100.0
	고엽제	63.7	18.8	17.5	100.0
	참전유공자	63.8	17.6	18.6	100.0
	보훈보상대상자	56.4	24.1	19.5	100.0
	5·18민주유공자	59.3	19.9	20.8	100.0
	특수임무	51.7	20.0	28.3	100.0
	제대군인	63.6	18.9	17.5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가족관계

1.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2018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경우와 '매우 만족'하는 경우를 합산하면 3분의 2에 조금 못 미치는 64.7%의 대상자가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40대 이하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3.9점인 반면, 70대 이상은 3.6점이었다. 보훈대상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대군인이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 집단이 3.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5-16〉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점수
2018년		2.4	5.8	28.4	48.2	15.1	3.7
2021년		1.9	5.6	27.7	50.6	14.1	3.7
성별	남성	2.0	5.7	27.2	50.5	14.6	3.7
	여성	1.5	5.5	29.3	51.0	12.6	3.7
연령 대별	40대 이하	1.6	3.6	19.8	51.3	23.7	3.9
	50대	1.7	4.4	22.3	51.2	20.4	3.8
	60대	1.9	4.4	25.7	51.9	16.2	3.8
	70대	2.3	6.9	29.5	49.8	11.6	3.6
	80대 이상	1.6	5.7	31.0	50.5	11.2	3.6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1	3.4	29.5	48.4	17.6	3.8
	국가유공자(본인)	1.1	5.0	26.2	52.2	15.5	3.8
	국가유공자(유족)	1.9	6.1	28.6	50.9	12.6	3.7
	고엽제	3.4	5.5	31.7	47.8	11.7	3.6
	참전유공자	2.6	6.9	32.0	48.4	10.1	3.6
	보훈보상대상자	3.1	3.1	25.1	49.1	19.5	3.8
	5·18민주유공자	2.5	8.4	32.2	48.8	8.1	3.5
	특수임무	5.9	7.8	31.3	38.6	16.4	3.5
	제대군인	1.6	3.3	16.6	52.8	25.7	4.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가족도움

가족의 지원 또는 도움을 받는 양상은 응답자의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자녀/부모/형제의 존재와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조사하여 1) 동거자녀, 2) 비동거 자녀, 3) 배우자, 4) 본인(배우자) 부모, 5) 형제 등으로 응답자의 가족형태를 분류하였다. 응답자의 약 3분의 1에 조금 못미치는 31.2%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생활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76.3%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3.1%였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동거자녀, 배우자, 본인(배우자) 부모의 존재 비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형제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가족 도움의 형태는 1) 정서적 지원(고민상담), 2) 도구적 지원(청소, 식사, 세탁), 3) 간병, 수발, 병원동행, 4) 현금지원, 5) 현물지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라 도움의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 도구적 지원, 간병, 병원동행 등의 도움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모든 가족형태 중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청소, 식사, 세탁 등의 도구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88.0%에 달했다. 반면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각각 60.0%, 26.9%였다.

한편 경제적 도움의 경우에는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비율이 현금과 현물지원 모두 가장 높았다. 부모를 직접 부양하지 못하는 비동거 자녀는 경제적 지원의 형태를 통해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형태별로 좀더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동거자녀로부터 주로 도구적 도움과 정서적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자녀로부터는 정서적 도움과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본인(배우자)의 부모와 형제로부터는 주로 정서적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18년 조사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가족형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78.5%인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해당 비율은 14.1%에 불과하였다.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높고, 보훈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유족)과 같이 배우자 없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도 남성 응답자는 29.2%인 반면, 여성 응답자는 37.7%로 여성 응답자가 더 높았다. 남성 응답자들은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의 경우에 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성 응답자가 여성에 비해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간병, 수발 도움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청소, 식사 등의 도구적 도움의 경우 남성들이 여성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86.8%에 달하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배우자로부터 도구적 도움을 받는 비율이 73.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적 도움의 경우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원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함께 생활하는 자녀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성들이 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76.7%였다. 반면에 남성들은 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이 50.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여성들이 사별하여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도움의 유형과 정도가 응답자의 가족형태와 긴밀하게 연관됨을 보여준다.

〈표 5-17〉 가족유형과 성별 가족도움 여부

(단위: %)

구분		해당자 존재 여부		해당자가 존재하는 경우				
		있다	없다	고민상담 (정서적도움)	청소, 식사, 세탁 (도구적도움)	간병, 수발, 병 원동행 도움	경제적 도움	
2018년	동거자녀	33.2	66.8	60.1	62.0	50.9	43.8	42.1
	비동거 자녀	76.5	23.5	55.6	34.1	37.9	47.1	44.6
	배우자	64.8	35.2	85.3	88.6	79.9	41.4	42.1
	본인(배우자) 부모	18.8	81.2	40.4	22.4	15.8	14.7	17.5
	형제	71.6	28.4	32.2	7.7	7.3	5.4	9.5
2021년	동거자녀	31.2	68.8	57.8	60.0	49.0	41.5	41.2
	비동거 자녀	76.3	23.7	53.7	26.9	31.0	44.7	44.6
	배우자	63.1	36.9	86.1	88.0	76.1	41.7	40.5
	본인(배우자) 부모	17.9	82.1	39.1	19.8	13.7	12.9	15.4
	형제	74.0	26.0	29.3	5.7	4.8	4.1	7.0
남성	동거자녀	29.2	70.8	50.1	51.6	40.0	34.3	34.3
	비동거 자녀	74.4	25.6	49.2	23.4	26.8	41.9	41.8
	배우자	78.5	21.5	86.8	89.8	77.3	40.4	39.6
	본인(배우자) 부모	21.1	78.9	39.4	20.8	13.9	13.0	15.5
	형제	75.9	24.1	27.7	5.3	4.6	4.0	6.8

구분		해당자 존재 여부		해당자가 존재하는 경우				
		있다	없다	고민상담 (정서적도움)	청소, 식사, 세탁 (도구적도움)	간병, 수발, 병 원동행 도움	경제적 도움	
여성	동거자녀	37.7	62.3	76.7	80.7	71.1	59.0	58.4
	비동거 자녀	82.4	17.6	66.8	36.9	43.1	52.5	52.6
	배우자	14.1	85.9	73.5	55.7	54.8	64.9	56.8
	본인(배우자) 부모	7.9	92.1	35.9	11.6	12.2	11.5	14.4
	형제	67.9	32.1	35.1	7.2	5.5	4.2	7.5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도움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연령에 따라 가족구성원 유무와 동거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배우자)의 부모와 형제가 존재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동거자녀가 있는 비율은 50대가 57.5%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응답자가 20.3%로 가장 낮았다. 50대에 자녀를 결혼시킨 후 60대 이후에는 부부끼리 또는 혼자 생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대에 따라 가족구성원 유무와 동거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원형태와 정도에도 차이를 낳는다.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의 경우, 정서적 도움과 도구적 도움은 40대 이하에서 각각 88.5%, 90.3%로 가장 높았다. 간병, 수발 등의 도움은 80대가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도움의 경우에도 40대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 각 연령대 별로 생애주기상 직면하는 역할과 건강상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80대 이상에서는 동거자녀에게 각종 도움을 받는 비율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동거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도움을 전담하는 것이다.

〈표 5-18〉 연령별 가족도움 여부

(단위: %)

구분		해당자 존재 여부		해당자가 존재하는 경우				
		있다	없다	고민상담 (정서적도움)	청소,식사,세탁 (도구적도움)	간병,수발,병 원동행 도움	경제적 도움 현금지원	현물지원
40대 이하	동거자녀	52.0	48.0	32.1	27.7	13.1	4.6	6.0
	비동거 자녀	5.5	94.5	40.5	25.0	8.5	11.1	13.4
	배우자	60.8	39.2	88.5	90.3	70.1	54.9	50.2
	본인(배우자) 부모	85.9	14.1	55.5	32.5	23.5	22.3	24.4
	형제	83.8	16.2	47.6	12.8	9.4	8.7	11.8
50대	동거자녀	57.5	42.5	51.2	49.5	27.5	19.8	21.8
	비동거 자녀	50.1	49.9	44.1	16.4	12.2	17.0	18.0
	배우자	78.4	21.6	83.2	89.0	69.7	48.1	43.6
	본인(배우자) 부모	53.7	46.3	30.8	11.0	6.6	5.6	9.0
	형제	85.0	15.0	36.2	6.1	5.3	4.1	7.8
60대	동거자녀	30.4	69.6	54.8	55.3	39.4	40.4	41.0
	비동거 자녀	78.2	21.8	52.2	17.9	18.6	34.2	33.5
	배우자	70.6	29.4	87.2	87.4	71.5	46.0	45.9
	본인(배우자) 부모	21.5	78.5	23.0	8.5	4.8	4.7	7.5
	형제	85.7	14.3	32.6	5.9	5.3	3.8	7.0
70대	동거자녀	20.3	79.7	53.4	60.3	51.7	49.0	46.4
	비동거 자녀	89.2	10.8	49.8	21.8	27.1	44.3	44.0
	배우자	72.7	27.3	86.9	89.2	80.2	39.2	38.9
	본인(배우자) 부모	4.4	95.6	13.9	4.1	3.1	2.9	4.1
	형제	77.5	22.5	25.3	4.4	3.8	3.6	6.8
80대 이상	동거자녀	32.6	67.4	82.2	86.8	84.5	68.0	67.4
	비동거 자녀	89.7	10.3	62.2	41.1	47.4	56.4	56.7
	배우자	40.2	59.8	82.9	83.6	77.3	32.8	31.7
	본인(배우자) 부모	0.0	100.0	0.0	0.0	0.0	0.0	0.0
	형제	54.3	45.7	20.8	4.1	3.6	2.7	4.3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별로 가족도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보훈대상자별로 먼저 가족구성원 형태에 차이를 보였다. 동거자녀가 있는 비율은 5·18민주유공자가 48.4%로 가장 높았다. 비동거자녀가 있는 비율은 참전유공자가 90.3%로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84.8%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비율은 제대군인 집단이 64.6%로 가장 높았다. 형제가 있는 비율은 보훈보상대상자가 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구성원 유무는 보훈대상자의 연령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각 영역별 가족도움에서 정서적, 도구적, 간병, 수발 도움은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동거자녀, 비동거 자녀의 순이었다. 각 영역별로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자 집단을 살펴보면, 정서적 도움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비율이 89.8%로 가장 높았다. 도구적 도움은 제대군인이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91.7%로 가장 높았다. 간병, 병원동행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8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제적 도움에서 현금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동거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50.7%로 가장 높았다. 현물지원의 경우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동거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5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5-19〉 대상자별 가족도움 여부

(단위: %)

구분		해당자 존재 여부		해당자가 존재하는 경우				
		있다	없다	고민상담 (정서적도움)	청소·식사·세탁 (도구적도움)	간병, 수발, 병 원동행 도움	경제적 도움	
독립 유공자	동거자녀	28.6	71.4	66.9	69.1	64.7	47.3	49.8
	비동거 자녀	83.1	16.9	63.0	33.7	44.4	44.4	48.7
	배우자	61.9	38.1	86.0	85.7	79.1	39.5	36.6
	본인(배우자) 부모	6.4	93.6	30.6	13.8	7.0	0.0	6.7
	형제	69.5	30.5	24.0	5.5	5.5	4.1	6.7
국가 유공자 (본인)	동거자녀	29.7	70.3	53.4	52.7	39.4	30.4	31.7
	비동거 자녀	74.2	25.8	51.6	23.4	25.8	38.4	38.7
	배우자	83.1	16.9	87.4	90.0	78.6	37.6	37.0
	본인(배우자) 부모	25.1	74.9	37.2	19.7	14.7	10.8	13.2
	형제	78.7	21.3	29.4	5.7	5.1	3.8	5.9

구분		해당자 존재 여부		해당자가 존재하는 경우				
		있다	없다	고민상담 (정서적도움)	청소·식사·세탁 (도구적도움)	간병,수발,병 원동행 도움	경제적 도움	
							현금지원	현물지원
국가 유공자 (유족)	동거자녀	36.2	63.8	66.1	69.6	59.4	50.7	50.2
	비동거 자녀	78.6	21.4	59.4	30.8	36.0	47.2	46.9
	배우자	34.7	65.3	81.9	80.7	69.2	49.2	47.0
	본인(배우자) 부모	9.7	90.3	25.8	8.7	5.8	9.1	9.8
	형제	70.4	29.6	31.0	6.5	5.1	4.2	6.9
고엽제	동거자녀	18.1	81.9	56.6	67.3	59.2	59.5	57.6
	비동거 자녀	90.4	9.6	47.1	22.2	28.2	47.2	44.9
	배우자	84.8	15.2	89.8	91.5	82.5	41.7	41.5
	본인(배우자) 부모	5.0	95.0	24.0	6.3	4.3	8.7	2.2
	형제	79.5	20.5	25.0	4.2	3.6	4.4	8.5
참전 유공자	동거자녀	21.7	78.3	62.0	65.2	63.6	57.7	55.0
	비동거 자녀	90.3	9.7	51.3	27.5	32.7	50.8	50.3
	배우자	73.5	26.5	85.6	88.2	79.4	38.8	38.2
	본인(배우자) 부모	2.8	97.2	10.1	3.3	3.3	4.9	8.4
	형제	68.4	31.6	22.0	3.4	3.4	3.3	6.4
보훈보상 대상자	동거자녀	35.5	64.5	38.2	43.7	24.9	17.1	16.4
	비동거 자녀	37.3	62.7	42.8	19.7	21.1	28.0	30.1
	배우자	51.8	48.2	83.4	86.9	71.1	48.8	45.4
	본인(배우자) 부모	58.7	41.3	52.7	38.9	22.5	26.2	29.0
	형제	83.9	16.1	38.7	11.8	8.9	7.5	10.8
5·18민주 유공자	동거자녀	48.4	51.6	48.0	44.0	26.8	26.4	25.7
	비동거 자녀	49.7	50.3	50.1	22.9	26.2	38.3	41.5
	배우자	59.7	40.3	84.0	83.1	69.9	51.5	44.9
	본인(배우자) 부모	44.5	55.5	36.1	22.1	12.7	9.3	14.8
	형제	78.5	21.5	33.6	9.4	5.3	7.5	8.9
특수임무	동거자녀	41.7	58.3	50.7	47.7	33.6	39.3	36.9
	비동거 자녀	64.9	35.1	42.8	14.0	14.1	37.3	32.2
	배우자	66.3	33.7	84.6	85.7	72.3	51.7	45.8
	본인(배우자) 부모	29.5	70.5	29.6	14.5	8.8	9.8	11.6
	형제	83.6	16.4	26.2	7.1	6.3	7.1	11.8
제대군인	동거자녀	45.4	54.6	40.1	40.7	21.1	15.3	16.5
	비동거 자녀	39.0	61.0	46.1	18.8	15.5	24.0	26.5
	배우자	74.6	25.4	88.4	91.7	69.3	47.0	44.6
	본인(배우자) 부모	64.6	35.4	50.2	26.2	17.8	17.0	20.4
	형제	83.8	16.2	39.9	7.6	5.9	5.4	9.4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친인척과의 연락과 만남

친인척과의 연락빈도는 만남빈도에 비해 높았다. 한 달에 1-2회 연락한다는 비율이 23.6%로 가장 높았으며, 1년에 1-2회 정도가 21.1%로 높게 나타났다.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비율은 14.7%였다. 친인척과의 연락빈도는 201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친인척과의 관계망이 약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류활동이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 연령대, 대상자 집단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연락빈도가 남성에 비해 높았다. 일주일에 4회 이상 매우 빈번하게 연락하는 비율은 남성이 5.0%인 반면, 여성은 8.3%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연락빈도가 높았다. 일주일에 1회 정도 연락하는 빈도는 40대 이하는 17.7%로 80대 이상 7.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대상자별로는 일주일에 4회 이상 매우 빈번한 연락빈도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주일에 1회 정도 연락하는 비율은 제대군인이 15.5%로 가장 높았다.

〈표 5-20〉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연락 빈도

(단위: %)

구분		일주일에 4회 이상	일주일에 2-3회 정도	일주일에 1회 정도	한달에 1-2회	3개월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왕래가 전혀 없었음
2018년		6.4	6.5	10.4	25.1	18.2	21.8	11.6
2021년		5.8	7.8	9.4	23.6	17.5	21.1	14.7
성별	남성	5.0	7.1	9.4	24.4	18.9	21.5	13.6
	여성	8.3	10.0	9.3	21.0	13.2	20.0	18.3
연령 대별	40대 이하	10.1	12.1	17.7	26.0	16.6	12.5	5.0
	50대	5.4	9.6	12.1	28.4	21.9	15.9	6.8
	60대	5.3	9.1	10.8	27.3	20.2	19.9	7.5
	70대	5.2	6.5	7.6	25.6	17.7	23.7	13.8
	80대 이상	5.6	6.8	7.3	16.0	14.7	22.8	26.8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4	7.1	8.8	20.3	18.8	22.4	17.3
	국가유공자(본인)	5.2	7.2	10.7	25.1	20.3	20.2	11.3
	국가유공자(유족)	6.4	8.7	8.6	22.5	15.6	21.4	16.7
	고엽제	3.4	5.6	8.6	27.6	15.6	25.1	14.2
	참전유공자	4.9	6.0	6.3	21.2	16.9	24.3	20.4
	보훈보상대상자	10.2	10.3	14.0	22.7	17.3	18.2	7.4
	5·18민주유공자	6.2	7.4	12.4	27.1	18.9	18.5	9.4
	특수임무	5.7	8.6	11.2	27.1	18.3	14.9	14.1
	제대군인	8.1	11.3	15.5	27.4	19.4	13.9	4.4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전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전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만남 빈도는 1년에 1-2회 정도가 3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개월에 1-2회 정도가 17.0%로 높게 나타났다. 친인척과의 만남 빈도는 2018년 실태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왕래가 전혀 없었다는 비율도 22.5%로 2018년 14.8%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인척 간의 관계망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해 친인척 간의 교류활동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친인척과의 만남빈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친인척과 만나는 빈도가 다소 높았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회 정도 만나는 비율은 남성이 1.9%인 반면 여성은 3.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친인척과의 만남 빈도가 높았다. 한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비율의 경우 80대 이상은 10.1%인 반면, 40대 이하의 경우 22.7%로 거의 두 배 이상 높았다. 보훈대상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한달에 1-2회 만나는 비율은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이 각각 20.9%, 17.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집단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표 5-21〉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만남 빈도

(단위: %)

구분		일주일에 4회 이상	일주일에 2-3회 정도	일주일에 1회 정도	한달에 1-2회	3개월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왕래가 전혀 없었음
2018년		2.8	2.2	4.8	14.8	18.6	41.9	14.8
2021년		2.1	2.3	3.5	13.6	17.0	39.0	22.5
성별	남성	1.9	1.9	3.4	13.6	18.0	40.5	20.9
	여성	2.9	3.7	4.0	13.7	14.1	34.1	27.6
연령 대별	40대 이하	4.4	3.0	6.6	22.7	27.1	28.4	7.8
	50대	1.3	2.4	4.1	15.3	27.6	39.7	9.6
	60대	2.1	2.1	4.0	15.3	21.0	41.8	13.7
	70대	1.6	2.0	2.7	12.5	15.1	43.4	22.7
	80대 이상	2.3	2.6	3.1	10.1	10.5	34.3	37.1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4	1.1	4.6	11.5	17.1	38.5	25.8
	국가유공자(본인)	1.8	2.3	4.2	14.3	17.9	41.1	18.5
	국가유공자(유족)	2.3	3.0	3.1	13.8	15.9	36.9	24.9
	고엽제	1.3	0.8	2.7	12.1	14.8	43.6	24.8
	참전유공자	1.9	1.6	2.3	10.7	14.0	39.9	29.6
	보훈보상대상자	3.5	2.3	6.6	20.9	19.2	36.4	11.0
	5·18민주유공자	2.2	1.9	4.3	14.9	19.0	40.9	16.9
	특수임무	1.9	3.1	5.3	12.5	19.2	38.4	19.7
	제대군인	3.3	2.3	5.7	17.9	26.3	36.5	7.9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5절 보건의료

1. 의료이용자격 및 전반적 건강 상태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 국가 차원의 의료제도는 단일자격을 갖도록 설계되지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1개 이상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보훈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과 보훈의료 자격을 함께 갖고 있으며 일부 보훈대상자 중 자격,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과 보훈 의료 자격을 갖게 된다.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범위에 해당하는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있으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가 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가족 중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의료급여 자격을 함께 갖게 되는데 이때 보훈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 구성²¹⁾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80~100%로 일반국민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는 급여 혜택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입원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만을 본인 부담하도록 하며, 외래 진료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²²⁾만을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입원 시 본인 부담은 없고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1,500~2,500원²³⁾정도의 본인부담을 하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국비진료 대상자는 지정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하고 있으며,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액의 약 30~90%까지를 감면하고 있다.

21) 일반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 3급 이내 (1~3)의 상이등급자, 4급 이내(1~4)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취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인정

22)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정액, 정률로 차등 적용

23) 의료급여 종별, 선택 의료급여 대상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의료보장 자격에 있어 1개 이상의 자격을 갖는 보훈대상자가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이 53.5%로 가장 높았고, 보훈대상자 국비진료(24.9%), 보훈대상자 감면진료(16.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감소한 반면, 보훈대상자 국비 또는 감면진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70대의 경우, 건강보험보다 보훈대상자 국비 또는 감면진료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대상별로는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국비 또는 감면진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수임무와 제대군인은 국민건강보험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제도(1순위)

(단위: %)

구분		보훈대상자 국비진료	보훈대상자 감면진료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민건강보험 (직장,지역)	기타	계
2021년		24.9	16.6	3.6	0.8	53.5	0.6	100.0
성별	남성	29.1	16.5	3.1	0.7	49.9	0.7	100.0
	여성	11.5	17.0	5.1	1.0	64.9	0.4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13.1	6.1	1.2	0.5	78.0	1.1	100.0
	50대	14.5	6.5	3.4	0.8	73.8	1.1	100.0
	60대	15.0	11.9	3.2	1.0	68.7	0.2	100.0
	70대	35.0	19.5	3.5	0.7	40.7	0.6	100.0
	80대 이상	23.6	22.3	4.9	0.8	47.7	0.6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6.1	20.5	3.9	0.9	48.3	0.2	100.0
	국가유공자(본인)	49.8	14.3	1.9	0.3	33.1	0.6	100.0
	국가유공자(유족)	10.0	15.5	4.8	1.0	68.3	0.4	100.0
	고엽제	61.8	19.1	2.2	0.6	15.7	0.7	100.0
	참전유공자	22.0	25.9	4.7	0.9	46.0	0.5	100.0
	보훈보상대상자	17.1	17.5	2.6	0.3	62.1	0.5	100.0
	5·18민주유공자	37.7	10.2	14.0	0.7	37.5	0.0	100.0
	특수임무	5.9	9.7	5.0	0.4	76.6	2.4	100.0
	제대군인	2.9	3.8	1.1	0.9	89.6	1.7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2018년에 비해 긍정적 평가가 다소 높아졌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매우 나쁘다+나쁜 편이다)는 응답은 45.2%로 2018년 46.4%보다 1.2%p 감소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는 다소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였다. 특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매우 나쁘다+나쁜 편이다) 응답은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63.7%로 가장 높았고, 참전유공자가 51.3%, 국가유공자(유족) 47.9%, 독립유공자 4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3〉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2018년		10.9	35.5	32.6	17.9	3.1
2021년		11.3	33.9	32.5	20.2	2.0
성별	남성	10.2	31.9	33.1	22.4	2.4
	여성	14.9	40.2	30.6	13.4	0.8
연령 대별	40대 이하	4.3	14.4	32.6	38.5	10.2
	50대	4.2	15.6	39.2	37.3	3.7
	60대	5.7	22.2	38.9	30.6	2.6
	70대	10.5	37.3	35.2	16.3	0.7
	80대 이상	20.9	49.0	22.4	7.5	0.2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2.4	34.8	34.9	17.9	0.0
	국가유공자(본인)	10.3	35.3	32.9	19.7	1.8
	국가유공자(유족)	12.4	35.5	33.0	18.0	1.1
	고엽제	14.6	49.1	27.3	9.0	0.0
	참전유공자	13.6	37.7	33.3	14.7	0.7
	보훈보상대상자	8.6	33.5	36.4	20.2	1.3
	5·18민주유공자	9.0	35.8	34.6	19.2	1.4
	특수임무	7.7	22.8	42.4	23.3	3.8
	제대군인	3.7	9.8	29.4	47.2	9.9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은 보훈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2018년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과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걷는 데 지장이 있다는 응답은 31.2%로 4.9%p 감소, 목욕을 혼자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있다는 응답은 17.2%로 1.8%p 감소, 일상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응답은 24.3%로 5.6%p 감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는 응답은 41.8%로 7.5%p 감소, 마지막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는 응답은 22.8%로 2.8%p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주관적 전반적 건강 상태와 항목별 건강 상태 결과를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모든 항목에서 건강 상태가 다소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5-24〉 보훈대상자의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걷는데 지장이 있다	목욕을 혼자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있다	일상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평균
2018년		36.1	19.0	29.9	49.3	25.6	32.0
2021년		31.2	17.2	24.3	41.8	22.8	27.5
성별	남성	27.6	14.7	21.3	38.3	20.2	24.4
	여성	42.5	25.3	33.9	53.1	30.8	37.1
연령대별	40대 이하	10.7	2.7	7.5	22.2	10.0	10.6
	50대	11.7	3.9	7.4	23.0	12.9	11.8
	60대	12.6	5.7	8.8	25.5	14.8	13.5
	70대	28.2	12.5	20.7	43.1	23.5	25.6
	80대 이상	60.8	40.9	50.9	63.2	34.4	50.0
대상분류	독립유공자	36.2	23.8	30.4	43.6	29.7	32.7
	국가유공자(본인)	31.8	16.0	24.4	44.8	21.6	27.7
	국가유공자(유족)	33.6	19.0	26.1	44.2	25.5	29.7
	고엽제	36.0	17.9	29.0	54.7	30.4	33.6
	참전유공자	37.2	22.5	29.4	45.5	24.9	31.9
	보훈보상대상자	28.0	8.6	22.0	45.0	22.0	25.1
	5·18민주유공자	29.4	13.8	22.6	48.6	36.2	30.1
	특수임무	20.9	7.2	14.2	34.4	22.0	19.7
	제대군인	5.4	2.4	4.2	11.8	6.7	6.1

주: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지난 1년 동안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보훈대상자 비율은 86.0%로 2018년 95.0%에 비해 9.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고혈압(22.3%) > 관절·척추 등 근골격계질환(19.1%) > 당뇨병(11.6%) > 심혈관계질환(9.0%)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이 25.4%로 가장 많아 전체 대상자의 주요 질환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성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 이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혈압 유병율이 증가한 반면, 근골격계질환은 감소하였다. 특히 치매는 80대 이상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5〉 지난 1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진료 받은 주요 질환

(단위: %)

구분		진료 여부 (있음)	치매	당 노 병	고 혈 압	심혈관 계질환 (협심증 등)	뇌혈관 계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	비뇨기계 질환 (전립선 비대증 등)	근골격 계질환 (관절, 척 추 등)	안과 질환 (백내장 등)	악성 종양 (암 등)	치과 질환 (치주염 등)	기타
2018년		95.0	2.7	10.0	21.6	8.0	4.7	5.4	21.0	3.7	2.7	5.6	9.4
2021년		86.0	3.3	11.6	22.3	9.0	4.6	7.3	19.1	6.7	2.4	8.8	5.0
성별	남성	84.6	2.4	11.7	21.9	9.2	4.9	9.2	17.0	6.6	2.6	9.4	5.1
	여성	90.6	5.9	11.2	23.6	8.3	3.9	1.4	25.4	7.1	1.5	6.8	4.8
연령 대별	40대 이하	55.3	0.8	5.7	11.1	3.4	1.3	2.2	38.3	5.8	0.6	17.2	13.6
	50대	72.0	0.2	12.1	21.1	6.3	2.7	3.8	24.9	3.8	2.0	14.3	8.9
	60대	82.9	0.7	11.2	23.1	7.5	3.0	6.1	19.9	6.8	2.8	12.7	6.3
	70대	92.2	1.5	12.7	22.8	10.1	5.3	8.6	16.3	7.0	2.9	8.3	4.5
	80대 이상	94.4	7.7	10.9	23.0	9.1	5.1	7.0	19.4	6.9	1.7	5.7	3.5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90.8	4.0	12.5	23.6	7.5	5.6	7.0	18.1	7.8	3.5	7.9	2.5
	국가유공자(본인)	89.9	2.1	12.0	19.5	10.8	4.5	9.5	17.1	7.0	3.1	9.6	4.9
	국가유공자(유족)	87.0	4.4	12.0	24.2	8.5	3.7	3.0	23.1	6.6	1.9	7.7	4.9
	고엽제	95.9	1.9	11.3	23.0	8.6	8.0	9.8	14.0	6.8	4.6	7.8	4.4
	참전유공자	91.3	4.0	11.1	23.2	8.5	5.6	10.1	16.5	6.7	1.7	7.8	4.9
	보훈보상대상자	79.1	1.7	5.1	14.1	6.3	3.9	6.3	33.7	6.1	2.8	10.9	9.2
	5·18민주유공자	82.8	1.0	11.8	18.4	9.8	4.1	6.4	21.8	6.3	0.9	11.7	7.8
	특수임무	77.1	1.5	10.4	23.4	6.9	1.8	3.4	27.9	5.6	0.4	12.4	6.4
	제대군인	57.4	1.0	10.3	21.7	5.9	2.4	5.0	21.3	5.9	2.1	16.9	7.5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은 앞 문항의 주요 질환을 재분석하여 복합질환자 비중을 살펴보았다. 지난 1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보훈대상자는 평균 1.8개의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보훈대상자 2명 중 1명은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질환 수, 2개 이상의 복합질환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상별로는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평균 질환 수, 복합질환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복합질환 보훈대상자 현황

(단위: %)

구분		평균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2021년		1.8	14.0	35.8	23.5	14.7	6.6	5.4
성별	남성	1.8	15.4	35.2	22.9	14.3	6.3	5.9
	여성	1.9	9.4	37.7	25.4	16.0	7.5	4.0
연령 대별	40대 이하	0.7	44.7	41.6	9.8	2.4	1.5	0.2
	50대	1.1	28.1	43.5	19.6	5.3	2.4	1.2
	60대	1.5	17.1	41.8	23.2	11.4	4.3	2.3
	70대	2.1	7.8	32.8	25.2	17.9	8.6	7.7
	80대 이상	2.1	5.6	32.0	27.4	19.5	8.3	7.2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0	9.2	33.5	28.7	15.4	6.3	6.9
	국가유공자(본인)	2.0	10.1	34.4	23.7	16.2	7.6	8.2
	국가유공자(유족)	1.7	13.0	37.9	24.4	14.5	6.4	3.8
	고엽제	2.4	4.1	30.1	21.8	22.5	10.4	11.0
	참전유공자	2.0	8.8	34.4	26.9	16.7	7.5	5.8
	보훈보상대상자	1.3	20.9	47.5	19.0	6.5	4.1	2.1
	5·18민주유공자	1.7	17.2	34.1	23.0	14.7	7.3	3.7
	특수입무	1.3	22.9	43.2	18.2	11.4	2.3	2.0
	제대군인	0.9	42.7	37.1	13.2	4.5	1.4	1.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의료이용 실태

지난 1년간 의료이용 경험이 있었던 보훈대상자가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일반(민간)병·의원(6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훈병원(20.4%), 위탁병원(14.8%), 국공립병원(4.2%)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률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70대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본인)의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용률이 각각 75.8%, 58.4%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7〉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단위: %)

구분		보훈 병원	위탁 병원	국공립 병원 (보건소 등 포함)	일반(민간) 병의원	합계
2021년		20.4	14.8	4.2	60.6	100.0
성별	남성	24.3	16.7	4.5	54.5	100.0
	여성	9.0	9.2	3.4	78.5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7.8	14.7	4.1	73.3	100.0
	50대	7.0	10.6	4.4	77.9	100.0
	60대	13.2	8.6	3.1	75.2	100.0
	70대	30.1	16.7	3.7	49.5	100.0
	80대 이상	16.2	16.4	5.6	61.7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2.3	18.3	8.5	60.8	100.0
	국가유공자(본인)	34.5	23.9	4.1	37.5	100.0
	국가유공자(유족)	8.9	7.8	3.6	79.7	100.0
	고엽제	46.3	29.5	5.3	19.0	100.0
	참전유공자	21.1	15.1	4.8	58.9	100.0
	보훈보상대상자	12.7	18.9	3.1	65.4	100.0
	5·18민주유공자	21.8	11.2	7.7	59.3	100.0
	특수임무	8.3	5.2	5.0	81.6	100.0
	제대군인	5.0	1.3	4.3	89.4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은 보훈대상자들의 지난 1년간 의료이용을 입원, 외래 및 약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보훈대상자 의료기관 이용자 비율은 입원, 외래, 약국 모두에서 감소하였고, 평균 입원일수, 외래 및 약국 이용일수 등이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중 입원자 비율은 2018년 25.1%에서 19.5%로 5.6%p 감소하였고 평균 입원일수도 39.9일에서 32.0일로 감소함에 따라 평균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도 248.9만 원에서 221.8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외래와 약국 이용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외래이용자 비율도 84.5%로 8.4%p 감소하였으며 외래 내원일수도 21.9일에서 18.2일로 감소하였다. 또한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액도 이용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50.7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입원 및 외래 이용자 비율, 평균 입내원일수 및 본인

부담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외래/약국 이용자 비율, 평균 입내원일수 및 본인부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보훈대상자의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실적²⁴⁾과 비교해 보면²⁵⁾, 일반국민의 의료이용 경험도 다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국민 중 입원자 비율은 2018년 14.4%에서 2021년 12.9%로 1.5%p 감소하였고, 동 기간 외래 이용자 비율도 93.9%에서 91.5%로 2.4%p 감소하였다. 한편 건강보험 대상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19.9일에서 20.9일로 다소 증가하였고, 외래일수는 18.9에서 17.0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와 일반국민의 의료이용량과 비교해 보면 보훈대상자의 의료이용량이 일반국민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표 5-28〉 보훈대상자 의료기관 의료이용실적

(단위: %, 일, 만 원)

구분	입원			외래			약국	
	입원이용자 비율	평균 입원일수	평균 본인부담	외래이용자 비율	평균 이용일수	평균 본인부담	약국이용자 비율	평균 본인부담
2018년	25.1	39.9	248.9	92.9	21.9	50.7	90.9	30.9
2021년	19.5	32.0	221.8	84.5	18.2	46.0	83.3	28.6
성별	남성	18.7	28.2	188.4	83.2	17.3	44.7	81.8
	여성	22.2	41.9	310.4	88.7	21.1	49.9	88.1
연령 대별	40대 이하	8.8	13.8	118.3	54.2	11.5	45.7	52.7
	50대	9.3	24.0	209.1	71.4	14.7	50.7	69.3
	60대	15.1	19.0	209.4	82.0	15.2	57.2	80.5
	70대	22.5	24.4	187.4	90.8	19.5	41.6	89.5
	80대 이상	24.9	50.5	287.5	91.9	20.4	44.9	91.4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2.7	30.8	291.2	89.0	19.0	53.2	88.3
	국가유공자(본인)	21.1	26.7	141.6	88.7	17.6	38.5	85.8
	국가유공자(유족)	19.2	37.2	298.8	85.4	19.7	50.8	84.9
	고엽제	30.9	38.7	153.9	93.6	18.8	29.0	92.1
	참전유공자	20.0	32.5	239.3	89.4	18.3	46.3	89.3
	보훈보상대상자	18.8	41.9	201.3	77.7	19.3	71.0	76.2
	5·18민주유공자	19.8	21.9	112.8	81.6	20.9	34.9	77.8
	특수입무	12.6	33.6	289.7	75.6	13.4	44.8	72.3
	제대군인	10.1	13.2	156.5	56.7	12.5	58.8	55.2

주: 입원/외래/약국 이용자는 전체 보훈대상자 중 의료이용이 있었던 대상자의 비율이며, 의료이용실적은 의료이용이 있었던 대상자들의 평균 의료이용 실적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2020 건강보험통계연보.

25) 건강보험통계연보의 발간은 차 년도로 가용한 2020년 통계연보와 비교하였음.

3. 의료비 부담 수준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의료지원 유형은 「국가보훈대상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국가보훈대상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에서는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의료이용 유형은 먼저 국비진료대상자와 감면진료대상자로 구분되고, 감면진료대상자의 경우 감면비율과 이용 가능한 병원 유형이 대상유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보훈의료지원대상자가 보훈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국비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이때 별도로 부과되는 본인부담 진료비 범위는 병원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 이용이 가능하고, 도서벽지 거주자,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먼저 보훈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보훈대상자의 36.9%는 의료비 부담이 된다(매우 부담됨 + 부담됨)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매우 부담됨 + 부담됨)은 2018년 38.2%에 비해 1.3%p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특성별로는 의료이용이 더 많았던 여성의 의료비 부담이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는 특수임무, 국가유공자 유족 및 참전유공자가 의료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은 입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민간보험 여부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5-29〉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 (입원 외래/ 민간보험 가입여부 추가)

(단위: %)

구분		매우 부담이 됨	부담이 됨	보통	부담이 되지 않음	전혀 부담이 안 됨
2018년		14.1	24.1	21.1	26.7	14.1
2021년		11.2	25.7	20.0	27.5	15.6
성별	남성	9.8	23.2	19.8	28.6	18.5
	여성	15.4	33.2	20.3	24.1	7.1
연령 대별	40대 이하	5.7	19.8	22.9	29.9	21.7
	50대	4.4	21.7	26.3	27.7	19.9
	60대	8.9	24.9	23.3	29.5	13.5
	70대	11.2	24.6	18.4	27.9	17.8
	80대 이상	15.3	30.0	18.2	25.0	11.5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0.4	26.7	21.0	26.8	15.1
	국가유공자(본인)	6.9	17.5	17.2	31.2	27.2
	국가유공자(유족)	14.5	32.0	21.7	23.8	8.0
	고엽제	7.0	19.9	14.9	31.7	26.4
	참전유공자	13.7	28.8	20.0	26.4	11.1
	보훈보상대상자	12.2	22.1	25.4	25.8	14.4
	5·18민주유공자	5.3	18.0	12.4	37.9	26.5
	특수임무	14.0	34.7	21.4	21.4	8.5
	제대군인	6.1	19.4	25.1	31.9	17.5
의료이용 형태	입원	18.7	28.9	14.9	26.7	10.8
	외래	11.1	25.7	20.0	27.5	15.7
민간보험 보유여부	있다	7.2	24.2	23.0	30.4	15.2
	없다	12.6	26.3	18.9	26.4	15.8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본 실태조사에서의 가구 소득과 가구 지출 중 의료비 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을 살펴보았다. 의료비가 가구의 소득 또는 소비수준의 일정비 중 이상이 되는 가구들을 추정함으로써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과부담 의료비는 가구 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threshold)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

(WHO, 2000)는 지불 능력(ability to pay) 중 의료비로 40% 이상 지출될 경우로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재난적 의료비는 가처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측정하게 되나 여기서는 가구 전체의 연간 소득과 가구 의료비만을 고려하여 의료비 부담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전반적인 보훈대상자의 연간 가구 소득 중 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2021년 전체 보훈대상자의 연간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은 약 8.0%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9.1%에 비해 1.1%p 감소한 것으로 가구 소득 중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이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 소득 중 의료비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는 전체 보훈대상 가구의 23.1%로 2018년 대비 3.3%p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특성별로는 여성 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남성 가구 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8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가구 소득의 약 10.8%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 비율도 증가하여 80대 이상 가구의 35.2%는 의료비 지출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참전유공자의 가구 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8%로 가장 높았다. 한편, 전체 보훈대상가구의 의료비 지출의 가구 소득의 40% 이상을 지출하는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비율은 1.9%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도 대비 0.6%p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표 5-30〉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 및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평균	10%미만	10%이상				
					10~20%	20~30%	30~40%	40%이상
2018년		9.1	73.6	26.4	15.8	5.7	2.5	2.5
2021년		8.0	76.9	23.1	14.2	5.0	2.0	1.9
성별	남성	7.4	78.8	21.2	13.1	4.5	1.9	1.6
	여성	10.0	70.9	29.1	17.8	6.7	2.1	2.5
연령 대별	40대 이하	2.9	95.4	4.6	3.4	0.9	0.2	0.1

구분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평균	10%미만	10%이상				
					10~20%	20~30%	30~40%	40%이상
	50대	6.1	91.4	8.6	6.0	1.8	0.2	0.6
	60대	7.0	83.8	16.2	10.8	3.3	1.2	0.9
	70대	8.3	74.6	25.4	15.5	5.7	2.4	1.8
	80대 이상	10.8	64.8	35.2	21.0	7.6	3.0	3.6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7.7	74.5	25.5	17.3	5.3	1.6	1.3
	국가유공자(본인)	6.2	83.3	16.7	10.6	3.1	1.7	1.3
	국가유공자(유족)	9.6	74.2	25.8	15.4	6.0	2.1	2.2
	고엽제	8.6	74.7	25.3	16.4	5.3	2.0	1.5
	참전유공자	9.8	67.7	32.3	19.5	7.2	2.9	2.7
	보훈보상대상자	5.0	86.6	13.4	9.5	2.9	0.6	0.5
	5·18민주유공자	4.5	89.1	10.9	7.5	1.9	0.0	1.5
	특수임무	5.4	83.2	16.8	12.1	3.8	0.0	1.0
	제대군인	3.9	91.2	8.8	6.5	1.6	0.4	0.3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지난 1년간 몸이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욕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보훈대상자의 10.8%가 치료 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이 아팠지만 치료를 포기한 경험은 2018년과 비교해 0.8%p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치료를 포기한 주된 사유로는 ‘진료비 부담’이 3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료를 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30.5%)’, ‘거동이 불편해서(13.2%)’, ‘보훈위탁병원과 거리가 멀어서(13.0%)’ 순이었다. 2018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진료비 부담이나 보훈위탁병원과 거리가 멀어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은 다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특성별로는 여성(12.7%)이 남성(10.2%)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 이하(13.9%)와 80대(13.1%)에서 치료 포기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80대 이상은 진료비 부담보다는 ‘진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거동이 불편해서’ 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더 큰 이유로 나타났다.

〈표 5-31〉 치료 포기 경험 및 포기 사유

(단위: %)

구분		치료 포기 경험 있음	치료 포기 사유				
			진료비 부담	보훈위탁 병원과 거리가 멀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진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기타
2018년		11.6	45.1	14.6	16.0	19.7	4.7
2021년		10.8	39.9	13.0	13.2	30.5	3.4
성별	남성	10.2	39.6	15.3	10.7	30.4	4.0
	여성	12.7	40.6	7.2	19.6	30.7	1.9
연령 대별	40대 이하	13.9	36.0	27.2	1.0	26.3	9.5
	50대	11.3	56.8	12.4	1.2	23.1	6.4
	60대	8.8	48.3	9.0	5.3	34.7	2.7
	70대	9.2	46.1	12.8	9.6	28.4	3.1
	80대 이상	13.1	26.9	9.7	28.2	34.4	0.8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6.8	50.1	6.4	16.9	26.7	0.0
	국가유공자(본인)	9.7	27.7	24.7	9.0	33.5	5.1
	국가유공자(유족)	11.5	46.5	6.9	15.5	28.4	2.6
	고엽제	9.0	27.7	15.6	20.8	30.7	5.3
	참전유공자	11.9	38.7	11.4	17.0	31.6	1.3
	보훈보상대상자	16.0	34.2	28.3	1.8	31.0	4.8
	5·18민주유공자	12.4	42.6	14.9	2.7	35.3	4.6
	특수임무	18.2	51.8	7.8	2.8	37.6	0.0
제대군인		8.6	52.5	10.3	2.0	27.1	8.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 의료지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보훈·위탁 병원을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19.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진료비 감면율 및 감면 범위 확대(18.2%)’, ‘보훈병원 증설(15.3%)’, ‘보훈병원 진료수준 향상(14.3%)’, ‘전문위탁진료(11.7%)’ 순이었고 인구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32〉 보훈 의료지원 개선 항목

(단위: %)

구분	보훈병원 진료수준 향상	보훈병원 진료 및 입원 대기 기간 단축	보훈병원 증설	전문 위탁 진료 확대	위탁 병원 지정 확대	진료비 감면율 및 범위 확대	지원 형태 다양화 (방문진 료 장기 요양시설 이용지원 등)	중기 복무자 까지 지원대 상 확대	기타	합계
2021년	14.3	9.7	15.3	11.7	19.4	18.2	7.3	2.6	1.5	100.0
성별	남성	15.5	10.2	15.8	11.9	19.6	6.2	3.2	1.5	100.0
	여성	10.5	8.0	13.8	10.9	18.7	10.6	0.9	1.6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14.1	5.8	12.3	9.7	18.6	15.1	4.1	19.0	100.0
	50대	20.1	6.2	13.1	11.0	18.5	19.0	5.6	4.1	100.0
	60대	15.0	8.5	14.5	12.4	19.1	20.4	6.6	1.6	100.0
	70대	15.5	12.2	16.1	11.8	19.8	16.9	5.9	0.4	100.0
	80대 이상	10.6	9.0	16.4	11.9	19.7	19.7	11.4	0.2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8.8	11.9	13.1	12.9	18.8	15.4	8.0	0.0	100.0
	국가유공자(본인)	17.1	13.2	16.4	14.3	22.5	9.6	5.3	0.8	100.0
	국가유공자(유족)	11.6	7.5	14.1	10.6	18.9	25.7	9.2	0.3	100.0
	고엽제	16.0	14.2	18.8	11.8	19.6	11.5	6.4	0.1	100.0
	참전유공자	13.9	10.3	16.9	11.7	19.4	18.5	7.6	0.4	100.0
	보훈보상대상자	14.1	8.5	17.2	12.2	21.9	19.8	4.6	0.7	100.0
	5·18민주유공자	12.1	13.9	11.4	13.8	20.3	14.3	7.9	0.3	100.0
	특수임무	10.9	7.4	12.1	13.0	17.8	24.3	8.4	3.9	100.0
	제대군인	16.5	4.2	11.9	8.1	13.6	16.7	5.2	21.6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은 보훈의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이외에 의료 이용을 위한 추가적인 금전적 자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훈대상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았다. 보훈대상자의 30.1%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민간보험 가입률이 약 78.0²⁶⁾~94.9%²⁷⁾로 조사되고 있는데 반해 보훈대상자의 민간보험가입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소득, 연령, 건강 상태, 이중

26) 통계청.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tblId=DT_33109_D011&orgId=331&language=kor&conn_path=&vw_cd=&list_id=에서 2022. 2. 26. 인출.

27)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9). 2019년 건강보험 제도 국민 인식조사.

의료보장 자격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성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았고, 대상 분류별로는 제대군인과 보훈보상대상자에서 민간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상군의 특성보다는 연령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3〉 의료비 환급 가능한 민간 의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2021년		30.1	69.9
성별	남성	31.6	68.4
	여성	25.2	74.8
연령 대별	40대 이하	76.0	24.0
	50대	69.0	31.0
	60대	51.2	48.8
	70대	19.5	80.5
	80대 이상	3.6	96.4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8.4	81.6
	국가유공자(본인)	29.4	70.6
	국가유공자(유족)	32.8	67.2
	고엽제	12.8	87.2
	참전유공자	12.1	87.9
	보훈보상대상자	62.2	37.8
	5·18민주유공자	31.4	68.6
	특수임무	49.9	50.1
	제대군인	70.0	3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4. 정신건강 상태

최근 우리 사회는 빈곤, 질병, 부채, 건강 문제, 직장 및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한 높은 자살사망률, 우울 및 불안장애 보유휘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정신건강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신체건강과도 상호작용을 한다.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모두가 긍정적인 때 전체

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발병, 진행, 결과에 상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Herrmann et al., 2005, 132).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 지표를 활용하여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체 보훈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훈대상자의 22.7%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많이 느끼는 편임 + 매우 많이 느낌)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2018년과 비교해 보면 5.9%p 감소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다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특성별로는 여성의 스트레스 정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정도를 ‘많이 느끼는 편임’과 ‘매우 많이 느낌’을 합하여 비교한 결과, 여성의 25.3%, 남성의 21.9%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이 24.9%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하 24.0%, 50대가 23.3%순이었다. 보훈대상별로는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의 보훈대상자 순이었다.

〈표 5-34〉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단위: %)

구분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임	많이 느끼는 편임	매우 많이 느낌
2018년		17.8	53.7	21.2	7.4
2021년		20.2	57.0	18.4	4.3
성별	남성	20.8	57.3	17.9	4.0
	여성	18.5	56.2	19.9	5.4
연령 대별	40대 이하	16.2	59.8	20.0	4.0
	50대	17.5	59.1	19.2	4.1
	60대	21.9	59.1	14.9	4.1
	70대	20.9	56.6	18.2	4.2
	80대 이상	20.4	54.6	20.0	4.9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3.0	53.9	19.2	3.9
	국가유공자(본인)	21.3	57.1	17.6	4.0
	국가유공자(유족)	17.7	58.0	19.3	5.0
	고엽제	17.8	54.3	21.1	6.8
	참전유공자	21.5	55.9	18.9	3.8
	보훈보상대상자	10.7	58.1	23.2	8.0
	5·18민주유공자	14.8	50.4	29.3	5.4
	특수임무	12.9	57.5	22.1	7.5
	제대군인	25.3	58.3	13.7	2.6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우울은 CES-D11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CES-D는 일반 인구집단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그 경제성과 용이성, 문항의 간결성 등의 장점이 인정되어 여러 연구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우울척도(이하 CES-D11)를 활용한 우울척도는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항목별 측정된 총점에 20/11을 곱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우울의 진단을 위한 CES-D의 절단점(cutoff point)은 60점을 기준으로 16점과 25점을 많이 사용하는데, 16점 이상은 유력 우울증(probable depression), 25점은 확실한 우울증(definite depression)을 의미한다(Kohout et al., 1993).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0~16점 미만인 경우에 정상군, 16~25점 미만인 경우에는 우울 위험군, 25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CES-D11을 활용하여 보훈대상자의 우울 증상을 분석한 결과 보훈대상자의 평균 우울점수는 16.2점으로 2018년 18.2점으로 우울성향이 2점 감소하여 육체적 건강수준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는 여성의 우울수준(19.7점)이 남성(15.1점)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성향도 증가하여 80대 이상의 우울지표 점수는 21.5점 수준이었다.

CES-D11의 점수를 추출하여 정상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여 보훈대상자의 우울수준을 집단화한 결과, 전체 보훈대상자의 46.5%는 우울 위험군 또는 우울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위험군이 25.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CES-D11을 활용한 분류에서 통상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25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훈대상자의 우울수준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성별로는 여성의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60.2%(위험군+고위험군)로 남성 42.1%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우울지표 점수와 유사하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위험군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80대 이상은 우울 고위험군 비율은 4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5·18민주유공자 59.5%, 국가유공자(유족) 52.8%, 고엽제후유(의)증의 보훈대상자 5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5〉 우울 척도(CES-D11) 점수

(단위: 점, %)

구분		CES-D 평균 (점)	비율(%)			
			정상군	위험군	고위험군	합계
2018년		18.2	48.5	22.0	29.6	100.0
2021년		16.2	53.6	20.9	25.6	100.0
성별	남성	15.1	57.9	19.6	22.5	100.0
	여성	19.7	39.9	25.0	35.2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10.4	73.2	14.1	12.7	100.0
	50대	11.9	69.0	16.1	14.9	100.0
	60대	12.8	66.7	16.4	16.9	100.0
	70대	16.4	52.9	22.3	24.9	100.0
	80대 이상	21.5	34.4	25.6	40.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6.9	51.2	23.2	25.7	100.0
	국가유공자(본인)	15.3	57.3	19.4	23.3	100.0
	국가유공자(유족)	17.8	47.2	22.8	30.0	100.0
	고엽제	17.9	48.4	22.9	28.8	100.0
	참전유공자	17.6	49.1	22.7	28.3	100.0
	보훈보상대상자	16.4	53.9	23.1	23.0	100.0
	5·18민주유공자	19.3	40.6	27.9	31.6	100.0
	특수임무	16.1	54.5	20.4	25.2	100.0
	제대군인	8.7	79.3	12.3	8.3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제까지 보훈대상자 정신건강에 있어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성향 정도를 살펴보고 다음은 보훈대상자의 마음건강에 있어 어떤 부분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보훈대상자 약 3명 중 1명은 마음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우울, 외로움(45.2%)’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정신건강 관리(22.4%)’, ‘악몽, 불면 등 수면 문제(15.9%)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6〉 마음건강 어려움 여부 및 유형

(단위: %)

구분	있음	마음 건강 어려움 유형								
		우울, 외로움	악몽, 불면 등 수면 문제	트라우마 (PTSD)	스트레스, 정신건강 관리	불안	화, 분노	가족관계, 대인관계	기타	합계
2021년	33.8	45.2	15.9	2.8	22.4	6.7	3.6	3.1	0.4	100.0
성별	남성	31.6	40.8	15.5	3.5	24.9	6.9	4.4	3.6	100.0
	여성	40.5	56.1	16.8	0.9	16.0	6.2	1.6	2.0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28.1	17.9	13.3	4.2	47.0	7.7	5.1	4.8	100.0
	50대	28.3	27.7	14.9	4.7	35.9	10.5	3.1	3.2	100.0
	60대	28.9	39.2	16.6	3.1	26.0	6.3	2.8	5.5	100.0
	70대	34.1	46.5	16.5	3.1	18.8	7.8	4.0	2.9	100.0
	80대 이상	40.0	57.1	15.6	1.4	16.1	4.4	3.1	1.9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0.8	50.0	13.4	3.9	25.6	3.9	0.7	0.0	100.0
	국가유공자(본인)	34.0	36.3	15.6	4.4	27.2	7.9	4.0	4.3	100.0
	국가유공자(유족)	36.5	51.8	16.1	1.0	19.4	7.0	2.3	2.1	100.0
	고엽제	41.4	48.9	18.0	3.3	16.2	6.9	3.4	2.7	100.0
	참전유공자	33.4	50.7	16.3	2.8	17.4	4.6	5.0	2.5	100.0
	보훈보상대상자	45.5	29.5	14.6	9.9	26.5	8.1	5.7	5.6	100.0
	5·18민주유공자	47.5	38.4	14.0	13.9	23.4	4.0	5.0	1.3	100.0
	특수임무	37.9	34.6	14.8	7.6	30.7	6.1	3.8	2.3	100.0
	제대군인	19.8	22.0	13.3	2.2	43.3	8.1	3.6	7.5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대상자는 부상, 가족의 사망 등 다양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심리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전국 5개 권역에 심리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심리상담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본 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대상자의 심리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유형을 조사한 결과, 보훈대상자의 마음건강 어려움 극복을 위한 서비스로는 ‘개인상담(23.2%)’, ‘심리검사(13.6%)’, ‘정신건강관련 교육(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특성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37〉 마음건강 어려움 극복을 위해 원하는 서비스

(단위: %)

구분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집단활동 프로그램 (음악, 미술, 원예 등)	정신건강 관련 교육 (스트레스 관리 등)	기타	이용의사 없음
2021년		23.2	13.6	4.9	5.7	10.8	0.5	41.3
성별	남성	22.6	14.0	4.9	5.5	11.6	0.4	41.0
	여성	24.5	12.6	4.9	6.3	8.8	0.6	42.2
연령 대별	40대 이하	28.3	19.0	0.9	7.0	15.7	0.0	29.1
	50대	26.6	8.0	2.7	10.8	14.8	0.5	36.7
	60대	25.7	12.4	4.3	7.9	11.4	0.3	38.0
	70대	21.9	15.2	5.7	4.5	11.9	0.5	40.4
	80대 이상	21.6	11.9	5.7	4.8	7.1	0.6	48.2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5.2	13.1	3.7	6.4	9.5	0.7	51.4
	국가유공자(본인)	21.7	17.4	3.5	5.4	13.6	0.4	38.1
	국가유공자(유족)	23.8	11.9	5.0	6.7	8.9	0.5	43.2
	고엽제	29.6	11.4	4.3	2.4	10.2	0.5	41.6
	참전유공자	20.5	12.9	7.1	4.1	9.1	0.5	45.8
	보훈보상대상자	30.8	15.2	2.8	6.3	12.1	0.0	32.7
	5·18민주유공자	30.1	17.2	3.8	4.1	11.6	0.0	33.3
	특수임무	25.7	13.3	1.3	8.1	9.6	0.0	42.0
제대군인		28.1	12.6	3.3	10.1	18.4	0.4	27.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5. 주요 건강행태(흡연, 음주)

보훈대상자의 건강행태 중 흡연 및 음주 실태 파악을 위해 2021년 조사에서는 흡연과 음주 영역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흡연율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보훈대상자의 흡연율은 15.4%로 나타나 일반국민의 흡연율²⁸⁾ 18.4%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흡연율은 남성 19.8%, 여성 1.4%로 남녀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0대 이하는 38.7%로 가장 높았고 50대 28.7%, 60대 18.0%, 70대 13.8%였고 80대 이상은 3.6%로 가장 낮았다. 대상 분류별로는 특수임무, 보훈보상대상자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보훈 자격별 연령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8) 여유진·신재동·이병재·우선희·한겨레·정다운·송지은·홍성운·오미애·정은희·김선... 임은정. (2020). 202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균 흡연량은 흡연 여부에서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이용하여 흡연량을 산출하였다.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3.5개비로 일반국민 중 흡연자의 흡연량 13.0개비²⁹⁾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5-38〉 흡연 여부 및 정도

(단위: %)

구분		흡연여부	하루 평균 흡연량(개수)
전체		15.4	13.5
성별	남성	19.8	13.6
	여성	1.4	10.8
연령 대별	40대 이하	38.7	13.9
	50대	28.7	14.6
	60대	18.0	15.3
	70대	13.8	12.4
	80대 이상	3.6	9.9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1.2	13.4
	국가유공자(본인)	19.6	13.4
	국가유공자(유족)	10.2	14.8
	고엽제	14.4	11.3
	참전유공자	13.3	12.1
	보훈보상대상자	30.2	13.4
	5·18민주유공자	28.0	16.2
	특수입무	31.3	15.6
제대군인		25.7	14.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은 보훈대상자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보훈대상자의 6.6%는 ‘월 1회 이하’, 11.0%는 ‘월 2~4회’, 9.7%는 ‘주 2~3회’, 6.6%는 ‘주 4회 이상’, 66.1%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국민과의 비교를 위하여 월간 음주율³⁰⁾을 산출해보면, 보훈대상자는 27.3%, 일반국민 78.6%로 보훈대상자의 월간 음주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월간 음주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 33.9%, 여성 6.1%로 남성의 월간 음주율이 월등히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간 음주율도 높아져 40대 이하의 월간 음주율은 54.3%로 가장 높았다.

29) 박은자·배정은·송은솔·정연·최슬기·이용준·김은주·염아림·윤열매·김규성·박현아·이영민·윤유진·김성경·최건우·이효정·박유진. (2020). 201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30) 월간 음주율은 최근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한 사람의 비율로 한국의료패널 산출기준을 적용함.

〈표 5-39〉 음주횟수

(단위: %)

구분		월 1회 이하	월간 음주율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거의 마시지 않음
전체		6.6	27.3	11.0	9.7	6.6	66.1
성별	남성	7.6	33.9	13.5	12.0	8.4	58.4
	여성	3.5	6.1	3.0	2.3	0.8	90.5
연령 대별	40대 이하	13.3	54.3	27.9	19.5	6.9	32.3
	50대	9.9	48.6	18.0	19.8	10.8	41.5
	60대	7.8	35.9	14.7	14.1	7.1	56.4
	70대	6.7	25.5	9.6	8.2	7.7	67.9
	80대 이상	2.4	8.1	2.4	2.4	3.3	89.5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3	19	6.6	7.4	5.0	76.8
	국가유공자(본인)	7.6	33.1	13.5	12.3	7.3	59.3
	국가유공자(유족)	5.5	17.5	7.0	6.7	3.8	77.0
	고엽제	6.6	24.9	9.1	9.2	6.6	68.4
	참전유공자	5.9	25.3	7.9	7.6	9.8	68.8
	보훈보상대상자	8.5	42.4	22.6	11.9	7.9	49.2
	5·18민주유공자	6.2	42.6	15.4	17.4	9.8	51.2
	특수임무	5.1	45.1	16.8	17.4	10.9	49.8
제대군인		9.7	48.9	25.1	17.3	6.5	41.4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은 음주횟수와 음주량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고위험 음주율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시는 날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³¹⁾. 보훈대상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6.2%로 일반국민³²⁾ 16.3%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결과를 보였다.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보훈대상자의 음주 시 음주량을 조사한 결과, 1~2잔은 24.8%, 3~4잔은 25.8%, 5~6잔은 19.9%, 7~9잔은 18.6%, 10잔 이상은 10.9%로 조사되었다.

〈표 5-40〉 음주량

(단위: %)

구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전체		24.8	25.8	19.9	18.6	10.9
성별	남성	22.7	25.8	20.4	19.6	11.5
	여성	55.0	25.6	12.7	4.6	2.1
연령 대별	40대 이하	12.8	18.1	24.2	21.9	22.9
	50대	12.6	22.9	25.5	26.5	12.5

31) 고위험 음주율은 한국의료패널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함.

32) 박은자 외, (2020). 201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구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대상 분류	60대	19.9	26.9	22.3	20.9	10.0
	70대	32.7	29.9	16.2	14.9	6.3
	80대 이상	50.8	26.8	10.9	8.6	2.9
	독립유공자	24.1	34.6	19.0	15.8	6.5
	국가유공자(본인)	21.1	25.2	20.6	21.3	11.8
	국가유공자(유족)	28.8	25.5	18.2	17.4	10.0
	고엽제	28.5	30.9	21.5	12.9	6.3
	참전유공자	34.1	28.4	14.9	16.2	6.4
	보훈보상대상자	14.1	21.2	23.5	17.0	24.2
	5·18민주유공자	18.5	24.3	21.6	20.7	14.9
	특수임무	8.4	25.5	27.3	22.6	16.2
	제대군인	15.2	22.3	26.2	20.1	16.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은 술을 마신다고 보훈대상자 중 한 번에 소주 1병이나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과음의 횟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26.2%는 과음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19.7%는 ‘한 달에 한번 미만’, 17.8%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28.9%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7.4%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41〉 과도한 음주 빈도

구분		전혀 없다	한 달에 한번 미만	한 달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거의 매일
전체		26.2	19.7	17.8	28.9	7.4
성별	남성	24.5	19.6	18.1	30.0	7.9
	여성	49.7	20.6	13.6	14.7	1.4
연령 대별	40대 이하	14.8	19.6	23.0	35.8	6.8
	50대	15.6	18.7	17.8	38.8	9.2
	60대	24.3	17.9	19.5	31.9	6.4
	70대	32.1	20.8	16.3	23.2	7.7
	80대 이상	49.0	21.2	7.8	14.4	7.6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6.5	16.8	16.2	31.1	9.5
	국가유공자(본인)	24.2	19.3	17.4	31.2	7.8
	국가유공자(유족)	30.7	19.3	16.6	27.1	6.4
	고엽제	28.0	21.7	18.5	24.7	7.1
	참전유공자	32.5	20.5	13.6	23.7	9.7
	보훈보상대상자	17.0	20.8	21.8	33.8	6.7
	5·18민주유공자	21.1	13.9	18.0	38.6	8.4
	특수임무	18.3	15.9	16.2	37.6	12.1
	제대군인	16.5	19.6	25.0	33.8	5.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6절 경제활동

1.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활동 현황

보훈대상자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는 34.6%로 세 명 중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학생, 실업자 등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이며, 보훈대상자의 연령 등의 특성으로 볼 때 구직 의사가 있는 비취업자는 대부분 실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향후 구직의사가 없는 비취업자는 60.5%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연로자, 구직단념자,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상당수의 보훈대상자가 고령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40.8%)이 여성(15.3%)에 비해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약 2.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향후 구직의사가 없는 비취업자는 여성(83.0%)이 남성(56.1%)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취업자 비중이 높았다. 40대 이하는 80~90% 이상, 50대는 79.4%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60대 이상은 50% 이하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70대의 경우에도 26.2%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할 의사가 있는 청장년층에서 비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다. 특히 30대 이하의 10%는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라는 점은 실업상태의 보훈대상자를 향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기준 연령별 실업률³³⁾을 보면 20대 7.7%, 30대 3.3%, 40대 2.4% 정도로 보훈대상자에서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 하더라도 향후 구직의사가 있는 30대 이하 비취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훈대상별로 취업자 비중은 제대군인(76.4%), 보훈보상대상자(63.6%), 특수임무 유공자(62.0%) 및 5·18민주유공자(56.0%) 순으로 높았으며,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유족)은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의 경우 고령이거나(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 비율이 높거나(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과 같이 가구원의 사망과 높은 연령대가 이러한

33) 통계청.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성/연령별). 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DA7089에서 2022. 2. 24. 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42〉 경제활동 참여 상태

(단위: %)

구분		취업자 (일을 한다)	비취업자		계
			(향후)구직 의사 있음 (학생, 구직자 등)	향후 구직 의사 없음 (연로자, 구직단념자 등)	
2018년		34.5	5.0	60.5	100.0
2021년		34.6	2.8	62.5	100.0
성별	남성	40.8	3.2	56.1	100.0
	여성	15.3	1.7	83.0	100.0
연령 대별	30대 이하	82.7	10.0	7.3	100.0
	40대	90.4	5.2	4.4	100.0
	50대	79.4	4.9	15.7	100.0
	60대	50.8	5.5	43.6	100.0
	70대	26.2	1.9	71.9	100.0
	80대 이상	4.4	0.1	95.6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8.8	2.1	79.1	100.0
	국가유공자(본인)	36.6	2.9	60.5	100.0
	국가유공자(유족)	28.8	2.7	68.6	100.0
	고엽제	24.1	1.8	74.1	100.0
	참전유공자	23.8	1.1	75.1	100.0
	보훈보상대상자	63.6	7.9	28.5	100.0
	5·18민주유공자	56.0	4.5	39.5	100.0
	특수임무	62.0	4.5	33.5	100.0
	제대군인	76.4	7.0	16.6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장 구직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 직장을 구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기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8%,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80% 이상은 1년 이내 직장을 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1.0% 즉, 10명 중 한명은 직장을 구하는데 2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70% 이상이 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30,40대의 경우 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5~60% 정도였으며,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정도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구직기간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의 경우 구직기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길게 나타나는데, 이들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43〉 직장구직기간

(단위: 시간,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2021년		66.8	15.1	7.1	11.0
성별	남성	66.3	15.7	7.1	11.0
	여성	71.5	10.3	6.8	11.4
연령 대별	30대 이하	55.2	20.7	12.9	11.3
	40대	56.9	17.8	9.6	15.7
	50대	65.1	15.9	8.5	10.6
	60대	70.3	14.8	6.1	8.9
	70대	72.9	12.0	4.3	10.8
	80대 이상	74.9	11.2	1.7	12.2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70.5	18.1	4.5	6.8
	국가유공자(본인)	63.2	15.2	9.4	12.1
	국가유공자(유족)	72.2	13.1	4.8	9.9
	고엽제	72.3	11.2	4.7	11.9
	참전유공자	73.2	12.8	4.0	9.9
	보훈보상대상자	56.9	21.3	7.9	14.0
	5·18민주유공자	72.8	7.4	7.6	12.2
	특수임무	60.0	15.8	9.1	15.1
	제대군인	59.5	19.4	9.6	11.5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38.0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근무시간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주 7시간 정도 더 많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0대 이하에서는 주당 40시간 이상을 60대 이상에서는 주당 40시간 이하로 조사되었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 주당 근무시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특정 유형에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주당 근무시간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 비율이 높았던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41시간 정도였으며, 다른 유형의 보훈대상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30.9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일을 할 때 정부가 제공한 정부지원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노동시장에 참여 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9.8%로 열 명 중 한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8.9%)에 비해 여성(17.3%)의 비율이 8.4%p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는 15.7%, 80대 이상은 41.4%로 높게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는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에서 각각 17.7% 정도가 정부지원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독립유공자의 11.6%, 특수임무유공자 9.7%, 국가유공자(본인 및 유족) 8.9% 순으로 나타났다.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 비율이 3.5%로 다른 보훈대상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44〉 주당 근무 일수, 주당 근무 시간 및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단위: 시간, %)

구분		주당 근무 시간	정부지원일자리
2018년		40.2	11.1
2021년		38.0	9.8
성별	남성	38.7	8.9
	여성	31.8	17.3
연령 대별	30대 이하	42.3	3.8
	40대	43.4	7.5
	50대	41.4	4.9
	60대	38.1	5.9
	70대	33.7	15.7
	80대 이상	21.7	41.4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5.3	11.6
	국가유공자(본인)	39.7	8.9
	국가유공자(유족)	37.1	8.9
	고엽제	30.9	17.7
	참전유공자	33.2	17.7
	보훈보상대상자	41.3	6.9
	5·18민주유공자	38.1	3.5
	특수임무	41.5	9.7
	제대군인	41.3	5.4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에서는 보훈대상자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과 직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산업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공공행정, 국방 등이 13.0%, 농림, 임업 및 어업이 11.1%, 사업시설관리 등이 10.6%, 제조업 8.9% 순으로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 등(11.5%), 농림, 임업 및 어업(11.4%), 제조업(9.4%), 운수 및 창고업(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비중(16.0%)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등(13.3%), 숙박·음식업 등(11.9%), 교육서비스업(11.1%), 도소매업(9.7%) 순으로 남성과 다르게 특징적으로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는 공공행정, 국방,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60대의 경우 사업시설관리 산업에, 그리고 70,80대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대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 이외 공공행정, 국방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25.8%)이 높게 나타났는데, 앞의 분석 결과에서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여부(41.4%)가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교적 힘들거나 복잡한 정보 등을 요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훈대상자 대상별로는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농림 및 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20~30%의 비중을 보였으며, 독립유공자는 제조업(10.3%)과 협회 및 단체 등(10.3%)의 산업에, 보훈보상대상자는 제조업(18.9%)에, 5·18민주유공자는 운수 및 창고업(11.8%), 건설업(11.5%)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수임무유공자와 제대군인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등의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45〉 종사하고 있는 산업 종류

(단위: %)

산업구분	2018년	2021년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	13.1	11.1	11.4	8.9	0.3	1.1	3.3	11.8	21.7	28.6
광업	0.3	0.2	0.1	0.2	0.2	0.4	0.0	0.0	0.2	0.4
제조업	10.4	8.9	9.4	4.4	14.5	15.9	11.1	7.1	4.5	2.3
전기, 가스 등	2.0	1.8	2.0	0.0	2.0	1.4	2.9	2.3	1.0	0.0
수도, 하수폐기물 등	1.3	1.0	1.0	0.7	0.8	1.0	1.2	1.3	0.8	0.0
건설업	7.4	6.9	7.5	1.6	3.1	6.8	11.3	7.4	5.7	3.4
도소매업	7.9	7.4	7.1	9.7	8.3	8.7	6.3	6.6	8.1	5.1
운수 및 창고업	9.3	8.2	9.0	1.3	6.9	6.6	8.2	8.1	10.1	3.3
숙박 및 음식업	5.0	4.1	3.2	11.9	4.1	3.8	4.9	4.8	3.1	4.8
정보통신업	1.5	1.4	1.4	1.1	1.7	3.1	1.8	1.1	0.4	1.0

산업구분	2018년	2021년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금융 및 보험업	1.9	2.0	2.0	2.5	5.8	2.7	3.6	1.5	0.1	0.0
부동산업	2.3	1.8	2.0	0.4	0.2	2.4	0.8	2.2	2.6	0.5
전문, 과학 및 기술	3.4	3.7	3.9	2.0	5.3	6.7	3.9	3.2	2.3	1.5
사업시설관리 등	10.0	10.6	11.5	3.5	5.4	4.2	7.3	15.1	13.8	8.8
공공행정, 국방 등	10.1	13.0	13.0	13.3	25.7	19.8	14.9	4.3	9.9	25.8
교육서비스업	4.1	4.7	3.9	11.1	4.3	5.7	6.8	5.7	2.6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	6.0	4.8	16.0	3.2	3.6	5.0	8.2	6.8	5.1
예술, 스포츠 등	1.3	2.0	2.0	2.4	4.3	2.3	2.2	2.3	0.8	1.5
협회 및 단체 등	5.3	4.8	4.6	6.6	3.5	3.4	4.1	5.8	5.3	6.7
가구내 고용활동 등	0.5	0.4	0.2	2.0	0.2	0.0	0.0	1.2	0.1	0.0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1	0.3	0.0	0.2	0.4	0.0	0.0	0.0
산업구분	대상분류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고엽제	참전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제대 군인	
농업, 임업 및 어업	8.2	9.6	11.1	30.2	22.4	2.9	7.8	4.0	2.9	
광업	0.0	0.1	0.2	0.9	0.2	0.4	0.0	0.0	0.1	
제조업	10.3	8.6	9.2	7.2	4.3	18.9	9.4	9.3	11.5	
전기, 가스 등	2.2	2.3	1.9	0.0	0.8	4.5	1.1	1.4	1.8	
수도, 하수폐기물 등	0.0	0.4	1.5	0.4	0.8	0.9	1.2	0.7	1.4	
건설업	5.7	5.4	9.3	5.0	7.0	6.8	11.5	16.8	5.5	
도소매업	5.8	6.5	8.7	5.0	8.5	8.7	8.4	4.6	6.3	
운수 및 창고업	6.8	8.9	7.4	9.1	9.8	5.3	11.8	6.8	7.2	
숙박 및 음식점	6.8	1.7	7.9	0.9	2.9	4.5	4.2	5.2	3.4	
정보통신업	2.4	1.3	0.9	0.0	0.8	3.3	1.1	0.7	2.4	
금융 및 보험업	3.6	3.2	2.2	0.5	0.0	2.1	3.0	0.7	2.2	
부동산업	4.5	2.0	1.8	2.7	1.9	2.9	1.1	0.0	1.3	
전문, 과학 및 기술	2.3	2.6	3.3	2.2	2.9	4.9	1.6	3.0	6.3	
사업시설관리 등	9.2	14.9	5.3	10.9	14.0	5.7	8.4	6.0	10.4	
공공행정, 국방 등	9.4	14.6	6.5	10.6	10.6	10.8	3.9	24.2	21.7	
교육서비스업	4.8	5.0	5.7	0.4	2.5	6.3	9.6	5.1	4.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8	5.5	8.7	4.5	5.2	4.1	6.2	1.5	4.0	
예술, 스포츠 등	1.1	2.6	1.8	1.4	1.1	4.1	4.7	4.6	2.2	
협회 및 단체 등	10.3	4.6	5.5	8.0	4.3	2.9	5.1	4.6	4.1	
가구내 고용활동 등	0.0	0.2	1.0	0.0	0.0	0.0	0.0	0.8	0.1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2	0.0	0.0	0.0	0.0	0.0	0.2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전체적으로 단순노무(22.2%), 서비스종사자(1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단순노무, 서비스종사자 비중이 높았으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남녀 간의 직업에서의 차이가 보훈대상자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중장기적으로 보훈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고숙련 일자리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는 사무종사자, 50대는 서비스종사자, 60대 이상은 단순노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보다는 주로 단순노무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등에서 비중이 높았다. 보훈대상별로는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은 사무종사자 비중이 높고, 다른 대상자는 모두 단순노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5-46〉 종사하고 있는 직업 종류

(단위: %)

직업구분	2018년	2021년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관리자	9.3	9.2	9.8	4.0	7.8	13.4	11.5	9.8	6.3	5.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9	10.6	10.7	9.2	15.7	13.8	16.7	10.3	4.5	4.0
사무종사자	10.0	11.8	11.9	11.2	27.2	25.5	16.2	6.2	2.6	6.0
서비스종사자	15.1	15.9	14.8	25.1	16.6	14.2	17.0	18.9	14.4	5.1
판매종사자	7.6	5.0	5.0	5.8	7.1	5.8	3.9	4.3	5.3	5.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1.4	10.6	10.9	7.6	0.3	0.6	3.3	11.0	20.9	27.3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8.6	8.5	9.3	2.0	8.9	10.4	10.0	10.7	5.5	3.1
장치기계 등 종사자	5.9	5.7	6.4	0.1	9.1	5.6	6.9	5.4	4.7	0.0
단순노무	20.7	22.2	20.7	34.8	5.3	9.3	13.7	23.6	35.7	43.7
군인	0.6	0.6	0.6	0.3	2.1	1.5	0.8	0.0	0.0	0.0
직업구분	대상분류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고엽제	참전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제대 군인	
관리자	13.6	7.8	7.3	7.8	5.8	9.3	11.7	9.1	15.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2	9.8	10.7	4.1	4.4	15.4	15.1	18.3	15.8	
사무종사자	5.8	16.4	6.9	0.9	3.1	20.4	5.3	11.6	20.2	
서비스종사자	18.3	16.5	18.6	12.0	12.3	14.0	15.5	17.2	14.9	
판매종사자	5.9	4.0	5.8	3.7	6.2	6.3	7.6	1.5	4.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8.2	9.3	10.3	28.3	21.8	2.1	7.3	2.3	2.8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5.6	10.2	7.9	7.4	4.9	11.3	8.0	12.2	9.9	
장치기계 등 종사자	4.6	6.3	5.2	3.7	5.1	9.2	8.0	4.6	6.1	
단순노무	22.9	19.5	27.2	32.3	36.3	12.2	21.5	19.4	8.1	
군인	0.0	0.2	0.1	0.0	0.0	0.0	0.0	3.9	2.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 중 취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를 보면 43.7%가 직원이 1~4명에 불과한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보다 다소 규모가 있는 5~49명 사업장 종사자는 32.5%로 보훈대상자 대부분(76.2%)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규모가 큰 500인 이상의 경우는 8.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근무여건, 임금 등 복지혜택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복지격차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64.6%, 60대 이상에서는 80~9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고령자의 경우 주로 작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40대 이하 역시 30대 이하 47.8%, 40대 56.2%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약 14~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자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훈대상 유형별로도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나마 보훈보상대상자 중 13.2%, 국가유공자(본인) 중 10.8%, 제대군인의 9.9%가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7〉 사업장 종사자 규모

(단위: %)

구분		1~4명	5~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2018년		51.5	28.9	6.6	4.4	2.9	1.9	3.9
2021년		43.7	32.5	6.5	5.9	2.9	1.9	6.5
성별	남성	43.5	32.0	6.5	5.8	3.1	2.2	7.0
	여성	45.8	36.7	6.8	7.1	1.4	0.1	2.2
연령 대별	30대 이하	14.9	32.9	10.2	12.5	5.6	4.3	19.7
	40대	27.4	28.8	8.9	10.8	4.6	4.8	14.6
	50대	31.7	32.9	9.7	8.5	4.4	2.7	10.0
	60대	48.0	38.3	5.3	4.0	2.1	1.0	1.3
	70대	63.5	29.2	3.4	2.0	1.1	0.4	0.5
	80대 이상	62.6	30.1	3.6	0.0	0.0	0.0	3.6

구분		1~4명	5~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2.8	30.1	8.1	3.3	2.3	1.1	2.3
	국가유공자(본인)	38.1	32.2	7.9	5.0	3.3	2.6	10.8
	국가유공자(유족)	48.2	35.5	5.6	4.0	2.1	0.8	3.7
	고엽제	66.0	25.1	5.3	1.8	0.9	0.5	0.4
	참전유공자	63.4	30.0	2.5	1.8	1.2	0.4	0.7
	보훈보상대상자	31.8	30.2	7.4	10.9	3.2	3.3	13.2
	5·18민주유공자	48.5	31.9	6.7	6.1	4.6	0.0	2.2
	특수임무	36.3	34.3	6.7	9.2	6.7	1.5	5.4
제대군인		27.9	32.3	8.8	12.5	4.6	4.0	9.9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82.6%, 고용보험 47.7%, 산재보험 50.3%, 퇴직연금/퇴직금이 44.5%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종류별로 가입비율을 비교해보면, 먼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가입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 비교시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비율이 높았다. 50대 이하에서는 90% 이상이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80대 이상에서는 59.6%로 가입비율이 가장 낮았다. 고령의 경우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훈대상별로는 보훈보상대상자 94.4%, 제대군인이 94.0%, 특수임무유공자가 91.8%로 높은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시장 참여시 동시에 가입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입 수준은 취업자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연령별로는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50대 이하에서 70% 정도의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비율은 20% 내외로 다른 보훈대상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퇴직연금/퇴직금 가입비율은 전체적으로 44.5%였으며, 남성(45.6%)이 여성(34.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보훈대상별로는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에서 높은 가입 비중을 보인다.

〈표 5-48〉 취업자의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단위: %)

구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퇴직금
2018년		83.7	37.5	37.8	28.7
2021년		82.6	47.7	50.3	44.5
성별	남성	83.8	48.5	51.3	45.6
	여성	72.6	41.0	41.3	34.8
연령 대별	30대 이하	95.3	75.4	76.0	78.6
	40대	91.8	66.8	68.9	72.5
	50대	90.9	70.0	68.9	62.7
	60대	83.6	48.7	50.7	39.4
	70대	70.5	18.1	24.7	16.7
	80대 이상	59.6	14.7	14.7	6.9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83.8	46.1	48.3	40.3
	국가유공자(본인)	83.3	54.8	56.3	51.9
	국가유공자(유족)	80.9	44.3	46.4	37.0
	고엽제	70.2	20.8	26.0	16.8
	참전유공자	71.2	16.8	23.9	16.4
	보훈보상대상자	94.4	68.6	69.8	64.1
	5·18민주유공자	59.0	39.8	42.0	36.0
	특수임무	91.8	55.7	60.0	52.5
제대군인		94.0	68.4	69.3	68.2

주: 취업자에는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됨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5점 만점), 대부분 거의 유사한 수준의 3점 대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가 가장 높은 3.6점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소득(임금수준)이 3.0점으로 가장 낮았다. 개인발전가능성과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도 3.1점으로 역시 낮았다. 남녀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고용안정성과 복리후생 만족도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앞의 조사결과에서 사업장 규모, 사회보험 가입비율 등에서 차이를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대상별로 살펴볼때에도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현재의 직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9〉 현 직장 관련 만족도 점수

(단위: 점)

구분		근무환경 (안전, 위생)	근무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소득 (임금수준)	개인의 발전가능성	고용 안정성	복리후생
2018년		3.3	3.3	3.5	2.9	3.0	3.2	3.0
2021년		3.5	3.5	3.6	3.0	3.1	3.3	3.1
성별	남성	3.5	3.5	3.6	3.0	3.1	3.3	3.1
	여성	3.4	3.5	3.6	3.0	3.0	3.1	2.9
연령대 별	30대 이하	3.7	3.6	3.7	3.2	3.3	3.7	3.4
	40대	3.6	3.5	3.7	3.1	3.3	3.5	3.3
	50대	3.5	3.5	3.6	3.1	3.2	3.4	3.2
	60대	3.5	3.5	3.6	3.1	3.1	3.2	3.0
	70대	3.4	3.4	3.6	2.9	3.0	3.1	2.9
	80대 이상	3.5	3.5	3.6	3.1	3.1	3.2	3.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6	3.6	3.7	3.0	3.1	3.3	3.1
	국가유공자(본인)	3.5	3.5	3.6	3.1	3.1	3.4	3.2
	국가유공자(유족)	3.4	3.4	3.6	2.9	3.0	3.1	2.9
	고엽제	3.4	3.4	3.6	2.9	3.0	3.2	3.0
	참전유공자	3.4	3.4	3.6	2.9	3.0	3.2	3.0
	보훈보상대상자	3.4	3.4	3.5	3.0	3.1	3.4	3.1
	5·18민주유공자	3.3	3.3	3.5	2.8	3.0	3.0	2.9
	특수임무	3.3	3.3	3.5	3.0	3.1	3.2	3.1
제대군인		3.7	3.7	3.8	3.3	3.4	3.5	3.3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국가보훈대상자의 구직활동 실태

취업자와 현재 또는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비취업자 중 지난 1년간 구직실패(서류 전형 불합격, 면접 전형 불합격 등)를 경험한 보훈대상자는 8.9%로 2018년에 비해 0.2%p 감소였으며, 이들의 불합격 경험횟수는 평균 4.0회로 나타났다. 한편, 비취업자이면서 현재 또는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합격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5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불합격 경험횟수는 3.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제외한 보훈대상자 10명 중 1명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들 중 현재 취업자를 제외할 경우 이들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비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또는 향후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실패 경험과 구직실패 횟수를 살펴보면, 남성(53.3%)이 여성(48.1%)에 비해 구직에 실패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구직실패 경험횟수 또한 남성이 4.1회로 여성(1.7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구직실패 경험비율은 80대가 8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40대(59.8%)와 70대(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길 원하는 70, 80대의 경우 구직실패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구직실패(불합격) 경험횟수에서는 40대가 6.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구직실패 경험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횟수로는 5·18민주유공자의 불합격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의 경우에도 구직실패 경험과 불합격 경험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제대군인의 경우 군대에서 제대한 후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50〉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험 및 경험횟수

(단위: %, 회)

구분		취업자 및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		현재 또는 향후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	
		구직실패경험	불합격 경험횟수	구직실패경험	불합격 경험횟수
2018년		9.1	4.2	42.7	4.1
2021년		8.9	4.0	53.3	3.8
성별	남성	8.7	4.3	54.2	4.1
	여성	10.7	2.1	48.1	1.7
연령 대별	30대 이하	12.0	4.7	50.9	4.9
	40대	10.3	7.2	59.8	6.6
	50대	9.6	3.3	55.5	2.4
	60대	8.7	3.1	47.4	3.0
	70대	7.5	3.3	58.5	3.7
	80대 이상	3.2	2.0	81.5	2.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8.1	3.0	59.3	3.3
	국가유공자(본인)	8.8	3.5	55.5	2.8
	국가유공자(유족)	8.9	4.5	50.6	3.2
	고엽제	7.2	2.7	46.7	2.1
	참전유공자	6.3	3.2	45.5	4.1
	보훈보상대상자	14.7	6.1	69.8	5.4
	5·18민주유공자	8.4	4.7	44.5	6.4
	특수임무	9.0	4.3	60.2	1.8
제대군인		10.8	4.2	56.6	5.2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은 지난 1년간 취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응답자 중 46.0%가 고연령(‘나이가 많다’)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부족(16.1%)과 기술부족(12.9%)을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 정보부족 6.4%, 인맥없음 5.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로 인해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고연령에 기인한 취업상 어려움은 보훈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보훈대상자의 생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로는 역시 고연령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으며, 전체와 동일하게 일자리 부족과 기술부족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역시 고연령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으며, 50대에서는 일자리 부족(35.3%)을, 30대 이하에서는 기술부족(29.8%)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40대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 고연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0대 이하에서 일자리의 공유가 함께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연령’은 40대가 생각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상당수의 응답자가 고연령을 꼽았지만, 독립유공자는 일자리 부족(37.9%)을, 5·18민주유공자는 건강문제(32.5%)를 주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고연령은 누구나 경험하는 생애주기상의 진행 과정이며, 이 외에도 일자리 부족과 보훈대상자 개인의 역량에 대한 기술 수준의 제고가 필요한 점에서, 보훈대상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기술교육 등과 같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51〉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인맥없음	기술부족	정보부족	일자리 부족	고연령	지위 부작용	의지미약	건강문제	기타
2018년		5.3	14.6	7.6	14.7	50.6	0.6	0.2	4.3	2.2
2021년		5.4	12.9	6.4	16.1	46.0	0.9	0.0	11.1	1.1
성별	남성	5.7	13.9	6.9	15.3	44.5	1.0	0.0	11.3	1.3
	여성	3.6	6.3	2.8	21.5	56.1	0.0	0.0	9.9	0.0
연령 대별	30대 이하	10.9	29.8	15.3	17.7	10.8	0.0	0.0	13.6	1.9
	40대	7.2	16.0	6.3	13.9	37.5	4.4	0.0	12.8	1.9
	50대	4.1	15.8	6.9	35.3	23.1	1.5	0.0	13.4	0.0
	60대	4.7	10.1	3.5	14.0	58.4	0.0	0.0	7.8	1.5
	70대	2.9	1.6	3.5	4.7	77.7	0.0	0.0	9.1	0.6
	80대 이상	0.0	0.0	0.0	0.0	65.2	0.0	0.0	34.8	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0.0	12.4	0.0	37.9	25.1	0.0	0.0	24.6	0.0
	국가유공자(본인)	2.4	19.1	7.5	14.6	39.6	0.4	0.0	15.0	1.5
	국가유공자(유족)	3.2	9.3	0.0	17.1	55.1	0.0	0.0	15.3	0.0
	고엽제	0.0	0.0	12.2	10.7	66.0	0.0	0.0	5.8	5.3
	참전유공자	6.4	0.0	3.2	3.0	80.8	0.0	0.0	6.6	0.0
	보훈보상대상자	4.9	30.2	7.1	12.2	22.8	0.0	0.0	22.7	0.0
	5·18민주유공자	0.0	17.3	0.0	20.1	30.1	0.0	0.0	32.5	0.0
	특수임무	0.0	0.0	0.0	23.6	53.0	0.0	0.0	23.4	0.0
	제대군인	11.2	15.7	13.0	21.9	30.1	3.0	0.0	3.0	2.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으로는 취업지원센터 의뢰(42.7%), 검색 및 구인광고 확인(16.8%),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님(12.7%)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직접 찾아다님, 이력서 작성/면접 컨설팅 참여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취업지원센터 의뢰, 개인적 인맥 등의 비율은 감소한 모습이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은 취업지원센터 의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30대 이하는 이력서 작성/면접 컨설팅 참여, 직접 찾아다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52〉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

(단위: %)

구분		취업 지원 센터 의뢰	개인적 인맥	검색 및 구인 광고 확인	이력서 작성, 면접 컨설팅 참여	직업 상담 및 취업 박람회 참여	직업 교육 훈련 참여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 님	기타	계
2018년		50.5	20.3	14.4	3.7	1.0	2.3	4.3	1.6	100.0
2021년		42.7	14.4	16.8	9.8	2.1	1.4	12.7	0.1	100.0
성별	남성	41.7	14.7	16.1	10.8	2.0	1.3	13.2	0.2	100.0
	여성	48.9	12.2	21.6	3.5	2.2	2.3	9.3	0.0	100.0
연령 대별	30대 이하	30.1	13.0	14.2	20.0	2.2	3.8	16.2	0.4	100.0
	40대	44.9	5.6	20.7	12.8	2.0	2.0	12.1	0.0	100.0
	50대	36.5	22.1	27.5	4.1	1.4	1.4	6.9	0.0	100.0
	60대	41.1	19.1	14.9	10.2	1.0	1.0	12.4	0.2	100.0
	70대	54.6	8.8	10.9	6.1	3.6	0.0	15.9	0.0	100.0
	80대 이상	65.2	34.8	0.0	0.0	0.0	0.0	0.0	0.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1.4	23.7	12.6	0.0	0.0	0.0	12.4	0.0	100.0
	국가유공자(본인)	53.6	11.6	12.8	12.2	0.8	0.0	9.0	0.0	100.0
	국가유공자(유족)	33.7	21.2	23.3	6.2	0.0	0.0	15.6	0.0	100.0
	고엽제	58.8	12.2	23.3	0.0	0.0	0.0	5.6	0.0	100.0
	참전유공자	49.6	15.9	3.2	6.2	6.4	0.0	18.7	0.0	100.0
	보훈보상대상자	41.9	12.9	22.8	14.7	2.4	0.0	2.6	2.5	100.0
	5·18민주유공자	30.5	25.9	23.8	0.0	0.0	0.0	13.5	6.2	100.0
	특수임무	46.0	23.5	14.3	0.0	0.0	0.0	16.3	0.0	100.0
	제대군인	37.5	9.0	18.2	14.1	3.9	5.1	12.3	0.0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구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구인 정보제공(41.2%),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33.1%),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2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구직이 되지 않은 이유 부문과 연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구인 정보제공과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의 필요성은 남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남성의 경우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제공에 대한 욕구가, 여성의 경우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구인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전체 대상의 결과처럼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구인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지만, 특징적인 점은 30대 이하에서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에 대한

욕구가 5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80대 이상에서는 정보제공 이외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제공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보훈 대상별로는 대부분에서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구인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만,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대상에서 구직활동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을 꼽았다.

〈표 5-53〉 구직활동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위: %)

구분		적성검사 및 상담지원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구인 정보제공 ¹⁾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제공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	기타	계
2018년		5.9	47.1	23.0	22.7	1.3	100.0
2021년		3.7	41.2	20.0	33.1	2.0	100.0
성별	남성	3.7	40.6	20.7	33.2	1.9	100.0
	여성	4.0	44.6	15.5	32.6	3.3	100.0
연령 대별	30대 이하	4.4	33.7	11.1	50.9	0.0	100.0
	40대	0.8	42.1	25.9	31.2	0.0	100.0
	50대	6.3	43.3	19.0	30.0	1.4	100.0
	60대	3.5	40.5	24.4	29.9	1.7	100.0
	70대	3.5	43.3	18.0	29.9	5.4	100.0
	80대 이상	0.0	65.2	34.8	0.0	0.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0.0	38.4	0.0	61.6	0.0	100.0
	국가유공자(본인)	5.8	39.5	20.5	31.6	2.6	100.0
	국가유공자(유족)	3.3	46.8	18.5	29.8	1.5	100.0
	고엽제	0.0	45.1	18.1	24.4	12.5	100.0
	참전유공자	0.0	40.6	25.5	30.9	3.0	100.0
	보훈보상대상자	4.8	32.9	24.8	37.5	0.0	100.0
	5·18민주유공자	0.0	23.7	26.3	49.9	0.0	100.0
	특수임무	8.0	53.9	15.0	23.2	0.0	100.0
	제대군인	4.1	38.1	18.9	38.0	1.0	100.0

주: 1) 2018년 조사의 경우 다양한 정보제공(30.3%)과 구체적·정확한 구인정보(16.8%)의 합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가 희망하고 있는 직업종류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관리자(16.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6.3%)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15.4%), 서비스

종사자(13.5%) 등의 순이었다. 희망하는 직업 종류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남성은 관리자(17.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6.8%)에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단순노무(28.0%), 서비스업(25.3%)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5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대 이하의 경우 주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60대에서는 서비스종사자, 70, 80대의 경우 단순노무, 농림어업 종사자 등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훈대상별로 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관리자, 전문가 등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의 경우 농림어업과 단순노무 등을 다소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훈대상별 성별 혹은 연령의 특성이 반영된 차이일 것으로 사료된다.

〈표 5-54〉 희망하고 있는 직업 종류

(단위: %)

직업구분	2018년	2021년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관리자	12.8	16.6	17.6	7.9	21.3	23.9	20.9	15.7	10.5	9.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9	16.3	16.8	13.0	25.8	25.5	22.1	14.3	8.1	6.1
사무종사자	10.1	10.0	9.8	11.1	19.4	17.2	11.6	7.6	4.5	7.2
서비스종사자	15.1	13.5	12.1	25.3	11.2	9.5	12.5	17.1	14.1	8.2
판매종사자	6.3	3.7	3.4	6.7	4.3	2.7	3.9	3.4	4.1	3.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2.9	10.6	11.2	5.5	0.3	2.4	4.3	11.9	19.7	21.6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8.5	8.5	9.3	1.4	8.1	8.6	11.3	10.1	6.3	1.2
장치기계 등 종사자	4.9	4.7	5.2	0.8	5.9	5.4	5.5	4.4	4.3	0.0
단순노무	14.5	15.4	13.8	28.0	0.9	2.9	7.5	15.1	28.5	42.4
군인	0.8	0.8	0.8	0.5	2.8	1.9	0.5	0.4	0.0	0.0
직업구분	대상분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관리자	21.7	16.0	13.4	10.5	10.9	19.0	13.1	17.6	2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4	17.9	13.6	4.2	8.2	23.7	22.3	17.2	24.5	
사무종사자	6.3	13.9	6.8	4.0	4.7	16.1	5.6	9.8	13.7	
서비스종사자	11.3	13.1	17.7	16.3	11.2	13.8	14.0	13.9	9.9	
판매종사자	6.2	3.0	5.0	3.4	4.2	4.4	3.6	2.8	2.6	

직업구분	대상분류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고엽제	참전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제대 군인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8.4	10.8	9.6	27.5	20.6	2.6	9.9	4.9	3.2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1.2	9.2	9.0	6.0	6.7	5.7	7.9	14.3	8.6
장치기계 등 종사자	2.1	4.8	4.6	3.8	4.1	7.1	6.9	5.5	5.1
단순노무	15.4	11.4	20.1	24.3	29.5	6.5	16.6	11.2	3.6
군인	0.0	0.2	0.3	0.0	0.0	1.1	0.0	2.9	2.7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가 희망하는 월소득 수준은 평균적으로 월 약 385.4만 원으로 2018년 (331.9만 원)에 비해 53.5만 원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99.7만 원, 여성이 268.7만 원으로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500만 원 이상이었으며, 특히 40대의 경우에는 거의 600만 원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하는 월소득의 수준은 다소 낮아지고 있으며, 80대 이상은 평균 192.8만 원으로 젊은층과 노년층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훈대상별로는 제대군인이 가장 높고,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에서 400만 원대의 소득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 보면 희망하는 월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로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입(40.0%)이며, 다음으로 안정성(35.3%)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조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수입의 비중(52.9%) 보다 감소하고 이에 반해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비중이 다소 증가한 모습이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수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수입이 중요하다는 응답한 비율이 남성(39.1%)에 비해 여성(47.7%)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안정성에 대해 고려한다는 비율 또한 36.0%로 수입과 안정성 두 부분을 직업선택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입과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50대 이하는 '안정성'이, 60대 이상에서는 '수입'이 직업선택에 있어 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특징적인 점은 80대 이상에서 직업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수입’ 다음으로 ‘보람·자아성취’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점이다. 보훈대상별로는 대부분이 수입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제대군인만이 안정성이 38.6%로 수입 31.2%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55〉 희망하는 월소득 및 직업선택 요인

(단위: 만 원, %)

구분		월소득	직업선택시 고려사항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2018년		331.9	3.1	30.0	52.9	11.1	2.7
2021년		385.4	2.8	35.3	40.0	16.1	5.7
성별	남성	399.7	2.9	36.0	39.1	15.7	6.2
	여성	268.7	1.4	29.8	47.7	19.5	1.5
연령 대별	30대 이하	505.0	4.3	38.0	35.8	10.4	11.0
	40대	598.8	2.7	38.1	37.7	12.3	9.1
	50대	474.4	3.4	40.7	33.9	15.0	6.7
	60대	333.3	2.4	34.4	38.0	21.4	3.8
	70대	259.3	1.9	32.1	47.5	15.0	3.6
	80대 이상	192.8	4.8	21.0	46.4	26.6	1.2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64.9	7.1	29.0	46.5	14.4	3.0
	국가유공자(본인)	407.5	3.1	36.4	35.9	18.5	6.1
	국가유공자(유족)	362.7	2.4	33.4	45.9	14.2	4.0
	고엽제	236.5	2.1	35.5	41.6	15.1	5.7
	참전유공자	259.0	1.2	32.8	47.8	14.4	3.8
	보훈보상대상자	443.1	4.0	36.4	39.1	11.0	9.2
	5·18민주유공자	357.9	4.5	31.3	44.1	14.4	5.7
	특수임무	431.5	2.8	31.9	49.2	11.1	5.0
제대군인		493.3	3.7	38.6	31.2	17.8	8.4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보훈 관련법에 따른 취업 수강료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8.6%로 2018년(1.8%)에 비해 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9.1%로 여성의 4.3%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가장 많은 22.3%, 40대가 18.3%로 중고령, 노령층에 비해서 수강료 지원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관련

정보 접근 격차에 의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수강료 지원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는 제대군인의 경우 21.9%로 수강료 지원 경험이 다른 보훈대상자에 비해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 보훈보상대상자 10.8%, 국가유공자(본인) 10.4% 등으로 다른 대상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취업 수강료 지원의 실질적 도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훈 관련법에 따른 수강료 지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70% 정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비율(14.4%) 또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30대 이하의 경우 75% 정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70대의 경우 그 경험 비율도 낮을뿐더러 실질적 도움에 대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을 위한 정보 혹은 제도에 대한 접근성에서 연령별 격차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대상별로 보면 5·18민주유공자에서 취업 수강료 지원 경험자 중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56〉 보훈 관련법에 따른 취업 수강료 지원 경험 및 도움 여부

(단위: 만 원, %)

구분		수강료 지원 경험	취업 수강료 지원의 실질적 도움				
			전혀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18년		1.8	-				
2021년		8.6	9.6	9.5	13.8	47.4	19.7
성별	남성	9.1	9.3	9.9	14.0	47.6	19.2
	여성	4.3	14.4	1.6	10.1	44.7	29.2
연령 대별	30대 이하	22.3	8.6	5.5	11.1	46.4	28.5
	40대	18.3	4.1	14.3	18.4	51.3	12.0
	50대	10.7	7.7	9.6	13.8	50.1	18.8
	60대	5.8	13.4	10.3	12.4	42.2	21.7
	70대	1.1	49.2	4.3	10.1	36.5	0.0
	80대 이상	0.0	-	-	-	-	-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6.3	0.0	33.6	0.0	49.0	17.4
	국가유공자(본인)	10.4	10.2	9.1	14.0	47.0	19.8
	국가유공자(유족)	1.3	11.6	0.0	22.0	42.4	24.0

구분	수강료 지원 경험	취업 수강료 지원의 실질적 도움				
		전혀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고엽제	2.2	21.4	20.1	0.0	58.6	0.0
참전유공자	1.2	48.7	0.0	17.9	33.4	0.0
보훈보상대상자	10.8	10.6	3.2	17.6	61.3	7.2
5·18민주유공자	3.1	15.1	0.0	0.0	68.3	16.6
특수임무	4.1	15.1	0.0	34.7	33.5	16.8
제대군인	21.9	7.5	10.7	13.1	47.8	20.9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제대군인의 구직활동 실태

다음에서는 향후 취업 지원제도의 활용 제고를 위해 현재 국가보훈처의 취업 지원 제도의 주 대상인 제대군인에 한하여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10월 기준³⁴⁾ 제대군인의 규모는 99,363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11.82%를 차지한다. 더욱이 제1차 미래 보훈인구 추계(2020-2067)를 보면 제대군인의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4.2%로 빠르게 증가하여 2030년 경 기준연도(2020년)도 대비 50% 이상 증가한 14만 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국가보훈처, 2021, p.81). 또한 복무 형태에 따라 매년 20대 후반~30대 초반, 40대 중반, 50대 중반의 신규 등록자가 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국가보훈처, 2021, p.83). 이러한 점에서 제대군인의 현재 구직활동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보훈처의 취업 지원제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대상 중 제대군인은 총 1,135명으로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30대 이하 28.9%, 40대 20.1%, 50대 19.9%, 60대 19.7%, 70대 8.1%, 80대 이상이 3.3%로 나타난다. 이들 중 취업자는 76.4%,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는 7%, 구직의사가 없는 비취업자는 16.6%로 나타난다.

34) 국가보훈처. (2021b). 2021년 10월 말 보훈대상자 기본현황.

〈표 5-57〉 제대군인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연령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제대군인	28.9	20.1	19.9	19.7	8.1	3.3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대군인 조사대상에서 취업자 및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 중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10.8%로 제대군인의 10명 중 한 명이 구직실패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불합격 경험횟수는 4.2회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11.8%, 40대 11.7%, 60대 11.1%로 40대 이하와 6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를 제외하고 현재 또는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 대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5.6%는 구직실패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40, 50대, 그리고 70대에서 실패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표본 조사상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의 경우 연령별로 세분화시 표본수가 적게 나타나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구직실패를 경험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58〉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험 및 경험횟수(제대군인)

(단위: %, 회)

구분	취업자 및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		현재 또는 향후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	
	구직실패경험	불합격 경험횟수	구직실패경험	불합격 경험횟수
제대군인	10.8	4.2	56.6	5.2
30대 이하	11.8	3.7	46.0	5.0
40대	11.7	5.1	67.0	7.9
50대	9.1	2.6	70.2	2.1
60대	11.1	5.8	59.6	5.5
70대	5.3	3.1	67.0	3.1
80대 이상	-	-	-	-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들이 생각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제대군인 전체적으로 고연령이 30.1%로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 21.9%, 기술부족 15.7%,

정보부족 13.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40-60대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고연령을 주된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우선순위는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40대의 경우 고연령(32.3%), 일자리 부족(20.3%) 등을 주된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50대의 경우 일자리 부족(36.1%), 고연령(26.6%) 등의 이유를, 60대의 경우 고연령(54.1%)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30대 이하의 경우 다른 연령과 다르게 기술 부족(32.9%)을 가장 큰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17.5%), 정보부족(17.0%)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물론 일자리 양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구직의사가 있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직업을 위한 기술훈련 지원과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59〉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제대군인)

(단위: %)

구분	인맥없음	기술부족	정보부족	일자리 부족	고연령	지위 부족	의지미약	건강문제	기타
제대군인	11.2	15.7	13.0	21.9	30.1	3.0	0.0	3.0	2.1
30대 이하	11.8	32.9	17.0	17.5	15.0	0.0	0.0	2.9	3.0
40대	12.2	7.5	12.1	20.3	32.3	7.7	0.0	4.0	3.9
50대	5.9	10.1	10.7	36.1	26.6	5.5	0.0	5.2	0.0
60대	15.1	0.0	10.1	20.7	54.1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80대 이상	-	-	-	-	-	-	-	-	-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으로는 취업지원센터에 의뢰하였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검색 및 구인광고 확인(18.2%), 이력서 작성, 면접컨설팅 참여(14.1%) 등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에 대한 앞선 결과와 연결해보면 취업지원에 대한 정보가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혹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직업상담, 취업 관련 컨설팅 등의 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5-60〉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제대군인)

(단위: %)

구분	취업 지원 센터 의뢰	개인적 인맥	검색 및 구인 광고 확인	이력서 작성, 면접 컨설팅 참여	직업 상담 및 취업 박람회 참여	직업 교육 훈련 참여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님	기타	계
제대군인	37.5	9.0	18.2	14.1	3.9	5.1	12.3	0.0	100.0
30대 이하	29.3	9.0	17.7	14.5	2.8	6.1	20.8	0.0	100.0
40대	47.6	4.1	16.1	15.9	4.1	4.1	8.1	0.0	100.0
50대	25.8	15.6	32.5	5.2	5.1	5.2	10.6	0.0	100.0
60대	50.2	10.0	4.8	20.9	5.2	4.8	4.2	0.0	100.0
70대	53.3	0.0	46.7	0.0	0.0	0.0	0.0	0.0	100.0
80대 이상	-	-	-	-	-	-	-	-	-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또한 제대군인들이 구직활동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구인 정보제공이 38.1%,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이 38.0%로 정보제공과 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30대 이하와 60대에서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40대와 70대에서는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구인 정보제공을, 50대의 경우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제공과 비용 지원을 구직활동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인정보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5-61〉 구직활동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제대군인)

(단위: %)

구분	적성검사 및 상담지원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구인 정보제공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제공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	기타	계
제대군인	4.1	38.1	18.9	38.0	1.0	100.0
30대 이하	5.9	32.3	8.8	53.0	0.0	100.0
40대	0.0	55.9	23.9	20.3	0.0	100.0
50대	5.1	26.6	32.2	31.0	5.2	100.0
60대	5.5	35.1	20.2	39.2	0.0	100.0
70대	0.0	53.3	0.0	46.7	0.0	100.0
80대 이상	-	-	-	-	-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대군인이 희망하고 있는 직업 종류는 관리가 2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5% 등 전체 보훈대상자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세분화해보면 희망하고 있는 직업 종류는 제대군인 전체와 동일하게 나타지만 30대 이하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관리자 직종을 희망하는 등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물론 80대 이상의 경우 제대군인의 표본이 많이 않은 점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5-62〉 희망하고 있는 직업 종류(제대군인)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 자	서비스종 사자	판매종사 자	농림어업 숙련종사 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 등 종사자	단순노무	군인
제대군인	25.9	24.5	13.7	9.9	2.6	3.2	8.6	5.1	3.6	2.7
30대 이하	21.5	25.4	17.8	10.6	4.5	0.3	8.1	7.1	0.7	4.2
40대	31.1	26.8	15.1	5.5	1.8	2.9	10.3	2.4	1.4	2.8
50대	27.5	26.1	12.5	10.2	0.9	4.4	9.5	5.0	2.5	1.4
60대	25.3	21.8	6.1	14.4	2.3	6.2	7.3	5.5	9.6	1.7
70대	29.5	8.4	13.9	10.8	2.7	5.6	5.1	5.2	19.0	0.0
80대 이상	0.0	0.0	0.0	0.0	0.0	49.7	0.0	0.0	50.3	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들이 희망하는 월소득은 493.3만 원으로 보훈대상자 전체가 희망하는 월소득 385.4만 원 보다 백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세분화해보면 40대의 경우 642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50대 510.4만 원 정도로 전체 보훈대상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정성으로 제대군인의 38.6%가 직업선택시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수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세분화해보면 30대와 70대의 경우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0~60대에서는 직업선택 시에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3〉 희망하는 월소득 및 직업선택 요인(제대군인)

(단위: 만 원, %)

구분	월소득	직업선택시 고려사항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기타
제대군인	493.3	3.7	38.6	31.2	17.8	8.4	0.2
30대 이하	484.6	4.8	33.1	36.0	12.3	13.1	0.7
40대	642.0	3.3	39.3	33.8	14.0	9.7	0.0
50대	510.4	4.4	44.0	25.3	21.4	4.9	0.0
60대	342.0	1.7	42.4	23.6	29.0	3.4	0.0
70대	277.7	2.6	37.9	46.0	10.7	2.9	0.0
80대 이상 ¹⁾	129.7	0.0	0.0	25.3	74.7	0.0	0.0

주: 10케이스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해야함.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중 제대군인의 21.9%는 보훈 관련법에 따른 취업 수강료 지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0% 가까이는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취업 수강료 지원 경험은 50대 이하에서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50~6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60대의 경우 수강료 지원 경험이 8.2%로 낮았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6.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40, 50대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정도로 이들의 실태 파악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64〉 보훈 관련법에 따른 취업 수강료 지원 경험 및 도움 여부(제대군인)

(단위: 만 원, %)

구분	수강료 지원 경험	취업 수강료 지원의 실질적 도움				
		전혀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제대군인	21.9	7.5	10.7	13.1	47.8	20.9
30대 이하	26.3	6.8	5.3	7.8	47.7	32.5
40대	28.1	3.5	16.7	19.3	50.2	10.4
50대	23.7	8.4	10.1	16.0	48.8	16.8
60대	8.2	26.9	19.2	7.0	33.7	13.3
70대	-	-	-	-	-	-
80대 이상	-	-	-	-	-	-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7절 노후 보장

1. 금전적 노후준비

보훈대상자와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주된 금전적 준비수단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46.4%가 보훈급여금이라고 응답했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33.3%), 금융자산(7.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보훈급여금 46.8%, 공적연금 34.8%, 금융자산 7.2%로 나타났고, 여성은 보훈급여금 44.9%, 공적연금 28.5%, 주된 준비수단 없음이 12.5%로 준비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남성과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연령별로 75세 이상은 주된 준비수단이 보훈급여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는 반면, 60~64세의 경우 공적연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상별로는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을 제외하고 보훈급여금이 주된 준비수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의 경우 노후 준비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다른 대상에 비해 높았다.

〈표 5-65〉 노후생활을 위한 주된 금전적 준비수단

(단위: %)

구분		보훈 급여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금융자산	부동산 운용	기타	노후준비 수단 없음
2018년		55.2	31.8	0.8	2.2	4.4	2.4	0.4	5.6
2021년		46.4	33.3	1.0	1.4	7.6	3.9	0.2	6.2
성별	남성	46.8	34.8	1.0	1.7	7.2	4.1	0.1	4.2
	여성	44.9	28.5	0.9	0.6	9.0	3.3	0.3	12.5
연령 대별	49세 이하	14.3	49.0	3.4	6.2	16.4	2.8	0.0	8.0
	50세~59세	16.3	54.2	2.0	4.5	9.5	4.1	0.2	9.1
	60세~64세	14.8	61.0	2.0	1.7	9.2	4.2	0.2	6.9
	65세~74세	49.0	35.2	0.8	0.6	6.4	4.0	0.1	3.8
	75세 이상	62.5	19.8	0.2	0.3	5.9	4.1	0.2	6.9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65.0	21.1	0.0	0.7	6.4	3.5	0.0	3.4
	국가유공자(본인)	55.3	35.8	0.6	0.9	4.3	1.9	0.0	1.3
	국가유공자(유족)	36.7	34.1	1.3	1.3	10.2	4.4	0.4	11.6
	고엽제	72.6	17.5	0.7	0.2	4.4	2.8	0.0	1.9

구분	보훈 급여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금융자산	부동산 운용	기타	노후준비 수단 없음
참전유공자	66.6	18.2	0.1	0.7	5.1	5.5	0.0	3.6
보훈보상대상자	42.0	29.8	2.6	3.1	12.6	5.1	0.0	4.8
5·18민주유공자	0.0	44.8	1.2	3.7	16.6	6.4	0.6	26.6
특수임무	0.0	50.3	2.3	4.7	15.6	3.2	0.0	23.8
제대군인	0.0	67.2	2.9	5.0	13.5	4.2	0.2	7.1

주: 2018년의 경우 주된 금전적 준비수단에 1순위로 응답한 경우로, '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에 응답한 수치를 '공적연금'으로, '연금형 부채', '장기 저축성 보험', '주식채권', '예적금'에 응답한 수치를 '금융자산'으로 정리함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보훈대상자와 배우자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 정도만이 해당 연금 중 하나 이상에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3.6%, 여성 2.4%가 해당 연금 중 하나 이상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비율도 높아지다가 75세 이상에서 약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경우 개인연금 수급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수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개인연금 수급액이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수급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75세 이상의 경우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수급액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별로 살펴볼 때에도 대부분 개인연금 수급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수임무 유공자의 경우 퇴직연금액이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표 5-66〉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수급여부와 월평균 수령액(배우자포함)

(단위: %, 만 원, 월)

구분		연금수급여부		개인연금액	퇴직연금액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	
		있다	없다			금액	받은 연수
2018년		2.2	97.8	39.6	12.5	20.8	1.4
2021년		3.3	96.7	44.8	8.4	25.5	1.1
성별	남성	3.6	96.4	46.5	9.3	26.3	1.1
	여성	2.4	97.6	36.9	4.2	21.9	1.1
연령 대별	49세 이하	1.1	98.9	126.3	5.9	0.0	0.0
	50세~59세	1.8	98.2	45.1	7.1	0.0	0.0
	60세~64세	4.6	95.4	65.1	0.0	2.1	0.1
	65세~74세	4.1	95.9	47.2	9.2	9.5	0.3
	75세 이상	3.2	96.8	31.0	10.2	51.2	2.2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4	97.6	49.8	0.0	1.5	1.8
	국가유공자(본인)	2.4	97.6	51.8	11.2	33.8	1.0
	국가유공자(유족)	3.1	96.9	46.7	9.1	16.5	0.7
	고엽제	3.5	96.5	27.3	8.4	34.6	1.7
	참전유공자	4.4	95.6	30.4	8.0	38.2	1.8
	보훈보상대상자	2.4	97.6	36.7	0.0	0.0	0
	5·18민주유공자	6.3	93.7	89.3	9.7	9.1	0.3
	특수임무	1.9	98.1	65.8	12.7	0.0	0.0
	제대군인	3.1	96.9	76.1	3.8	0.0	0.0

주: 연금수급 여부에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321개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했거나 준비 가능한 월평균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월평균 생활비는 200.4만 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평균 생활비는 261.4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준비한 혹은 준비 가능한 월평균 금액은 161.8만 원으로 나타나, 최소·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에 비해 실제 준비하거나 준비 가능한 금액과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 금액이 더 높게 응답했으며, 준비한(준비 가능한) 금액은 남성 177.0만 원, 여성 113.7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준비한

(준비 가능한) 금액은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특수 임무유공자의 경우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에 비해 준비한(준비 가능한) 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7〉 노후생활 월평균 생활비

(단위: 만 원)

구분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준비한(준비가능한)금액
2018년		176.3	244.7	126.0
2021년		200.4	261.4	161.8
성별	남성	213.7	277.9	177.0
	여성	158.2	209.0	113.7
연령 대별	49세 이하	278.7	365.4	156.8
	50세~59세	270.5	349.5	196.2
	60세~64세	241.8	311.8	192.3
	65세~74세	198.3	258.6	162.8
	75세 이상	164.5	215.5	150.6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98.9	253.7	185.8
	국가유공자(본인)	233.0	301.1	200.7
	국가유공자(유족)	176.1	233.0	123.3
	고엽제	185.9	244.7	130.5
	참전유공자	168.7	220.9	169.9
	보훈보상대상자	241.0	316.0	128.7
	5·18민주유공자	200.9	274.8	109.5
	특수임무	215.6	278.7	100.6
	제대군인	277.0	354.3	195.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노후를 위한 금전적 준비 상황을 본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48.9%가 잘되어있지 않다, 0.9%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해 노후를 위한 금전적 준비 상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2.6%로 남성의 0.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경우 1.3%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52.3%가 잘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해 이들의 금전적 준비 상황이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임무 유공자도 4.3%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8〉 노후를 위한 금전적 준비 상황 평가

(단위: %)

구분		아주 잘되어있다	잘되어있다	보통이다	잘되어 있지않다	전혀 되어있지 않다	계
전체		1.8	6.0	42.3	48.9	0.9	100.0
성별	남성	1.8	6.2	43.0	48.6	0.4	100.0
	여성	1.6	5.5	40.4	49.9	2.6	100.0
연령대 별	49세 이하	1.2	3.1	42.1	53.2	0.3	100.0
	50세~59세	2.2	7.9	47.7	41.1	1.1	100.0
	60세~64세	2.7	10.2	45.5	40.6	1.1	100.0
	65세~74세	2.2	7.2	43.2	46.8	0.5	100.0
	75세 이상	1.3	4.8	40.3	52.3	1.3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7	7.1	49.2	40.6	0.5	100.0
	국가유공자(본인)	2.6	9.9	51.0	36.3	0.1	100.0
	국가유공자(유족)	1.7	5.1	39.2	52.0	2.1	100.0
	고엽제	0.9	4.3	39.5	55.4	0.0	100.0
	참전유공자	1.0	3.4	34.7	60.6	0.3	100.0
	보훈보상대상자	0.5	4.0	38.3	56.9	0.3	100.0
	5·18민주유공자	0.3	2.4	29.1	60.4	7.8	100.0
	특수임무	0.9	1.0	33.8	59.9	4.3	100.0
	제대군인	2.2	7.4	51.2	38.5	0.6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노후 희망 주거 형태 및 지역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9.0%가 개인주택으로 응답했다. 인구통계학적,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개인주택을 희망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보훈대상자 전용 임대아파트와 양로 및 요양시설의 경우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데, 고령보훈대상자 전용 임대아파트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다가 75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약간 하락한 반면, 양로 및 요양시설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다가 75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15.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초고령자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양로 및 요양시설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표 5-69〉 노후 희망 주거형태

(단위:%)

구분		고령보훈대상자 전용임대아파트	양로 및 요양시설	개인주택	기타	계
2018년		10.4	11.1	78.3	0.2	100.0
2021년		9.7	11.2	79.0	0.1	100.0
성별	남성	10.1	9.7	80.1	0.1	100.0
	여성	8.2	16.0	75.6	0.1	100.0
연령 대별	49세 이하	6.5	4.3	89.2	0.0	100.0
	50세~59세	6.8	6.3	86.6	0.3	100.0
	60세~64세	10.5	7.9	81.4	0.3	100.0
	65세~74세	11.7	9.7	78.5	0.1	100.0
	75세 이상	9.2	15.4	75.4	0.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3.5	11.5	74.5	0.4	100.0
	국가유공자(본인)	11.4	10.3	78.3	0.0	100.0
	국가유공자(유족)	8.2	13.8	77.9	0.1	100.0
	고엽제	12.1	10.5	77.3	0.1	100.0
	참전유공자	11.0	12.3	76.6	0.0	100.0
	보훈보상대상자	9.5	6.7	83.5	0.2	100.0
	5·18민주유공자	11.1	8.8	80.2	0.0	100.0
	특수임무	13.4	6.0	80.5	0.0	100.0
	제대군인	5.4	3.6	90.7	0.3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형태를 양로 및 요양시설이라고 응답한 보훈대상자의 희망 양로 및 요양시설 유형은 보훈요양원 32.5%, 무의탁 보훈대상자 전용 양로시설 28.1%로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양로시설과 민간양로시설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응답비율이 대체로 낮아졌으며, 보훈요양원과 무의탁보훈대상자 전용 양로 시설의 경우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70〉 희망 양로 및 요양시설 유형

(단위: %)

구분		무의탁보훈 대상자전용 양로시설	국공립양로 시설	민간양로 시설	장기요양 시설	보훈요양원	계
2018년		43.8	10.9	9.6	5.6	30.0	100.0
2021년		28.1	14.1	11.1	14.3	32.5	100.0
성별	남성	28.3	14.9	9.8	12.7	34.3	100.0
	여성	27.7	12.6	13.5	17.3	29.0	100.0
연령 대별	49세 이하	20.5	21.9	16.4	16.6	24.5	100.0
	50세~59세	31.0	11.7	14.3	16.1	26.9	100.0
	60세~64세	18.6	19.2	19.4	22.5	20.3	100.0
	65세~74세	32.3	15.7	7.8	8.6	35.5	100.0
	75세 이상	27.3	12.6	11.3	15.8	33.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0.1	25.0	16.4	11.3	27.3	100.0
	국가유공자(본인)	20.6	16.8	11.3	12.1	39.2	100.0
	국가유공자(유족)	27.8	11.9	12.6	18.0	29.6	100.0
	고엽제	23.1	16.6	3.2	6.3	50.8	100.0
	참전유공자	35.7	12.9	7.6	11.6	32.1	100.0
	보훈보상대상자	15.4	23.3	24.9	11.6	24.7	100.0
	5·18민주유공자	32.2	18.0	23.7	7.0	19.1	100.0
	특수임무	29.4	16.2	14.7	16.0	23.8	100.0
	제대군인	34.5	22.2	22.0	16.7	4.6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형태를 개인주택으로 응답한 보훈대상자 중 희망하는 개인주택 유형을 살펴본 결과, 43.7%가 단독주택, 51.1%가 아파트, 5.2%가 연립·다세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희망 동거자로는 66.2%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은 12.2%로 낮았고, 혼자 생활하는 것을 응답한 비중도 21.3%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81.0%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16.7%로 가장 낮고 희망동거자로 혼자 생활하는 것을 응답하는 비중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75세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20.2%로 가장 높았다.

〈표 5-71〉 노후 희망 개인주택 유형 및 희망 동거자

(단위:%)

구분		희망 개인주택				희망 동거자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	부부거주	자녀동거	혼자생활	기타
2018년		52.6	42.9	4.5	-	69.6	11.0	19.4	-
2021년		43.7	51.1	5.2	0.1	66.2	12.2	21.3	0.3
성별	남성	44.9	49.8	5.2	0.1	81.0	5.6	13.2	0.2
	여성	39.6	55.5	5.0	0.0	16.7	34.3	48.3	0.7
연령대별	49세 이하	39.9	57.6	2.5	0.0	85.1	2.0	12.5	0.4
	50세~59세	41.2	55.8	2.8	0.2	77.5	5.8	16.5	0.2
	60세~64세	41.3	55.1	3.6	0.0	75.5	6.4	17.9	0.2
	65세~74세	42.8	51.5	5.6	0.1	67.8	8.3	23.4	0.5
	75세 이상	46.2	47.3	6.3	0.2	56.0	20.2	23.6	0.2
대상분류	독립유공자	38.7	56.1	5.2	0.0	62.5	14.8	22.0	0.6
	국가유공자(본인)	42.7	52.5	4.6	0.1	83.3	5.8	10.7	0.2
	국가유공자(유족)	41.8	53.1	5.0	0.1	38.3	23.6	37.5	0.5
	고엽제	44.9	48.8	6.1	0.2	83.8	4.4	11.6	0.1
	참전유공자	49.2	43.4	7.2	0.2	74.4	9.1	16.4	0.1
	보훈보상대상자	40.8	55.0	4.2	0.0	71.7	5.8	22.2	0.3
	5·18민주유공자	47.8	51.0	1.2	0.0	69.4	6.2	24.4	0.0
	특수임무	44.8	50.3	4.9	0.0	66.2	11.3	22.5	0.0
	제대군인	39.8	57.5	2.7	0.0	86.3	2.8	10.6	0.3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거주 지역 형태를 살펴본 결과, 중소도시 41.7%, 대도시 34.1%, 농어촌 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연령대·보훈대상자별로 살펴봐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1.9%가 중소도시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33.5%, 24.5%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41.1%가 중소도시, 36.1%가 대도시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훈대상자별로 살펴봐도 모든 연령대에서 중소도시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5-72〉 희망 거주 지역 형태

(단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타	계
2018년		29.7	41.3	28.8	0.1	100.0
2021년		34.1	41.7	24.1	0.1	100.0
성별	남성	33.5	41.9	24.5	0.1	100.0
	여성	36.1	41.1	22.8	0.1	100.0
연령대별	49세 이하	38.8	45.6	15.5	0.1	100.0
	50세~59세	30.7	46.1	22.8	0.4	100.0
	60세~64세	31.9	43.0	24.9	0.2	100.0
	65세~74세	34.2	42.5	23.3	0.0	100.0
	75세 이상	33.9	39.3	26.8	0.1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1.6	37.1	21.1	0.2	100.0
	국가유공자(본인)	34.5	42.8	22.6	0.1	100.0
	국가유공자(유족)	33.9	41.3	24.6	0.1	100.0
	고엽제	34.4	40.3	25.3	0.0	100.0
	참전유공자	33.3	39.4	27.3	0.0	100.0
	보훈보상대상자	37.0	40.2	22.6	0.3	100.0
	5·18민주유공자	34.0	40.7	25.3	0.0	100.0
	특수임무	30.8	41.0	28.3	0.0	100.0
	제대군인	34.0	47.2	18.6	0.2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노후 희망 서비스

보훈대상자에게 노후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가사간병이 42.1%, 시설 보호가 31.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여가활동 7.8%, 이동지원 5.9%, 정서적 지원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대, 보훈대상 특성별로 살펴봐도 가사간병과 시설보호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65세 이하의 경우 노후 희망 서비스로 여가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5세 이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것 정도가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표 5-73〉 노후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시설 보호	가사 간병	의료 용품	여가 활동	이동 지원	정서적 지원	없음	기타	계
2018년		43.4	38.0	1.3	1.6	9.2	1.9	4.3	0.3	100.0
2021년		31.8	42.1	2.8	7.8	5.9	5.3	3.8	0.5	100.0
성별	남성	31.7	40.6	3.0	8.9	6.0	5.2	4.1	0.6	100.0
	여성	32.3	46.8	2.3	4.3	5.7	5.6	2.8	0.2	100.0
연령 대별	49세 이하	33.1	25.5	2.4	23.0	4.7	6.1	4.9	0.3	100.0
	50세~59세	35.1	33.2	2.4	15.4	4.9	5.2	3.4	0.4	100.0
	60세~64세	30.3	40.3	2.9	10.7	4.7	6.1	4.4	0.6	100.0
	65세~74세	28.8	44.3	3.0	7.8	6.0	5.7	3.8	0.6	100.0
	75세 이상	33.4	46.0	2.9	2.5	6.5	4.7	3.4	0.5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0.1	46.7	2.5	5.1	3.8	6.8	4.2	0.6	100.0
	국가유공자(본인)	30.7	42.1	2.5	9.4	6.4	5.2	3.2	0.6	100.0
	국가유공자(유족)	32.1	44.8	2.4	5.6	5.8	5.3	3.6	0.4	100.0
	고엽제	34.9	39.8	4.2	4.6	7.1	5.2	4.1	0.2	100.0
	참전유공자	32.8	44.3	3.2	4.1	5.8	5.0	4.1	0.6	100.0
	보훈보상대상자	29.6	33.1	2.9	16.2	6.8	5.5	5.5	0.3	100.0
	5·18민주유공자	29.5	36.1	2.7	12.9	6.7	6.4	3.8	1.9	100.0
	특수임무	35.5	35.3	2.3	12.1	4.1	8.3	1.9	0.5	100.0
	제대군인	30.3	29.4	3.5	20.0	5.3	6.3	4.7	0.4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 경험을 살펴본 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약 10.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 35.3%, 3등급 28.2%, 5등급 14.8%, 2등급 12.0%, 1등급이 5.0%, 인지지원 등급도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급여로는 재가급여가 63.2%로 가장 높았고, 복지용구 25.9%, 시설급여는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수급 비율의 경우 여성이 18.3%로 남성의 7.6%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장기요양 수급비율이 높아진 반면 1등급은 60대에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장기요양 수급비율은 독립유공자(13.7%), 국가유공자(유족) (13.1%), 참전유공자(13.1%)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74〉 장기요양급여 수급 여부 및 지급받은 급여의 종류

(단위: %)

구분		장기요양 수급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급여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시설	재가	복지용구	특별현금 급여
2018년		4.9	20.5		65.7		13.9	-	29.0	62.8	32.6	1.9
2021년		10.1	5.0	12.0	28.2	35.3	14.8	4.6	19.6	63.2	25.9	3.5
성별	남성	7.6	5.3	14.2	23.9	34.5	17.2	5.0	15.6	59.6	23.2	4.0
	여성	18.3	4.7	9.3	34.0	36.2	11.7	4.1	24.8	68.0	29.4	3.0
연령 대별	60대	1.0	24.3	8.4	27.5	19.6	0.0	20.3	17.6	52.3	39.8	18.0
	70대	5.8	6.7	11.0	24.6	28.0	20.7	9.0	10.8	52.9	23.2	5.4
	80대 이상	29.1	4.1	12.4	29.2	37.8	13.4	3.0	22.3	66.5	26.4	2.7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3.7	6.9	13.4	25.2	38.9	13.9	1.6	15.3	71.2	37.0	8.8
	국가유공자(본인)	7.7	3.4	15.9	22.0	29.7	18.1	10.9	12.1	52.9	21.4	5.2
	국가유공자(유족)	13.1	4.4	9.8	34.3	35.0	12.6	4.0	24.8	67.2	28.2	3.4
	고엽제	9.0	12.1	12.0	30.8	23.2	18.2	3.7	15.7	50.3	17.0	0.0
	참전유공자	13.1	5.6	12.8	22.6	41.0	16.0	1.9	18.0	65.5	25.7	2.6
	보훈보상대상자	1.9	0.0	0.0	44.9	12.3	28.1	14.7	0.0	73.0	43.7	0.0
	5·18민주유공자	3.6	15.9	0.0	34.7	32.7	8.7	8.0	26.0	49.3	24.6	8.0
	특수임무	3.0	17.4	17.2	31.0	17.2	0.0	17.2	50.7	14.9	14.9	0.0
	제대군인	0.8	8.6	16.2	47.8	27.4	0.0	0.0	8.1	63.1	36.1	16.2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지자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3.5% 정도만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수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안전지원(방문, 전화 등) 51.4%, 일상생활 지원(가사, 이동 활동 지원) 30.3%, 사회참여(자조 모임 등) 7.9%, 연계서비스(생활 지원, 주거 개선, 건강 지원) 6.5%, 생활교육(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운데 일상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훈대상자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비중이 높고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의 경우 안전지원을 받고 있는 비중이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났다.

〈표 5-7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여부 및 받고 있는 서비스

(단위: %)

구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비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연계서비스
성별	전체	3.5	51.4	7.9	3.9	30.3	6.5
	남성	2.9	52.3	8.6	5.1	25.5	8.5
	여성	5.7	49.7	6.8	1.5	39.1	2.8
연령 대별	60대	1.2	73.1	4.6	6.8	0.9	14.6
	70대	3.0	61.5	14.1	2.8	15.8	5.8
	80대 이상	8.6	40.7	4.2	3.4	48.0	3.6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0	19.5	19.2	0.0	61.2	0.0
	국가유공자(본인)	3.0	56.0	10.5	7.3	14.5	11.6
	국가유공자(유족)	4.1	52.7	7.2	2.4	32.6	5.0
	고엽제	4.4	61.2	2.7	2.6	33.5	0.0
	참전유공자	4.2	42.2	5.4	4.2	42.7	5.5
	보훈보상대상자	3.2	16.0	47.8	10.5	9.5	16.1
	5·18민주유공자	3.0	45.0	11.9	0.0	21.4	21.7
	특수임무	1.3	64.7	0.0	0.0	0.0	35.3
	제대군인	1.4	76.7	11.4	0.0	5.7	6.2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렇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를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살펴본 결과, 73.1%의 응답자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으며, 가족이 도와주고 있어서도 24.2%, 기타 1.7%,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가 1.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족이 도와주고 있어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보훈대상자의 경우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가족이 도와주고 있어서의 비중이 높다.

〈표 5-76〉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가족이 도와주고 있어서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기타
전체		73.1	24.2	1.1	1.7
성별	남성	73.1	24.3	1.0	1.6
	여성	73.0	23.7	1.3	2.0
연령대별	60대	88.3	10.6	0.4	0.7
	70대	75.1	22.7	0.6	1.6
	80대 이상	51.1	43.0	2.9	3.0
대상분류	독립유공자	67.0	28.3	1.8	2.8
	국가유공자(본인)	72.5	25.4	0.8	1.3
	국가유공자(유족)	76.5	20.7	1.0	1.8
	고엽제	68.7	28.7	0.5	2.1
	참전유공자	66.0	30.3	1.6	2.1
	보훈보상대상자	81.8	16.9	0.6	0.7
	5·18민주유공자	82.0	13.7	3.3	1.0
	특수임무	81.7	15.4	1.9	1.0
	제대군인	92.2	6.9	0.2	0.7

주: 65세 미만 해당 없음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4. 희망 안장 및 장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각 국립묘지별로 근거 법에 따라 안장 대상 자격이 정해지는데, 응답자 가운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응답자의 6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73.7%, 여성은 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안장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75세 이상의 경우 82.0%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훈대상자에 따라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희망 안장 장소의 경우 국립묘지가 전체의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별·연령별·보훈대상자 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가족묘지를 희망하는 비중이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77〉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여부와 희망 안장 장소

(단위: %)

구분		안장 대상자	희망 안장 장소			
			국립묘지	가족묘지	공설 및 사설 공원묘지	기타
성 별	전체	69.4	87.3	8.9	3.1	0.7
	남성	73.7	87.8	8.4	3.0	0.7
	여성	55.6	85.1	10.9	3.3	0.7
연 령 대 별	49세 이하	39.7	89.6	6.0	3.8	0.7
	50세~59세	54.7	92.2	5.3	1.3	1.2
	60세~64세	49.8	89.6	6.9	2.8	0.7
	65세~74세	69.5	88.1	7.9	3.2	0.8
	75세 이상	82.0	85.7	10.5	3.2	0.6
대 상 분 류	독립유공자	33.1	76.1	18.8	4.3	0.8
	국가유공자(본인)	92.4	90.8	6.3	2.4	0.6
	국가유공자(유족)	41.6	83.6	12.1	3.6	0.7
	고엽제	91.3	88.6	7.1	3.4	0.9
	참전유공자	91.2	85.0	10.6	3.5	0.9
	보훈보상대상자	23.6	76.7	15.4	5.6	2.3
	5·18민주유공자	83.7	84.7	7.9	5.4	2.0
	특수임무	30.0	88.6	6.6	1.6	3.2
	제대군인	53.2	91.6	5.5	2.6	0.3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안장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 중 주된 이유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거주지와 접근성이 좋아 사후 방문에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58.3%, 고향에 위치가 20.4%, 현 거주지(본인 기준)와의 접근성이 16.4%, 기타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연령별·보훈대상자 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가족 거주지와 접근성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족 거주지와 접근성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표 5-78〉 희망 안장 지역 선호 이유

(단위: %)

구분		현 거주지와 접근성	가족 거주지와 접근성	고향에 위치	기타	계
전체		16.4	58.3	20.4	5.0	100.0
성 별	남성	17.3	57.1	20.0	5.6	100.0
	여성	13.2	62.2	21.7	2.9	100.0
연 령 대 별	49세 이하	11.3	46.5	29.9	12.3	100.0
	50세~59세	11.6	50.2	32.0	6.3	100.0
	60세~64세	18.1	33.6	33.7	14.6	100.0
	65세~74세	16.9	60.5	17.4	5.3	100.0
	75세 이상	16.7	60.5	19.4	3.4	100.0
대 상 분 류	독립유공자	14.8	68.2	16.9	0.0	100.0
	국가유공자(본인)	19.6	53.9	21.4	5.1	100.0
	국가유공자(유족)	13.8	59.7	23.5	3.0	100.0
	고엽제	23.5	55.3	16.9	4.4	100.0
	참전유공자	15.8	61.3	17.4	5.5	100.0
	보훈보상대상자	15.5	55.3	14.9	14.3	100.0
	5·18민주유공자	16.7	65.9	7.0	10.4	100.0
	특수임무	0.0	42.8	29.0	28.2	100.0
	제대군인	11.9	50.9	27.7	9.5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향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8.2%가 매장, 화장 후 자연장 30.1%, 화장 후 야외매장(비석) 11.5%, 봉안 시설 실내에 유골 안치 9.5%, 화장 후 매장, 봉안 등을 하지 않음이 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 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65세 미만의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의 비중이 매장보다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매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79〉 희망하는 장례 유형

(단위: %)

구분		매장	화장 후 자연장	화장 후 야외매장 (비석)	봉안 시설 실내에 유골 안치	야외 담이나 벽 형태의 봉안시설에 유골 안치	화장 후 매장, 봉안 등을 하지 않음	기타	계
전체		38.2	30.1	11.5	9.5	1.4	8.2	1.2	100.0
성별	남성	37.6	30.3	11.7	8.9	1.8	8.4	1.3	100.0
	여성	40.2	29.5	10.6	11.6	0.1	7.2	0.8	100.0
연령대별	49세 이하	20.4	37.2	16.5	9.8	3.6	12.1	0.4	100.0
	50세~59세	23.1	44.0	12.9	5.8	2.5	11.7	0.0	100.0
	60세~64세	31.9	48.4	8.5	5.1	0.0	3.8	2.3	100.0
	65세~74세	36.2	28.6	9.1	12.8	1.2	11.6	0.4	100.0
	75세 이상	42.1	28.0	12.4	8.3	1.4	6.2	1.6	100.0
대상분류	독립유공자	28.8	24.9	25.6	15.2	5.4	0.0	0.0	100.0
	국가유공자(본인)	34.1	31.2	12.6	10.0	1.1	10.3	0.7	100.0
	국가유공자(유족)	41.5	29.5	10.1	10.2	0.0	7.6	1.3	100.0
	고엽제	33.3	34.7	11.5	10.8	3.1	4.5	2.1	100.0
	참전유공자	41.5	27.3	10.5	8.9	2.0	8.6	1.2	100.0
	보훈보상대상자	10.7	60.5	19.3	4.6	0.0	4.8	0.0	100.0
	5·18민주유공자	20.5	35.5	23.0	13.9	0.0	7.0	0.0	100.0
	특수임무	43.4	14.1	14.3	0.0	0.0	14.1	14.1	100.0
	제대군인	30.4	40.5	13.8	5.7	3.7	4.0	2.0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8절 정책 서비스

1. 보훈정책 서비스

보훈정책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양로보호, 보철구 지원, 수송시설 지원, 휴양시설 이용, 사망시 지원, 예우 지원, 재가 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등 서비스에 대하여 인지 여부 및 경험 여부와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정도는 보훈급여금(92.0%), 의료지원(89.7%), 사망시 지원

(86.3%), 이용료 감면(66.7%), 양로보호(48.6%)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보훈정책 서비스 이용 경험은 의료지원(73.2%), 보훈급여금(70.5%), 이용료 감면(35.2%) 등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외 제도에 대한 이용 경험은 10% 내외로 나타나고 있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경험 여부가 항목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런 결과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서비스 항목들이 바로 의료지원, 보훈급여금, 이용료 감면 등의 제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통을 의미하는 중간점(3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망시 지원(3.7점), 이용료 감면(3.7점), 교육 지원(3.5점), 수송시설 지원(3.5점), 휴양 시설 이용(3.5점), 재가복지 서비스(3.5점) 등 서비스 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훈급여금(2.9점), 양로보호(2.9점) 제도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5-80〉 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만족도	(n)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보훈급여금	92.0	8.0	70.5	29.5	2.9	6,990
교육 지원	47.6	52.4	15.7	84.3	3.5	1,677
취업 지원	42.4	57.6	10.6	89.4	3.4	1,085
대부 지원	39.9	60.1	12.0	88.0	3.3	1,223
의료 지원	89.7	10.3	73.2	26.8	3.3	7,246
양로보호	48.6	51.4	3.2	96.8	2.9	313
보철구 지원	31.7	68.3	4.1	95.9	3.3	469
수송시설 지원	46.5	53.5	17.6	82.4	3.5	1,751
휴양시설 이용	35.7	64.3	6.6	93.4	3.5	662
사망시 지원	86.3	13.7	10.4	89.6	3.7	863
예우 지원	43.8	56.2	6.7	93.3	3.2	654
재가복지 서비스	34.2	65.8	4.2	95.8	3.5	383
이용료 감면	66.7	33.3	35.2	64.8	3.7	3,437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런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정도를 2018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의료지원, 양로보호, 휴양시설 이용, 이용료 감면 제도에서 인지 수준이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경험 여부에서는 취업지원, 대부 지원, 의료지원, 양로보호, 휴양시설 이용, 이용료 감면 서비스 제도에서 경험 수준이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이용료 감면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항목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이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의미보다는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기대 수준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료된다.

〈표 5-81〉 2018년도/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비교

(단위: %, 점)

구분	인지 여부(알고있음)		경험 여부(있음)		만족도	
	2018년	2021년	2018년	2021년	2018년	2021년
보훈급여금	-	92.0	-	70.5	-	2.9
교육 지원	50.9	47.6	18.7	15.7	4.0	3.5
취업 지원	45.3	42.4	9.5	10.6	3.8	3.4
대부 지원	40.9	39.9	10.2	12.0	3.8	3.3
의료 지원	86.4	89.7	65.0	73.2	3.8	3.3
양로보호	47.2	48.6	2.3	3.2	3.7	2.9
보철구 지원	38.5	31.7	6.6	4.1	3.9	3.3
수송시설 지원	52.5	46.5	22.5	17.6	3.9	3.5
휴양시설 이용	29.9	35.7	5.6	6.6	4.0	3.5
사망시 지원	89.0	86.3	10.5	10.4	4.1	3.7
예우 지원	-	43.8	-	6.7	-	3.2
재가복지 서비스	-	34.2	-	4.2	-	3.5
이용료 감면	65.5	66.7	33.0	35.2	3.7	3.7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 보훈급여금

보훈정책 서비스 항목 중에서도 보훈급여금은 인지 여부에서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항목이다. 보훈급여금에 대한 인지 여부를 전반

적으로 살펴보면,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92.0%로 ‘모르고 있음’의 응답 비율인 8.0%와 비교하여 매우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이기 때문에 다른 보훈정책 서비스에 비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인지 수준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보훈급여금 인지 여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에 따른 성향을 보면, 남성의 인지 비율인 91.9%와 여성의 인지 비율인 92.4%는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한다. 연령대별 보훈급여금 인지 여부를 보면, 60대 이상이 5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지 비율이 9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경우 인지 비율이 62.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에는 80%대의 인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5-82〉 보훈급여금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
전체		92.0	8.0	100.0
성별	남성	91.9	8.1	100.0
	여성	92.4	7.6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74.2	25.8	100.0
	50대	79.3	20.7	100.0
	60대	86.9	13.1	100.0
	70대	98.4	1.6	100.0
	80대 이상	96.2	3.8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99.1	0.9	100.0
	국가유공자(본인)	96.8	3.2	100.0
	국가유공자(유족)	90.9	9.1	100.0
	고엽제	99.9	0.1	100.0
	참전유공자	99.6	0.4	100.0
	보훈보상대상자	98.1	1.9	100.0
	5·18민주유공자	88.5	11.5	100.0
	특수임무유공자	81.4	18.6	100.0
	제대군인	62.2	37.8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급여금 경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있음’의 응답 비율이 70.5%로 ‘없음’의 응답 비율인 29.5%와 비교하여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은 보훈급여금 수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보훈급여금 경험 여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에 따른 성향을 보면, 남성의 경험 비율은 73.3%로, 여성의 경험 비율은 61.6%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대별 보훈급여금 경험 여부를 보면, 60대 이하에서는 40% 내외 수준이었지만 70대 이상부터는 80% 이상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험 비율이 모두 8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50%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보훈급여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점(3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훈정책 서비스와 관련한 다른 제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한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보훈급여금에 대한 만족도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변동 정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보훈급여금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서비스 제도라는 점에서 보훈급여금에 대한 높은 기대가 오히려 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한다. 보훈급여금 만족도와 관련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만족도는 2.8점이고, 여성은 만족도는 3.1점 수준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대별 특성을 보면, 40대 이하, 50대, 70대는 2.8~2.9점 수준이었고, 60대와 80대 이상은 3.0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 유족), 제대군인은 3.0~3.3점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에는 최소 2.3점에서 최대 2.8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5-83〉 보훈급여금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전체		70.5	29.5	100.0	2.9
성별	남성	73.3	26.7	100.0	2.8
	여성	61.6	38.4	100.0	3.1
연령 대별	40대 이하	40.1	59.9	100.0	2.8
	50대	35.4	64.6	100.0	2.9
	60대	42.9	57.1	100.0	3.0
	70대	89.8	10.2	100.0	2.8
	80대 이상	81.2	18.8	100.0	3.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88.6	11.4	100.0	3.3
	국가유공자(본인)	83.2	16.8	100.0	3.1
	국가유공자(유족)	55.3	44.7	100.0	3.0
	고엽제	99.3	0.7	100.0	2.8
	참전유공자	98.9	1.1	100.0	2.6
	보훈보상대상자	89.8	10.2	100.0	2.7
	5·18민주유공자	39.5	60.5	100.0	2.5
	특수임무유공자	21.0	79.0	100.0	2.3
	제대군인	10.5	89.5	100.0	3.2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교육 지원

교육 지원은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학습보조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배출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보훈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교육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47.6%로, ‘모름’ 응답 비율은 52.4%로 나타났다. 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은 보훈급여금에 대한 인지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2018년도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인 50.9%에 비해서도 낮아진 수준이었다.

교육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도가 여성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전체보다 높은 60%대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지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 5·18민주유공자는 60% 이상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84〉 교육지원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18년		50.9	49.1	100.0
2021년		47.6	52.4	100.0
성별	남성	50.4	49.6	100.0
	여성	38.8	61.2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60.8	39.2	100.0
	50대	62.1	37.9	100.0
	60대	55.8	44.2	100.0
	70대	46.9	53.1	100.0
	80대 이상	34.3	65.7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8.5	51.5	100.0
	국가유공자(본인)	63.9	36.1	100.0
	국가유공자(유족)	42.0	58.0	100.0
	고엽제	54.9	45.1	100.0
	참전유공자	35.8	64.2	100.0
	보훈보상대상자	58.5	41.5	100.0
	5·18민주유공자	66.8	33.2	100.0
	특수임무유공자	52.9	47.1	100.0
	제대군인	48.3	51.7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교육 지원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있음’ 응답 비율이 15.7%로, ‘없음’ 응답 비율인 84.3%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18년도 조사 경험 ‘있음’ 비율인 18.7%보다도 더욱 낮아진 수준이었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답변 비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와 50대

에서는 25~28%대의 경험 정도를 보이나 그 이상 연령대에서는 10%대의 수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5·18민주유공자가 30.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가유공자(본인)의 경험도가 26.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3.5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2018년도 조사결과인 4.0점보다 낮아진 수준이었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가 공히 3.5점으로 같았으며, 연령대나 보훈대상별로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교육 지원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5·18민주유공자가 만족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

〈표 5-85〉 교육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18년		18.7	81.3	100.0	4.0
2021년		15.7	84.3	100.0	3.5
성별	남성	15.7	84.3	100.0	3.5
	여성	15.6	84.4	100.0	3.5
연령 대별	40대 이하	25.2	74.8	100.0	3.6
	50대	27.9	72.1	100.0	3.6
	60대	19.0	81.0	100.0	3.5
	70대	13.0	87.0	100.0	3.5
	80대 이상	10.3	89.7	100.0	3.4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5.4	84.6	100.0	3.5
	국가유공자(본인)	26.9	73.1	100.0	3.5
	국가유공자(유족)	14.5	85.5	100.0	3.5
	고엽제	19.6	80.4	100.0	3.5
	참전유공자	5.3	94.7	100.0	3.1
	보훈보상대상자	20.5	79.5	100.0	3.6
	5·18민주유공자	30.7	69.3	100.0	3.7
	특수임무유공자	17.1	82.9	100.0	3.5
	제대군인	13.2	86.8	100.0	3.6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 취업 지원

취업 지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체 등에 직장을 알선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활향상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직장알선, 직업훈련, 취업수강료, 특별고용 등이 있다.

취업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42.4%로, ‘모름’ 응답 비율인 57.6%보다 낮게 나타났다. 취업지원 인지 정도는 2018년도 ‘알고 있음’ 비율인 45.3%에 비해 소폭 낮아진 수준이었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 비율은 46.3%인 반면 여성의 인지 비율은 29.9%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인지 비율을 보면, 가장 젊은 연령대인 40대 이하에서 69.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지 비율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의 경우 50% 이상의 인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대상들은 20~40%대의 인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86〉 취업 지원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18년		45.3	54.7	100.0
2021년		42.4	57.6	100.0
성별	남성	46.3	53.7	100.0
	여성	29.9	70.1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69.7	30.3	100.0
	50대	61.8	38.2	100.0
	60대	49.8	50.2	100.0
	70대	39.8	60.2	100.0
	80대 이상	25.6	74.4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8.4	61.6	100.0
	국가유공자(본인)	58.4	41.6	100.0
	국가유공자(유족)	33.8	66.2	100.0
	고엽제	44.6	55.4	100.0
	참전유공자	29.1	70.9	100.0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보훈보상대상자	57.3	42.7	100.0
	5·18민주유공자	58.8	41.2	100.0
	특수임무유공자	51.6	48.4	100.0
	제대군인	58.9	41.1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취업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음’ 응답 비율이 10.6%로, ‘없음’ 응답 비율인 89.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인 9.5%에 비해서는 일부 개선된 수준이었으나 앞에서 본 교육지원 경험 여부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먼저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험 비율은 11.3%이고, 여성의 경험 비율은 8.3%로 남성의 경험 비율이 여성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특성을 보면, 40대 이하의 경험 비율이 3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50대 22.5%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이 비율이 13% 이하로 나타나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보면, 제대군인이 25.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가유공자(본인), 보훈보상대상자가 17~18%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 외에 5·18민주유공자도 13.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취업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3.4점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2018년도 조사 결과인 3.8점에 비해 낮아진 수준이었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대별로 주목할 만한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보훈대상 별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만족도가 3.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국가유공자(유족)와 5·18민주유공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5-87〉 취업 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18년		9.5	90.5	100.0	3.8
2021년		10.6	89.4	100.0	3.4
성별	남성	11.3	88.7	100.0	3.4
	여성	8.3	91.7	100.0	3.4
연령 대별	40대 이하	32.2	67.8	100.0	3.4
	50대	22.5	77.5	100.0	3.4
	60대	12.6	87.4	100.0	3.4
	70대	6.2	93.8	100.0	3.4
	80대 이상	4.2	95.8	100.0	3.3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7.7	92.3	100.0	3.1
	국가유공자(본인)	17.1	82.9	100.0	3.3
	국가유공자(유족)	7.5	92.5	100.0	3.5
	고엽제	7.0	93.0	100.0	3.4
	참전유공자	2.3	97.7	100.0	3.2
	보훈보상대상자	18.2	81.8	100.0	3.4
	5·18민주유공자	13.8	86.2	100.0	3.5
	특수임무유공자	10.3	89.7	100.0	3.7
	제대군인	25.0	75.0	100.0	3.4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라. 대부 지원

대부 지원은 장기 저리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주택, 자영사업, 생활안정 대부 등이 있다.

대부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39.9%로 ‘모름’ 응답 비율인 60.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2018년도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인 40.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의 인지 비율이 43.3%로 여성의 인지 비율인 29.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하와 50대는 54~56% 수준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그 외 연령대는 20~40%대의 인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보면, 국가유공자(본인),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서 50% 이상의 인지 비율을 보임으로서 다른 대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88〉 대부 지원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18년		40.9	59.1	100.0
2021년		39.9	60.1	100.0
성별	남성	43.3	56.7	100.0
	여성	29.3	70.7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54.2	45.8	100.0
	50대	55.7	44.3	100.0
	60대	47.3	52.7	100.0
	70대	40.3	59.7	100.0
	80대 이상	24.7	75.3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9.8	60.2	100.0
	국가유공자(본인)	58.3	41.7	100.0
	국가유공자(유족)	33.6	66.4	100.0
	고엽제	38.7	61.3	100.0
	참전유공자	27.7	72.3	100.0
	보훈보상대상자	52.9	47.1	100.0
	5·18민주유공자	53.5	46.5	100.0
	특수임무유공자	50.8	49.2	100.0
	제대군인	43.0	57.0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대부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12.0%로,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인 88.0%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2021년도 대부지원 경험 여부 비율은 2018년도 경험 여부 비율인 10.2%에 비해 더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험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하의 경험도가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의 경험도가 26.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자의 경우로 20.4%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고엽제후유

(의)증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경험도는 3%대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대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3.3점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는 2018년도 만족도인 3.8점에 비해 낮아진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에서 80대 이상은 3.3점~3.4점 수준에 위치해 있었고, 40대 이하와 50대는 3.1점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3.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5·18민주유공자가 3.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제대군인과 보훈보상대상자는 2.9점~3.0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89〉 대부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18년		10.2	89.8	100.0	3.8
2021년		12.0	88.0	100.0	3.3
성별	남성	12.9	87.1	100.0	3.3
	여성	9.5	90.5	100.0	3.3
연령 대별	40대 이하	24.9	75.1	100.0	3.1
	50대	19.4	80.6	100.0	3.1
	60대	15.1	84.9	100.0	3.4
	70대	10.3	89.7	100.0	3.4
	80대 이상	5.7	94.3	100.0	3.3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2.8	87.2	100.0	3.3
	국가유공자(본인)	26.5	73.5	100.0	3.3
	국가유공자(유족)	9.9	90.1	100.0	3.3
	고엽제	3.6	96.4	100.0	3.5
	참전유공자	3.1	96.9	100.0	3.1
	보훈보상대상자	16.9	83.1	100.0	3.0
	5·18민주유공자	15.9	84.1	100.0	3.4
	특수임무유공자	20.4	79.6	100.0	3.2
	제대군인	7.4	92.6	100.0	2.9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 의료 지원

의료 지원은 무료진료 등 국비 의료지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국비 및 감면 진료 등이 있다.

의료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89.7%로 ‘모름’ 응답 비율인 10.3%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2018년도 인지 비율인 86.4%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대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70대와 80대 이상이 92~95%의 비율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40대 이하는 7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본인)의 비율이 9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제대군인과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68~7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90〉 의료지원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18년		86.4	13.6	100.0
2021년		89.7	10.3	100.0
성별	남성	90.9	9.1	100.0
	여성	85.6	14.4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75.2	24.8	100.0
	50대	82.7	17.3	100.0
	60대	85.1	14.9	100.0
	70대	94.9	5.1	100.0
	80대 이상	92.2	7.8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94.7	5.3	100.0
	국가유공자(본인)	97.3	2.7	100.0
	국가유공자(유족)	85.4	14.6	100.0
	고엽제	97.9	2.1	100.0
	참전유공자	95.1	4.9	100.0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보훈보상대상자	87.6	12.4	100.0
	5·18민주유공자	95.6	4.4	100.0
	특수임무유공자	77.5	22.5	100.0
	제대군인	68.3	31.7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의료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73.2%로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인 26.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의료지원 경험 비율은 2018년도 결과인 65.0%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험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와 80대 이상의 경험도가 82~84%로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의 경험도가 9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대군인의 경험도는 3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3.3점 수준으로 2018년도 결과인 3.8점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인지 여부와 경험 여부는 긍정적으로 증가했는데 만족도는 낮아진 상황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와 80대 이상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의 만족도가 모두 3.5점 수준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2.9점 수준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91〉 의료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18년		65.0	35.0	100.0	3.8
2021년		73.2	26.8	100.0	3.3
성별	남성	75.2	24.8	100.0	3.3
	여성	66.9	33.1	100.0	3.2
연령 대별	40대 이하	43.8	56.2	100.0	3.2
	50대	54.6	45.4	100.0	3.2
	60대	60.0	40.0	100.0	3.2
	70대	84.2	15.8	100.0	3.3
	80대 이상	81.7	18.3	100.0	3.3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82.7	17.3	100.0	3.3
	국가유공자(본인)	89.2	10.8	100.0	3.5
	국가유공자(유족)	63.0	37.0	100.0	3.2
	고엽제	95.6	4.4	100.0	3.5
	참전유공자	84.0	16.0	100.0	3.1
	보훈보상대상자	67.6	32.4	100.0	3.2
	5·18민주유공자	86.3	13.7	100.0	3.5
	특수임무유공자	52.3	47.7	100.0	2.9
	제대군인	31.7	68.3	100.0	3.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바. 양로보호

양로보호 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의·식·주 등 일체의 생활 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안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복지타운, 보훈원, 요양원 등 입소지원이 있다.

양로보호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48.6%로 ‘모름’ 응답 비율인 51.4%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2021년도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은 2018년도 응답 비율인 47.2%보다는 긍정적으로 증가한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가 51.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40대 이하에서는 39.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의 인지도가 6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대군인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2〉 양로보호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18년		47.2	52.8	100.0
2021년		48.6	51.4	100.0
성별	남성	50.3	49.7	100.0
	여성	43.3	56.7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39.6	60.4	100.0
	50대	47.1	52.9	100.0
	60대	48.5	51.5	100.0
	70대	51.7	48.3	100.0
	80대 이상	47.8	52.2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0.5	49.5	100.0
	국가유공자(본인)	60.6	39.4	100.0
	국가유공자(유족)	42.5	57.5	100.0
	고엽제	55.7	44.3	100.0
	참전유공자	48.3	51.7	100.0
	보훈보상대상자	44.1	55.9	100.0
	5·18민주유공자	56.8	43.2	100.0
	특수임무유공자	45.7	54.3	100.0
	제대군인	36.6	63.4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양로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3.2%로, ‘없음’ 응답 비율인 96.8%보다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양로보호 경험 여부는 2018년도 결과인 2.3%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험도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의 경험도가 5.4%로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의 경험도가 5.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훈보상대상자와 제대군인의 경험도가 1.1~1.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로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2.9점 수준으로 정책서비스 항목 중에서 보훈급여금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만족도 수준은 2018년도 결과인 3.7점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기도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만족도가 3.3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5·18민주유공자와 제대군인의 만족도가 2.3~2.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3〉 양로보호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18년		2.3	97.7	100.0	3.7
2021년		3.2	96.8	100.0	2.9
성별	남성	2.9	97.1	100.0	2.9
	여성	4.3	95.7	100.0	3.0
연령 대별	40대 이하	1.6	98.4	100.0	2.5
	50대	1.2	98.8	100.0	2.7
	60대	2.5	97.5	100.0	2.8
	70대	2.9	97.1	100.0	2.9
	80대 이상	5.4	94.6	100.0	3.1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0	95.0	100.0	2.8
	국가유공자(본인)	3.3	96.7	100.0	3.0
	국가유공자(유족)	3.4	96.6	100.0	3.0
	고엽제	3.2	96.8	100.0	2.9
	참전유공자	3.5	96.5	100.0	2.9
	보훈보상대상자	1.1	98.9	100.0	3.3
	5·18민주유공자	3.1	96.9	100.0	2.3
	특수임무유공자	2.7	97.3	100.0	3.0
	제대군인	1.9	98.1	100.0	2.4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사. 보철구 지원

보철구 지원은 국가유공 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는 사업이다.

보철구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31.7%로 ‘모름’ 응답 비율인 68.3%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2021년도 인지 비율은 2018년도 인지 비율인 38.5%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의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의 인지도가 4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40.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가유공자(유족)의 인지도는 22.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4〉 보철구지원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18년		38.5	61.5	100.0
2021년		31.7	68.3	100.0
성별	남성	35.0	65.0	100.0
	여성	21.2	78.8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33.1	66.9	100.0
	50대	37.0	63.0	100.0
	60대	32.1	67.9	100.0
	70대	34.8	65.2	100.0
	80대 이상	24.9	75.1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8.5	71.5	100.0
	국가유공자(본인)	49.1	50.9	100.0
	국가유공자(유족)	22.2	77.8	100.0
	고엽제	40.9	59.1	100.0
	참전유공자	27.6	72.4	100.0
	보훈보상대상자	34.8	65.2	100.0
	5·18민주유공자	39.1	60.9	100.0
	특수임무유공자	29.0	71.0	100.0
	제대군인	26.0	74.0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철구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4.1%로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인 95.9%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았다. 2021년도 보철구 지원 경험 비율은 2018년도 6.6%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험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의 경험도가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의 경험 비율이 8.9%로 다른 대상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그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의 경험 비율이 5.9%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특수임무 유공자와 제대군인은 모두 1.0%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보철구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3.3점으로, 2018년도 만족도인 3.9점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만족도는 3.3점이고, 여성의 만족도는 3.4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와 80대 이상에서 3.4점 수준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2.9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3.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2.8점 수준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95〉 보철구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18년		6.6	93.4	100.0	3.9
2021년		4.1	95.9	100.0	3.3
성별	남성	4.7	95.3	100.0	3.3
	여성	2.4	97.6	100.0	3.4
연령 대별	40대 이하	4.5	95.5	100.0	2.9
	50대	3.1	96.9	100.0	3.3
	60대	3.1	96.9	100.0	3.4
	70대	4.2	95.8	100.0	3.2
	80대 이상	4.7	95.3	100.0	3.4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3	96.7	100.0	3.1
	국가유공자(본인)	8.9	91.1	100.0	3.4
	국가유공자(유족)	1.9	98.1	100.0	3.3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고엽제	5.9	94.1	100.0	3.2
	참전유공자	3.4	96.6	100.0	3.1
	보훈보상대상자	2.4	97.6	100.0	3.0
	5·18민주유공자	3.1	96.9	100.0	2.8
	특수임무유공자	1.0	99.0	100.0	3.0
	제대군인	1.0	99.0	100.0	3.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아. 수송시설 지원

수송시설 지원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 상이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예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기차, 버스, 지하철, 여객선, 국내선 항공기 등에 대한 무임 또는 할인 등이 있다.

수송시설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46.5%로 ‘모름’ 응답 비율인 53.5%에 비해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수송시설 지원 인지 비율은 2018년도 52.5%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의 인지도가 다른 연령 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의 인지도가 6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유족)의 인지 비율이 35~3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6〉 수송시설 지원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18년		52.5	47.5	100.0
2021년		46.5	53.5	100.0
성별	남성	50.3	49.7	100.0
	여성	34.2	65.8	100.0

구분		인식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연령 대별	40대 이하	46.2	53.8	100.0
	50대	52.0	48.0	100.0
	60대	47.0	53.0	100.0
	70대	51.5	48.5	100.0
	80대 이상	37.1	62.9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4.2	55.8	100.0
	국가유공자(본인)	65.8	34.2	100.0
	국가유공자(유족)	36.7	63.3	100.0
	고엽제	53.5	46.5	100.0
	참전유공자	43.5	56.5	100.0
	보훈보상대상자	41.5	58.5	100.0
	5·18민주유공자	65.3	34.7	100.0
	특수임무유공자	38.9	61.1	100.0
	제대군인	35.2	64.8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수송시설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17.6%로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인 82.4%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2021년도 수송시설 지원 경험 비율은 2018년도 22.5%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험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와 40대 이하의 경험 비율이 19~2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대와 80대 이상은 14~1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의 경험 비율이 34.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그 비율이 5.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수송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21년도 수송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도 3.9점에 비해 소폭 낮아진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의 만족도는 3.5점으로 여성의 만족도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연령대별 수준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연령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특별히 없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3.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에는 3.1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7〉 수송시설 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18년		22.5	77.5	100.0	3.9
2021년		17.6	82.4	100.0	3.5
성별	남성	19.6	80.4	100.0	3.5
	여성	11.3	88.7	100.0	3.5
연령 대별	40대 이하	19.0	81.0	100.0	3.4
	50대	17.3	82.7	100.0	3.5
	60대	14.0	86.0	100.0	3.5
	70대	20.3	79.7	100.0	3.5
	80대 이상	15.6	84.4	100.0	3.5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3.9	86.1	100.0	3.5
	국가유공자(본인)	34.2	65.8	100.0	3.6
	국가유공자(유족)	11.0	89.0	100.0	3.5
	고엽제	17.3	82.7	100.0	3.5
	참전유공자	15.2	84.8	100.0	3.3
	보훈보상대상자	8.1	91.9	100.0	3.2
	5·18민주유공자	29.8	70.2	100.0	3.5
	특수임무유공자	5.2	94.8	100.0	3.1
제대군인		5.8	94.2	100.0	3.3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자. 휴양시설 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보훈휴양원, 보훈협약콘도 등 이용이 있다.

휴양시설 이용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35.7%로 ‘모름’ 응답 비율인 64.3%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2021년도 휴양시설 이용 지원 인지 비율은 2018년도 29.9%에 비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40대 이하의 인지 비율이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 보면, 국가유공자(본인)의 인지 비율이 50.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유공자(유족)의 인지 비율은 25.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8〉 휴양시설 이용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18년		29.9	70.1	100.0
2021년		35.7	64.3	100.0
성별	남성	39.6	60.4	100.0
	여성	23.1	76.9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47.6	52.4	100.0
	50대	48.1	51.9	100.0
	60대	42.8	57.2	100.0
	70대	35.1	64.9	100.0
	80대 이상	23.9	76.1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2.4	67.6	100.0
	국가유공자(본인)	50.2	49.8	100.0
	국가유공자(유족)	25.6	74.4	100.0
	고엽제	37.3	62.7	100.0
	참전유공자	29.5	70.5	100.0
	보훈대상대상자	43.5	56.5	100.0
	5·18민주유공자	38.2	61.8	100.0
	특수임무유공자	40.0	60.0	100.0
	제대군인	46.7	53.3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휴양시설 이용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6.6%로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인 93.4%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도 휴양 시설 이용 지원 경험 비율은 2018년도 5.6%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험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40대 이하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본인)의 경험도가 12% 수준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반면 참전 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는 3%대 수준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3.5점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2018년도 4.0점 수준에 비해 상당 낮아진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는 3.5점 수준으로 동일하였고, 연령대별 수준에서는 60대 이상에서는 3.5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3.3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5-99〉 휴양시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18년		5.6	94.4	100.0	4.0
2021년		6.6	93.4	100.0	3.5
성별	남성	7.5	92.5	100.0	3.5
	여성	3.5	96.5	100.0	3.5
연령 대별	40대 이하	12.2	87.8	100.0	3.3
	50대	12.5	87.5	100.0	3.4
	60대	8.6	91.4	100.0	3.5
	70대	5.2	94.8	100.0	3.5
	80대 이상	3.5	96.5	100.0	3.5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1	95.9	100.0	3.3
	국가유공자(본인)	11.5	88.5	100.0	3.4
	국가유공자(유족)	3.8	96.2	100.0	3.4
	고엽제	4.8	95.2	100.0	3.5
	참전유공자	3.3	96.7	100.0	3.6
	보훈보상대상자	8.6	91.4	100.0	3.2
	5·18민주유공자	4.8	95.2	100.0	3.4
	특수임무유공자	8.5	91.5	100.0	3.2
	제대군인	12.2	87.8	100.0	3.5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차. 사망시 지원

사망시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고인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영구용 태극기 증정, 국립묘지 안장, 묘비 제작비, 조의금 등이 있다.

사망시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86.3%로 ‘모름’ 응답 비율인 13.7%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2021년도 사망시 지원 인지 비율은 2018년도 89.0%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진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 비율은 88.5%로 여성의 인지 비율인 79.6%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와 80대 이상의 인지 비율은 9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그 비율이 67.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모두 90% 이상의 인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보훈보상대상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에는 모두 60%대의 인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5-100〉 사망시 지원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18년		89.0	11.0	100.0
2021년		86.3	13.7	100.0
성별	남성	88.5	11.5	100.0
	여성	79.6	20.4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67.9	32.1	100.0
	50대	79.8	20.2	100.0
	60대	80.6	19.4	100.0
	70대	91.8	8.2	100.0
	80대 이상	90.6	9.4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74.6	25.4	100.0
	국가유공자(본인)	97.3	2.7	100.0
	국가유공자(유족)	74.6	25.4	100.0
	고엽제	96.3	3.7	100.0
	참전유공자	96.5	3.5	100.0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보훈대상대상자	64.2	35.8	100.0
	5·18민주유공자	92.4	7.6	100.0
	특수임무유공자	62.0	38.0	100.0
	제대군인	74.2	25.8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사망시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10.4%로,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인 89.6%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2021년도 사망시 지원 경험 비율은 2018년도 10.5%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험 비율은 27.2%로 남성의 경험 비율인 5.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80대 이상의 경우 경험 비율이 15.1%로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유족)의 경험도가 2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대군인의 경우 경험 비율이 1.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시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3.7점 수준으로, 2018년도 만족도인 4.1점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50대 이하의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유족)와 독립유공자가 3.7~3.8점 수준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높은 반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2.5점 수준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1〉 사망시 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18년		10.5	89.5	100.0	4.1
2021년		10.4	89.6	100.0	3.7
성별	남성	5.0	95.0	100.0	3.5
	여성	27.2	72.8	100.0	3.7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연령 대별	40대 이하	4.5	95.5	100.0	3.4
	50대	9.1	90.9	100.0	3.5
	60대	11.5	88.5	100.0	3.7
	70대	8.4	91.6	100.0	3.7
	80대 이상	15.1	84.9	100.0	3.7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3.0	87.0	100.0	3.7
	국가유공자(본인)	4.6	95.4	100.0	3.5
	국가유공자(유족)	23.2	76.8	100.0	3.8
	고엽제	3.8	96.2	100.0	3.5
	참전유공자	3.4	96.6	100.0	3.3
	보훈보상대상자	4.0	96.0	100.0	3.2
	5·18민주유공자	6.9	93.1	100.0	3.6
	특수임무유공자	4.2	95.8	100.0	3.0
	제대군인	1.8	98.2	100.0	2.5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카. 예우 지원

예우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진흥과 관련된 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예우 확대와 자긍심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예우 지원과 관련한 대표적인 지원내용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위문사업 등이 있다.

예우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43.8%로 ‘모름’ 응답 비율인 56.2%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예우 지원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 비율은 47.7%로 여성의 인지 비율인 31.5%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7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40대 이하와 8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가 56.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국가유공자(유족)와 보훈보상대상자는 35%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102〉 예우 지원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21년		43.8	56.2	100.0
성별	남성	47.7	52.3	100.0
	여성	31.5	68.5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39.5	60.5	100.0
	50대	47.1	52.9	100.0
	60대	43.7	56.3	100.0
	70대	47.6	52.4	100.0
	80대 이상	38.9	61.1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2.0	58.0	100.0
	국가유공자(본인)	56.9	43.1	100.0
	국가유공자(유족)	32.7	67.3	100.0
	고엽제	49.0	51.0	100.0
	참전유공자	46.5	53.5	100.0
	보훈보상대상자	35.4	64.6	100.0
	5·18민주유공자	49.7	50.3	100.0
	특수임무유공자	39.6	60.4	100.0
	제대군인	41.0	59.0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예우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6.7%로,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인 93.3%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예우 지원은 다른 정책서비스 항목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낮은 경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험 비율은 6.8%로 남성의 경험 비율인 6.6%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70대와 80대 이상의 경우 경험 비율이 7%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의 경험 비율이 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대군인의 경우 경험 비율이 2.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우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3.2점 수준으로, 다른 정책서비스 항목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50대 이하의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가 3.4점 수준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에는 2.4점 수준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3〉 예우 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21년		6.7	93.3	100.0	3.2
성별	남성	6.6	93.4	100.0	3.2
	여성	6.8	93.2	100.0	3.4
연령 대별	40대 이하	3.2	96.8	100.0	2.6
	50대	5.5	94.5	100.0	3.2
	60대	6.8	93.2	100.0	3.3
	70대	7.2	92.8	100.0	3.3
	80대 이상	7.4	92.6	100.0	3.3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7.4	92.6	100.0	3.4
	국가유공자(본인)	9.4	90.6	100.0	3.2
	국가유공자(유족)	6.2	93.8	100.0	3.3
	고엽제	7.1	92.9	100.0	3.3
	참전유공자	6.2	93.8	100.0	3.1
	보훈보상대상자	3.8	96.2	100.0	2.9
	5·18민주유공자	7.8	92.2	100.0	3.3
	특수임무유공자	3.1	96.9	100.0	2.4
제대군인		2.7	97.3	100.0	3.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타. 재가복지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는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찾아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의 재가복지서비스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34.2%로 ‘모름’ 응답 비율인 65.8%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아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 비율은 36.4%로 여성의 인지 비율인 27.5%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특성을 보면, 50대의 경우 인지 비율이 36.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하에서는 그 비율이 27.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가 45.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국가유공자(유족)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그 비율이 27%대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104〉 재가복지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21년		34.2	65.8	100.0
성별	남성	36.4	63.6	100.0
	여성	27.5	72.5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27.3	72.7	100.0
	50대	36.8	63.2	100.0
	60대	33.3	66.7	100.0
	70대	35.2	64.8	100.0
	80대 이상	35.2	64.8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6.5	63.5	100.0
	국가유공자(본인)	45.2	54.8	100.0
	국가유공자(유족)	27.3	72.7	100.0
	고엽제	40.1	59.9	100.0
	참전유공자	34.0	66.0	100.0
	보훈보상대상자	27.7	72.3	100.0
	5·18민주유공자	37.7	62.3	100.0
	특수임무유공자	29.7	70.3	100.0
	제대군인	28.7	71.3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4.2%,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인 95.8%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재가 복지 서비스 지원은 정책 서비스 항목 중에서 양로보호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험 비율은 5.5%로 남성의 경험 비율인 3.8%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80대 이상에서 10.4%의 비율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의 경험 비율이 5.7%로 대상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3.5점 수준으로, 위에서 본 예우 지원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0대 이상의 만족도가 3.6점 수준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가 3.9점 수준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105〉 재가복지 서비스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21년		4.2	95.8	100.0	3.5
성별	남성	3.8	96.2	100.0	3.5
	여성	5.5	94.5	100.0	3.5
연령 대별	40대 이하	1.0	99.0	100.0	3.2
	50대	1.9	98.1	100.0	3.0
	60대	1.2	98.8	100.0	3.3
	70대	2.6	97.4	100.0	3.4
	80대 이상	10.4	89.6	100.0	3.6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3	94.7	100.0	3.9
	국가유공자(본인)	4.4	95.6	100.0	3.3
	국가유공자(유족)	4.3	95.7	100.0	3.5
	고엽제	3.1	96.9	100.0	3.5
	참전유공자	5.7	94.3	100.0	3.6
	보훈보상대상자	1.1	98.9	100.0	3.2
	5·18민주유공자	2.7	97.3	100.0	3.2
	특수임무유공자	1.7	98.3	100.0	3.7
제대군인		0.7	99.3	100.0	3.6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파. 이용료 감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고궁,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이용료 감면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음’ 응답 비율이 66.7%로, ‘모름’ 응답 비율인 33.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21년도 이용료 감면 지원 인지 비율은 2018년도 65.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의 인지 비율이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이하와 8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가 8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의 인지 비율이 75~7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제대 군인의 인지 비율은 52.4%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106〉 이용료 감면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알고 있음	모름	계
2018년		65.5	34.5	100.0
2021년		66.7	33.3	100.0
성별	남성	70.6	29.4	100.0
	여성	54.5	45.5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59.7	40.3	100.0
	50대	71.6	28.4	100.0
	60대	70.0	30.0	100.0
	70대	72.6	27.4	100.0
	80대 이상	57.0	43.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67.3	32.7	100.0
	국가유공자(본인)	82.0	18.0	100.0
	국가유공자(유족)	57.7	42.3	100.0
	고엽제	74.6	25.4	100.0
	참전유공자	68.3	31.7	100.0
	보훈보상대상자	59.0	41.0	100.0
	5·18민주유공자	75.5	24.5	100.0
	특수임무유공자	63.3	36.7	100.0
	제대군인	52.4	47.6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용료 감면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35.2%로,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인 64.8%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험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의 경험 비율이 40.7%로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본인)의 경험 비율이 5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대군인의 경험 비율은 15.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 감면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7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만족도인 3.7점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가 모두 3.7점 수준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특성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의 만족도가 3.8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만족도가 3.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7〉 이용료 감면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계	
2018년		33.0	67.0	100.0	3.7
2021년		35.2	64.8	100.0	3.7
성별	남성	37.9	62.1	100.0	3.7
	여성	26.7	73.3	100.0	3.7
연령 대별	40대 이하	27.1	72.9	100.0	3.7
	50대	35.4	64.6	100.0	3.6
	60대	38.2	61.8	100.0	3.7
	70대	40.7	59.3	100.0	3.7
	80대 이상	28.1	71.9	100.0	3.7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5.9	64.1	100.0	3.8
	국가유공자(본인)	50.5	49.5	100.0	3.7
	국가유공자(유족)	28.4	71.6	100.0	3.7
	고엽제	41.7	58.3	100.0	3.7
	참전유공자	36.2	63.8	100.0	3.6
	보훈보상대상자	26.9	73.1	100.0	3.5
	5·18민주유공자	40.6	59.4	100.0	3.6
	특수임무유공자	30.0	70.0	100.0	3.4
	제대군인	15.9	84.1	100.0	3.6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지난 1년간 보훈정책 서비스 외에 ① 의료비 지원, ② 노인 급식 지원(무료지원 포함), ③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④ 가정 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⑤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⑥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⑦ 이동 편의 서비스(차량지원, 동행 등), ⑧ 주야간 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 ⑨ 노인 일자리 사업, ⑩ 장애인 일자리 사업, ⑪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⑫ 사회 교육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교실 등) 등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각각의 공공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뿐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로 사회복지 영역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료비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이용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비 지원’(13.8%)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물품 지원’(3.8%), ‘방문 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3.8%), ‘가사 봉사 서비스’(3.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외에 ‘노인 일자리 사업’(2.0%), ‘식사 배달 서비스’(1.9%), ‘이동 편의 서비스’(1.6%), ‘주야간 보호 서비스’(1.5%), ‘노인 급식 지원’(1.4%) 사업이 이용 빈도가 높았다. 나머지 항목들은 경험 비율이 0%대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

〈표 5-108〉 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있다	없다	계
의료비 지원	13.8	86.2	100.0
노인 급식 지원	1.4	98.6	100.0
물품 지원	3.8	96.2	100.0
가정 봉사 서비스	3.1	96.9	100.0
식사 배달 서비스	1.9	98.1	100.0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3.8	96.2	100.0
이동 편의 서비스	1.6	98.4	100.0
주야간 보호 서비스	1.5	98.5	100.0
노인 일자리 사업	2.0	98.0	100.0
장애인 일자리 사업	0.2	99.8	100.0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0.3	99.7	100.0
사회 교육 서비스	0.8	99.2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경험 정도를 2018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경험 정도의 연도별 비교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항목은 ‘의료비 지원’이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은 2018년도에는 34.2%의 이용 정도를 보였는데, 2021년도에는 13.8%로 그 수준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항목들의 연도별 비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물품 지원’, ‘가정 봉사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이동 편의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항목들은 경험 정도가 증가한 반면, ‘의료비 지원’, ‘노인 급식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항목은 경험 정도가 감소하였다.

〈표 5-109〉 2018년도/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경험 여부 비교

(단위: %)

구 분	경험 여부(있음)	
	2018년	2021년
의료비 지원	34.2	13.8
노인 급식 지원	2.5	1.4
물품 지원	2.6	3.8
가정 봉사 서비스	2.7	3.1
식사 배달 서비스	1.4	1.9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2.7	3.8
이동 편의 서비스	1.2	1.6
주야간 보호 서비스	0.7	1.5
노인 일자리 사업	2.1	2.0
장애인 일자리 사업	0.3	0.2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0.3	0.3
사회 교육 서비스	-	0.8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비 지원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13.8%로 ‘없다’는 응답 비율 86.2%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비율은 2018년도의 ‘있다’는 응답 비율 34.2%와 비교하면 20.4%p 감소한 상황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이용 정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와 80대 이상의 이용 여부가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가 25.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5·18민주유공자가 18.9% 수준으로 높은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에 제대군인의 이용 정도는 2.5%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0〉 의료비 지원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년		34.2	65.8	100.0
2021년		13.8	86.2	100.0
성별	남성	14.2	85.8	100.0
	여성	12.8	87.2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3.3	96.7	100.0
	50대	5.3	94.7	100.0
	60대	8.3	91.7	100.0
	70대	18.2	81.8	100.0
	80대 이상	17.4	82.6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5.8	84.2	100.0
	국가유공자(본인)	18.2	81.8	100.0
	국가유공자(유족)	11.4	88.6	100.0
	고엽제	25.2	74.8	100.0
	참전유공자	15.5	84.5	100.0
	보훈보상대상자	6.5	93.5	100.0
	5·18민주유공자	18.9	81.1	100.0
	특수임무유공자	5.1	94.9	100.0
	제대군인	2.5	97.5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노인 급식 지원

노인 급식 지원(무료지원 포함)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기초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인 급식 지원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1.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18년도의 2.5%에 비해서 떨어진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이용 정도보다는 여성의 이용 정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의 이용 여부가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의 이용 정도가 2.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제대군인은 이 비율이 0.1%로 전혀 없다고 볼 정도였다.

〈표 5-111〉 노인 급식 지원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년		2.5	97.5	100.0
2021년		1.4	98.6	100.0
성별	남성	1.3	98.7	100.0
	여성	1.6	98.4	100.0
연령 대별	60대	0.3	99.7	100.0
	70대	1.2	98.8	100.0
	80대 이상	3.2	96.8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1	98.9	100.0
	국가유공자(본인)	1.0	99.0	100.0
	국가유공자(유족)	1.2	98.8	100.0
	고엽제	0.8	99.2	100.0
	참전유공자	2.7	97.3	100.0
	보훈보상대상자	0.6	99.4	100.0
	5·18민주유공자	1.5	98.5	100.0
	특수임무유공자	1.7	98.3	100.0
	제대군인	0.1	99.9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 물품 지원

물품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식료품, 의류, 가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3.8%로 ‘없다’는 응답 비율 96.2%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도의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도의 응답 비율인 2.6%에 비해서는 약간 올라간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이용 정도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의 이용 정도가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가 7.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참전유공자가 6.1%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제대군인은 이 비율이 0.6%로 다른 대상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112〉 물품 지원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년		2.6	97.4	100.0
2021년		3.8	96.2	100.0
성별	남성	3.5	96.5	100.0
	여성	4.6	95.4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0.7	99.3	100.0
	50대	1.5	98.5	100.0
	60대	1.6	98.4	100.0
	70대	3.8	96.2	100.0
	80대 이상	6.9	93.1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7.0	93.0	100.0
	국가유공자(본인)	3.0	97.0	100.0
	국가유공자(유족)	3.7	96.3	100.0
	고엽제	3.1	96.9	100.0
	참전유공자	6.1	93.9	100.0
	보훈보상대상자	1.9	98.1	100.0
	5·18민주유공자	3.1	96.9	100.0
	특수임무유공자	5.4	94.6	100.0
	제대군인	0.6	99.4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라. 가정 봉사 서비스

가정 봉사 서비스는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해당 노인이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 봉사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3.1%로 ‘없다’는 응답 비율 96.9%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2021년도의 이용 비율은 2018년도 이용 비율인 2.7%에 비해서는 약간 상승한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이용 정도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의 이용 정도가 9.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보훈 대상별로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이용 정도가 5% 수준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제대군인은 그 비율이 0.1% 수준으로 이용자가 전혀 없는 수준이었다.

〈표 5-113〉 가정 봉사 서비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년		2.7	97.3	100.0
2021년		3.1	96.9	100.0
성별	남성	2.5	97.5	100.0
	여성	5.0	95.0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0.0	100.0	100.0
	50대	0.1	99.9	100.0
	60대	0.1	99.9	100.0
	70대	1.6	98.4	100.0
	80대 이상	9.3	90.7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0	95.0	100.0
	국가유공자(본인)	2.1	97.9	100.0
	국가유공자(유족)	3.5	96.5	100.0
	고엽제	1.2	98.8	100.0
	참전유공자	5.4	94.6	100.0
	보훈보상대상자	0.6	99.4	100.0
	5·18민주유공자	2.4	97.6	100.0
	특수임무유공자	0.9	99.1	100.0
	제대군인	0.1	99.9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 식사(혹은 밀반찬) 배달 서비스

식사(혹은 밀반찬) 배달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 직접적인 식사(혹은 밀반찬) 배달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식을 공급하고 건강을 개선시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사(혹은 밀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1.9%로 ‘없다’는 응답 비율 98.1%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도의 이 응답 비율은 2018년도의 응답 비율인 1.4%와 비교하여 미세하게 증가한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이용 정도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의 이용 비율이 4.5%로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이용 비율이 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대군인의 이용 정도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4〉 식사(혹은 밀반찬) 배달 서비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년		1.4	98.6	100.0
2021년		1.9	98.1	100.0
성별	남성	1.8	98.2	100.0
	여성	2.3	97.7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0.2	99.8	100.0
	50대	0.5	99.5	100.0
	60대	0.4	99.6	100.0
	70대	1.5	98.5	100.0
	80대 이상	4.5	95.5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1	95.9	100.0
	국가유공자(본인)	0.9	99.1	100.0
	국가유공자(유족)	1.8	98.2	100.0
	고엽제	1.2	98.8	100.0
	참전유공자	4.0	96.0	100.0
	보훈보상대상자	1.1	98.9	100.0
	5·18민주유공자	1.5	98.5	100.0
	특수임무유공자	1.3	98.7	100.0
	제대군인	0.2	99.8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바.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내용이다.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3.8%로 ‘없다’는 응답 비율 96.2%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8년도의 이용 비율은 2.7%로 2021년도에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이용 정도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의 이용 비율이 11.4%로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의 이용 비율이 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대군인의 이용 정도는 0.2%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5〉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서비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년		2.7	97.3	100.0
2021년		3.8	96.2	100.0
성별	남성	2.9	97.1	100.0
	여성	6.6	93.4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0.0	100.0	100.0
	50대	0.3	99.7	100.0
	60대	0.1	99.9	100.0
	70대	1.8	98.2	100.0
	80대 이상	11.4	88.6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7	95.3	100.0
	국가유공자(본인)	2.1	97.9	100.0
	국가유공자(유족)	4.6	95.4	100.0
	고엽제	2.6	97.4	100.0
	참전유공자	6.3	93.7	100.0
	보훈보상대상자	0.6	99.4	100.0
	5·18민주유공자	2.4	97.6	100.0
	특수임무유공자	0.9	99.1	100.0
	제대군인	0.2	99.8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사. 이동 편의 서비스

이동 편의 서비스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 지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 편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1.6%로 절대다수가 이용 경험이 없었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2%로 나타났으며, 2021년도에 미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이용 정도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의 이용 비율이 4.1%로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의 이용 비율이 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독립유공자가 1.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전혀 없었다.

〈표 5-116〉 이동 편의 서비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년		1.2	98.8	100.0
2021년		1.6	98.4	100.0
성별	남성	1.3	98.7	100.0
	여성	2.4	97.6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0.0	100.0	100.0
	50대	0.2	99.8	100.0
	60대	0.4	99.6	100.0
	70대	1.1	98.9	100.0
	80대 이상	4.1	95.9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8	98.2	100.0
	국가유공자(본인)	1.6	98.4	100.0
	국가유공자(유족)	1.7	98.3	100.0
	고엽제	0.8	99.2	100.0
	참전유공자	2.4	97.6	100.0
	보훈보상대상자	0.3	99.7	100.0
	5·18민주유공자	1.3	98.7	100.0
	특수임무유공자	0.4	99.6	100.0
	제대군인	0.0	100.0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아. 주야간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보호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2018년도 이용 비율인 0.7%에 비해서는 미세하게 증가한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이용 정도가 남성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의 이용 비율은 4.2%로 주야간 보호 서비스의 이용 연령대는 오직 80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였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이용 비율이 약 3%로 이들만이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였다.

〈표 5-117〉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년		0.7	99.3	100.0
2021년		1.5	98.5	100.0
성별	남성	1.2	98.8	100.0
	여성	2.6	97.4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0.0	100.0	100.0
	50대	0.5	99.5	100.0
	60대	0.2	99.8	100.0
	70대	0.8	99.2	100.0
	80대 이상	4.2	95.8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8	97.2	100.0
	국가유공자(본인)	0.8	99.2	100.0
	국가유공자(유족)	1.9	98.1	100.0
	고엽제	0.7	99.3	100.0
	참전유공자	2.5	97.5	100.0
	보훈보상대상자	0.0	100.0	100.0
	5·18민주유공자	0.9	99.1	100.0
	특수입무유공자	0.4	99.6	100.0
	제대군인	0.1	99.9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자.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2.0%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비해서는 그나마 높은 수준이었다. 2018년도 이용 비율인 2.1%와 비교하면 동일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이용 여부가 여성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의 이용 비율이 3.5%로 80대 이상 이용 비율인 2.0%와 더불어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의 경우 이용 비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참전유공자의 경우로 3.5%의 이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외 대상은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

〈표 5-118〉 노인 일자리사업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년		2.1	97.9	100.0
2021년		2.0	98.0	100.0
성별	남성	2.1	97.9	100.0
	여성	1.9	98.1	100.0
연령 대별	60대	0.9	99.1	100.0
	70대	3.5	96.5	100.0
	80대 이상	2.0	98.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4	97.6	100.0
	국가유공자(본인)	1.4	98.6	100.0
	국가유공자(유족)	1.8	98.2	100.0
	고엽제	4.0	96.0	100.0
	참전유공자	3.5	96.5	100.0
	보훈보상대상자	1.0	99.0	100.0
	5·18민주유공자	0.9	99.1	100.0
	특수임무유공자	3.1	96.9	100.0
	제대군인	0.2	99.8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차.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0.2%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21년도 이 비율은 2018년도 이용 비율인 0.3%와 비교하면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 거의 이용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대별이나 보훈대상별로 이용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무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5-119〉 장애인 일자리사업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년		0.3	99.7	100.0
2021년		0.2	99.8	100.0
성별	남성	0.2	99.8	100.0
	여성	0.1	99.9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0.3	99.7	100.0
	50대	0.4	99.6	100.0
	60대	0.2	99.8	100.0
	70대	0.3	99.7	100.0
	80대 이상	0.1	99.9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0.7	99.3	100.0
	국가유공자(본인)	0.3	99.7	100.0
	국가유공자(유족)	0.1	99.9	100.0
	고엽제	0.3	99.7	100.0
	참전유공자	0.3	99.7	100.0
	보훈보상대상자	0.5	99.5	100.0
	5·18민주유공자	0.9	99.1	100.0
	특수임무유공자	0.4	99.6	100.0
	제대군인	0.1	99.9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0.3%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 2018년도에는 이용 비율이 0.3%로 나타나 변화가 전혀 없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용 정도가 0%대 수준이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표 5-120〉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년		0.3	99.7	100.0
2021년		0.3	99.7	100.0
성별	남성	0.3	99.7	100.0
	여성	0.4	99.6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0.1	99.9	100.0
	50대	0.4	99.6	100.0
	60대	0.1	99.9	100.0
	70대	0.4	99.6	100.0
	80대 이상	0.3	99.7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0.2	99.8	100.0
	국가유공자(본인)	0.3	99.7	100.0
	국가유공자(유족)	0.3	99.7	100.0
	고엽제	0.3	99.7	100.0
	참전유공자	0.4	99.6	100.0
	보훈보상대상자	0.0	100.0	100.0
	5·18민주유공자	0.6	99.4	100.0
	특수임무유공자	0.4	99.6	100.0
	제대군인	0.2	99.8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타. 사회 교육 서비스

사회 교육 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대상자가 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한글 교실, 생활 요가, 노래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사회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이 0.8%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 교육 서비스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이용 비율은 1.5%로 남성의 이용 비율인 0.6%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대별 특성을 보면, 70대와 80대 이상에서 1%의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용 비율이 2.3%로 나타나 다른 대상에 비해 유의미한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 외에 국가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약 1%의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 외 대상에서는 0%대의 이용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5-121〉 사회 교육 서비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전체		0.8	99.2	100.0
성별	남성	0.6	99.4	100.0
	여성	1.5	98.5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0.4	99.6	100.0
	50대	0.1	99.9	100.0
	60대	0.5	99.5	100.0
	70대	1.1	98.9	100.0
	80대 이상	1.0	99.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3	97.7	100.0
	국가유공자(본인)	0.6	99.4	100.0
	국가유공자(유족)	1.0	99.0	100.0
	고엽제	0.7	99.3	100.0
	참전유공자	1.0	99.0	100.0
	보훈보상대상자	0.0	100.0	100.0
	5·18민주유공자	0.6	99.4	100.0
	특수임무유공자	0.9	99.1	100.0
	제대군인	0.3	99.7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9절 정책 인식 및 욕구

1.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정도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각각 19.3%, 32.4%로서 51.7%가 자긍심을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2018년 63.0%에 비해 11.3%p 감소한 결과이다. 지난 3년간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긍심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긍심을 갖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 자긍심을 크게 느끼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가 각각 29.5%, 26.2%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기여한 자부심과 공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5-122〉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18년		25.9	37.1	22.6	9.0	5.5
2021년		19.3	32.4	31.6	10.7	5.9
성별	남성	21.0	33.5	28.7	10.9	6.0
	여성	14.2	29.0	40.6	10.4	5.8
연령 대별	40대 이하	10.1	18.0	39.6	19.3	13.0
	50대	16.9	29.0	33.0	11.5	9.6
	60대	16.9	29.7	34.1	12.1	7.2
	70대	21.6	36.7	27.3	9.9	4.5
	80대 이상	21.7	34.1	32.8	7.8	3.6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9.5	38.6	25.2	5.3	1.3
	국가유공자(본인)	26.2	37.2	24.6	8.9	3.1
	국가유공자(유족)	13.5	28.1	39.2	11.8	7.5
	고엽제	22.7	38.0	26.5	9.5	3.4
	참전유공자	22.5	37.4	26.2	9.5	4.3
	보훈보상대상자	7.6	20.1	39.3	18.1	14.8
	5·18민주유공자	10.4	29.4	35.3	18.3	6.6
	특수임무	11.3	18.8	32.5	21.6	15.8
	제대군인	13.6	22.0	37.9	14.3	12.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이 7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보훈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15.8%였다. 이는 2018년 실태조사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더 높았다. 반면 보훈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부심이 높게 나타났다. 70대, 80대 이상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각각 76.5%, 77.6%를 차지했다. 반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걸맞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40대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

보훈대상별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의 경우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자긍심을 느낀다는 비율은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23〉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

(단위: %)

구분		국가보훈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정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확산되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을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기타
2018년		13.6	75.6	5.5	2.8	2.6	0.0
2021년		15.8	75.5	4.0	2.3	2.5	0.0
성별	남성	12.8	78.8	3.9	2.4	2.1	0.0
	여성	27.6	62.1	4.4	1.8	4.1	0.0
연령대별	40대 이하	19.8	65.4	7.9	2.4	4.5	0.0
	50대	13.3	71.8	7.7	3.8	3.5	0.0
	60대	18.7	73.8	3.2	2.0	2.2	0.0
	70대	15.2	76.5	4.0	2.4	1.9	0.0
	80대 이상	14.9	77.6	2.8	1.7	3.0	0.0
대상분류	독립유공자	16.0	70.5	3.5	5.8	4.2	0.0
	국가유공자(본인)	17.6	75.0	4.0	2.1	1.3	0.0
	국가유공자(유족)	23.7	64.6	5.1	2.4	4.3	0.0
	고엽제	15.7	74.9	4.6	2.5	2.3	0.0
	참전유공자	7.8	85.5	2.9	1.7	2.1	0.0
	보훈보상대상자	27.8	52.6	7.7	4.6	7.4	0.0
	5·18민주유공자	8.7	81.8	3.8	3.9	1.7	0.0
	특수임무	4.9	87.0	0.0	8.1	0.0	0.0
제대군인		8.8	83.1	3.3	2.8	2.0	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보훈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가 6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예우시책이 다양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서라는 비율이 18.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훈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는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에 비해 자긍심을 느끼는데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은 보훈정책에 대한 불만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이 미흡한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한 비율이 5.0%에서 8.4%로 증가하였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보훈대상자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증진하는 것도 향후 보훈정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훈대상자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훈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보훈대상별로는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이 보훈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24〉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국가보훈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이 다양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서	일반국민들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사회적 분위기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 미흡	기타
2018년		69.0	19.5	4.5	5.0	2.0
2021년		64.9	18.7	5.8	8.4	2.2
성별	남성	64.1	18.9	5.4	9.1	2.5
	여성	67.6	17.9	7.1	6.0	1.4
연령 대별	40대 이하	53.4	20.4	8.7	11.5	6.0
	50대	60.4	22.2	5.3	9.6	2.6
	60대	65.7	19.0	5.5	6.7	3.0
	70대	69.5	17.3	4.2	8.3	0.7
	80대 이상	70.0	17.0	6.4	6.6	0.0

구분		국가보훈대상자 에 걸맞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이 다양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서	일반국민들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사회적 분위기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 미흡	기타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2.8	43.6	6.9	6.7	0.0
	국가유공자(본인)	62.1	17.4	6.1	13.7	0.7
	국가유공자(유족)	67.3	18.6	6.1	6.3	1.7
	고엽제	65.1	17.0	6.8	11.0	0.0
	참전유공자	74.7	15.1	2.8	6.7	0.7
	보훈보상대상자	66.2	15.8	4.0	10.7	3.3
	5·18민주유공자	59.2	20.7	3.8	16.3	0.0
	특수임무	72.3	21.2	0.0	6.5	0.0
	제대군인	51.0	24.2	8.7	8.4	7.7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

가. 보훈대상자 지원정책 만족도

보훈대상자 지원정책 만족도는 ‘만족’, ‘매우 만족’을 합산하여 18.2%인 반면, 만족하지 않는 비율(‘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산)이 42.7%로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2018년 실태조사에서 만족 18.0%, 불만족 45.1%와 비교하면 불만족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보훈대상자가 여성에 비해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비율이 각각 24.6%, 41.9%를 차지했다.

〈표 5-125〉 보훈대상자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2018년		11.8	33.3	36.9	15.9	2.1
2021년		10.4	32.3	39.2	15.8	2.4
성별	남성	10.9	34.0	37.8	15.2	2.2
	여성	8.9	26.9	43.8	17.7	2.8
연령 대별	40대 이하	14.5	31.8	41.1	10.6	2.1
	50대	11.9	31.6	39.5	14.3	2.8
	60대	11.8	30.3	39.8	15.8	2.4
	70대	10.5	35.9	36.1	15.1	2.3
	80대 이상	7.4	28.5	42.7	19.0	2.4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4	22.1	40.7	27.3	4.6
	국가유공자(본인)	6.7	30.4	37.7	22.0	3.2
	국가유공자(유족)	11.4	29.7	41.2	15.3	2.4
	고엽제	9.3	37.1	35.2	16.2	2.1
	참전유공자	11.2	39.3	36.9	11.0	1.6
	보훈보상대상자	16.7	29.1	40.3	13.4	0.5
	5·18민주유공자	13.5	35.6	36.4	13.9	0.6
	특수임무	24.6	41.9	27.2	6.2	0.0
	제대군인	14.1	27.9	43.9	12.0	2.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범위의 미흡과 지원수준의 미흡이 각각 45.5%, 40.2%로 주된 이유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2018년 실태조사에서 지원수준 미흡과 지원범위의 미흡이 각각 45.4%, 40.7%로 나타난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지원수준 미흡정도는 감소하였지만, 지원범위 미흡은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지원수준 미흡을 언급한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원범위의 미흡을 만족스럽지 못하는 이유로 더 많이 언급하였다. 연령대별로는 70, 8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지원수준 미흡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원범위의 미흡은 6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보훈대상별로는 특수임무,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 지원범위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50%를 넘는 비율을 보였다. 지원수준

미흡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5-126〉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에 불만족 하는 이유

(단위: %)

구분		현행 지원범위의 미흡	국가보훈처의 정책적 기능의 한계	각종 교육, 홍보, 상담 여건 미비	현행 지원수준의 미흡	기타
2018년		40.7	9.0	4.8	45.4	0.1
2021년		45.5	8.1	5.7	40.2	0.4
성별	남성	44.5	8.7	5.5	40.9	0.4
	여성	49.7	6.0	6.6	37.4	0.3
연령 대별	40대 이하	42.6	8.1	14.0	34.3	1.0
	50대	38.0	13.2	12.3	35.6	0.9
	60대	50.1	9.4	6.9	33.5	0.1
	70대	46.9	7.6	3.2	42.1	0.3
	80대 이상	43.5	6.5	3.5	46.3	0.3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9.7	9.0	2.3	48.9	0.0
	국가유공자(본인)	41.2	11.0	3.8	43.5	0.4
	국가유공자(유족)	49.5	7.0	6.7	36.6	0.2
	고엽제	42.8	8.8	1.4	46.1	1.0
	참전유공자	44.0	6.5	2.6	46.8	0.1
	보훈보상대상자	47.2	8.0	4.4	38.7	1.7
	5·18민주유공자	52.3	9.2	2.7	35.2	0.6
	특수임무	58.0	5.6	2.8	33.5	0.0
	제대군인	46.9	9.9	18.3	23.7	1.2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 보훈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분야

국가보훈처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 1순위로는 2/3이 조금 못 미치는 응답자들이 보훈급여금(63.8%)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의료 지원이 16.9%, 양로지원 5.2% 순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는 ‘확대되어야 할 분야’를 조사한 결과이고 응답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보훈급여금 개선의견이 급증하고, 재취업/창업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성들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성들은 양로지원, 의료지원 등의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의료, 양로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70, 80대 이상의 경우 보훈급여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7%, 66.1%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고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고 보훈 급여에 생계를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60대가 2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인세대에 속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취업의 경우 40대 이하, 5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은 근로 연령대로서 취업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보훈급여금의 경우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가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훈급여금에 대한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제대군인, 국가유공자(본인, 유족), 독립유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취업의 경우, 제대군인이 1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은 근로연령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5-127〉 국가보훈처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 1순위

(단위: %)

구분		재취업 창업	교육	의료	주거	소득 보장	문화 및 여가	사회 적응	법률 지원	보훈문 화확산	기타	
2018년		10.3	2.3	28.1	6.6	44.2	1.5	0.3	0.8	3.2	0.3	
구분		보훈 급여금	교육	취업	대부	의료 지원	양로 지원	사망시 지원	예우 지원	재가 복지 서비스	사회 적응	기타
2021년		63.8	1.0	4.0	1.5	16.9	5.2	0.8	2.9	2.4	0.5	0.9
성별	남성	64.4	1.1	4.6	1.8	16.2	4.5	0.8	3.1	2.0	0.6	0.9
	여성	62.0	0.9	2.1	0.7	18.8	7.5	1.1	2.3	3.6	0.2	0.8
연령 대별	40대 이하	51.6	4.9	14.0	5.1	12.4	1.3	0.7	4.8	0.9	2.3	2.1
	50대	52.4	2.7	11.2	4.7	17.8	2.6	1.2	3.5	1.4	1.8	0.7
	60대	54.2	0.6	6.5	2.2	22.1	5.0	0.9	4.9	1.7	0.6	1.2

구분		보훈 급여금	교육	취업	대부	의료 지원	양로 지원	사망시 지원	예우 지원	재가 복지 서비스	사회 적응	기타
대상 분류	70대	71.7	0.5	1.5	0.6	15.5	4.7	0.6	1.9	2.2	0.1	0.8
	80대 이상	66.1	0.3	0.2	0.2	16.9	8.4	1.1	2.4	3.9	0.1	0.4
	독립유공자	57.9	1.7	2.6	1.1	17.1	7.4	0.9	3.8	4.8	0.7	2.0
	국가유공자(본인)	62.5	0.9	4.0	1.8	17.4	5.7	1.0	2.9	2.4	0.5	0.9
	국가유공자(유족)	61.9	0.7	2.7	1.5	19.2	6.4	0.8	2.9	3.1	0.2	0.7
	고엽제	74.2	0.2	0.9	0.3	12.8	5.4	0.7	2.3	2.4	0.0	0.9
	참전유공자	77.3	0.4	0.7	0.2	12.6	4.1	0.7	1.5	1.8	0.0	0.5
	보훈보상대상자	67.9	3.6	4.2	2.3	15.0	1.4	0.8	2.4	0.3	0.8	1.4
	5·18민주유공자	74.1	1.9	5.4	2.1	6.6	3.7	0.6	3.7	1.5	0.0	0.3
	특수임무	69.4	3.3	3.3	2.3	14.4	1.8	0.9	4.1	0.0	0.5	0.0
	제대군인	36.9	3.8	17.3	4.4	20.6	3.0	0.9	6.6	1.4	2.8	2.2

주: 2018년 조사에서는 국가보훈처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를 질문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국가보훈처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를 질문하는 것으로 문항을 변경하였음. 또한, 문항 변경에 따라 응답가능한 선택지의 내용도 함께 변경하였음. 2018년과 2021년의 응답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라.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가장 힘든 점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운 점이 5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감염우려 29.9%, 소득감소 8.0%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소득감소를 언급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운 점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소득감소의 경우 연령대가 낮은 40대 이하, 50대 대상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염 우려, 병원 이용 어려움을 언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람들과 만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대가 53.4%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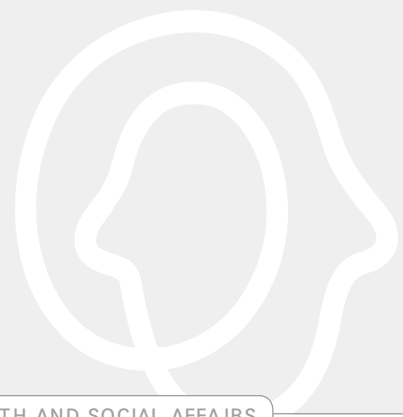
보훈대상별로 살펴보면 소득감소의 경우, 특수임무,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운 점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128〉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가장 힘든 점

(단위: %)

구분		소득감소	병의원 이용 어려움	감염우려	돌봄 받기 어려움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움	기타	계
2021년		8.0	2.5	29.9	0.8	51.3	0.3	100.0
성별	남성	8.9	2.4	29.6	0.8	50.5	0.4	100.0
	여성	5.1	2.9	30.9	0.9	53.6	0.2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19.2	1.5	25.8	0.5	46.6	1.2	100.0
	50대	18.1	2.2	28.9	0.0	45.4	0.4	100.0
	60대	12.3	1.4	28.7	0.3	50.8	0.1	100.0
	70대	5.7	2.8	30.3	0.8	53.4	0.3	100.0
	80대 이상	1.4	3.3	31.8	1.5	51.7	0.3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7.4	2.2	27.8	0.9	53.2	0.6	100.0
	국가유공자(본인)	6.9	3.3	29.5	0.8	52.0	0.3	100.0
	국가유공자(유족)	9.3	2.3	30.6	0.6	50.9	0.2	100.0
	고엽제	4.3	2.9	31.9	1.4	52.1	0.2	100.0
	참전유공자	5.3	2.8	30.6	1.3	50.5	0.3	100.0
	보훈보상대상자	20.7	2.3	29.3	0.8	41.7	0.3	100.0
	5·18민주유공자	17.4	3.4	30.9	2.1	38.7	1.6	100.0
	특수임무	22.3	0.9	22.2	0.5	47.1	0.5	100.0
	제대군인	12.2	0.7	26.0	0.4	53.7	0.8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6장

타 조사 및 유사집단과의 비교

제1절 개요

제2절 가계금융·복지조사

제3절 일반 실태: 노인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제4절 인식과 욕구: 사회조사

제6장 타 조사 및 유사집단과의 비교

제1절 개요

보훈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사 자체의 질적 제고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보훈대상자의 실태를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2015년 시작된 국가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이전에는 보훈대상 집단을 전체 가구, 노인, 장애인 등과 생활 실태 및 수준을 비교할만한 자료의 구축은 미미하였다.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처음부터 보훈대상 집단을 전체 가구, 노인, 장애인 등 다른 대상 집단과 주요 변수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표가 개발되었다(임완섭 외, 2014).

본 절에서는 보훈대상자와 이들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비교 집단을 설정하고 보훈대상자와의 집단 간(또는 실태조사 간) 실태 및 인식 또는 생활수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영역별로는 가구 경제상황과 사회인식을 비교하였고, 유사한 집단으로는 노인과 장애인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가구 경제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인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사회인식 비교에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각각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와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당 조사표들의 조사지표 및 조사 문항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여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가구 경제상황은 먼저 두 조사의 가구 일반 현황과 주거 현황을 우선 비교하고, 다음으로 가계지출, 가구 소득, 자산, 부채의 순으로 비교하였다. 사회인식에 대해서는 두 조사의 일반 현황인 주거 현황을 우선 비교하고, 본 주제인 여가·사회참여·사회적 관계망, 자원봉사, 계층의식 및 계층이동, 가족관계, 건강 및 스트레스, 노후준비의 순으로 비교하였다. 노인실태조사와의 비교는 가구 및 경제상황, 사회참여 및 가족관계, 보건의료, 경제활동의 순으로, 장애인실태조사와의 비교는 주거상황, 가구 소득 및 지출, 문화여가, 보건의료의 순으로 비교를 실시하였다.

제2절 가계금융·복지조사

1.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06년 가계자산조사를 실시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 표본 규모와 조사내용(금융·복지부문)을 확대·개편하면서 전국을 대표하는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횡단 및 패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조사이다. 2017년 조사결과 이후부터 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 자료와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작성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의 공식 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기 조사의 목적은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이며, 가계생활 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복지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하여 개발되었다(통계청, 2020³⁵⁾). 즉,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자산 등 재무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경제적 삶(well-being)의 정도에 대해 측정 가능한 자료이다.

조사대상은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이며, 항목별 조사시점은 자산, 부채, 가구 구성의 경우 조사연도 3월 31일 현재이며,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의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1년간) 기준이다. 즉, 본 조사인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활용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및 지출 기준은 2020년 1년간이며, 자산, 부채, 가구 구성의 기준은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소득 및 지출의 기준은 본 조사와 동일하며, 자산 및 부채, 가구 구성의 기준은 본 조사(2021년 9월 1일 기준)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2절에서는 본 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와 일반국민(전체 가구)의 일반적 현황 및 가계상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35) 통계청. (2020a),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 비교분석

가. 가구 일반현황

먼저 가구원 수를 비교해보면, 보훈대상자의 가구분포는 2인가구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 25.0%, 3인가구 15.7%, 4인가구 8.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전체 가구의 경우에도 2인가구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훈대상과 동일하게 2인 가구 다음으로 1인가구(22.8%), 3인가구(21.4%)와 4인가구(21.4%)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1~2인 가구원 수 비중이 약 70% 정도 으로 전체 가구(약 51%)와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난다. 평균 가구원 수에서도 전체 가구가 보훈대상자 가구보다 0.37명 정도 가구원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 조사대상 가구원 수

(단위: 명, %)

구분	평균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2.24명	25.0	45.7	15.7	8.8	4.9	100.0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2.61명	22.8	28.2	21.4	21.4	6.3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전체 가구의 가구주와 보훈대상자의 연령을 비교한 결과이다.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2세로 전체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 55.6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대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훈대상자의 연령대는 60대가 17.0%, 70대가 39.1%, 80대가 17.8%, 90대 이상 또한 8.6%로 고령자 비율이 높다. 즉,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60대 이상의 비중이 82.5%에 이르며 이는 전체 가구의 60대 이상 가구주 비율 39.4%와 2배 정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로 인해 이후 소득, 지출 및 자산의 수준 차이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6-2〉 조사대상 연령대

(단위: %)

구분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1.0	3.8	4.9	7.8	17.0	39.1	17.8	8.6	100.0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2.3	12.4	21.6	24.3	20.8	12.2	5.8	0.5	100.0

주: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연령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 연령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나. 주거 현황

다음으로 주거 현황에 대해 비교해보면, 보훈대상자의 거주 주택 입주형태는 자가 6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13.4%, 전세 9.2%, 기타 7.7%,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1.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주택 입주형태는 마찬가지로 자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18.5%, 전세 14.1%, 기타 5.6%,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1.1% 순으로 입주형태의 비율이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자가 보유 비율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보훈대상자 가구에서 자가 보유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반면 전세의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표 6-3〉 현 거주 주택 입주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기타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67.9	9.2	13.4	1.8	7.7	100.0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60.7	14.1	18.5	1.1	5.6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다. 가계지출

가구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해보면, 소비 지출 전체 수준은 전체 가구가 월평균 230.5만 원으로 보훈대상자 가구에 비해 약 35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194.9만 원이며 이 중 식료품비가 75.3만 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38.6% 정도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35.7만 원(18.3%), 주거비 25.4만 원(13.0%), 의료비 20.2만 원(10.4%), 교통비 19.2만 원(9.9%)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비지출에는 오락·문화, 의류·신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 지출 비목으로 식료품을 제외한다면 주거비 및 의료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경우 마찬가지로 식료품비가 72.4만 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31% 정도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55.3만 원(24.0%), 주거비 27.5만 원(11.9%), 교육비 24.7만 원(10.7%) 중심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해보면 식료품비와 오락·문화, 의류·신발,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등이 포함된 기타소비지출을 제외한다면 공통적으로 주거비가 소비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고령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4〉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만 원/월)

구분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75.3	25.4	8.2	20.2	19.2	10.9	35.7	194.9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72.4	27.5	24.7	15.5	21.1	14.0	55.3	230.5

주: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기준 2020년이며, 2021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경우 지출 및 소득은 2020년 기준, 자산 및 부채는 2021년 3월 31일 기준임. 비균등화 지출로 산출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소비지출 이외 이전지출 즉, 비소비지출에 대해 비교해보면 전체 가구의 경우 월평균 비소비지출액이 93.5만 원으로 보훈대상자 가구 56.1만 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공적연금, 사회보험료로 월평균 14.6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자비용 등 기타지출, 세금,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도 보훈대상 가구와 동일하게 사회보장분담금이 31.7만 원으로 비소비지출 중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금이 월평균 30.6만 원으로 비소비지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6-5〉 가구 월평균 비소비지출

(단위: 만 원/월)

구분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 (이자비용 등)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12.8	14.6	9.4	6.0	13.3	56.1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30.6	31.7	11.3	3.8	16.1	93.5

주: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기준 2020년이며,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지출 및 소득은 2020년 기준, 자산 및 부채는 2021년 3월 31일 기준임. 비균등화 지출로 산출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라. 가구 소득

다음에서는 두 조사대상 간 연간 가구 소득에 대해 비교해본 결과이다. 보훈대상자 가구의 연간 가구 소득은 4,257.5만 원으로 전체 가구 6,124.8만 원의 70% 정도의 수준이다. 소득원천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보훈대상자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1,692.3만 원, 근로소득이 1,680.1만 원으로 각각 가구 소득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보훈대상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체 가구 근로소득의 약 43.6% 수준이다. 전체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63%를 차지하는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9.8%에 불과하다.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수준과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6〉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중앙값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1,680.1	586.6	184.2	1,692.3	114.3	4,257.5	3,242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3,854.6	1,135.0	432.4	602.3	100.6	6,124.8	4,836

주: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기준 2020년이며,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지출 및 소득은 2020년 기준, 자산 및 부채는 2021년 3월 31일 기준임. 비균등화 소득으로 산출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연간 소득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분포를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3,000~5,000만 원인 구간에 23.8% 분포하며, 다음으로 1,000~2,000만 원 구간에 23.0%, 2,000~3,000만 원 구간에 19.0% 정도 분포되어 있다. 전체 가구의 경우에도 3,000~5,000만 원 구간에 21.1% 정도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보훈대상자 가구와는 다르게 다음으로 5,000~7,000만 원 구간 16.5%, 7,000~10,000만원 구간 16.2%, 1억 원 이상 15.7% 등 고소득층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구간에 46.1% 즉 절반 가까이가 분포하고 있는 반면, 전체 가구의 경우 절반 정도는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구간에 분포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체 가구의 경우 1억 원 이상 가구가 15.7%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5.2%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나 가구주 및 조사대상의 연령에서 오는 차이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제활동인구 연령대가 전체 가구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6-7〉 연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단위: %)

구분	1,000 만원 미만	1,000~ 2,000 만원 미만	2,000~ 3,000 만원 미만	3,000~ 5,000 만원 미만	5,000~ 7,000 만원 미만	7,000~ 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이상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4.1	23.0	19.0	23.8	13.9	10.9	5.2	100.0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6.2	12.4	11.9	21.1	16.5	16.2	15.7	100.0

주: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기준 2020년이며,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지출 및 소득은 2020년 기준, 자산 및 부채는 2021년 3월 31일 기준임. 비균등화 소득으로 산출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다음은 경상소득을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규모를 추정한 결과로, 조사된 소득 기준에 따라 2020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15.4%, 중간소득계층 64.2%, 고소득층 20.3%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을 기준중위소득 30% 미만과 30~50% 미만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각각 1.9%, 13.5%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은 12.5%로 보훈대상자 가구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으며, 고소득층은 34.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이 24.6%, 중간소득계층이 55.9%, 고소득층이 19.6%로 나타나 보훈대상이 60대 이상 고령이 대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가구의 노인가구에 비해 보훈대상 노인가구의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분석 결과이다.

〈표 6-8〉 소득계층별 가구분포

(단위: %)

구분	기준중위소득 ¹⁾	저소득층 : ① + ②			중간소득계층 (50~150%)	고소득층 (150%이상)	합계
		빈곤층① (30%미만)	빈곤층② (30~50%)	50%미만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1.9	13.5	15.4	64.2	20.3	100.0
가계금융· 복지조사 (2021)	전체	2.3	10.2	12.5	52.7	34.8	100.0
	노인가구 ²⁾	3.8	20.8	24.6	55.9	19.6	100.0

주: 1) 소득기준에 따라 2020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여 산출,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가구 기준 비율임.

2)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말함.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마. 자산

보훈대상자 가구와 전체 가구의 자산 수준을 비교해보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평균 자산은 42,140.8만 원으로 전체 가구 50,253.4만 원의 약 84% 정도로 전체 가구 평균 자산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산 구성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보훈대상자의 금융자산은 평균 약 5,260.5만 원으로 전체 가구 금융자산 평균액 11,319.3만 원의 약 46.5%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경우 저축액 외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전·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전체 가구에서 금융자산이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실물자산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영향으로 금융자산의 중앙값 또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체 가구의 금융자산 중앙값은 5,441만 원으로 보훈대상자 가구의 1,300만 원의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표 6-9〉 가구의 자산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중앙값		
	금융자산 ¹⁾	실물자산 ²⁾	소계	금융자산 ¹⁾	실물자산 ²⁾	소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5,260.5	36,880.3	42,140.8	1,300	17,500	22,500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11,319.3	38,934.1	50,253.4	5,441	19,200	28,480

주: 1)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등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입주형태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해당)이 포함

2) 실물자산에는 거주 주택(입주형태가 자가인 경우 해당)과 거주 주택 이 외 소유 및 점유부동산, 기타실물자산이 포함된 금액임.

3)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기준 2020년이며,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지출 및 소득은 2019년 기준, 자산 및 부채는 2020년 3월 31일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총자산액에서 총부채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을 비교해보면, 보훈대상자 38,015.4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 41,452만 원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전체 가구의 순자산액 중앙값은 22,600만 원, 보훈대상자의 순자산 중앙값은 19,500만 원 정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표 6-10〉 가구의 순자산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중앙값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38,015.4	19,500
가계금융·복지조사(2021)	41,452	22,600

주: 1) 순자산(=총자산-총부채) 계산시 음수는 '0'으로 치환하여 산출함.

2)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기준 2020년이며,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지출 및 소득은 2020년 기준, 자산 및 부채는 2021년 3월 31일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바. 부채

1) 부채 규모

마지막으로 부채 현황에 대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훈대상자의 평균 부채 규모는 6,251만 원(가계용 3,250.7만 원, 사업용 3,000.3만 원)으로 전체 가구 8,801.4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금융기관 부채의 경우 전체 가구 6,088.7만 원, 보훈대상자 가구 3,076.5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각각 63.3만 원, 58.8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보훈처 생업 지원 대출액은 평균 108.9만 원으로 나타나 신용카드 관련 대출의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 보훈처 생업 지원 대출의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표 6-11〉 부채의 규모(전 가구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금융기관 부채	신용카드 관련대출	보훈처 생업지원 대출	부채액 (가계용)	부채액 (사업용)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3,076.5	58.8	108.9	3,250.7	3,000.3
가계금융·복지조사(2021)	6,088.7 ¹⁾	63.3	-	8,801.4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기관 부채에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 금융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단위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등, 보험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기관 등을 포함.

2)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기준 2020년이며,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지출 및 소득은 2020년 기준, 자산 및 부채는 2021년 3월 31일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인식

보훈대상자의 1년 전 대비 부채 변화는 ‘변화 없음’이 78.4%로 가장 높으며,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반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였으며, 감소한 부채의 상환 방법으로는 소득으로 상환한 비율이 9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금융자산 처분 및 퇴직(연)금으로 정산한 비율이 3.5%, 주거를 변경하여 상환한 비율 1.4%,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처분으로 상환한 비율이 1.3%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경우 1년 전 대비 부채규모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4.0%로 보훈대상자 가구와 비교 시 부채규모에 대한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채규모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29.6%, 부채 규모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46.4%로 보훈대상자 가구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전체 가구의 경우 소득활동 등 경제활동이 활발함과 동시에 부채에 대한 변화도 활발하게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1년 전 대비 부채규모가 감소한 경우 소득으로 상환한 경우가 8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자산 처분 및 퇴직(연)금으로 정산한 경우가 4.0%, 다음으로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한 비율이 2.2%, 기타의 방법이 2.1%, 주거의 변경 1.6%로 나타났다.

〈표 6-12〉 1년 전 대비 부채 변화와 상환 방법에 대한 비율

(단위: 만 원)

구분	부채 규모 변화			감소한 가구의 부채 상환 방법					
	감소	변화 없음	증가	소득으로 상환	금융자산 처분 등	주거의 변경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처분	상속 및 증여	기타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16.5	78.4	5.1	92.5	3.5	1.4	1.3	0.6	0.7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46.4	24.0	29.6	89.6	4.0	1.6	2.2	0.5	2.1

주: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기준 2020년이며, 2021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경우 지출 및 소득은 2020년 기준, 자산 및 부채는 2021년 3월 31일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3절 일반 실태: 노인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1. 노인실태조사

가. 개요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 실시의 법제화(2007년 1월)로 매 3년 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총 5번(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인구 총 조사를 기반으로 노인실태조사 표본 10,000여명을 추출,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목표모집단으로 한다. 노인실태조사는 한국 노인의 다각적인 생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현재 노인 정책 및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윤경 외, 2020). 본 절에서는 가장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나. 노인실태조사와의 비교분석

1) 가구 및 경제상황

노인실태조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명, 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나타났다.

〈표 6-13〉 가구원 수

(단위: %)	
구분	평균
노인실태조사	2.0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2.2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 주택 입주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79.8%, 전세 9.8%, 보증금 있는 월세 7.1%, 기타(무상) 2.8%, 보증금 없는 월세 0.5%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의 현 거주 주택 입주 형태는 자가 67.9%, 보증금 있는 월세 13.4%, 전세 9.2%, 기타(무상) 7.7%, 보증금 없는 월세 1.8% 순으로 노인실태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4〉 거주 주택 입주 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무상)
노인실태조사	79.8	9.8	7.1	0.5	2.8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67.9	9.2	13.4	1.8	7.7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평균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소비지출은 147.5만 원, 보훈대상자는 194.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은 노인실태조사는 23.0 원, 보훈대상자는 25.4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6-15〉 가계지출

(단위: 만 원)

구분	월평균 소비지출	이 중 월평균 주거비지출
노인실태조사	147.5	23.0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194.9	25.4

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음으로 연간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는 전체 평균 3,026.5만 원, 보훈대상자의 연간 가구 소득 전체 평균은 4,257.6만 원으로 노인실태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훈대상자에 65세 미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공적이전소득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는 근로

소득 1,077.8만 원, 공적이전소득 675.6만 원, 사업소득 465.5만 원, 사적이전소득 353.7만 원, 재산소득 294.5만 원이며, 보훈대상자의 연간 가구 소득 항목별 평균은 근로소득 1,680.1만 원, 공적이전소득 1,692.5만 원, 사업소득 586.6만 원, 재산소득 184.2만 원, 사적이전소득 114.3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6-16〉 연간 가구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항목별 평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기타소득
노인실태조사	3,026.5	1,077.8	465.5	294.5	675.6	353.7	1.4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4,257.6	1,680.1	586.6	184.2	1,692.5	114.3	-

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구 자산을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가구 총자산은 30,515.6만 원인데 비해 보훈대상자의 소유 및 점유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 기타자산 전체를 고려한 가구 자산 평균은 42,140.8만 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는 부동산자산 26,182.7만 원, 금융자산 3,212.8만 원, 기타자산 1,120.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보훈대상자의 경우 부동산자산의 평균액은 38,226.0만 원, 금융자산 3,071.9만 원, 기타자산 842.9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6-17〉 가구 자산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항목별 평균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기타자산
노인실태조사	30,515.6	26,182.7	3,212.8	1,120.1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42,140.8	38,226.0	3,071.9	842.9

주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주2: 부동산 자산에는 현재 거주 주택의 가격, 전세 및 보증부 월세 보증금과 거주 주택 외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토지, 논, 밭, 임야 등의 부동산 관련 자산이 함께 포함됨.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구 부채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의 평균 가구 부채액은 1,892.8만 원이며 가계 용도 부채액만 고려한 보훈대상자의 평균 가구 부채액은 3,244.3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6-18〉 가구 부채

(단위: 만 원)

구분	부채액
노인실태조사	1,892.8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3,244.3

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며, 보훈실태조사의 경우 가계용 부채액만 고려한 액수임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사회참여 및 가족관계

노인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주된 여가 유형을 살펴보면, 취미 및 오락 활동 30.0%, 사회 및 기타활동 30.5%, 휴식활동 26.0%,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의 주된 여가 유형을 살펴보면, 휴식활동 63.2%, 취미·오락활동 12.1%, 스포츠 참여 8.3% 순으로 나타나며, 이들 중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경우 휴식활동 71.4%, 취미 및 오락활동 10.1%, 사회 및 기타활동 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9〉 지난 1년간 주된 여가 유형

(단위: %)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활동	취미· 오락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기타
노인실태조사	2.2	3.7	1.7	5.8	-	30.0	26.0	30.5	-
보훈	전체	1.8	1.9	3.3	8.3	3.3	63.2	5.7	0.4
	65세 이상	0.7	2.1	2.8	5.0	1.4	71.4	6.1	0.5

주: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1순위 응답을 의미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가장 많이 한 활동을 질문함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의 노인들이 희망하는 여가 유형을 살펴보면, 휴식활동 41.3%, 취미 및 오락활동 22.8%, 관광활동 8.9%, 사회 및 기타활동 6.7%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의 희망 여가 유형을 살펴보면, 휴식활동 36.9%, 관광활동 25.0%, 취미 및

오락활동 12.4%, 스포츠 참여 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경우 휴식활동 45.3%, 관광활동 20.9%, 취미·오락활동 1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0〉 향후 희망 여가 유형

(단위: %)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활동	취미· 오락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기타
노인실태조사		4.7	7.2	2.3	6.1	8.9	22.8	41.3	6.7	-
보훈	전체	2.4	3.7	2.0	9.7	25.0	12.4	36.9	7.2	0.7
	65세 이상	1.2	4.0	1.8	5.9	20.9	12.0	45.3	8.0	0.8

주: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1순위 응답을 의미함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노인들의 지난 1년간 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7.6%로 나타났으며, 보훈대상자는 17.8%, 이들 중 65세 이상은 10.1%가 지난 1년간 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여행 경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21〉 지난 1년간 여행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노인실태조사		27.6	72.4
보훈	전체	17.8	82.2
	65세 이상	10.1	89.9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참여 관련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는 2.9%가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훈대상자는 8.7%, 이들 중 65세 이상은 6.9%가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는 45.3%, 보훈대상자는 18.6%,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는 13.6%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2〉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단위: %)

구분		자원봉사활동 경험		희망 여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노인실태조사		2.9	97.1	45.3	54.3
보훈	전체	8.7	91.3	18.6	81.4
	65세 이상	6.9	93.1	13.6	86.4

주: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율을 자원봉사활동 경험 '있다'로 분류함. 자원 봉사활동 희망 여부는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에 있다고 포함. 보훈대상자실태조사의 경우 지난 1년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묻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의 자원봉사 활동 의사를 묻고 있음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관계 관련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왕래 빈도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의 노인들은 연 1~2회 왕래가 45.9%, 분기 1~2회 26.8%, 한달 1회가 12.0%, 왕래 없음 10.6%, 일주일 1회 2.3%, 일주일 2,3회가 1.7%, 거의 매일 0.7%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유사하게 연 1~2회 왕래가 39.0%, 왕래 없음 22.5%, 분기 1~2회 17.0%, 한달 1회가 13.6%, 일주일 1회 3.5%, 일주일 2,3회가 2.3%, 거의 매일 2.1%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살펴보면, 연 1~2회 왕래가 40.0%, 왕래 없음 26.8%, 분기 1~2회 14.1%, 한달 1회가 11.8%, 일주일 1회 3.0%, 일주일 2,3회가 2.3%, 거의 매일 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3〉 지난 1년간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왕래 빈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노인실태조사		0.7	1.7	2.3	12.0	26.8	45.9	10.6
보훈	전체	2.1	2.3	3.5	13.6	17.0	39.0	22.5
	65세 이상	1.9	2.3	3.0	11.8	14.1	40.0	26.8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음으로 가족관계 관련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의 노인들은 분기에 1~2회가 30.8%, 한달 1회가 25.4%, 연 1~2회가 18.6%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한 달에 1회가 23.6%, 연 1~2회가 21.1%, 분기

1~2회가 17.5%, 왕래 없음도 14.7%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살펴보면, 연 1~2회가 22.9%, 한 달에 1회가 22.3%, 왕래 없음이 17.7%, 분기 1~2회가 1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4〉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연락 빈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없음
노인실태조사		2.0	6.3	12.0	25.4	30.8	18.6	4.9
보훈	전체	5.8	7.8	9.4	23.6	17.5	21.1	14.7
	65세 이상	5.4	7.0	7.7	22.3	17.0	22.9	17.7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보건의료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의 노인들은 건강한 편이 44.8%, 그저 그렇다 30.8%, 나쁜 편이 17.6%, 매우 건강 4.5%, 매우 나쁜 편 2.3%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나쁜편이 33.9%, 그저 그렇다 32.5%, 건강한 편이 20.2%, 매우 나쁜 편이 11.3%, 매우 건강한 편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으로 살펴보면, 나쁜 편이 39.7%, 보통이 31.3%, 건강한 편이 14.8%, 매우 나쁜 편이 13.6%, 매우 건강한 편이 0.6%로 나타났다.

〈표 6-25〉 전반적인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매우 건강	건강한 편	그저 그렇다	나쁜 편	매우 나쁜 편
노인실태조사		4.5	44.8	30.8	17.6	2.3
보훈	전체	2.0	20.2	32.5	33.9	11.3
	65세 이상	0.6	14.8	31.3	39.7	13.6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음으로 병원 진료 여부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의 노인들은 지난 1개월 간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가 70.6%로 나타났으며, 보훈대상자의 경우 지난 1년 간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가 86.0%, 이들 중 65세 이상은 9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6〉 병원 진료 여부

(단위: %)

구분		지난 1년간 진료 여부	
		있다	없다
노인실태조사(지난 1개월 간)		70.6	29.4
보훈 (지난 1년 간)	전체	86.0	14.0
	65세 이상	92.0	8.0

주: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지난 1개월 간 보건의료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한의원, 치과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하며, 보훈실태조사의 경우 지난 1년간 진료여부를 의미함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경제활동

현재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의 노인들은 36.9%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훈대상자는 34.6%, 이들 중 65세 이상은 20.5%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7〉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일을 한다	일을 하지 않는다
노인실태조사		36.9	63.1
보훈	전체	34.6	65.4
	65세 이상	20.5	79.5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때 현재 하는 일이 정부지원일자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의 노인들은 41.8%가 현재 일자리가 정부지원일자리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훈대상자는 9.8%, 이들 중 65세 이상은 15.1%가 정부지원일자리라고 응답하였다.

〈표 6-28〉 현재 하는 일의 정부 지원 일자리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노인실태조사		41.8	58.2
보훈	전체	9.8	90.2
	65세 이상	15.1	84.9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직종을 살펴본 결과,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8.7%는 단순 노무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5%, 서비스 종사자 12.2%, 관리자 8.8%, 기능원 및 관련 직종 5.6%, 판매 종사자 4.7%, 장치기계 조작 및 조합종사자 3.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 종사자 22.2%, 서비스종사자 15.9%, 사무종사자 1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6%, 관리자 9.2%, 기능원 및 관련 직종 8.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중 65세 이상은 단순 노무 종사자 34.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9.6%, 서비스 종사자 14.9%, 관리자 7.2%, 기능원 및 관련 직종 5.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29〉 현재 하는 일의 직종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장치 기계 조작 및 조합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노인실태조사	8.8	2.0	1.1	12.2	4.7	13.5	5.6	3.2	48.7	0.3
보훈	전체	9.2	10.6	11.8	15.9	5.0	10.6	8.5	5.7	22.2
	65세 이상	7.2	5.3	3.4	14.9	5.1	19.6	5.5	4.4	-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윤경 외.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장애인 실태조사

가. 장애인 실태조사 개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에 의하여 3년 주기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1980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다가, 200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여 최근 공표된 자료는 2020년 자료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 조사를 수행한 김성희 외(2020)에 따르면, 기존 장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조사구 조사로써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조사는 일반가구 조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1단계 표본추출 단위는 기존의 조사구에서 읍·면·동으로 바뀌었다. 등록장애인 중 2단계 확률 비례 추출된 조사대상자는 14,000명으로 하여, 목표 표본인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등록장애인 전수를 모집단으로 표집오차를 보정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는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임완섭 외(2018)의 분류법을 참고하여,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대상자 9,716명 중 상이등급(1~7등급)을 받은 3,078명을 ‘상이’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외 대상자를 ‘비상이’ 집단으로 분류하여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한다. 비교를 위하여 장애인 실태조사와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조사 문항과 선택지가 동일한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나. 장애인 실태조사와의 비교분석

1) 주거 상황

상이 집단 및 비상이 집단 보훈대상자의 주거 위치를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장애인 중 97.3%가 지상에 거주하고 지하가 1.6%, 반지하가 1.1%인데 비해 보훈대상자 중 98.5%가 지상에 거주하고 지하가 0.3%, 반지하가 1.1%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보훈대상자 중 지상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간 높다.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상이 집단의 98.9%가 지상에 살고 반지하의 응답률은 0.8%인데, 비상이 집단은 98.3%가 지상에 살고 반지하의 응답률이 1.3%로 약간 높다. 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은 상이 집단 0.2%, 비상이 집단 0.3%로 장애인 1.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표 6-30〉 주거 위치

(단위: %)

구분		지하	반지하	지상	옥상/옥탑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상이	0.2	0.8	98.9	0.1	100.0
	비상이	0.3	1.3	98.3	0.1	100.0
	전체	0.3	1.1	98.5	0.1	100.0
장애인실태조사(2020)		1.6	1.1	97.3	0.1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김성희 외.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음 표는 거주 주택 점유형태를 비교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중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의 67.9%인 데에 비해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인 중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58.2%로 보훈대상자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전체의 22.0%로 보훈대상자 13.4%에 비해 다소 높다.

보훈대상자 중에서는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이 집단 66.9%, 비상이 집단 68.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세는 각각 8.9%와 9.3%로 1.4%p 차이이고, 보증금 있는 월세도 각각 14.3%, 13.0%로 1.3%p 차이 수준으로 보훈대상자의 거주 주택 점유형태는 상이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31〉 거주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등 기타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상이	66.9	8.9	14.3	2.0	7.9	100.0
	비상이	68.5	9.3	13.0	1.6	7.7	100.0
	전체	67.9	9.2	13.4	1.8	7.7	100.0
장애인실태조사(2020)		58.2	10.3	22.0	2.2	7.5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김성희 외.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가구 소득 및 지출

여기에서는 보훈대상자의 소득 및 지출과 장애인의 소득 및 지출을 비교한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월평균 소득은 199만 원이고 월평균 총지출은 178.5만 원 수준이다. 반면, 보훈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354.8만 원이고 월평균 총지출은 251.0만 원 수준으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인의 소득 및 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상이등급별로 상이 집단의 월평균 소득이 362.2만 원이고 비상이 집단이 351.0만 원으로 약 1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총지출은 각각 251.8만 원과 250.6만 원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상이 집단의 지출 중 소비지출은 197.1만 원, 비소비지출은 54.7만 원인데 비상이 집단의 소비지출은 193.8만 원, 비소비지출은 56.8만 원으로 나타나, 비상이 집단의 소비지출이 상이 집단에 비해 약간 낮고 비소비지출이 약간 높다.

〈표 6-32〉 지난 1년간 가구 평균 월 소득 및 지출

(단위: 만 원/월)

구분		가구 소득	총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상이	362.2	251.8	197.1	54.7
	비상이	351.0	250.6	193.8	56.8
	전체	354.8	251.0	194.9	56.1
장애인실태조사(2020)		199.0	178.5	-	

주: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의 합이고, 비소비지출은 세금,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지출,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 기타 비소비지출의 합임. 장애인실태조사(2020)에서는 월 평균 총 가구 소득 및 지출액을 사용함.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김성희 외.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보건 및 의료

다음 표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와 보훈대상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면, 장애인의 응답률은 14.9%인데 보훈대상자는 22.3%로 7.4%p 차이이다. 매우 나쁘거나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장애인 47.6%, 보훈대상자 45.2%로 두 집단 간 차이가 2.4%p로 상대적으로 적어 장애인의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보훈대상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보훈대상자 중에서는 상이 집단의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0%로 비상이 집단 25.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상이 집단의 매우 나쁘거나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2%로 비상이 집단 42.7%에 비해 높다. 집단별로 비교하면, 비상이 집단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장애인에 비해 상이 집단 보훈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6-33〉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좋다			보통	나쁘다			계
		매우 좋음	좋은 편임	소계		나쁜 편임	매우 나쁨	소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상이	1.3	14.7	16.0	33.8	37.7	12.5	50.2	100.0
	비상이	2.4	23.1	25.5	31.9	32.0	10.7	42.7	100.0
	전체	2.0	20.2	22.3	32.5	33.9	11.3	45.2	100.0
장애인실태조사(2020)		0.8	14.1	14.9	37.4	37.5	10.1	47.6	100.0

주: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매우 좋음', '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5점 척도로 질문함.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김성희 외.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다음 표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꼈거나 많이 느꼈다는 응답률은 장애인이 33.6%로 전체 보훈대상자 22.8%에 비해 10.8%p 높다. 보훈대상자 중에서는 상이 집단 보훈대상자가 24.6%, 비상이 집단 보훈대상자가 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4〉 일상생활 스트레스

(단위: %)

구분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임	많이 느끼는 편임	매우 많이 느낌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상이	16.8	58.6	20.0	4.6	100.0
	비상이	22.0	56.2	17.6	4.2	100.0
	전체	20.2	57.0	18.4	4.4	100.0
장애인실태조사(2020)		14.4	52.0	28.6	5.0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김성희 외.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의 건강행태, 특히 현재 흡연 실태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장애인의 12.4%가 현재 흡연하는 반면, 보훈대상자의 흡연율은 15.4%로 장애인에 비해 3.0%p 높은 수준이다. 보훈대상자 중에서는 상이 집단의 흡연율이 16.3%로 비상이 집단의 14.9%에 비해 1.4%p 높게 나타났다.

〈표 6-35〉 건강행태: 현재 흡연

(단위: %)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21)	상이	16.3	83.7	100.0
	비상이	14.9	85.1	100.0
	전체	15.4	84.6	100.0
장애인실태조사(2020)		12.4	87.6	100.0

주: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현재 '매일 피움'과 '가끔 피움',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으로 질문하고, '매일 피움'과 '가끔 피움'을 현재 '피움'으로, 나머지를 '피우지 않음'으로 분류함.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김성희 외.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절 인식과 욕구: 사회조사

1. 사회조사 개요

사회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10개의 사회지표 영역을 5개 영역씩 각각 2년 주기로 조사한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20년과 2021년 조사다. 2020년에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영역을 조사하였으며, 2021년에는 기본,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영역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자는 전국 19,000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으로, 2020년에는 약 38,000명, 2021년에는 약 36,000명이었다(통계청, 2020, 2021³⁶⁾). 따라서 사회조사는 일반국민의 인식을

36) 통계청. (2021c). 2021년 사회조사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2020b). 2020년 사회조사결과(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파악할 수 있어 보훈대상자의 인식과 욕구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사회조사와 2021년 보훈실태조사와 유사한 항목을 비교하고자 한다.

2. 비교 분석

가. 여가

보훈대상자의 여가활동은 휴식활동이 63.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취미, 오락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와 사회조사의 여가활동 응답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조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휴식 활동,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6〉 참여 여가

(단위:%)

참여 여가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활동	취미· 오락 활동	휴식 활동	사회및 친교 활동	기타 활동	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1.8	1.9	3.3	8.3	3.3	12.1	63.2	5.7	0.4	100.0
참여 여가	동영상 콘텐츠 시청 ¹⁾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²⁾	스포츠 경기 관람 ³⁾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등	취미· 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활동 및 기타
사회조사(2021)_주중	88.9	5.9	4.5	2.8	13.7	2.7	38.7	25.2	69.0	6.0
사회조사(2021)_주말	83.0	7.8	3.9	2.6	15.0	10.5	33.7	22.6	70.7	10.1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b). 사회조사. 원자료.

보훈대상자의 여가 만족도의 경우 만족(‘만족’,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21.9%,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이 31.4%로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조사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사회조사에 따르면 만족하는 비율 27%로 불만족 23.6%에 비해 높았다. 보훈대상자는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높은 연령, 장애 등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6-37〉 여가 만족도

(단위:%)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7.5	23.9	46.7	18.8	3.1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사회조사(2021)	23.6		49.4	27.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b). 사회조사. 원자료.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로서 보훈대상자는 건강 문제(42.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41.3%), 시간 부족(7.5%)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조사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일반국민의 경우 경제적 부담(46.1%)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시간 부족, 건강, 체력 부족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보훈대상자의 연령대와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가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즐기지 못하는 제약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표 6-38〉 여가 불만족 이유

(단위:%)

구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불편	여가시설 부족	정보 부족	경험 부족	건강 문제	함께 즐길사람 없어서	기타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41.3	7.5	0.8	0.9	1.2	3.5	42.5	1.3	1.0

구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여가 프로그램 부족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건강, 체력 부족	여가를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기타
사회조사(2021)	46.1	19.3	1.3	2.7	1.0	1.5	5.5	10.4	1.6	10.6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0b). 사회조사. 원자료.

나. 자원봉사

보훈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사회조사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였다.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1년 이내 참여 의사는 보훈대상자가 18.6%로 일반국민 25.4%에 비해 다소 낮았다.

〈표 6-39〉 자원봉사 활동 참여 현황

(단위:%)

구분	자원봉사 참여 경험 여부		향후 1년 이내 자원봉사 참여 의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8.7	91.3	18.6	81.4
사회조사(2021)	8.4	91.6	25.4	74.6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0b). 사회조사. 원자료.

다. 가족관계

보훈대상자들이 가족관계에 만족(‘만족’,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64.7%였으며, 이는 일반국민의 가족관계 만족도 58.7%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보훈대상자의 가족관계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율은 7.5%로 일반국민의 가족관계 불만족도 3.0%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40〉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1.9	5.6	27.7	50.6	14.1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 만족
사회조사(2020)	0.5	2.5	38.2	33.7	25.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0b). 사회조사. 원자료.

라. 건강 및 스트레스

보훈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좋다(‘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합산)고 응답한 비율은 22.2%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반국민들의 거의 절반(49.4%)가 건강하고 응답한 비율에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이다.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도 보훈대상자는 45.2%, 일반국민은 14.3%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높은 연령대, 장애 비율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표 6-41〉 건강 상태 인식

(단위:%)

구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11.3	33.9	32.5	20.2	2.0
사회조사(2020)	1.4	12.9	36.0	39.6	10.8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0b). 사회조사. 원자료.

스트레스의 경우 응답 항목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보훈대상자의 스트레스를 경험 비율(‘조금’, ‘많이’ 합산)이 75.4%로 일반 국민 45.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훈대상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안정된 직장 부족, 건강하지 못한 상태 등이 스트레스를 낳는 요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6-42〉 스트레스 정도

(단위:%)

구분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임	많이 느끼는 편임	매우 많이 느낌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20.2	57.0	18.4	4.3
구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느끼지 않는 편이다	느끼는 편이다	매우 많이 느꼈다
사회조사(2020)	8.8	40.7	45.2	5.4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0b). 사회조사. 원자료.

마. 노후준비

보훈대상자의 노후준비 방법에서는 보훈급여금(4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공적연금이 33.3%를 차지했다. 사회조사의 경우 보훈급여금 응답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일반국민의 경우 국민연금이 55.2%로 가장 높았으며,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직역연금, 사적연금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3〉 노후준비 방법

(단위:%)

구분	보훈 급여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금융자산	부동산 운용	기타	노후준비 수단 없음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021)	46.4	33.3	1.0	1.4	7.6	3.9	0.2	6.2

구분	국민연금	직역연금	사적연금	주택연금	퇴직급여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없음
사회조사(2021)	55.2	8.3	8.4	-	3.9	18.4	5.2	0.6	34.9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b). 사회조사. 원자료.



제7장

보훈정책 효과성 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분포 및 규모

제2절 공적이전과 보훈급여금의 효과성

제 7 장 보훈정책 효과성 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분포 및 규모

1. 개요 및 측정방법

본 절에서는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및 규모 추정을 실시하고 2018년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포 및 규모 추정을 통해 현재 보훈대상자의 소득 실태 및 그 특성을 파악함은 물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 집단 등에 대한 정책함의를 얻을 수 있다.

소득계층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을 객관적 기준으로 책정된 일정 수준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 소득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에서 정책 기준선으로 제시한 소득을 활용하는 방법과 본 실태조사에 수록된 소득 또는 지출 등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기준 소득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보훈대상자 및 해당 가구에 대한 다양한 기준선 및 상대적 개념의 분포 도출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도출된 기준선을 활용해서 다른 대상 집단과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즉 국가보훈대상자들 사이의 소득분포를 파악하는 데에만 활용될 수 있을 뿐 전체 국민들이 적용을 받는 소득계층과 괴리됨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소득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부에서 공표하는 정책기준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상 집단 및 다른 데이터와의 비교가 용이하며, 복지급여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 기준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수요 또한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실태조사의 목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있으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 집단 및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한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과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기준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선으로는 정부에서 공표하는 정책적 기준선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선으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³⁷⁾을 활용하였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 다양한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근거로써 활용되고 있다.

한편, 본 조사에서 자산, 부채 등과 같은 저장(stock) 변수들의 기준시점은 2021년 8월 1일이지만, 소득 및 지출과 같은 유량(flow) 변수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변수의 집계 값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적용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분포를 파악하였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다.

〈표 7-1〉 2020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 월 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주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6). 2017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2016-127호.

이렇게 소득계층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선이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소득을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규모를 추정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가구의 생활실태분석 부문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러한 소득들은 퇴직금, 경조금과 같이 일시적 성격의 소득이 아닌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소득들이다. 이러한 소득들의 총합을 경상소득으로 지칭하는데, 이러한 경상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 이전지출의 규모와 그 성과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한편,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에 있어 가처분소득을 적용하기도 한다.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과 같은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개념이다. 가처분소득은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과 같은 정부 부문에

37)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이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에서 산출하였다가 최근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에서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대한 가구의 비소비지출까지 고려한 최종적인 성격의 소득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득 개념 중에서 본 연구는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선정기준에 있어 가처분소득 보다는 경상소득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상소득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이전 지출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동일한 보훈대상자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기준선과 동일한 소득 유형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적이전이 없을 경우 보훈대상자의 순수한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는 데는 시장소득이 적합하고, 공적이전을 포함하되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실제 처분가능한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가처분소득이 적합하여 이들 소득들을 기준으로 한 분석도 병행하기로 한다. 단, 제2절에서 공적이전과 보훈급여금의 소득보장 효과성 파악에는 시장소득과 경상소득만을 활용하였다.

소득계층별 분포 추정을 위한 기준선과 소득 유형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소득 계층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을 크게 저소득층, 중간소득계층, 고소득층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물론 이보다 더 자세한 분류도 가능하지만 국제기구 및 선행연구에서 수행되는 소득분포 및 소득재분배 측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준중위소득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유럽연합)와 같은 국제기구나 우리나라의 통계청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의 기준선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기준선과 차상위 계층 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한다. 또한 통상적인 국제비교에서도 중위 소득 50% 기준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50%에서 150%까지는 중간소득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기준중위 소득의 50%미만은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의 50%에서 150%미만 까지는 중간소득 계층, 기준중위소득의 150%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38) 이러한 집단을 중산층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중산층의 경우 단순히 소득 수준만으로 분류하기에는 적절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소득계층'으로 지칭하였음(임완섭 외, 2014, p.48).

여기에서 기준중위소득의 30% 미만을 추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기준중위소득의 30%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준이며, 빈곤기준선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기준적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계층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해서 언급한 집단 구분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중간소득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150% 미만, ‘고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기준중위 30% 미만의 ‘빈곤층①’과 기준중위소득 30~50%에 해당하는 ‘빈곤층②’로 다시 분류하였다.³⁹⁾

이렇게 대상 집단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구분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 계층 구분 기준선(가구원수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 7-2〉 소득 계층 구분 기준선 : 월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기준중위소득의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소득의 150%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11,084,573

주 :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

2. 소득계층별 분포 및 규모 추정 결과

정상소득을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분포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가구를 저소득층, 중간소득계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 분포를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은 15.4%, 중간소득계층은 64.8%, 고소득층은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기준중위소득 30%미만 빈곤층①과 기준중위소득 30%~50%미만 빈곤층②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빈곤층①은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②는 전체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39) 이러한 집단 구분은 국제기구나 선행연구의 선례를 따른 것이지만,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은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 집단 및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의 비교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약 9%p가 감소(24.6% → 15.4%)하였고 중간소득계층은 6.5%p 증가했고, 고소득층은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빈곤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빈곤층①의 경우 2018년 7.5%에서 1.9%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층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21년 조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빈곤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2018년 조사에 비해 국가보훈대상자 소득 증가폭이 전체 국민의 그것보다 더 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소득이 446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보훈대상자의 가구 소득은 제4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463만 원 증가한 것이다.

한편, 성별에 따른 소득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훈대상자가 남성인 경우의 저소득층 비율이 여성이 보훈대상자였을 때의 저소득층 비율보다 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0% 미만의 극빈곤층인 빈곤층①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특징을 보인다. 중간소득계층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전체적으로 성별 소득분포가 일관적이지 않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②에도 동일하게 확인되는데, 빈곤층①의 경우는 40대 이하의 빈곤율이 50대와 6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계층에서는 7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에서는 50대, 40대의 순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의 저소득층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5·18 민주유공자의 비율(21.1%)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계층의 분포를 살펴보면, 5·18민주유공자의 비율이 7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훈보상대상자의 비율이 5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계층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소득층의 비율은 7.7%로 참전유공자(7.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유형은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로 35.5%로 나타났고, 국가유공자 본인은 두 번째로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았다.

〈표 7-3〉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추정 I : 경상소득 적용

(단위: %)

구분		저소득층 : ① + ②			중간소득계층 (50~150%)	고소득층 (150%이상)	합계
		빈곤층① (30%미만)	빈곤층② (30~50%)	50%미만			
2018년		7.5	17.1	24.6	57.8	17.6	100.0
2021년		1.9	13.5	15.4	64.3	20.4	100.0
성별	남성	1.6	14.0	15.6	63.1	21.3	100.0
	여성	2.6	12.0	14.6	68.2	17.2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1.3	1.7	3.1	57.0	40.0	100.0
	50대	0.4	3.6	4.0	49.5	46.5	100.0
	60대	0.8	5.3	6.1	60.6	33.3	100.0
	70대	1.3	14.5	15.8	73.0	11.2	100.0
	80대 이상	3.9	25.0	28.5	60.9	10.6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2	9.4	10.6	68.9	20.6	100.0
	국가유공자(본인)	0.4	5.3	5.8	66.3	27.9	100.0
	국가유공자(유족)	2.3	11.1	13.4	68.2	18.4	100.0
	고엽제	1.1	20.0	21.1	71.2	7.7	100.0
	참전유공자	3.4	30.0	33.1	59.7	7.1	100.0
	보훈보상대상자	0.3	6.4	6.7	58.8	34.5	100.0
	5·18민주유공자	2.9	15.2	18.1	64.7	17.2	100.0
	특수임무	2.4	11.4	13.8	66.7	19.5	100.0
	제대군인	0.8	1.9	2.8	53.5	43.7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전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아래 표는 가처분소득을 적용하였을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여준다.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써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이 모두 반영된 상태, 즉 사회적 이전(social transfer)이 완전히 일어난 상태에서의 소득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지출을 제외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측정할 경우 경상소득에 비해 빈곤율이 높아지게 된다. 앞서 경상소득의 경우 빈곤층①의 비율이 1.9%였던 것에 비해 가처분소득 적용 시 2.9%로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소득층 비율은 경상소득 적용 시 보다 감소하였고, 중간소득계층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빈곤층의 비율이 27.2%에서 17.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빈곤층①과 빈곤층②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중간소득계층은

이전 조사에 비해 7.3%p 증가하였고, 고소득층 비율도 2.2%p 증가하였다. 즉, 사회적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측정된 소득분포에서도 이전 조사에 비해 빈곤층 비율은 감소하고, 중간소득계층 이상 소득계층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7-4〉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추정 II : 가처분소득 적용

(단위: %)

기준중위 구분		저소득층 : ① + ②			중간소득계층 (50~150%)	고소득층 (150%이상)	합계
		빈곤층① (30%미만)	빈곤층② (30~50%)	50%미만			
2018년		9.0	18.1	27.2	59.0	13.8	100.0
2021년		2.9	14.8	17.7	66.3	16.0	100.0
성별	남성	2.6	15.3	18.0	65.3	16.8	100.0
	여성	3.6	13.1	16.6	69.7	13.6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1.7	3.0	4.7	65.3	30.0	100.0
	50대	0.9	4.2	5.1	57.5	37.5	100.0
	60대	1.3	6.2	7.5	65.3	27.2	100.0
	70대	2.4	16.5	18.9	72.3	8.9	100.0
	80대 이상	5.6	25.3	30.9	61.1	8.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1.8	12.1	13.9	68.3	17.8	100.0
	국가유공자(본인)	1.0	6.1	7.0	70.3	22.7	100.0
	국가유공자(유족)	3.2	12.5	15.7	70.1	14.2	100.0
	고엽제	1.6	22.7	24.4	69.4	6.3	100.0
	참전유공자	5.5	31.2	36.7	58.1	5.2	100.0
	보훈보상대상자	0.6	6.7	7.3	62.5	30.3	100.0
	5·18민주유공자	3.8	16.4	20.2	65.6	14.4	100.0
	특수임무	2.1	15.5	17.9	67.4	14.7	100.0
	제대군인	1.0	3.2	4.3	61.8	34.0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시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을 제외한 소득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시장소득 적용 시 전체 저소득층의 비율은 55.2%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상소득 적용 시의 15.4%보다 저소득층의 비율이 39.8%p 증가한 수치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할 경우 저소득층의 비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빈곤율은 39.8%p 감소한 것이며, 증감률로는 빈곤율이 72.1%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시장소득을 적용한 소득계층별 분포를 통해 경상소득 또는 가처분소득을 적용할 경우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간소득계층 증감 효과

등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5.4%에서 55.2%로 0.2%p 감소하여 이전 조사와 거의 유사한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극빈곤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빈곤층①의 경우 44.3%에서 46.3%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계층은 0.8%p 정도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의 경우는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개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소득분포는 이전 조사에 비해 극빈곤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양극화가 다소 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이전이 이루어진 상태인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전 조사에 비해 빈곤층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이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7-5〉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추정 II : 시장소득 적용

(단위: %)

기준중위 구분		저소득층 : ① + ②			중간소득계층 (50~150%)	고소득층 (150%이상)	합계
		빈곤층① (30%미만)	빈곤층② (30~50%)	50%미만			
2018년		44.3	11.0	55.4	36.1	8.5	100.0
2021년		46.3	8.9	55.2	35.3	9.5	100.0
성별	남성	44.3	8.9	53.1	36.5	10.4	100.0
	여성	52.9	8.8	61.7	31.6	6.7	100.0
연령 대별	40대 이하	4.5	2.4	6.9	61.2	31.8	100.0
	50대	9.9	4.4	14.2	56.3	29.5	100.0
	60대	31.3	8.9	40.2	48.4	11.4	100.0
	70대	58.6	11.2	69.8	27.2	2.9	100.0
	80대 이상	63.9	9.0	72.9	23.1	4.0	100.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8.0	6.9	64.9	29.7	5.5	100.0
	국가유공자(본인)	48.2	8.0	56.2	35.0	8.8	100.0
	국가유공자(유족)	45.4	9.1	54.4	36.5	9.1	100.0
	고엽제	62.7	10.1	72.8	24.4	2.9	100.0
	참전유공자	57.8	11.8	69.6	27.4	3.1	100.0
	보훈보상대상자	19.7	5.3	25.0	51.3	23.8	100.0
	5·18민주유공자	23.1	11.3	34.4	52.5	13.2	100.0
	특수임무	17.4	7.1	24.5	59.8	15.7	100.0
	제대군인	14.2	3.5	17.7	52.7	29.6	100.0

주 : 제시된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아래 표는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훈대상자 수로 환산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모집단으로 삼은 보훈대상자 수 665,162명을 기준으로 앞서 제시한 소득계층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소득계층별 비율은 보훈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율을 의미하는데, 표본추출에 있어 보훈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가구에 한 명의 보훈대상자를 매칭하였기 때문에 가구의 분포는 보훈대상자의 분포와 일치한다. 소득계층별 보훈대상자의 수를 살펴보면, 경상소득 적용 시 저소득층의 비율 15.4%를 적용할 경우 약 102천 명으로 추정된다. 기준중위소득 30% 미만 대상자는 약 12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훈대상자 중 소득 수준이 가장 열악한 계층을 의미한다. 중간소득계층은 약 428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은 약 135천 명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처분소득의 경우 앞서 소득계층별 분포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경상소득 적용 시 보다 해당 계층의 규모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간소득계층은 약 441천명으로 경상소득 적용 시의 428천 명보다 약 13.4천 명 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장소득으로 살펴볼 경우 저소득층 규모는 전체 55.4%에 해당하는 약 367천 명, 중간소득계층은 약 235천 명, 고소득층은 약 63천 명으로 파악된다.

〈표 7-6〉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

(단위: 명, %)

구분	기준중위소득	저소득층 : ① + ②			중간소득계층 (50~150%)	고소득층 (150%이상)	합계
		빈곤층① (30%미만)	빈곤층② (30~50%)	50%미만			
경상소득 적용		12,305 (1.9)	89,930 (13.5)	102,235 (15.4)	427,633 (64.3)	135,294 (20.4)	655.2 (100.0)
가처분소득 적용		19,290 (2.9)	98,444 (14.8)	117,734 (17.7)	441,002 (66.3)	106,426 (16.0)	655.2 (100.0)
시장소득 적용		307,970 (46.3)	59,199 (8.9)	367,169 (55.2)	234,802 (35.3)	63,190 (9.5)	655.2 (10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지금까지 보훈대상자의 소득계층별 분포 및 규모를 살펴보았는데, 보훈제도는 그 특성상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가 아니며, 희생과 공헌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훈제도 보훈급여금(상이 1급 1항)의 목표였던 ‘전국 3인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 수준도 일반적인 저소득층 대상의

급여의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제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소득 수준이 낮은 대상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대상자가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노인이며, 대부분은 공적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기초보장과 노인 계층의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주요 공적이전과 보훈급여금의 소득보장 측면의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공적이전과 보훈급여금의 효과성

1. 공적이전

본 절에서는 보훈대상자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 효과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의 소득(혹은 지출)을 가지는 사람(혹은 가구)을 전체 인구(혹은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19).

$$\text{빈곤율} (y, z) = \frac{q}{n}$$

q는 소득(또는 지출)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혹은 가구)수이며, n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를 나타내고, y는 개인(혹은 가구)소득(혹은 지출), z는 빈곤선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소득과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차감한 소득인 시장소득의 빈곤율을 각각 구한 후 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즉, 공적이전소득 포함 전과 후의 빈곤율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이전지출의 소득보장 효과성을 살펴본 것이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 공적이전소득은 보훈급여금(수당 포함),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이 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항목이 구성되어있다.

빈곤 기준선 설정은 앞서 소득계층별 분포에서 살펴본 기준중위소득 30%(빈곤층①)와

기준중위소득 50%(저소득층)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보훈대상자 가구의 공적이전 소득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 단위 빈곤율을 추정하였다.

먼저 기준중위소득 30% 적용하여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 보훈대상자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은 46.3%, 경상소득 적용 빈곤율은 1.9%로,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빈곤율이 96.0%(4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2018년 조사결과(시장소득 적용 대비 경상소득 적용 빈곤율 83.0% 감소)와 비교해도 감소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보훈대상자가 남성인 가구가 여성인 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 효과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남성 96.4%, 여성 95.0%).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 감소율이 높아져 70대에서 97.8%로 가장 높고, 80대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는, 국가유공자(본인)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빈곤율이 99.1% 감소하여 가장 높은 빈곤 감소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98.5%, 고엽제 98.3%, 독립유공자 98.0% 등의 순으로 빈곤율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수임무 및 5·18민주유공자의 경우에는 빈곤 감소율이 각각 86.1%와 87.3%로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90%에 가까운 감소율로 전체적으로 빈곤율 감소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 빈곤율 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이다. 시장소득 빈곤율 55.2%에서 경상소득 빈곤율 15.4%로 떨어져 공적이전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율이 72.2%로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 30% 적용 결과와 비교해볼 때 빈곤 기준선의 상향으로 빈곤율 감소폭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빈곤율 감소 효과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2018년 55.5%, 2021년 72.2%).

성별로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30% 적용 결과에서는 보훈대상자가 남성인 가구의 빈곤 감소 효과가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나, 기준중위소득 50% 적용 결과에서는 여성 가구의 빈곤율 감소율이 76.3%로 남성 가구의 70.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 감소율이 커지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는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89.7%로 공적이전으로 인한 빈곤 감소율이 가장 높고, 제대군인 84.4%, 독립유공자 83.7%, 국가

유공자(유족) 75.4%, 보훈보상대상자 73.1% 등의 순으로 전체 가구의 빈곤 감소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7〉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단위: %)

구분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시장소득 적용 A	경상소득 적용 B	감소분%p : A-B	감소율%: (A-B)/A
기준중위소득의 30% 기준 빈곤계층					
2018년		44.3	7.5	36.8	83.0
2021년		46.3	1.9	44.5	96.0
성별	남성	44.3	1.6	42.7	96.4
	여성	52.9	2.6	50.2	95.0
연령 대별	40대 이하	4.5	1.3	3.2	70.9
	50대	9.9	0.4	9.5	96.0
	60대	31.3	0.8	30.5	97.3
	70대	58.6	1.3	57.3	97.8
	80대 이상	63.9	3.9	60.0	93.9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8.0	1.2	56.9	98.0
	국가유공자(본인)	48.2	0.4	47.7	99.1
	국가유공자(유족)	45.4	2.3	43.1	95.0
	고엽제	62.7	1.1	61.6	98.3
	참전유공자	57.8	3.4	54.4	94.2
	보훈보상대상자	19.7	0.3	19.4	98.5
	5·18민주유공자	23.1	2.9	20.2	87.3
	특수임무	17.4	2.4	15.0	86.1
	제대군인	14.2	0.8	13.3	94.1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 빈곤계층					
2018년		55.4	24.6	30.7	55.5
2021년		55.2	15.4	39.8	72.2
성별	남성	53.1	15.6	37.5	70.6
	여성	61.7	14.6	47.1	76.3
연령 대별	40대 이하	6.9	3.1	3.9	56.0
	50대	14.2	4.0	10.2	71.8
	60대	40.2	6.1	34.1	84.8
	70대	69.8	15.8	54.0	77.3
	80대 이상	72.9	28.5	44.4	60.9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64.9	10.6	54.3	83.7
	국가유공자(본인)	56.2	5.8	50.4	89.7
	국가유공자(유족)	54.4	13.4	41.1	75.4
	고엽제	72.8	21.1	51.7	71.0
	참전유공자	69.6	33.1	36.4	52.4
	보훈보상대상자	25.0	6.7	18.2	73.1
	5·18민주유공자	34.4	18.1	16.3	47.4
	특수임무	24.5	13.8	10.7	43.7
	제대군인	17.7	2.8	14.9	84.4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 표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층의 규모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증감 효과를 보여준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보험료 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는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제도와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 보훈급여금 등도 이전소득에 포함된다. 이에 공적이전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효과뿐만 아니라 중간·고소득계층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소득계층 비율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기준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간소득계층은 82.1% 증가했으며,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113.5%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조사결과 증가율(중간소득계층 59.9%, 고소득층 106.6%)과 비교해 공적이전을 통한 중간소득계층 및 고소득층의 증가폭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보훈대상자가 여성인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중간소득계층 및 고소득층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보훈대상자가 60대 이후인 가구에서는 공적이전으로 인해 중간소득계층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50대 이하 가구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 이하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으로 인한 중간소득계층의 감소는 고소득층의 증가로 상쇄됨을 볼 수 있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가구에서 공적이전으로 인해 중간·고소득계층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 참전유공자 가구의 경우 그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공적이전의 중간소득계층·고소득층 증감 효과

(단위: %)

구분		소득계층 비율		소득계층 변화	
		시장소득 적용 A	경상소득 적용 B	증감분%p : B-A	증감율%: (B-A)/A
기준중위소득의 50~150% : 중간소득계층					
2018년		36.1	57.8	21.7	59.9
2021년		35.3	64.3	29.0	82.1
성별	남성	36.5	63.1	26.6	73.0
	여성	31.6	68.2	36.6	115.6
연령 대별	40대 이하	61.2	57.0	-4.3	-7.0
	50대	56.3	49.5	-6.8	-12.2
	60대	48.4	60.6	12.2	25.3
	70대	27.2	73.0	45.7	167.8
	80대 이상	23.1	60.9	37.8	164.0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29.7	68.9	39.2	131.9
	국가유공자(본인)	35.0	66.3	31.3	89.3
	국가유공자(유족)	36.5	68.2	31.7	87.0
	고엽제	24.4	71.2	46.9	192.4
	참전유공자	27.4	59.7	32.3	118.0
	보훈보상대상자	51.3	58.8	7.5	14.7
	5·18민주유공자	52.5	64.7	12.2	23.3
	특수임무	59.8	66.7	7.0	11.6
기준중위소득의 150%이상 : 고소득층					
2018년		8.5	17.6	9.1	106.6
2021년		9.5	20.4	10.8	113.5
성별	남성	10.4	21.3	10.9	104.8
	여성	6.7	17.2	10.5	156.8
연령 대별	40대 이하	31.8	40.0	8.1	25.6
	50대	29.5	46.5	17.1	57.8
	60대	11.4	33.3	21.9	191.8
	70대	2.9	11.2	8.3	281.3
	80대 이상	4.0	10.6	6.6	165.8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5.5	20.6	15.1	277.4
	국가유공자(본인)	8.8	27.9	19.1	216.9
	국가유공자(유족)	9.1	18.4	9.3	102.5
	고엽제	2.9	7.7	4.8	168.6
	참전유공자	3.1	7.1	4.1	134.1
	보훈보상대상자	23.8	34.5	10.7	45.0
	5·18민주유공자	13.2	17.2	4.0	30.7
	특수임무	15.7	19.5	3.7	23.7
제대군인		29.6	43.7	14.1	47.8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보훈급여금

앞서 전체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보장 효과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도 보훈급여금이 저소득층 및 중간·고소득층 규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보훈급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과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수시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 분류한 보훈대상자의 9개 유형 중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보훈급여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보훈급여금 포함 전과 후의 경상소득 빈곤율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 30%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보훈급여 지급 전 빈곤율은 18.6%인데 반해, 보훈급여금 지급 후 빈곤율은 1.9%로, 보훈급여금으로 인해 빈곤율이 9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훈급여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보훈대상자 특성별로는 앞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보훈대상자가 남성인 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매우 근소한 차이로 좀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70대까지는 빈곤 감소율이 커지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는, 국가유공자(본인) 가구에서 빈곤율 감소 효과가 98.0%로 가장 높고, 보훈보상대상자 96.9%, 독립유공자 96.4%, 고엽제 95.5%, 국가유공자(유족) 87.9%, 참전유공자 83.9%의 순으로 보훈급여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빈곤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보훈급여금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율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56.7%로, 마찬가지로 2018년 39.2%와 비교해볼 때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보훈대상자 가구의 보훈급여금 빈곤율 감소 효과가 더 크며, 연령대별로는 70대까지 빈곤 감소율이 증가하다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별로는 국가유공자(본인) 83.1%, 독립유공자 77.3%, 보훈보상대상자 61.9%, 국가유공자(유족) 61.9%, 고엽제 59.0%로 나타났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32.3%로 보훈급여금으로 인한 빈곤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9〉 보훈급여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

(단위: %)

구분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보훈급여금 지급전 A	보훈급여금 지급후 B (경상소득 적용)	감소분%p : A-B	감소율%: (A-B)/A
기준중위소득의 30% 기준					
2018년		25.8	7.5	18.3	70.8
2021년		18.6	1.9	16.7	90.0
성별	남성	16.9	1.6	15.3	90.5
	여성	24.0	2.6	21.4	89.1
연령 대별	40대이하	2.6	1.3	1.3	50.4
	50대	2.8	0.4	2.4	86.1
	60대	7.5	0.8	6.7	88.8
	70대	22.5	1.3	21.2	94.2
	80대이상	30.4	3.9	26.5	87.1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32.1	1.2	30.9	96.4
	국가유공자(본인)	22.4	0.4	21.9	98.0
	국가유공자(유족)	18.9	2.3	16.6	87.9
	고엽제	24.5	1.1	23.4	95.5
	참전유공자	21.0	3.4	17.6	83.9
	보훈보상대상자	9.2	0.3	8.9	96.9
	5·18민주유공자	2.9	2.9	0.0	0.0
	특수임무	2.4	2.4	0.0	0.0
	제대군인	0.8	0.8	0.0	0.0
기준중위소득의 50%기준					
2018년		40.5	24.6	15.9	39.2
2021년		35.5	15.4	20.1	56.7
성별	남성	33.5	15.6	17.9	53.4
	여성	41.7	14.6	27.1	65.0
연령 대별	40대이하	4.8	3.1	1.7	36.1
	50대	7.6	4.0	3.6	47.4
	60대	15.8	6.1	9.7	61.4
	70대	46.2	15.8	30.3	65.7
	80대이상	51.7	28.5	23.2	44.9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6.4	10.6	35.9	77.3
	국가유공자(본인)	34.2	5.8	28.5	83.1
	국가유공자(유족)	35.2	13.4	21.8	61.9
	고엽제	51.5	21.1	30.4	59.0
	참전유공자	49.0	33.1	15.8	32.3
	보훈보상대상자	17.6	6.7	10.9	61.9
	5·18민주유공자	18.1	18.1	0.0	0.0
	특수임무	13.8	13.8	0.0	0.0
	제대군인	2.8	2.8	0.0	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는 보훈급여금으로 인한 중간소득계층 및 고소득층의 증감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훈급여금은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혹은 특정 사유의 발생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이다. 즉, 보훈급여금을 통해 저소득층 감소는 물론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7-10〉을 보면 보훈급여금으로 인해 중간소득계층은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결과와 비교해볼 때 중간소득계층의 증가율은 더 크고, 고소득층의 증가율은 거의 유사하나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층 모두에서 보훈대상자가 여성인 가구가 남성 가구에 비해 각각의 규모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50대 이하 가구에서는 보훈급여금 지급 후 중간소득계층의 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모든 연령대에서 고소득층의 규모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보훈대상자 유형별로는,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가구에서 보훈급여금으로 인해 중간·고소득계층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 보훈급여금의 중간소득계층·고소득층 증감 효과

(단위: %)

구분		소득계층 비율		소득계층 변화	
		보훈급여금 지급전 A	보훈급여금 지급후 B (경상소득 적용)	증감분%p : B-A	증감율%: (B-A)/A
기준중위소득의 50~150% : 중간소득계층					
2018년		45.6	57.8	12.2	26.8
2021년		48.4	64.3	15.9	32.9
성별	남성	49.0	63.1	14.0	28.6
	여성	46.3	68.2	21.9	47.3
연령 대별	40대이하	60.4	57.0	-3.4	-5.7
	50대	49.8	49.5	-0.3	-0.7
	60대	55.1	60.6	5.5	10.0
	70대	47.1	73.0	25.9	55.0
	80대이상	41.1	60.9	19.8	48.1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43.7	68.9	25.2	57.6
	국가유공자(본인)	46.4	66.3	19.9	43.0
	국가유공자(유족)	50.5	68.2	17.7	35.1
	고엽제	43.4	71.2	27.8	64.1
	참전유공자	45.5	59.7	14.2	31.2
	보훈보상대상자	54.3	58.8	4.5	8.3
	5·18민주유공자	64.7	64.7	0.0	0.0
	특수임무	66.7	66.7	0.0	0.0
	제대군인	53.5	53.5	0.0	0.0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 : 고소득층					
2018년		13.9	17.6	3.7	26.3
2021년		16.2	20.4	4.2	25.8
성별	남성	17.5	21.3	3.8	21.9
	여성	12.0	17.2	5.2	43.6
연령 대별	40대이하	34.8	40.0	5.1	14.8
	50대	42.6	46.5	4.0	9.3
	60대	29.1	33.3	4.2	14.4
	70대	6.8	11.2	4.4	65.3
	80대이상	7.2	10.6	3.5	48.5
대상 분류	독립유공자	9.9	20.6	10.7	108.6
	국가유공자(본인)	19.4	27.9	8.5	44.0
	국가유공자(유족)	14.4	18.4	4.1	28.2
	고엽제	5.1	7.7	2.6	50.9
	참전유공자	5.5	7.1	1.6	29.6
	보훈보상대상자	28.1	34.5	6.4	22.6
	5·18민주유공자	17.2	17.2	0.0	0.0
	특수임무	19.5	19.5	0.0	0.0
	제대군인	43.7	43.7	0.0	0.0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아래 표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과 빈곤율 감소 효과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점을 감안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와 노인가구로 구분하여 보훈대상자 가구와 비교하였다. 기준중위소득 30% 적용 시 보훈대상자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46.3%)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 가구 빈곤율(15.3%) 및 노인가구 빈곤율(35.0%)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은 보훈대상자 가구(1.9%)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 가구 2.3%, 노인가구 3.8%). 즉,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적용 시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 가구에 비해 보훈대상자 가구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가구와 비교해서는 더 낮게 나타났다.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과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 가구와 노인가구 모두와 비교해볼 때 보훈대상자 가구에서 여전히 빈곤 감소 효과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7-11〉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비교

(단위: %)

구분	빈곤율		빈곤율 감소 효과	
	시장소득 적용 A	경상소득 적용 B	감소분%p : A-B	감소율%: (A-B)/A
기준중위소득의 30% 기준 빈곤계층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46.3	1.9	44.5	96.0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	2.3	13.0	84.9
	노인가구 ¹⁾	3.8	31.3	89.3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 빈곤계층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55.2	15.4	39.8	72.2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	12.5	11.7	48.4
	노인가구 ¹⁾	24.6	25.5	50.9

주: 가구에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노인가구로 정의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8장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및 함의

제2절 실태조사 및 연구 관련 제언

제 8 장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물을 활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를 분석하여,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통계 등을 제공하고 관련 정책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지표를 선정하고 2018년 실태조사 조사표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 및 개발하였으며, 표본추출과 대면·면접방식의 실태조사를 수행한 통계청 통계대행과의 실태조사의 수행을 지원하였다. 또한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과 관련 정책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조사수행과 그 결과분석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대상 집단을 근거법과 유·가족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등 9개 집단으로 유형화 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표본추출과 조사수행은 물론 조사결과 전반의 주요 분석항목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실태조사는 2021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되었는데,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전체 보훈대상자 655,184명 중 9,716명(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6월에 실시했던 2018년 조사에 비해 조사 시기가 늦추어졌는데, 당초 8월에 예정하였던 것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조사 시기를 조정한 탓이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제도 현황, 실태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실태, 국가보훈대상자(개인)의 생활실태 및 인식 현황, 타 조사 및 유사집단과의 비교, 소득계층별 규모와 소득보장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과 이와 관련한 정책함의로 구성되었다.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주요결과 및 정책함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정책함의는 보훈대상자 가구 일반사항을 포함한 가구에 대한 분석과 보훈대상자 개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보훈대상자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타 조사와의 비교분석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가. 가구 생활실태

1) 가구 생활실태

먼저, 보훈대상자의 가구 일반사항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가구 규모(가구원 수)는 평균 2.2명이었으며, 고령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보훈대상자의 90.4%가 가구주였으며, 남성 가구주 비율은 95.9%로 여성(73.2%)보다 높았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중 61.9%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상당수가 사별로 인해 무배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훈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62.5%는 비경제활동인구이며, 이중 여성의 비경제활동 비율은 79.1%로 남성(55.3%)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서 40대 이하 보훈대상자의 약 68%는 상용근로였다. 보훈대상자의 사회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살펴보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공적연금을 수급하거나 가입하고 있으며(연금 수급 하면서 가입은 제외), 가입 혹은 수급 중인 공적연금 종류는 국민연금이 37.8%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국가보훈대상자 중 2.4%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생계급여 수급률(2020년 기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약 6.3%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주거급여도 전체 보훈대상자의 1.7%가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급여는 학령기 자녀를 가구원으로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수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가구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거주 주택 유형의 경우 48%가 아파트, 3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영구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 중 67.9%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가 13.4%, 전세가 9.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자가 거주자의 경우 현 거주 주택에 대한 가격은 평균 약 39천만 원이었으며,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규모는 약 9.7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택 환경 불안과 주거비 불안층이 보훈대상자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정형주택, 최저주거기준 등 주거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들을 찾아내고,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주택협동조합 등과 협업을 통해 임대 주택 등에 우선 거주하게 하거나,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비 부담이 큰 보훈대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월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이동(낮은 주거비, 전세로 전환 등) 등에 대한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

보훈대상자 가구의 가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가구당 소비지출은 월평균 194.9만 원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식료품(외식포함)비가 75.3만 원, 기타소비지출이 35.7만 원, 주거비가 25.4만 원, 의료비가 20.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료품비와 주거비 같이 의식주에 사용되는 기초적 지출 비용이 전체 소비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보훈대상자의 연령대가 50대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288.1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지출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지출 수준이 낮아졌다. 한편, 보훈대상자의 가구당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56.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사회보험료는 14.6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6만 원으로 비소비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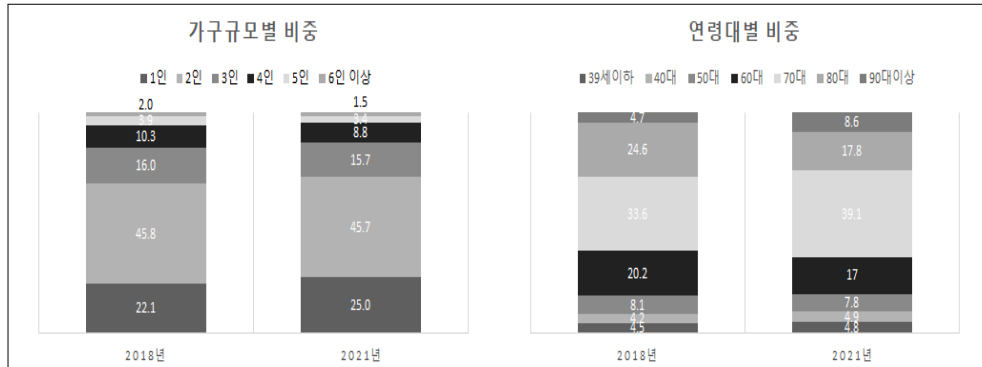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상소득은 평균 4,2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은 1,680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39.5%, 공적이전소득은 1,692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39.7%, 그리고 사업소득은 586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1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소득 구성 중 근로소득보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더 큰 것은 보훈급여금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노동을 통한 소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그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사적이전소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거주 주택을 제외한 자산은 13,300만 원이며, 그 중 소유 및 점유 부동산은 약 9,38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약 3,072만 원, 기타자산(자동차 포함)은 약 843만 원이었다. 부채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보훈대상자 가구당 총 부채액은 평균 약 6,251만 원으로 사업용 부채를 제외하면 약 3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주로 금융기관 대출액이며 원금 상환액은 약 200만 원, 이자지출액은 96.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주택으로 인한 모기지 부담이 있을 경우 모기지 원금이 아닌 이자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부담으로 인해 다른 지출을 줄이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채무나 체납액을 탕감하거나 유예하는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전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2) 가구 생활실태의 변화

가구 일반사항과 생활실태의 주요 지표별로 2018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18년 2.3명에서 2021년에는 2.2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1인 가구의 비중이 약 3%p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평균 연령은 2018년 71.0세에서 2021년 71.2세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40대 이하와 70대와 9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50대, 60대, 80대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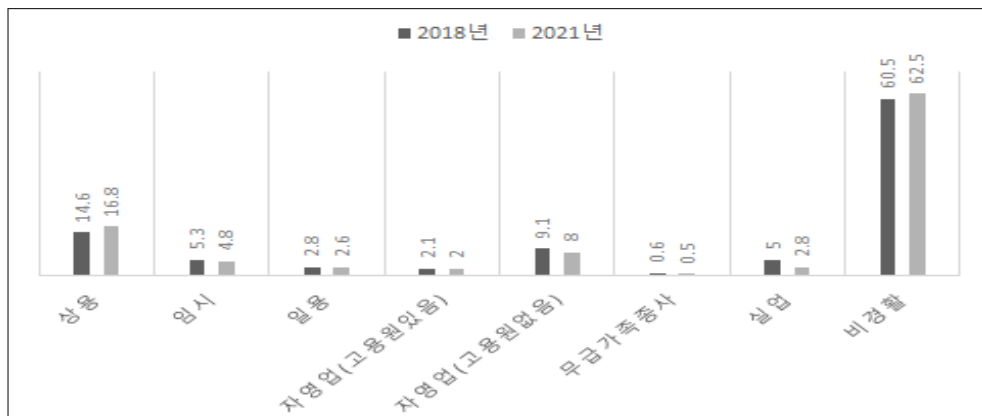
[그림 8-1]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가구원 수, 연령대 비중 변화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변화를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소폭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5%에서 2.8%로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고령화의 영향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지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임시일용직 비율이 감소하고 상용직 비율이 증가한 점, 그리고 실업률이 감소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는 비장애인 비율이 2018년 71.0%에서 73.9%로 증가한 점, 만성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한 비율이 같은 시기 66.9%에서 67.7%로 감소한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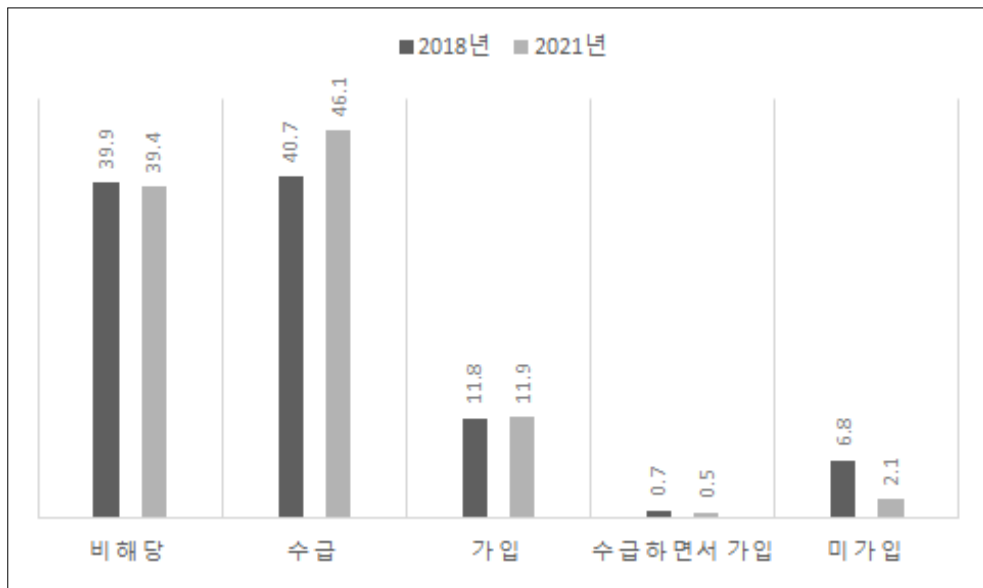
[그림 8-2]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상태 변화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연금 가입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여타 유형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급자가 40.7%에서 46.1%로 증가한 반면, 미가입은 6.8%에서 2.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공적연금에 의한 보호의 정도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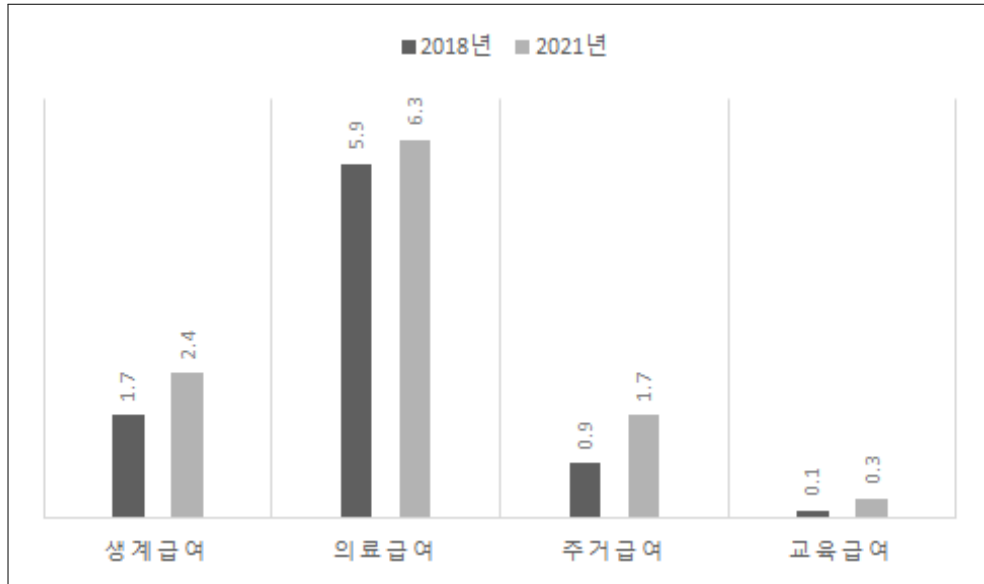
[그림 8-3] 국가보훈대상자 공적연금 가입 형태 변화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전체 급여에 걸쳐 수급률이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는 1.7%에서 2.5%로, 의료급여는 5.9%에서 6.3%로, 주거급여는 0.9%에서 1.7%로 각각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소득변화와 각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등 제도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중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것을 주요 제도 변화로 꼽을 수 있고, 주거급여의 경우는 선정기준이 완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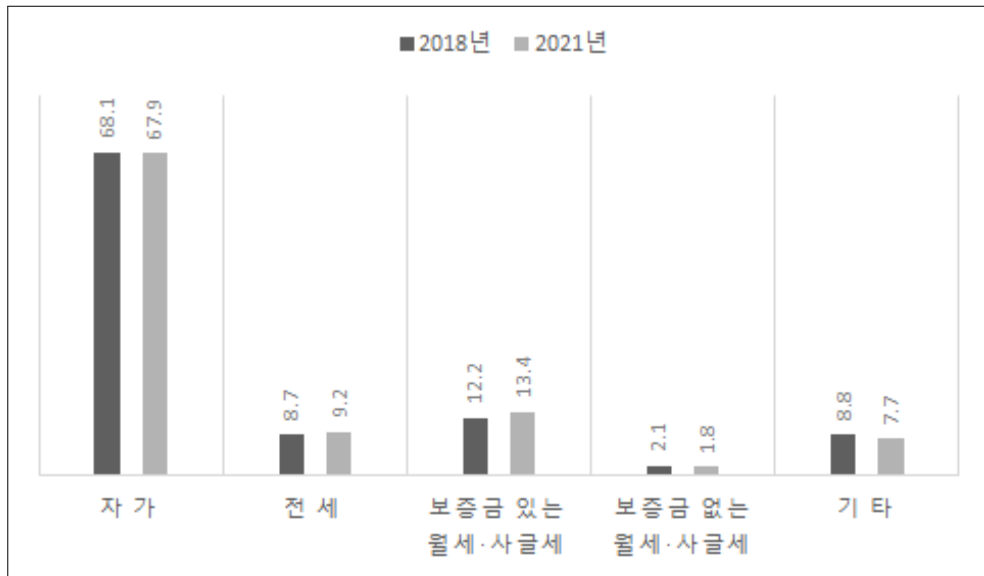
[그림 8-4]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변화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거상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거주 주택 유형에서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감소하고 일반아파트 거주 비율이 증가한 것을 특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주택 입주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자가의 비율은 미미하게 감소(0.2%p)한 반면,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사글세의 비중이 조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보훈복지타운 등 무상주택이나 무상사택이 포함되는 기타 유형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5]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입주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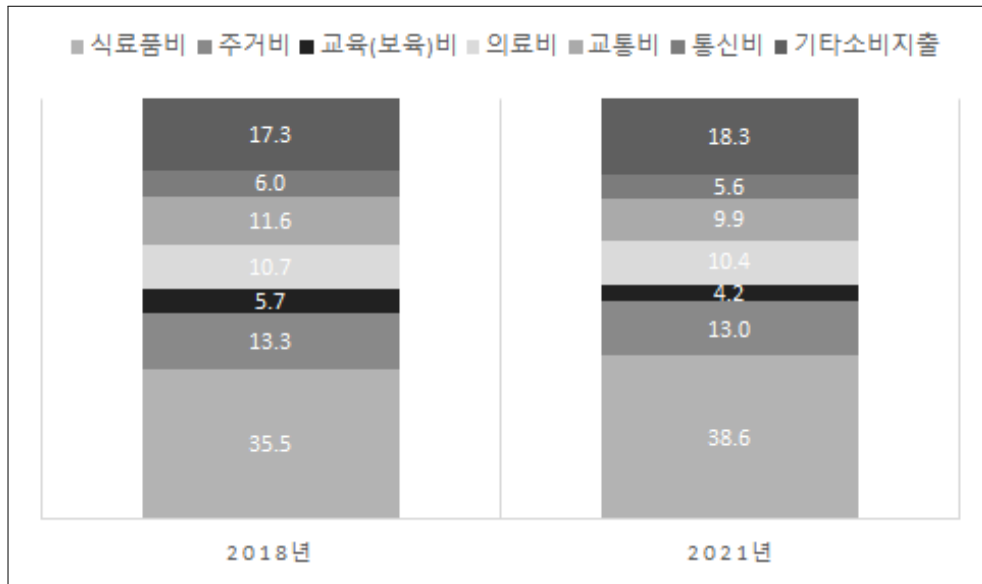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의 질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변화는 거주면적이 모든 입주 형태에서 증가했다는 점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도 방수, 면적,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감소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018년 177.6만 원에서 2021년 194.9만 원으로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출항목별 비중의 변화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비는 35.5%에서 38.6%로 증가했고, 주거비, 교육(보육)비, 의료비, 교통비의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은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추가적 소비지출이 가장 필요한 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4-25〉 참조), 식료품비가 20.4%에서 42.1%로 가장 크게 늘었고, 다음으로 기타소비가 9.1%에서 12.4%로 소폭 증가하였다. 나머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의 항목은 감소하여 식료품비와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실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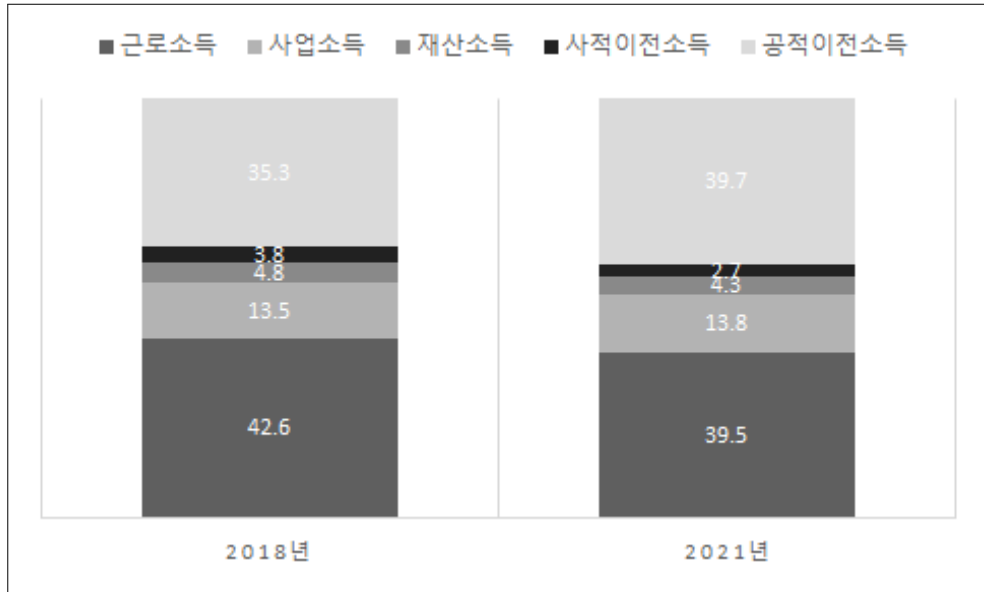
[그림 8-6] 국가보훈대상자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변화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상소득은 2018년 3,795만 원에서 2021년에는 4,258만 원으로 약 463만 원 증가했다. 소득원천별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18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근로소득의 비중은 3.1%p 감소했고, 사업소득이 비중은 0.3%p 증가했다.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각각 0.5%p, 1.1%p씩 감소했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35.3%에서 39.7%로 4.4%p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전체 경상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1,340만 원에서 1,692만 원으로 352만 원 증가) 전체 경상 소득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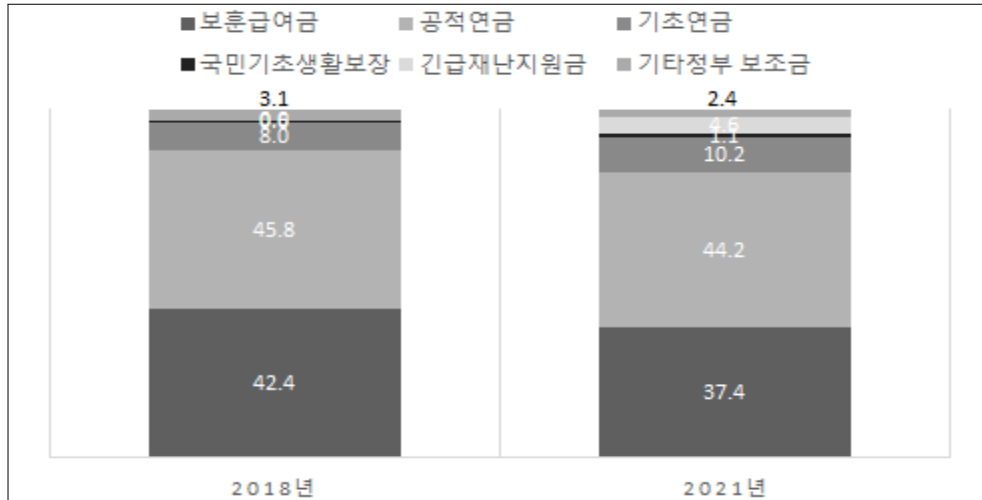
[그림 8-7] 국가보훈대상자 경상소득 원천별 구성비 변화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전체의 4.6%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보훈급여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기타정부보조금의 상대적 비중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훈급여금의 비중은 42.4%에서 37.4%로 감소하였으며, 공적연금의 비중도 45.8%에서 44.2%로 감소하였다. 반면, 기초연금의 비중은 8.0%에서 10.2%로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기초연금액이 상향조정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2020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그림 8-8] 국가보훈대상자 공적이전소득 원천별 구성비 변화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및 인식 현황

1) 생활실태 및 인식

문화 및 여가생활에 관심이 있는(약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보훈대상자의 비율은 48.1%로 나타났고, 주요 여가활동으로 휴식 활동이 63.2%로 가장 많았고, 사회 및 친교 활동 4.7%, 문화예술관람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휴식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사회 및 친교 활동과 문화예술관람의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이전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에 비추어 문화 및 여가생활에 관한 욕구에 크게 미달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하는 여가 유형을 살펴보면, 휴식활동이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광 활동, 취미·오락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는 관광활동이 가장 선호 되는 활동이었는데, 이런 변화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 팬데믹에 대비하여 고령인 보훈대상자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가 생활 불만족 이유로는 건강 문제 42.5%, 경제적 부담 41.3%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과 건강 관련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공적인 개입을 강화하여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고연령층일수록 여가활동을 주로 혼자 보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노인들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안일 도움에 대해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가 약 15%에 달하고 돈을 빌려야 할 경우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도 약 37%, 이야기 상대가 없는 경우도 약 17%에 달해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보훈대상자의 약 83%가 60대 이상이고, 특히 약 26%는 80대 이상인 고연령 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몸이 아파도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도 이야기 상대가 없는 대상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보훈대상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고령화 및 사적이전의 감소추세⁴⁰⁾ 등으로 볼 때 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족, 특히 비동거 가족의 도움이 줄어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정서적, 경제적 부담의 확대와도 연결되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정서적 도움의 경우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큰 편인데, 배우자 사망 등 정서적 도움의 기반을 잃을 경우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훈대상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2018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걷기, 스스로 목욕과 옷 입기, 일상 활동에 지장 등 항목별 건강 상태도 2018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자 비율은 입원, 외래, 약국 모두 2018년에 비해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훈대상자의 36.9%가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은 약 8% 수준으로 201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가구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10%를 넘는 가구는 약 23%인데, 이 역시 이전 조사에 비해 감소하였다.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보장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이 5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40) 이번 조사에서 사적이전소득은 약 94만 원으로 2018년 조사 100만 원에 비해 감소하였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에서 3.0%로 감소하였음.

국비 진료, 국가유공자 감면 진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보험 이용률이 낮아지는 반면 국가유공자 진료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해보면, 보훈대상자들의 비용 측면의 보장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대한 접근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병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국가보훈 대상자는 부상, 가족의 사망 등 다양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조사에서 CES-D11척도를 활용하여 우울성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보훈대상자의 25.6%가 우울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보훈대상자의 정신 건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보훈대상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일을 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34.6%, 실업 또는 향후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는 2.8%였으며, 향후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은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 고연령(46%)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으며, 일자리 부족과 건강문제는 2018년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가 다소 심각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41.2%),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33.1%),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제공(20.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제활동 실태 및 관련 인식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먼저,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연령자와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의 보훈대상자로 일을 원하는 경우 적합한 직종, 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보훈대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 혹은 세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구직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중에서 2018년에 비해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의 욕구가 증가한 것에 주목하여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을 하고 있거나 의사가 있는 경우, 기업에 대한 일반적 현황 외에 복무 등에 대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등을 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 등과 협약을 통해 주기적,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나눔활동(과거 경험 등의 공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본인의 기술과 장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해서 교환할 수 있는 ‘타임뱅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취업 지원제도의 주 대상인 제대군인의 경우 취업자 및 구직의사가 있는 비취업자 중 10명 중 1명 꼴로 지난 1년 동안 구직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한 이유로 고연령 30.1%, 일자리 부족 29.1%, 기술부족과 정보부족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훈대상자에 비해 고연령에 의한 사유는 적은 반면 일자리 부족과 정보 부족의 사유가 더 많아 이들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과 적합한 일자리 확보에 주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보훈대상자의 노후 보장 준비 실태와 그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0%가 노후를 위한 금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노후생활을 위한 주된 금전적 준비수단으로는 응답자의 46.4%가 보훈 급여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공적 연금 33.3%, 금융자산 7.6%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200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264만 원, 준비했거나 준비 가능한 금액은 월 162만 원으로 각각 응답하여 현재 준비했거나 준비 가능한 금액이 적정 생활에 필요한 금액 보다 약 100만 원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형태는 고령보훈대상자 전용 임대 아파트(9.7%)와 양로 및 요양시설(11.2%)에 비해 개인주택(79.0%)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희망 동거자로는 보훈대상자의 66.2%가 배우자를 선택하였다. 보훈대상자들이 노후에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가사 간병(42.1%), 시설 보호(31.8%), 여가활동(7.8%) 등의 순으로 꼽았다.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 가사간병 지원과 시설보호에 대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양적 확대와 함께 내실화 있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특히 개인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확대를 비중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훈제도의 다양한 서비스 중 주요 13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사망시 지원, 이용료 감면, 양로보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는데,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현금지원과 비용 완화와 같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정책 서비스 이용 경험은 의료지원, 보훈급여금, 이용료 감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족도는 사망시 지원 3.7점, 이용료 감면 3.7점, 교육 지원 3.5점, 수송시설 지원 3.5점, 휴양시설 이용 3.5점, 재가복지 서비스 3.5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지도와 경험률이 높은 보훈급여금은 2.9점으로 보통에 다소 미달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즉, 보훈대상자들의 인지도와 경험률이 높은 보훈급여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현금지원의 만족도는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가, 또는 보훈대상자로서의 적절한 삶의 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준인가, 또는 여타 복지급여 수급자와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인가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보훈급여금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기준들에 따른 적정 보상수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적 지원 이외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표 8-9〉 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만족도	(n)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보훈급여금	92.0	8.0	70.5	29.5	2.9	6,990
교육 지원	47.6	52.4	15.7	84.3	3.5	1,677
취업 지원	42.4	57.6	10.6	89.4	3.4	1,085
대부 지원	39.9	60.1	12.0	88.0	3.3	1,223
의료 지원	89.7	10.3	73.2	26.8	3.3	7,246
양로보호	48.6	51.4	3.2	96.8	2.9	313
보철구 지원	31.7	68.3	4.1	95.9	3.3	469
수송시설 지원	46.5	53.5	17.6	82.4	3.5	1,751
휴양시설 이용	35.7	64.3	6.6	93.4	3.5	662
사망시 지원	86.3	13.7	10.4	89.6	3.7	863
예우 지원	43.8	56.2	6.7	93.3	3.2	654
재가복지 서비스	34.2	65.8	4.2	95.8	3.5	383
이용료 감면	66.7	33.3	35.2	64.8	3.7	3,437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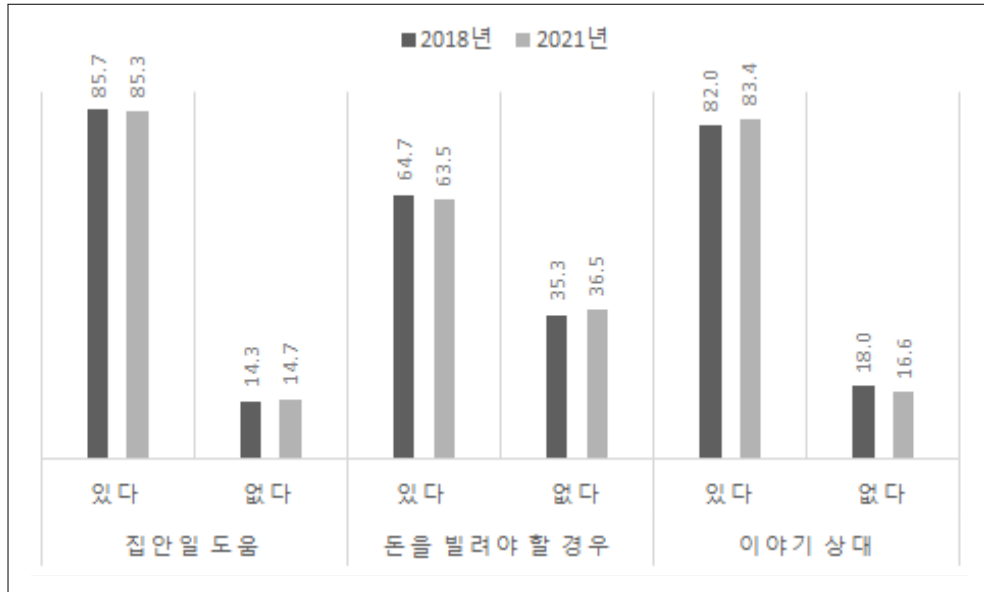
보훈대상자 인식 및 욕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정책 만족도는 만족, 매우 만족을 합산하여 약 18%이며,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약 43%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범위의 미흡과 지원 수준의 미흡이 각각 45.5%, 40.2%로 나타났으며, 국가보훈처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 1순위로는 보훈급여금(63.8%)이 압도적으로 꼽혔으며 2순위로는 의료지원(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가장 힘든 점으로는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운 점이 5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감염병 우려 29.9%, 소득감소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생활실태 및 인식 변화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는 2018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약간 관심이 있거나 매우 관심 있는 비율 47.8%에서 48.1%로 0.3%p 증가) 가운데, 주요 여가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휴식활동이 49.6%에서 63.2%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휴식활동이 이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관람, 스포츠참여, 관광활동, 사회 및 친교활동 등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보훈대상자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패턴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한 사람에 대한 질문에도 가족과 친구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혼자라는 응답 비중이 크게 증가(38.3%에서 44.6%)한 결과, 관광여행 경험이 크게 감소(47.5%에서 17.8%)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지지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집안일을 도와 줄 사람과 이야기 상대가 있다는 응답은 2018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줄 사람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리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청할 사람은 증가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감소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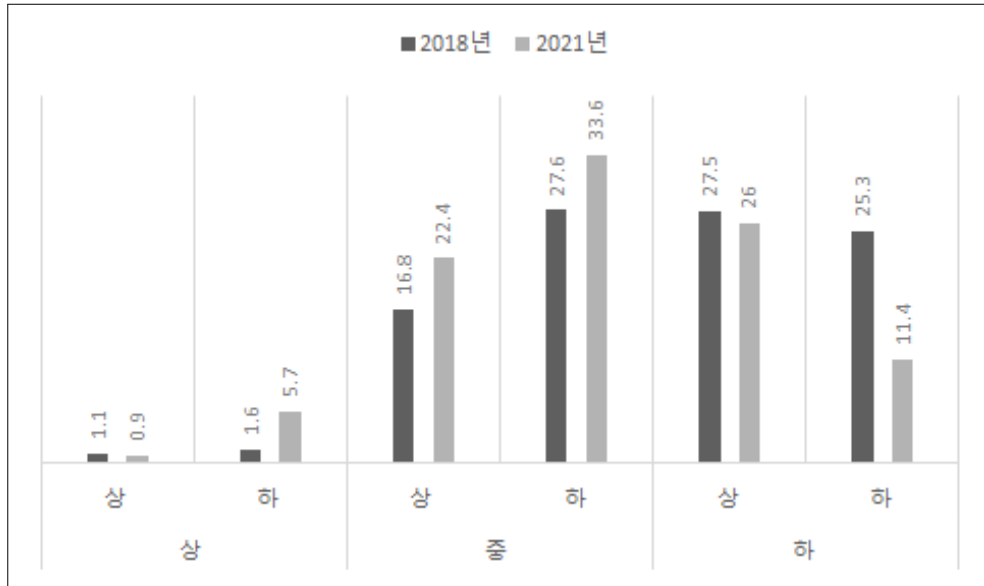
[그림 8-9] 국가보훈대상자 사회적 지지체계 변화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사회적 계층인식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층으로 인식한 대상자는 2018년 2.7%에 비해 2021년에 6.6%로 증가했고, 중간층으로 응답한 비율도 같은 기간 44.4%에서 56%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2.8%에서 37.4%로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계층의식의 긍정적인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견인한 전체적인 소득 수준 향상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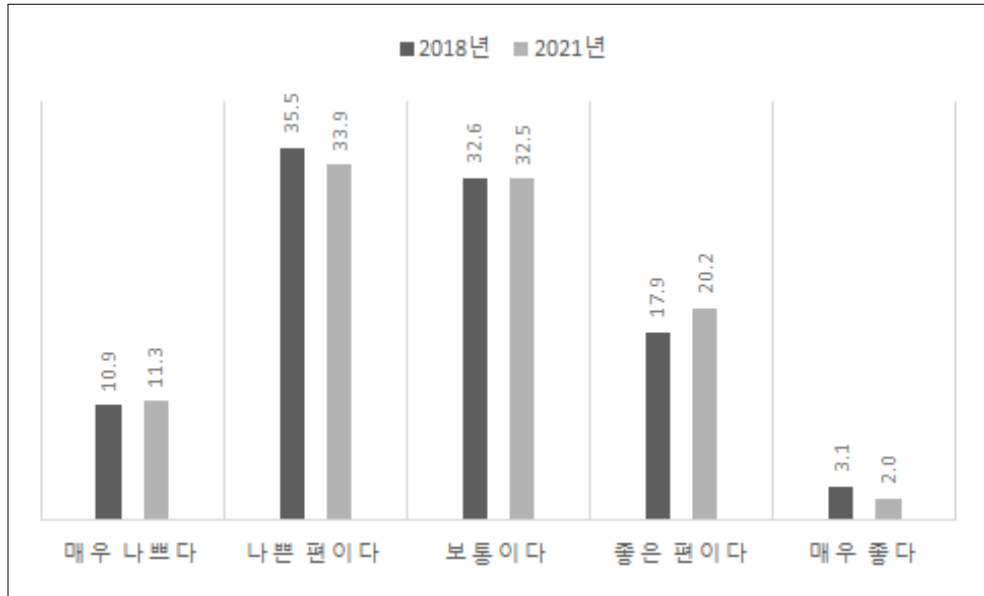
[그림 8-10] 국가보훈대상자 사회적 계층인식 변화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관적 건강 상태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보통이다가 거의 변화 없는 가운데, 좋은 편이다가 증가하고 나쁜 편이다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는 호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걷기, 혼자 목욕 또는 옷입기, 일상활동, 통증이나 불편감, 불안 또는 우울 등의 항목에서도 2018년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표 5-2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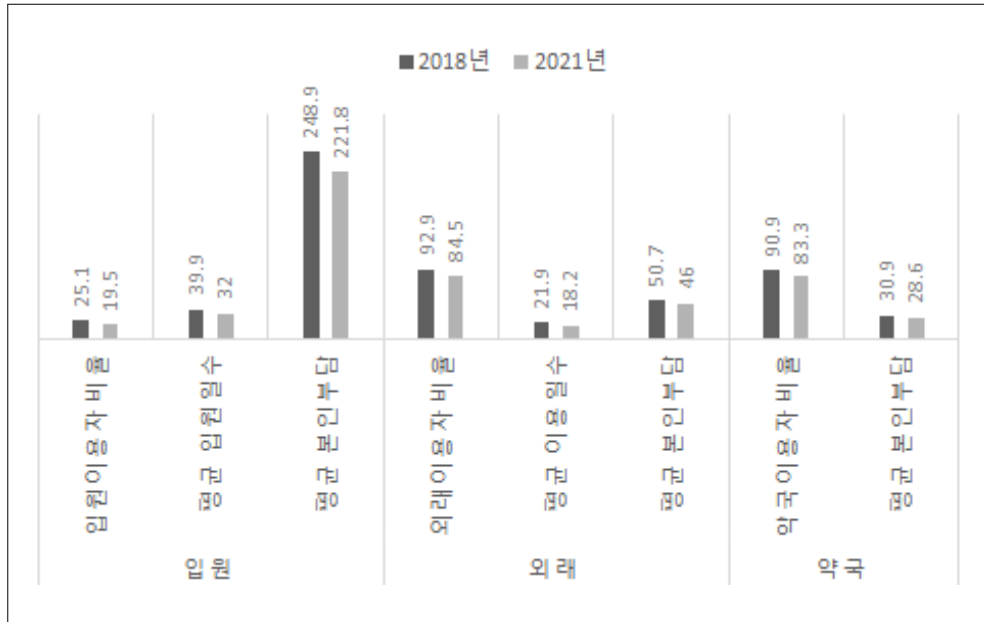
[그림 8-11] 국가보훈대상자 주관적 건강 상태 변화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난 1년간 의료이용 실적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2018년에 비해 입원, 외래, 약국 모두에 걸쳐 이용자 비율, 이용일 수, 본인 부담이 모두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본문에서도 기술하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실적이 감소한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국민의 이용률 감소보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이용률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고령자가 비중이 높은 보훈대상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2018년에 비해 2021년에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결과(부담 38.2%에서 36.9%)와 치료 포기 경험률이 감소(11.6%에서 10.8%) 결과와 연관지어보면 의료비 부담과 미충족 의료 욕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량이 감소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8-12] 국가보훈대상자 의료기관 의료이용 실적 변화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 타 조사 및 유사집단과의 비교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 집단을 설정하고 집단 간 (또는 조사 간) 실태 및 인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훈대상자의 상대적 특성 파악을 위한 비교집단으로 전체 가구(일반국민), 노인, 장애인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대상들로 조사를 수행한 다음의 조사들과 본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보훈대상자(또는 보훈대상자가 속한 가구)와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통계청의 사회조사자료를, 노인과의 특성 비교를 위해 노인실태조사자료를, 장애인과의 특성비교를 위해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1)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

먼저, 보훈대상자를 전체 가구(일반국민)와 비교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 가구로 본 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일반국민의 가구 일반사항 및 소득 및 지출 등 가계상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먼저, 가구의 일반적인 사항 및 주거상황을 비교해보면, 보훈대상자의 경우 1~2인 가구 비중이 약 70%로 일반국민 전체 가구(약 5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비중이 약 83%에 이르며 이는 일반국민 전체 가구의 60대 이상 가구주 비율(약 4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주형태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자가 보유 비율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보훈대상자 가구에서 자가 보유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가계상황에 대해 비교한 결과 일반국민 전체 가구에 비해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비지출을 비교해 보면, 전체 가구의 경우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보훈대상자의 경우 고령층 비중이 높은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전체 가구 소득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 비중이 63%를, 공적이전소득이 9.8%를 각각 차지하는 일반가구와 소득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자산의 경우 보훈대상자 가구는 평균 42,141만 원으로 전체 가구 50,253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평균 부채규모는 6,251만 원으로 일반 가구 8,801만 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보훈대상자 가구의 경우 1~2인 가구원수 비중과 더불어 60대 이상의 비중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령화된 1~2인 가구에 대한 욕구와 실태파악이 선행된 후, 필요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도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으로 소득보전 이외의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비지출 항목 중 의료비 지출비용이 일반국민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의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타 정책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실태조사와 비교

일반 노인의 비교를 위해 노인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동일 대상 비교를 위해 노인실태조사대상인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 한정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노인실태조사의 노인들과 보훈실태조사의 보훈대상자의 소득, 자산, 소비 수준을 비교하면 보훈실태조사가 더 높은 소득, 자산, 소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의 노인들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148만 원이며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195만 원으로 나타났고, 소득 수준도 보훈대상자의 연간 가구 소득 평균은 약 4,258만 원으로 노인실태조사의 연간 가구 소득 3,027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도 약 43,771만 원으로 노인실태조사 가구 자산 평균 약 30,516만 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노인실태조사의 노인들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건강한 편 44.8%, 그저 그렇다 30.8%, 나쁜 편 17.6%, 매우 건강 4.5%, 매우 나쁜 편 2.3%, 보훈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은 나쁜 편 39.7%, 보통 31.3%, 건강한 편 14.8%, 매우 나쁜 편 13.6%, 매우 건강한 편 0.6%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훈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상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해보면, 노인실태조사에서 36.9%가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20.5%에 불과해 보훈대상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 중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약 42%로 나타난 반면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15%로 나타나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3) 장애인실태조사와 비교

장애인과 보훈대상자와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체 보훈대상자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그룹,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비상이그룹으로 구분하여 2020년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먼저, 가구 소득 및 지출 비교 결과 보훈

대상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이 장애인실태조사의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에 비해 높고, 지출 또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보훈대상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355만 원으로 장애인실태조사의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 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주관적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면,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인데 비해 보훈대상자는 22.3%로 장애인에 비해서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꼈거나 많이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애인이 33.6%로 보훈대상자 22.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주관적 건강 상태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인지율도 보훈대상자가 장애인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4) 사회조사와 비교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를 통해 일반국민 인식과 보훈대상자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훈대상자의 경우 만족(21.9%)이 불만족(31.4%)보다 낮은 반면, 사회조사에서는 그 반대로 만족(27.0%)의 비율이 불만족(2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보훈대상자의 경우 일반국민들에 비해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불만족도는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만족 이유로 보훈대상자는 건강문제(42.5%), 경제적 부담(41.3%), 시간부족(7.5%) 등의 순인데, 일반국민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46.1%)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인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열악한 건강 상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실태조사 및 연구 관련 제언

지금까지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주요결과를 제시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전체 연구를 갈무리하면서 금번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와 연구의 향후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본 실태조사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정책모니터링이라 할 수 있다. 정책 모니터링은 “정책 프로그램 또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군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임완섭 외, 2018. p. 395). 동 법 제16조에서 실태조사의 목적을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실태조사 역시 정책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본 실태조사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론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지만 조사 시점의 보훈대상자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탄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완섭 외(2018)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보훈제도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회환경 변화와 보훈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사항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동태적 특성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사문항은 그대로 살리되 조사 당시의 환경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제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생활실태조사에서는 뼈대가 되는 주요한 문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적이전소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파악하는 등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고, 정책적 함의가 크지 않은 항목들은 삭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등의 변화를 기하였다.

둘째, 역시 조사문항과 관련한 제안으로 조사문항의 탄력적인 구성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한 단순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자와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어(71.2세)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사표의 문항 수와 난이도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위 무응답(조사 거부)과 항목 무응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는 조사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의 간소화 방안과 더불어 질문

방식의 효율화를 동시에 목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자료 결합을 통한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와 관련한 핵심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료의 결합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문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사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출 자료원으로 활용되며, 우리나라 공식적 소득분배지표의 자료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한 좋은 사례다. 통계청은 2017년부터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동 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항목은 응답거부나 과소·과대 응답의 위험이 큰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금융부채 통계 등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조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훈행정 데이터베이스의 보훈급여금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보훈급여금은 보훈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를 대표하는 지표이며, 이에 따라 보훈정책의 평가와 그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실태조사에서 보훈급여금의 경우 하나의 변수로 조사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부 항목별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대상 가구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얻어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의 종류별, 유형별로 정확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 된 행정자료와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행정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들 행정자료를 실제로 활용하지는 않고 조사로 파악된 정보와의 비교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토내용을 담지 않았지만 전술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례와 같이 행정자료 결합을 통한 조사의 신뢰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비롯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보훈처가 보유하고 있는 보훈급여금 관련 행정자료 외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자료,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 연계 행정자료의 범위 확대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2021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조사는 2018년 실태조사와 동일한 조사체제로 수행되면서 2년이라는 시계열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3년 사이의 동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본 연구에서는 실태를 보여주는 본문(제4장과 제5장)에서 간략히 비교를 하였고, 결론의 제1절에서 동태

변화의 함의가 있는 항목에 대해 간략히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개년도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 추이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음번 조사결과까지 시계열이 확장될 경우, 일부 지표의 경우는 변화 추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요한 지표에 한해서는 시계열적 변화 추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심층적인 동태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동태분석뿐만 아니라 횡단면적으로도 당해연도 조사에서 파악된 주요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보훈정책의 주요 영역별로 심층적인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정책개선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취업 지원사업의 경우 취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분석 프레임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보훈유형, 상이정도,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유형별 생활실태와 보훈급여 및 서비스 수혜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방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서 향후 심층조사 참여에 동의를 받은 응답자 중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파악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개별 심층 인터뷰나 초점 집단인터뷰 등의 방식을 통해 양적 조사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맥락적인 특성이나 정책 욕구, 정책효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기간 연장과 관련 예산 확충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앞서 제안한 심층 연구와 같이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본 실태조사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정책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들과 관련하여 본 실태조사의 자료는 사업군에 대한 평가인 기본평가는 물론 중요사업에 대한 심층적 평가인 핵심평가에서도 그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의 자체평가에서도 보훈 프로그램의 필요와 만족도는 중요한 평가 지표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와 별개로 국가보훈처 차원의 다양한 평가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및 인식실태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본 실태조사자료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를 활용한 평가 분석을 통해 보훈대상자 및 보훈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여 정량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정책개선 및 제도설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임완섭 외, 2018. p.396).

그리고 정책평가와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동 계획은 「국가보훈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계획은 제4차 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시간 범위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책대상자의 실태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계획의 시간 범위 또는 주기(5년)와 실태조사의 주기(3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계획수립 단계에서 최신의 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의 주기가 동일한 사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이 있다. 동 조사와 계획은 3년 주기로 설정되어 있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차기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에 적시 반영이 가능한 구조다. 현재의 종합계획 주기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종합계획 수립 직전 연도에 별도의 부가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종합계획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도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등 인적 속성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대안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3년 주기의 실태조사 및 연구와 기본계획 수립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9). 2019년 건강보험 제도 국민 인식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14459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621&lsiSeq=188435#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8325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8&lsiSeq=234259#0000>.
- 국가보훈처 누리집. <https://www.mpva.go.kr/mpva/index.do>에서 2022. 2. 6. 인출.
- 국가보훈처. (2011). **보훈50년사(1961~2011)**.
- 국가보훈처. (2021a). **2020년 국가보훈처 보훈 연감**.
- 국가보훈처. (2021b). **2021년 10월 말 보훈대상자 기본현황**.
- 국가보훈처. (2021c).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I)**.
- 국가보훈처. (2021d).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II)**.
- 국가보훈처. (2021e). **국가보훈처 내부 전산자료**.
- 국가보훈처. (2021f). **보훈 60년사**.
- 국가보훈처. (2021g). **주요 보훈정책 현황**.
- 국가보훈처. **예우보상**.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0>에서 2022. 2. 26. 인출.
-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김성희·이민정·오욱찬·오다은·황주희·오미애·김지민·이연희·강동욱·권선진·백은령·윤상용·이선우.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이주미. (2015).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5(3), 71-102.
- 박은자·배정은·송은솔·정연·최슬기·이응준·김은주·염아림·윤열매·김규성·박현아·이영민·윤유진·김성경·최건우·이효정·박유진. (2020). **201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6). **2017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 보건복지부. (2021). **2021 의료급여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여유진·신재동·이병재·우선희·한겨레·정다운·송지은·홍성운·오미애·정은희·김선 … 임은정.
(2020). **202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김세진·황남희·임정미·주보혜·남궁은하·이선희·정경희·강은나·김경래(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김태완·김문길·황정하·정용문·강형민. (2017).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교연구**. 국가보훈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김태완·정은희·황도경·이아영·형시영·황정하·윤여선·박형준·이주미·김예슬·최준영·안영.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보훈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김태완·황도경·오미애·최준영. (2014).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선행연구**. 국가보훈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82에서 2022. 2. 6. 인출.
- 통계청 통계설명DB.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https://www.narastat.kr/metastvc/index.do>에서 2022. 2. 22. 인출.
- 통계청. (2020a).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통계청. (2020b). **2020년 사회조사**. 원자료.
- 통계청. (2020c). **2020년 사회조사결과(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 통계청. (2021a).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통계청. (2021b).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
- 통계청. (2021c). **2021년 사회조사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 통계청.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tblId=DT_33109_D011&orgId=331&language=kor&conn_path=&vw_cd=&list_id=에서 2022. 2. 26. 인출.
- 통계청.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성/연령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DA7089에서 2022. 2. 24. 인출.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총인구수('20)**. <https://kosis.kr/visual/nsportalStats/detail.do?menuId=10&NUM=1007>에서 2022. 2. 27.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19). **2019년 빈곤통계연보**.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록 1] 표본추출 세부 과정 및 가중값 작성⁴¹⁾

1. 표본추출

가. 이상추출(Two-phase sampling, Double sampling)

- (목적) 이상추출 표본설계는 세분화된 층화, 포함오차 감소 등 추정의 효율성과 조사비용 절감 등 현장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규모 조사에 주로 이용
 - (1상) 대규모 1상 표본을 집락 추출하여 2상 표본의 층화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최종 추출표본의 지역범위를 조정하여 현장조사 효율성을 제고
 - ※ 2상 표본의 분포를 1상 표본 지역에 밀집되도록 한정할 수 있음. 즉, 최종 표본이 11,000명, 1상 표본이 3,340개 조사구인 경우
 - 최종 표본은 조사구당 평균 3명의 표본이 분포
 - (2상) 층화효율을 높이기 위해 1상 추출된 표본을 리스트화 하여 2상 표본추출틀로 활용하고, 최종 추출단위인 보훈대상자를 직접 층화하여 보훈대상자를 리스트 추출
 - ※ 이단(Two-stage) 추출의 경우에는 1단 표본 조사구내에서 2단 표본을 확률추출함에 따라 최종 2단 표본의 층화가 어려움(보훈유형별 적정 표본수 확보가 어려움)
- (표본추출방법) 이상추출
 - (1상) 집락계통추출(조사구 추출)
 - (2상) 층화계통추출(리스트 추출)

41) 본 부록은 통계청 통계대행과에서 작성한 내용을 발췌 및 수정한 것임.

나. 1상 표본추출

1) 층화

- 최종 표본의 가중값 편차를 줄이기 위해 1상 표본은 별도로 층화하지 않음.

2) 표본규모

- 예산 및 이전 조사의 RSE, 응답률(87.2%)를 고려해 표본 규모 결정
 - 목표 표본 수 11,000명
- 예상 오차: 예상되는 상대표준오차(RSE)는 8.0%

3) 표본추출

- 최종 표본의 가중값 편차(영향)을 줄이기 위해 1상 표본의 추출 확률이 동일하도록(자체가중) 계통 추출
- 분류지표
 - 시도 공표자료의 정도 제고를 위해 시도, 조사구별 대상자 수(규모), 주소명 기준으로 정렬
- ※ 내재적 층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상 층화지표와 관련이 있는 조사구별 대상자 규모를 분류지표로 선정
- * 각 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류지표로 가구를 정렬하여 계통추출을 할 경우에는 내재적으로 층화 효과를 얻음

4) 1상 추출 결과

- 1상 표본추출결과 시도 및 보훈유형별 분포는 추출틀의 분포와 유사(차이 0.08%p 미만)

〈부표 1〉 보훈유형별 추출결과

보훈유형	추출률		1상		차이 (%p)(b-a)
	대상자	구성비(%) (a)	대상자	구성비(%) (b)	
계	638,173	100.04	200,908	100.00	-0.04
독립유공	7,991	1.26	2,500	1.24	-0.02
국가유공(본인)	158,779	24.90	49,965	24.86	-0.04
국가유공(유족)	214,058	33.54	67,465	33.58	0.04
5·18민주유공	30,218	4.74	9,478	4.72	-0.02
참전유공	149,435	23.42	47,198	23.50	0.08
고엽제후유	5,782	0.90	1,817	0.90	0.00
특수임무유공	4,169	0.66	1,273	0.64	-0.02
제대군인	1,985	0.32	630	0.32	0.00
보훈보상대상	65,756	10.30	20,582	10.24	-0.06

〈부표 2〉 시도별 추출결과

시도	추출률		1상		차이 (%p)(b-a)
	대상자	구성비(%) (a)	대상자	구성비(%) (b)	
전국	638,173	100.0	200,908	99.98	-0.02
서울	113,213	17.74	35,617	17.72	-0.02
부산	46,884	7.34	14,754	7.34	0.00
대구	31,809	4.98	10,044	5.00	0.02
인천	31,493	4.94	9,896	4.92	-0.02
광주	18,657	2.92	5,892	2.94	0.02
대전	18,975	2.98	5,954	2.96	-0.02
울산	10,497	1.64	3,327	1.66	0.02
세종	4,351	0.68	1,354	0.68	0.00
경기	151,977	23.82	47,853	23.82	0.00
강원	25,782	4.04	8,128	4.04	0.00
충북	20,922	3.28	6,620	3.30	0.02
충남	26,152	4.10	8,231	4.10	0.00
전북	23,503	3.68	7,368	3.66	-0.02
전남	23,291	3.64	7,321	3.64	0.00
경북	39,029	6.12	12,270	6.10	-0.02
경남	42,127	6.60	13,258	6.60	0.00
제주	9,511	1.50	3,021	1.50	0.00

다. 2상 표본추출

1) 층화

○ 공표 단위 및 자료 분석, 현장조사 여건을 고려한 층화변수 선정

- 보훈분류(9)층: 9개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상이등급별): 각 7개

*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분석 활용을 위해 상세분류 요청

2) 층별 표본배분

□ 보훈유형별 배분: 제곱근($\sqrt{N}$) 비례배분

○ 보훈유형별 모집단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도 및 보훈유형별 공표를 고려하여 제곱근 비례 배분

$$* \text{제곱근 비례배분} : n_{\text{보훈유형별}} = n_{\text{전체}} \times \frac{\sqrt{N_{\text{보훈유형별}}}}{\sum \sqrt{N_{\text{보훈유형별}}}}$$

○ 보훈유형별 제곱근 비례배분

〈부표 3〉 보훈유형별 제곱근 비례배분

보훈유형	대상자수	비례배분	제곱근비	최종표본
계	200,908	11,000	1.000	11,000
1. 독립유공	2,500	137	0.046	506
2. 국가유공(본인)	49,965	2,736	0.204	2,244
3. 국가유공(유족)	67,465	3,694	0.237	2,607
4. 고엽제	9,478	519	0.089	979
5. 참전유공	47,198	2,584	0.198	2,178
6. 보훈보상대상	1,817	99	0.039	429
7. 5.18민주유공	1,273	70	0.033	363
8. 특수임무유공	630	34	0.023	253
9. 제대군인	20,582	1,127	0.131	1,441

○ 국가유공(본인)의 상이등급별 제공금 비례배분

〈부표 4〉 국가유공(본인)의 상이등급별 제공금 비례배분

보훈유형	대상자수	비례배분	제공금비	최종표본
2. 국가유공(본인) 계	49,965	2,245	1.000	2,243
- 전상및공상군경 제외	16,609	746	0.189	424
- 전상군경(1급)	88	4	0.014	31
- 전상군경(2급)	157	7	0.018	40
- 전상군경(3급)	1,014	46	0.047	105
- 전상군경(4급)	248	11	0.023	52
- 전상군경(5급)	1,786	80	0.062	139
- 전상군경(6급)	8,598	386	0.136	305
- 전상군경(7급)	5,967	268	0.113	254
- 공상군경(1급)	282	13	0.025	56
- 공상군경(2급)	197	9	0.021	47
- 공상군경(3급)	760	34	0.040	90
- 공상군경(4급)	295	13	0.025	56
- 공상군경(5급)	1,352	61	0.054	121
- 공상군경(6급)	5,381	242	0.108	242
- 공상군경(7급)	7,231	325	0.125	281

3) 최종 표본배분 결과

○ 보훈유형별 및 상이등급별 최종 표본배분 결과

〈부표 5〉 보훈유형별 제공금 비례배분

보훈유형	조사구(1상) 대상자수	표본수	보훈유형	조사구(1상) 대상자수	표본수
계	200,908	11,000	- 공상군경(3급)	760	90
1. 독립유공	2,500	506	- 공상군경(4급)	295	56
2. 국가유공(본인)	49,965	2,244	- 공상군경(5급)	1,352	121
- 전상및공상군경 제외	16,609	424	- 공상군경(6급)	5,381	242
- 전상군경(1급)	88	32	- 공상군경(7급)	7,231	281
- 전상군경(2급)	157	40	3. 국가유공(유족)	67,465	2,607
- 전상군경(3급)	1,014	105	4. 고엽제	9,478	979
- 전상군경(4급)	248	52	5. 참전유공	47,198	2,178
- 전상군경(5급)	1,786	139	6. 보훈보상대상	1,817	429
- 전상군경(6급)	8,598	305	7. 5.18민주유공	1,273	363
- 전상군경(7급)	5,967	254	8. 특수임무유공	630	253
- 공상군경(1급)	282	56	9. 제대군인	20,582	1,441
- 공상군경(2급)	197	47			

라. 표본추출

○ 표본추출률과 표본의 주요 특성 차이는 6.3%p 이내

○ 보훈유형별(상이등급 포함) 주요 특성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일부 표본규모가 작은 층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추정 단계에서 조정이 필요

〈부표 6〉 보훈유형별(상이등급 포함) 조사모집단 특성 비율

보훈유형	성별 구성비 차이		연령대 구성비 차이						
	남자	여자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세 이상
계	76.0	24.0	4.8	4.9	7.9	17.0	39.2	17.7	8.3
1. 독립유공	59.6	40.4	0.1	0.9	4.8	16.3	29.4	36.4	12.1
2. 국가유공(본인)	99.4	0.6	5.3	6.8	9.9	19.3	42.1	10.4	6.2
- 전상 및 공상군경 제외	98.4	1.6	1.4	1.2	12.8	38.7	24.9	12.2	8.7
- 전상군경(1급)	99.3	0.7	0.4	.	.	0.7	73.1	12.5	13.3
- 전상군경(2급)	99.8	0.2	.	.	.	0.9	64.6	17.4	17.2
- 전상군경(3급)	100.0	.	.	.	.	0.8	79.7	12.0	7.5
- 전상군경(4급)	100.0	.	.	.	.	0.1	61.1	19.1	19.6
- 전상군경(5급)	100.0	0.0	0.1	0.0	0.0	0.4	68.8	18.0	12.7
- 전상군경(6급)	99.9	0.1	0.0	0.0	0.0	0.6	83.6	11.1	4.6
- 전상군경(7급)	100.0	0.0	0.1	0.1	0.0	0.6	74.3	13.0	11.9
- 공상군경(1급)	99.8	0.2	6.3	11.5	23.8	28.0	22.1	7.9	0.3
- 공상군경(2급)	99.8	0.2	4.4	11.5	21.9	26.5	25.3	9.9	0.5
- 공상군경(3급)	99.3	0.7	5.3	12.3	16.2	25.1	30.2	10.2	0.8
- 공상군경(4급)	99.1	0.9	6.4	12.2	18.7	23.4	26.6	11.6	1.2
- 공상군경(5급)	99.7	0.3	4.5	10.8	17.7	26.0	29.5	10.4	1.1
- 공상군경(6급)	99.8	0.2	7.9	16.7	22.3	22.9	22.7	6.6	0.9
- 공상군경(7급)	99.9	0.1	25.6	26.9	15.3	15.7	12.2	3.5	0.8
3. 국가유공(유족)	33.4	66.6	0.5	2.7	9.0	27.5	27.0	26.9	6.4
4. 고엽제	99.7	0.3	0.0	0.3	0.1	0.5	92.2	6.7	0.2
5. 참전유공	99.1	0.9	.	.	.	0.4	59.5	21.1	19.0
6. 보훈보상대상	83.6	16.4	35.5	15.1	17.1	18.7	8.2	4.7	0.8
7. 5.18민주유공	80.5	19.5	2.2	1.5	15.4	60.1	13.5	6.5	0.7
8. 특수임무유공	76.4	23.6	3.4	26.5	23.8	21.8	11.9	11.4	1.3
9. 제대군인	95.9	4.1	29.0	20.2	19.7	20.0	8.1	3.0	0.1

〈부표 7〉 보훈유형별(상이등급 포함) 추출표본 특성 비율

보훈유형	성별 구성비 차이		연령대 구성비 차이						
	남자	여자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세 이상
계	79.5	20.5	6.6	6.0	8.7	16.6	38.8	16.0	7.3
1. 독립유공	60.1	39.9	0.4	1.4	4.3	15.6	28.1	37.7	12.5
2. 국가유공(본인)	99.7	0.3	5.2	7.2	9.8	16.8	44.4	10.4	6.2
- 전상 및 공상군경 제외	99.1	0.9	0.9	2.4	11.6	39.6	24.1	12.5	9.0
- 전상군경(1급)	100.0	.	.	.	.	.	75.0	6.3	18.8
- 전상군경(2급)	100.0	.	.	.	.	.	67.5	15.0	17.5
- 전상군경(3급)	100.0	.	.	.	.	.	77.1	13.3	9.5
- 전상군경(4급)	100.0	.	.	.	.	.	63.5	17.3	19.2
- 전상군경(5급)	100.0	.	.	0.7	.	.	70.5	17.3	11.5
- 전상군경(6급)	100.0	.	.	.	.	1.3	83.6	9.5	5.6
- 전상군경(7급)	100.0	.	.	.	.	0.8	74.0	13.4	11.8
- 공상군경(1급)	100.0	.	5.4	8.9	25.0	32.1	19.6	7.1	1.8
- 공상군경(2급)	97.9	2.1	2.1	12.8	23.4	27.7	25.5	8.5	.
- 공상군경(3급)	100.0	.	4.4	10.0	14.4	30.0	33.3	7.8	.
- 공상군경(4급)	100.0	.	10.7	8.9	19.6	19.6	26.8	14.3	.
- 공상군경(5급)	100.0	.	3.3	13.2	17.4	25.6	28.9	10.7	0.8
- 공상군경(6급)	99.6	0.4	8.7	16.1	23.1	22.7	22.3	6.6	0.4
- 공상군경(7급)	100.0	.	26.3	24.9	16.4	16.7	11.4	3.6	0.7
3. 국가유공(유족)	32.8	67.2	0.5	2.8	8.9	27.6	27.1	26.7	6.4
4. 고엽제	99.9	0.1	.	0.4	0.1	0.6	92.0	6.6	0.2
5. 참전유공	99.0	1.0	.	.	.	0.2	59.4	21.0	19.4
6. 보훈보상대상	83.2	16.8	36.1	14.0	17.7	19.3	7.2	4.4	1.2
7. 5.18민주유공	79.9	20.1	3.0	1.4	14.6	59.0	14.6	6.9	0.6
8. 특수임무유공	75.1	24.9	3.6	25.3	24.1	22.1	11.9	12.3	0.8
9. 제대군인	95.8	4.2	29.0	19.8	20.1	19.8	8.1	3.2	0.1

〈부표 8〉 보훈유형별(상이등급 포함) 특성 차이(%p)

보훈유형	성별 구성비 차이		연령대 구성비 차이						
	남자	여자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세 이상
계	3.5	-3.5	1.8	1.0	0.8	-0.5	-0.4	-1.7	-1.0
1. 독립유공	0.5	-0.5	0.3	0.5	-0.4	-0.7	-1.4	1.4	0.3
2. 국가유공(본인)	0.3	-0.3	-0.1	0.4	-0.1	-2.6	2.4	0.0	0.0
- 전상 및 공상군경 제외	0.6	-0.6	-0.5	1.1	-1.2	0.9	-0.9	0.3	0.2
- 전상군경(1급)	0.7	.	.	.	.	.	1.9	-6.3	5.5
- 전상군경(2급)	0.2	.	.	.	.	.	2.9	-2.4	0.3
- 전상군경(3급)	0.0	.	.	.	.	.	-2.5	1.4	2.0
- 전상군경(4급)	0.0	.	.	.	.	.	2.3	-1.8	-0.4
- 전상군경(5급)	0.0	.	.	0.7	.	.	1.7	-0.7	-1.2
- 전상군경(6급)	0.1	.	.	.	.	0.7	0.0	-1.6	0.9
- 전상군경(7급)	0.0	.	.	.	.	0.2	-0.3	0.3	-0.1
- 공상군경(1급)	0.2	.	-0.9	-2.6	1.2	4.1	-2.5	-0.8	1.5
- 공상군경(2급)	-2.0	2.0	-2.3	1.3	1.5	1.2	0.2	-1.4	.
- 공상군경(3급)	0.7	.	-0.8	-2.3	-1.7	4.9	3.2	-2.4	.
- 공상군경(4급)	0.9	.	4.4	-3.3	1.0	-3.7	0.2	2.7	.
- 공상군경(5급)	0.3	.	-1.2	2.4	-0.3	-0.4	-0.6	0.4	-0.3
- 공상군경(6급)	-0.2	0.2	0.8	-0.6	0.9	-0.1	-0.4	0.0	-0.5
- 공상군경(7급)	0.1	.	0.8	-2.0	1.0	1.0	-0.8	0.1	-0.1
3. 국가유공(유족)	-0.6	0.6	0.0	0.0	-0.1	0.1	0.1	-0.2	0.0
4. 고엽제	0.1	-0.1	.	0.1	0.0	0.1	-0.1	0.0	0.0
5. 참전유공	-0.1	0.1	.	.	.	-0.2	-0.1	-0.1	0.4
6. 보훈보상대상	-0.3	0.3	0.7	-1.1	0.6	0.7	-1.0	-0.3	0.4
7. 5.18민주유공	-0.6	0.6	0.8	-0.1	-0.8	-1.1	1.1	0.3	-0.2
8. 특수임무유공	-1.3	1.3	0.2	-1.2	0.3	0.3	0.0	0.9	-0.5
9. 제대군인	0.0	0.0	0.0	-0.4	0.4	-0.1	0.0	0.2	0.0

2. 가중값 작성

가. 설계 가중값(Design Weight)

- 설계가중치는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며, 계통추출(SYS)로 1상 표본 조사구를 자체가중이 되도록 추출하고 추출된 1상 표본 내에서 다시 대상자를 추출하는 이상추출법을 사용

$$w_h^0 = \frac{N}{n} \times \frac{M_h}{m_h}$$

- $h = 1, 2, \dots, H$: 층을 나타내는 첨자
- w_h^0 : 설계 가중값
- N : 표본추출틀 전체 조사구 수
- n : 1상 표본 조사구 수
- M_h : 1상 표본(2상 추출틀) h 층 내 보훈대상자 수
- m_h : 2상 표본 h 층 내 보훈대상자 수

나. 무응답 조정 가중값

- 무응답 가중값 조정
 - 응답자가 조사 자체에 불응한 단위무응답 등 표본의 변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셀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무응답 가중값 조정 실시
 - 응답성향 점수(응답확률)를 구하고, 그 역수를 설계가중값에 곱한 값을 무응답 가중값으로 작성

$$w_h^1 = w_h^0 \times \frac{1}{\rho_h}$$

- w_h^1 : 무응답 조정 가중값
- w_h^0 : 설계 가중값
- ρ_h : 응답성향 점수(응답확률)

다. 최종 가중값

○ 추정량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벤치마크 모집단의 분포에 맞게 사후층화 또는 반복비례 가중방법 활용

$$w_{h,g} = w_h^1 \times \frac{X_{h,g}}{\hat{X}_{h,g}}$$

- $w_{h,g}$: 최종 가중값
- w_h^1 : 무응답 조정 가중값
- g : 사후층화 그룹
- X : 벤치마킹 모집단 추정치
- $\hat{X}$: 표본의 총 가중값

[부록 2]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조사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가구용)



인 사 말 씀

국가보훈처와 통계청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과 복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보훈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정확한 통계 조사를 하려면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조사 기간(2021. 9. 24. ~ 10. 5.)에 조사원이 귀댁을 방문하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 내용과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표지 부분은 조사원이 적습니다.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로(길) _____		
	동 _____ 호 (_____ 읍·면·동 _____)		
관리 사항	행정구역코드	관리 번호	보훈대상자 성명
지방청·사무소		조사원 성명	휴대전화
			조사표 작성 방법 ■ 조사원 면접식 ■ 자기 기입식



국가보훈처



통계청

〈 조사표 작성 요령 〉

- 객관식 문항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1개의 번호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또는 ☐ 표 하거나 ☐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쓰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응답한 경우에는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쓰십시오.
- 한 항목에 응답하고 다음 항목에 응답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되, '화살표(→)'가 표시된 부분은 지정된 항목으로 이동해 응답하십시오.

I. 가구 일반사항 (2021. 9. 1. 기준)

1 현재 귀택의 가구원(가구주 포함)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 가구주 :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

※ 가구원 :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가구를 형성하여 생계를 함께 하는 구성원

· 따로 살고 있지만 생계를 해당가구에 의존하거나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주말부부, 학생 등)은 포함

· 분가한 자녀, 군인으로 입대한 가족, 함께 살고 있는 가사도우미·운전자·하숙생 등의 동거인 등은 제외

가구원 번호 (1번은 항상 보훈대상자)	성명	성별		출생연도	동거여부	가구주와의 관계	
		1. 남	2. 여			1. 가구주 2.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 또는 그 배우자 5. 손자손녀 또는 그 배우자	6.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 7.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8.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9. 기타
01	보훈대상자 성명						
02							
03							
04							
05							
06							
07							
08							

가구원 번호	혼인 상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과정	상태	
	0. 해당 없음 (만 18세 미만) 1. 배우자 있음 2. 별거 3. 사별 4. 이혼 5. 미혼	0. 안 받음(미취학 포함)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4년제 미만) 5. 대학교(4년제 이상) 6. 대학원 이상	1. 졸업 2. 재학(휴학 포함) 3. 중퇴(수료 포함) * '0. 안 받음'은 상태를 기입하지 않음	0. 해당 없음(만 15세 미만)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7. 실업자(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한 자) 8.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인, 구직단념자)
01				
02				
03				
04				
05				
06				
07				
08				

가구원 번호	장애 분류 및 등급		만성질환	공적연금 가입 형태	가입 및 수급중인 공적 연금
	분류	장애정도			
	0. 해당 없음 1. 지체 2. 뇌병변 3. 시각 4. 청각 5. 언어 6. 지적 7. 자폐성 8. 정신 9. 심장 10. 심장 11. 호흡기 12. 간 13. 안면 14. 장루/요루 15. 뇌전증(간질) 16. 비등속 장애인 (보훈처 등록 장애인 포함) *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	0. 해당 없음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 1~3급)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 4~6급) 3. 비등속 장애인 (보훈처 등록 장애인 포함)	1. 없음 2. 있음 * 만성질환은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투병, 투약하는 경우	0. 해당 없음 1. 연금 수급 2. 연금 가입 3. 연금수급 하면서 가입 4. 미가입	0. 해당 없음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 3. 군인연금 4. 사학연금 5. 별정직우체국 연금
01					
02					
03					
04					
05					
06					
07					
08					

※ 공적연금 가입형태

0. 해당 없음 :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업주부 및 학생, 만 18세 미만, 만 60세 이상)
 1. 연금 수급 :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을 현재 수급 받는 경우
 2. 연금 가입 :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및 납부예외자 포함) 또는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 포함
 4. 미가입 :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람

2 귀택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수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급여종류	수급형태	
	1. 생계급여	① 비수급	② 수급(가구원 일부 수급 포함)
	2. 의료급여	① 비수급	② 의료급여 1종 ③ 의료급여 2종
	3. 주거급여	① 비수급	② 수급
	4. 교육급여	① 비수급	② 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생계, 의료, 주거 급여에 적용)과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

※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② 의료급여 1종: 병입비의 본인부담이 없고 비급여만 본인부담 15%를 부담

③ 의료급여 2종: 병입비의 15%를 부담하며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100%를 부담함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단독주택(다가구 및 영업 전용 단독주택 포함)
- 일반 아파트
- 국민임대 · 영구임대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주택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오피스텔
- 빌라하우스, 판잣집, 컨테이너
- 기타

■ 자가 → 4-1

- 전세 → 4-1

- 보증금 있는 월세 → 4-1
(사글세) 4-2

- 보증금 없는 월세 → 4-2
(사글세)

- 기타 → 4-2
(보훈복지타운 등 무상주택, 무상 사택 등)

4-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현 시가 기준)은 얼마입니까?
(자가의 경우 주택 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기입)

금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원
---	---	---	---	---	---	---	---	---

4-2 현재 지불하고 있는 월세액은 얼마입니까?
(보증금 제외)

인원	성	년	월	일
----	---	---	---	---

지하 반지하 지상 옥상

III. 가계 지출

8 2020년(2020.1.1~2020.12.31) 한 해 가구의 소비 지출을 월평균 금액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목	세부 내용	월평균 금액				
1) 식료품비 (외식비 포함)	곡물, 빵류, 떡류, 육류, 유제품, 채소, 조미 식품, 비주류 음료,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	천	백	십	일	만원
2) 주거비	월세, 주거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천	백	십	일	만원
3) 교육비 (보육비 포함)	정규 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 교육(사교육), 기타 교육 등의 서비스 등	천	백	십	일	만원
4) 의료비	의약품, 외래 의료 서비스, 입원 서비스, 치과 서비스 (※ 실제 부담한 비용만을 기입. 즉, 보험에서 환급받은 금액 등은 의료비에서 제외)	천	백	십	일	만원
5) 교통비	차량 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자동차 구입 비용은 제외)	천	백	십	일	만원
6) 통신비	통신 장비(전화 기기, 통신 서비스)일반 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천	백	십	일	만원
7) 기타 소비 지출	① 오락·문화 + ② 의류·신발 + ③ 가정용품·가사 서비스 + ④ ①~③ 이외 기타 소비 지출	천	백	십	일	만원
	① 오락·문화비: 운동, 공연, 여행, 취미용품 등에 대한 지출 ② 의류·신발비: 의복, 교복, 신발 등 구입 및 수선·세탁 서비스에 대한 지출 ③ 가정용품·가사 서비스비: 가구, 가전 기기, 식기류 등의 가정용품, 가사 도우미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소비 지출(비소비 지출 제외): 이미용품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보장성 보험료(저축성보험료 제외) 등의 지출을 포함	천	백	십	일	만원
전체 소비 지출	총액: 1) + 2) + 3) + 4) + 5) + 6) + 7)	천	백	십	일	만원

9 귀댁의 소비 지출 항목 중 어디에 추가 지출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 ☐ 식료품비 ☐ 교통비 ☐ 가정용품·가사 서비스
☐ 주거비 ☐ 통신비 ☐ 기타 소비 지출
☐ 교육비(보육비 포함) ☐ 오락·문화
☐ 의료비 ☐ 의류·신발

10 2020년(2020.1.1~2020.12.31) 한 해 가구의 비소비 지출을 월 평균금액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목	세부 내용	월평균 금액				
1) 세금	소득세,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동산세 등	천	백	십	일	만원
2) 사회 보험료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천	백	십	일	만원
3) 가구 간 이전 지출	상계를 알아하지 않는 부모, 자녀나 친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 보조금, 경조사비 등	천	백	십	일	만원
4) 비영리 단체로 이전	종교 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천	백	십	일	만원
5) 기타 비소비 지출	이자 지출 등 1)~4)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천	백	십	일	만원
전체 비소비 지출	총액: 1) + 2) + 3) + 4) + 5)	천	백	십	일	만원

IV. 가계 소득

11 2020년(2020.1.1~2020.12.31) 한 해 가구의 소득을 세금 공제 전 연간 소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구분 \ 소득	가구 연간 소득 (보훈대상자 소득 포함)					보훈대상자 연간 소득				
1) 근로소득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2) 사업소득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3) 재산소득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4) 공적 이전소득: (1) + (2) + ... + (6)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1)보훈급여금(수당 포함)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2)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3)기초연금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5)긴급재난지원금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6)기타 정부 보조금((1)~(5) 이외)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5) 사적 이전소득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전체 연간 소득: 1) + 2) + 3) + 4) + 5)	천	백	십	일	만원	천	백	십	일	만원

1)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세금 공제 전 소득

2)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 사업 수입(매출액, 판매 수입 등)에서 사업 지출(총비용)을 뺀 금액

3)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및 주택·건물·토지 임대 수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4) 공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 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받아 생기는 사회보장 급여(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체육연금 등)를 의미

5) 사적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친인척, 비영리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받아 생기는 소득

V. 자산 (2021. 9. 1. 기준)

12 귀댁의 보유 자산은 모두 얼마입니까?

자산 항목	세부 내용	금액				
1) 소유하거나 점유 중인 부동산 *거주하는 공간(집 등) 제외	주택, 주택 이외 건물, 토지, 양식장, 기타 부동산, 전세 보증금, 사업 설비 관리금 등	억	천	백	십	만원
2) 금융 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적립식 펀드, 타기 전 부은 켄드 등	억	천	백	십	만원
3) 기타 자산	자동차, 운동 클럽 회원권, 영업용 자동차와 번호판 가격, 귀금속, 상품권, 농축산물 농기계 등	억	천	백	십	만원
총액: 1) + 2) + 3)		억	천	백	십	만원

VI. 부채



현재(2021. 9. 1.) 기준 가구의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 13** 귀택의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가계용 부채와 사업용 부채의 총합)

십억	억	천	백	십	일
----	---	---	---	---	---

만원 → 부채가 없는 경우 **16** 번으로 이동

- 13-1** 귀택의 총 부채액 중 사업 용도의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십억	억	천	백	십	일
----	---	---	---	---	---

만원

- 13-2** 귀택의 아래 항목들의 가계 용도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구분	금액					
1) 금융기관 부채액(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회사 대출 등)	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카드 빚(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 등)	억	천	백	십	일	만원
3) 보훈처 생업 지원 대출(나라사랑 대출)	억	천	백	십	일	만원

부채 상환 능력

- 14** 2020년(2020. 1. 1~2020. 12. 31) 부채에 대한 원금 상환액 및 이자 지출액은 총 얼마입니까?

14-1 원금상환액

억	천	백	십	일
---	---	---	---	---

만원

14-2 이자지출액

억	천	백	십	일
---	---	---	---	---

만원

- 15**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자가 주택 마련 | ■ 부채 상환 | ■ 교육비 마련 |
| ■ 자가 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 | ■ 사업 자금(영농자금 포함) 마련 | ■ 생활비 마련 |
| ■ 전세·월세 보증금 마련 | ■ 결혼 자금 마련 | ■ 기타() |
| ■ 투자 자금(증권 등) 마련 | ■ 의료비 마련 | |

- 16** 귀택의 부채 규모는 1년 전(2020. 9. 1)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 감소 →
☐ 변화 없음
☐ 증가

16-1 부채 규모를 감소시킨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
| ■ 소득으로 상환 | ■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처분(거주 주택 제외) |
| ■ 금융자산 처분이나 퇴직연금 정산 | ■ 상속이나 증여로 상환 |
| ■ 주거를 변경하여 상환 | ■ 기타() |

※ ■ 주거를 변경하여 상환

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주거 지역의 0동, 주거 규모의 축소, 주거 형태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자금이며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됨

Ⅶ. 추가 질문

17 작년 기준(2020년 12월 31일)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	--

명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더 있을 경우에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개인용: 보훈대상자 응답)



인 사 말 씀

국가보훈처와 통계청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과 복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보훈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정확한 통계 조사를 하려면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조사 기간(2021. 9. 24. ~ 10. 5.)에 조사원이 귀덕을 방문하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 내용과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표지 부분은 조사원이 적습니다.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로(길) _____		
	동 _____ 호 (_____ 읍·면·동 _____)		
관리 사항	행정구역코드	관리 번호	보훈대상자 성명

지방청·사무소	조사원 성명	휴대전화	조사표 작성 방법
			☐ 조사원 면접식 ☐ 자기 기입식



국가보훈처



통계청

- 객관식 문항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1개의 번호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또는 ☐ 표하거나 ☐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쓰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응답한 경우에는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쓰십시오.
- 한 항목에 응답하고 다음 항목에 응답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되, '확실함(→)'가 표시된 부분은 지정된 항목으로 이동해 응답하십시오.

1 귀하는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낮음											매우 높음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는 귀하의 삶이 얼마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 없다 ←————→ 매우 가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3. 귀하는 현재 여가 및 문화생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 전혀 관심이 없다 ■ 별로 관심이 없다 ■ 약간 관심이 있다 ■ 매우 관심이 있다

주된 여가 유형

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9. 1. ~ 2021. 8. 31.) 어떤 여가 활동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 | | |
|-------------------------------|-----------------------------------|
| ■ 문화예술 관람(영화, 전시회 등) | ■ 취미 오락 활동(등산, 낚시, 독서 등) |
| ■ 문화예술 참여(미술, 노래 교실, 사진 촬영 등) | ■ 휴식(산책, TV 시청, 낮잠 등) |
| ■ 스포츠 관람(TV 중계 시청 포함) | ■ 사회 및 친교 활동(봉사, 종교 활동, 동호회 활동 등) |
| ■ 스포츠 활동(축구, 골프, 당구, 수영 등) | ■ 기타() |
| ■ 관광·국내 여행, 자동차 드라이브 등) | |

4-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 활동을 하셨습니까?(모든 여가활동을 통틀어)

- 혼자
 ■ 가족(친척 포함)
 ■ 친구(연인 포함)
- 동호회 회원(종교 단체 등 포함)
 ■ 직장 동료
 ■ 기타()

여행경험 및 횟수

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9. 1.~2021. 8. 31.)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업무상 출장과 여학연수 등 교육을 위한 여행은 제외)

☐ 있다 →

5-1 해당되는 항목(여행횟수)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없으면 '0'으로 기재)

국내여행	1) 숙박 여행				번
	2) 당일 여행				번
해외여행					번

☐ 없다

여가 활용 만족도

6 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6-1 귀하께서 평소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감염병 염려를 제외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적 부담

☐ 시간 부족

☐ 교통 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 불편

☐ 여가 시설 부족

☐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 여가 관련 경험 부족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음

☐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음

☐ 기타()

향후 여가 활동

7 귀하는 앞으로 어떤 여가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 문화예술 관람(영화, 전시회 등)

☐ 문화예술 참여(미술, 노래 교실, 사진 촬영 등)

☐ 스포츠 관람(TV 중계 시청 포함)

☐ 스포츠 활동(축구, 골프, 당구, 수영 등)

☐ 관광(국내외 여행, 자동차 드라이브 등)

☐ 취미 오락 활동(등산, 낚시, 독서 등)

☐ 휴식(산책, TV 시청, 낮잠 등)

☐ 사회 및 친교 활동(봉사, 종교 활동, 동호회 활동 등)

☐ 기타()

오락·문화 지출

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9. 1. ~ 2021. 8. 31.) 오락·문화비(운동, 공연, 단체 여행비, 취미용품 등)에 한 달 평균 얼마 정도를 사용하십니까?

월

천	백	십	일
---	---	---	---

 만원

II. 사회 참여 및 의식 (2021. 9. 1. 기준)

사회적 관계망

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②
2)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①	②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②

※ 가사 도우미 등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사회복지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체 참여

10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9. 1.~2021. 8. 31.)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10-1 주로 어떤 단체에 참여하셨습니다?

- | | |
|-----------------------------|-------------------------------|
| ■ 친목 및 사교 단체(계, 동창회 등) | ■ 이약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
| ■ 종교 단체(자바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 ■ 정치 단체(정당 등) |
| ■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 ■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
| ■ 시민 사회단체(환경 단체, 봉사 단체 등) | ■ 보훈 단체(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광복회 등) |
| ■ 학술 단체(학회, 연구회 등) | ■ 기타() |

■ 없다

자원봉사 관련

1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9. 1.~2021. 8. 31.)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12 귀하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계층 의식

13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					상
①	②	③	④	⑤	⑥

신뢰

14 귀하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뢰함

■ 신뢰하지 않음

■ 모르겠음

III. 가족관계

15. 귀하는 가족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비동거 가족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1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녀, 부모, 형제에게서 해당 항목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구분	16-1 해당자 존재 여부			16-2 고민 상담 (정서적 도움)		16-3 청소·식사 준비· 세탁·도구적 도움		16-4 간병·수발· 병원동행 도움		16-5 경제적 도움			
	없음	있음								현금 지원		현물 지원	
				① 도움 받음		② 도움 받지 못함							
1) 동거 자녀	①	②	→ '있음'인 경우만 응답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2) 비동거 자녀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3) 배우자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4) 본인(배우자) 부모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5) 형제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1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해 친인척과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 일주일에 4회 이상 ■ 3개월에 1~2회 정도
 ■ 일주일에 2~3회 정도 ■ 1년에 1~2회 정도
 ■ 일주일에 1회 정도 ■ 왕래가 전혀 없었음
 ■ 한달에 1~2회 정도

1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해 친인척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전화, 문자 등) 주고받으셨습니까?

■ 일주일에 4회 이상 ■ 3개월에 1~2회 정도
 ■ 일주일에 2~3회 정도 ■ 1년에 1~2회 정도
 ■ 일주일에 1회 정도 ■ 왕래가 전혀 없었음
 ■ 한달에 1~2회 정도

IV. 보건 의료

자 격

19 귀하가 주로 이용 중인 의료제도는 무엇입니까?(2순위까지 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국가유공자(국비진료) ☐ 의료급여 2층
☐ 국가유공자(감면진료) ☐ 국민건강보험(직장, 지역)
☐ 의료급여 1층 ☐ 기타(군 병원 등)

※ ☐ 국가유공자(국비 진료): 지정된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보훈처에서 지정한 민간병원) 진료시 국비로 전액 진료
☐ 국가유공자(감면 진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액의 약 30~90%까지 감면

건강상태

20 귀하는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나쁘다 ☐ 나쁜 편이다 ☐ 보통이다 ☐ 좋은 편이다 ☐ 매우 좋다

21 귀하는 다음 항목별로 귀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걷는 데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목욕을 혼자 하거나 옷을 입는 데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상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일, 공부, 가사일, 가족 또는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9. 1.~2021. 8. 31.) 질병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22-1 어떤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 ☐ 치매 ☐ 근육격계 질환(관절, 척추 등)
☐ 당뇨병 ☐ 안과 질환(백내장 등)
☐ 고혈압 ☐ 악성 종양(암 등)
☐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등) ☐ 치과 질환(치주염 등)
☐ 뇌혈관계 질환(뇌경색, 뇌출혈 등) ☐ 기타()
☐ 비뇨기계 질환(전립선 비대증 등)

☐ 없다 → 26 번으로 이동

의료 이용 실태

2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9. 1.~2021. 8. 31.) 어떤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셨습니다?

☐ 보훈병원 ☐ 위탁병원 ☐ 국공립 병원(보건소 등 포함) ☐ 일반(민간) 병원

※ 국공립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시·도·군·공립병원, 지방의료원, 군·경찰병원 등

24 귀하의 지난 1년 동안(2020. 9. 1.~2021. 8. 31.) 병원(약국포함) 이용 일수와 본인이 부담한 총진료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의료기관 이용실적			이용 일수	본인부담금
	없다	있다			
1) 입원	①	②	→ '있다'인 경우만 응답	연 [] [] [] 일	연 [] [] [] [] [] [] 만원
2) 외래	①	②		연 [] [] [] 일	연 [] [] [] [] [] [] 만원
3) 약제비(약국)	①	②		해당 없음	연 [] [] [] [] [] [] 만원

※ 요양병원 입원은 입원에 포함(요양원은 제외)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 중에서 본인이 직접 지불한 금액(비급여 포함)을 의미하며, 위탁병원 이용으로 진료비를 환급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음

※ 약제비(약국)는 병의원 이용에 따른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기재

의료비 부담 수준

2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9. 1.~2021. 8. 31.) 지출한 의료비(본인부담금)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꼈습니까?

☐ 매우 부담이 됨 ☐ 부담이 됨 ☐ 보통 ☐ 부담이 되지 않음 ☐ 전혀 부담이 안 됨

2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9. 1.~2021. 8. 31.) 몸이 아팠지만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26-1 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료비 부담 때문에 ☐ 치료를 받아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 보훈 및 위탁병원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 기타()
☐ 거동이 불편해서

☐ 없다

27 귀하는 보훈 의료지원에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보훈병원 진료 수준 향상 ☐ 진료비 감면율 및 감면 범위 확대
☐ 보훈병원 진료 및 입원 대기 기간 단축 ☐ 지원 형태 다양화(방문 진료, 장기요양시설 이용 지원 등)
☐ 보훈병원 증설 ☐ 중기 복무자(5~10년)까지 지원 대상 확대
☐ 전문 위탁진료 확대 ☐ 기타()
☐ 위탁병원 지정 확대

- ※ 전문 위탁진료: 특수 질환 또는 중증 질환자 등 보훈병원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 전문 의료시설(국내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
☐ 위탁병원: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거리가 가까워 접근이 용이한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의원을 위탁병의원으로 지정 운영
☐ 감면율과 감면 범위는 대상자에 따라 완전 국비 또는 30~90%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중기복무자에게는 현재 의료지원 혜택이 없음

28 귀하는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이 있으십니까?

- ☐ 있다 ☐ 없다

- ※ 민간 의료보험: 암, 뇌경색, 치매 등 특정 질병 진단 시 정해진 액수를 받는 정액형 보험 또는 병의원에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받는 실손보험

정신 건강

29 귀하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 ☐ 거의 느끼지 않음 ☐ 조금 느끼는 편임 ☐ 많이 느끼는 편임 ☐ 매우 많이 느낌

30 지난 1주일(7일) 동안 귀하께서 경험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항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1.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자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	①	②	③	④
6.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물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1. 무엇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심리재활서비스

31 귀하는 현재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예 →

31-1 어떤 부분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2순위까지 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우울 · 외로움 | ■ 불안 |
| ■ 악몽 · 불면 등 수면문제 | ■ 화 · 분노 |
| ■ 트라우마(PTSD) | ■ 가족 관계 · 대인 관계 |
| ■ 스트레스, 정신건강 관리 | ■ 기타() |

31-2 위의 마음건강 어려움에 대하여 어떤 서비스를 가장 이용하고 싶습니까?
(2순위까지 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개인 상담(11 전문 심리상담) | ■ 정신건강 관련 교육(스트레스 관리 등) |
| ■ 심리 검사(전반적인 마음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 및 상담) | ■ 기타() |
| ■ 집단상담(비슷한 어려움의 사람들과 함께 상담프로그램 진행) | ■ 이용할 의사 없음 |
| ■ 집단 활동 프로그램(음악, 미술, 원예 등) | |

■ 아니오

32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예 →

32-1 귀하는 담배를 하루에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하루 평균 _____ 개비

■ 아니오

33 귀하께서는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 ☐ 월 1회 이하
☐ 월 2~4회
☐ 주 2~3회
☐ 주 4회 이상
☐ 거의 마시지 않는다

33-1 평소 술을 마시는 날 몇 잔 정도나 마십니까?

- ☐ 1~2잔 ☐ 3~4잔 ☐ 5~6잔 ☐ 7~9잔 ☐ 10잔 이상

33-2 귀하는 얼마나 자주 한 번에 소주 1병이나 맥주 4병 이상을 드십니까?

- | | |
|---------------|---------------|
| ■ 전혀 없다 |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 ■ 한 달에 한 번 미만 | ■ 거의 매일 |
| ■ 한 달에 한 번 정도 | |

V. 경제활동 (2021. 9. 1. 기준)

현재 일자리 특성

34 귀하는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일을 한다 → 35 번으로 이동

■ 일을 하지 않지만 일하고 싶다 → 44 번으로 이동

■ 일하지 않고 있으며 일 할 의사도 없다 → 51 번으로 이동

※ 일을 한다

-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 가구원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
- 일시적 사유로 일하지 못하였으나 이들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

■와 ■의 경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만 향후 근로 및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로 구분

- 따라서 ■의 경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만이 포함됨

35 귀하는 현 직장(일)을 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36 귀하는 현 직장(일)에서 언제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십니까?

천	백	십	일	년	월
---	---	---	---	---	---

37 귀하는 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십니까?

주당 근무 시간: 일주일에

--	--

 시간

38 귀하는 현재 정부 자원 일자리에서 일하십니까?

■ 예

■ 아니오

39 현재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 부동산업 |
| ■ 광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제조업 | ■ 사업 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 교육 서비스업 |
| ■ 건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 도매 및 소매업 |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운수 및 창고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정보통신업(출판 포함)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금융 및 보험업 | ■ 기타() |

40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 관리자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 사무종사자 |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 서비스종사자 | ■ 단순노무종사자 |
| ■ 판매종사자 | ■ 군인 |

41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 | |
|------------|-------------|
| ■ 1~4명 | ■ 300~499명 |
| ■ 5~49명 | ■ 500~999명 |
| ■ 50~99명 | ■ 1,000명 이상 |
| ■ 100~299명 | |

42 귀하는 다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구분	가입	미가입
1)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①	②
2) 고용보험	①	②
3) 산재보험	①	②
4) 퇴직연금/퇴직금	①	②

43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아래 항목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근무환경(안전, 위생)	①	②	③	④	⑤
2) 근무시간	①	②	③	④	⑤
3)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4) 소득(임금수준)	①	②	③	④	⑤
5) 개인의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6) 고용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7)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구직 활동

4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9. 1.~2021. 8. 31.)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험(서류 전형 불합격, 면접 후 불합격 등)이 있으십니까?

■ 예 →

44-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서류 전형 불합격, 면접 후 불합격 등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험은 몇 회나 됩니까?

 회

44-2 귀하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인맥 및 배경 부족 | ☐ 나이가 많아서 |
| ☐ 전문 기술 및 지식이 부족
(외국어 능력 포함) | ☐ 지위 변화에 따른 부적응 |
| ☐ 일자리(사업) 관련 정보 부족 | ☐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없음 |
| ☐ 임금, 직종 등 적절한 일자리(사업) 부족 | ☐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 |
| ☐ 기타 | ☐ 기타 |

■ 아니요 →

47 번으로 이동

45 귀하는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 | |
|---|--|
| ☐ 취업지원센터 의뢰
(주민센터, 구청, 고용지원센터, 보훈지청 취업지원 등) | ☐ 직업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참여 |
| ☐ 개인적 인맥(가족, 친구 및 친지) | ☐ 직업교육훈련 참여 |
| ☐ 신문, 잡지, TV, 컴퓨터, 벽보 등 검색 및 구인광고 확인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님 |
|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면접컨설팅 참여 | ☐ 기타 |

46 귀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적성검사 및 상담지원
- ☐ 구직 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 ☐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구인 정보제공
- ☐ 기타()
- ☐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47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직업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 ☐ 관리자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사무종사자
-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서비스종사자
- ☐ 단순노무종사자
- ☐ 판매종사자
- ☐ 군인

48 귀하가 희망하는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	--	--	--	--

 만원

직업선택 요인

49 귀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 ☐ 명예·명성
- ☐ 보람·자아 성취
- ☐ 안정성
- ☐ 발전성·장래성
- ☐ 수입
- ☐ 기타()

취업 수강료 지원

50 귀하는 보호 관련법에 따른 취업 수강료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있다 →

50-1 취업 수강료 지원이 귀하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셨습니까?

- ☐ 전혀 도움 안 됨
- ☐ 도움이 됨
- ☐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이 됨
- ☐ 보통

☐ 없다

VI. 노후 보장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51 귀하는 귀하와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어떤 금전적 수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주된 준비수단 선택)

- ☐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등) ☐ 금융자산(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 부동산 운용
☐ 사적연금(은행, 보험사를 통한 개인연금) ☐ 기타()
☐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 없음(금전적 노후 준비 수단 없음)

52 귀하는 귀하와 배우자의 노후 생활에 최소한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최소 생활비: 월 평균

천	백	십	일
---	---	---	---

 만원

53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생활에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노후 적정 생활비: 월 평균

천	백	십	일
---	---	---	---

 만원

54 귀하는 현재(2021. 9. 1)를 기준으로 귀하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해 얼마 정도를 준비하셨거나 준비가 가능하십니까? (*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했거나 준비 가능한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

월 평균

천	백	십	일
---	---	---	---

 만원

55 귀하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귀하와 배우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아주 잘 되어 있다 ☐ 잘 되어 있지 않다
☐ 잘 되어 있다 ☐ 전혀 되어 있지 않다
☐ 보통이다

56 현재 귀하와 배우자는 지급받고 있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 및 농지 연금이 있으십니까?

☐ 있다 →

56-1 귀하는 연금으로 얼마를 지급받고 있으십니까?

개인연금	월 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퇴직연금	월 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월 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평균 연수	년	년

☐ 없다

57 귀하가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고령 보훈대상자 전용 임대아파트

☐ 양로 및 요양시설 →

57-1 귀하는 노후에 어떤 양로시설, 요양시설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 ☐ 무의탁 보훈대상자 전용 양로시설 ☐ 장기요양시설(비용 본인 부담)
☐ 국공립 양로시설(비용 본인 부담) ☐ 보훈요양원
☐ 민간 양로시설(비용 본인 부담)

☐ 개인 주택 →

57-2 귀하는 노후에 어떤 개인 주택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 ☐ 단독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트 ☐ 기타()

57-3 귀하는 노후에 개인주택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 ☐ 배우자 ☐ 자녀 ☐ 혼자 ☐ 기타()

☐ 기타 ()

58 귀하는 노후에 어떤 지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타()

59 귀하는 노후에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시설 보호 서비스(요양시설 등) ☐ 이동 지원 서비스(동행, 차량 지원 등)
☐ 가사 간병 서비스(보훈 섬김이 등) ☐ 정서적 · 심리적 지원 서비스(말벗 서비스 등)
☐ 노인 의료용품 지원(지팡이 등) ☐ 필요하지 않음
☐ 여가 활동 지원 ☐ 기타()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60 귀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60-1 귀하의 장기요양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60-2 귀하어 어떤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구분	받은	안 받은
1) 시설 급여(노인 요양시설 등)	①	②
2) 재가 급여(방문 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급여 등)	①	②
3) 복지 용구	①	②
4) 특별 현금 급여	①	②

■ 아니요 →

60-3 귀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십니까?

(※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등급 외(A,B,C)인 경우 응답)

■ 예 →

60-3-1 귀하어 주로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 ☐ 안전 지원(방문, 전화 등)
- ☐ 사회 참여(자조 모임 등)
- ☐ 생활 교육(신체 건강, 정신 건강 등)
- ☐ 일상생활 지원(가사, 이동 활동 지원)
- ☐ 연계 서비스(생활 지원, 주거 개선, 건강 지원)

■ 아니요 →

60-3-2 귀하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 ☐ 가족이 도와주고 있어서
- ☐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 ☐ 기대()
- ☐ 해당없음(만 65세 미만)

■ 노인 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 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 지원(세탁,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 외 A	등급 외 B, C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이상	75이상 95미만	60이상 75미만	51이상 60미만	45이상 51미만	45미만(치매)
제공 급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가 원칙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 가능)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 복지용구 이용 가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자체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

61 귀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입니까?

예 →

61-1 귀하는 어디에 안장되고 싶으십니까?

- ☐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 → **62** 번으로 이동
- ☐ 가족묘지(선산 등)
- ☐ 공설 및 사설 공원묘지
- ☐ 기타()

61-2 귀하는 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싶으십니까?

- ☐ 현 거주지(본인 기준)와의 접근성이 좋아 심리적으로 편함
- ☐ 가족(배우자, 자식 등) 거주지와의 접근성이 좋아 가족이 방문하기 편리함
- ☐ 고향에 위치함
- ☐ 기타()

61-3 귀하는 향후 본인의 장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 ☐ 매장(묘지)
- ☐ 화장 후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등)
- ☐ 시신을 화장하여 야외에 매장하고 비석을 세움
- ☐ 건축물 형태의 봉안 시설 실내에 유골을 안치함
- ☐ 야외에 세워진 담이나 벽 형태의 봉안 시설에 유골을 안치함
- ☐ 화장 후 매장, 봉안 등을 하지 않겠음
- ☐ 기타()

아니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Ⅶ. 정책 서비스

보훈정책 서비스

62 보훈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지원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62-1 인지 여부		62-2 경험 여부						
	알고 있음	모름	없음	있음	62-2-1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보훈 급여금(보상금 수당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지원(입학금, 수업료, 보훈 장학금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취업 지원(직업 훈련, 취업 수당료, 특별 고용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대부 지원(주택, 자영사업, 생활안정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의료 지원(국비, 감면)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양로 보호(복지 타운, 보훈원, 요양원 등 입소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보철구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수송 시설 지원(기차, 버스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휴양 시설 이용(보훈 휴양원, 보훈 협약 콘도)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사망 시 지원(국립묘지 안장, 묘비 제작비, 조의금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예우 지원(국가유공자 명예 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재가복지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이용료 감면(고궁, 국립공원, 자연 휴양림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보훈대상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음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6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9. 1~2021. 8. 31) 다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 분	있다	없다
1) 의료비 지원(암 환자 지원 사업, 노인 개안 수술(백내장 등))	①	②
2) 노인 급식 지원(무료 지원 포함)	①	②
3)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4) 가정 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①	②
5)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6) 방문 가정 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7) 이동 편의 서비스(차량 지원, 동행 등)	①	②
8) 주야간 보호 서비스(일정 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	①	②
9) 노인 일자리 사업	①	②
10) 장애인 일자리 사업	①	②
11)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①	②
12) 사회 교육 서비스(한글 교실, 생활 요가, 노래 교실 등)	①	②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 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1)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동록 3급 이상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소득 수준,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 지원이나 이동 보조 등의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Ⅷ. 보호대상자 인식

64 귀하는 국가보호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64-1 국가보호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가보호대상자에 걸맞은 적절한 대우(경제적 지원 등)를 받지 못해서
- 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우 시책이 다양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서
- 일반 국민들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 사회적으로 보호대상자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 기타()

→ 65 번으로 이동

64-2 국가보호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가보호대상자에 걸맞은 대우(경제적 지원 등)를 받아서
-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 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우 정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확산되어서
- 사회적으로 보호대상자를 존중하는 분위기라서
- 기타()



IX. 정책 인식 및 욕구

65 귀하는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65-1 귀하가 국가보훈정책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현행 지원 범위의 미흡 ☐ 현행 지원 수준의 미흡
☐ 국가보훈처의 정책적 기능의 한계 ☐ 기타()
☐ 각종 교육·홍보·상담 여건 미비

66 귀하는 국가보훈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보훈 급여금 ☐ 의료 지원 ☐ 재가복지서비스
☐ 교육 지원 ☐ 요양원 등 양로 지원 ☐ 사회 적응
☐ 취업 지원 ☐ 사망 시 지원 ☐ 기타()
☐ 대부 지원 ☐ 예우 지원

67 귀하는 코로나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 ☐ 소득 감소(실직이나 휴/폐업으로) ☐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움
☐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어서 ☐ 기타()
☐ 감염에 대한 우려 ☐ 없음
☐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없음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더 있을 경우에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